


정책보고서 2012-70

##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선우덕·김현식·김대중·오신휘·안세아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약.....	1
제1장 서론.....	39
제1절 배경 및 목적.....	39
제2절 평가 방법 및 내용.....	40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평가.....	55
제1절 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5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55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74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103
제2절 고령화 분야(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25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125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150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169
제3절 성장동력 분야(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176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177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201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210
제4절 분야별 추진실적 비교 평가.....	219
1. 목표달성도 비교.....	219
2. 예산집행실적.....	243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핵심과제 45개)에 의한 평가.....	271
제1절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271
제2절 분야별 성과평가 및 가중치에 의한 평가.....	289
제3절 종합평가.....	293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29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설문조사 .....	297
1. 전화설문조사 개요 .....	297
2. 전화설문조사 분석결과 .....	305
3. 전화설문조사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	332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336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	336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340
3.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	360
제5장 종합평가 .....	379
제1절 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379
제2절 고령화 분야(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381
제3절 성장동력 분야(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384
제6장 결론 .....	389
참고문헌 .....	393
부록 .....	397

## &lt;표 목차&gt;

<표 1- 1>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별 및 성과평가방법별 해당사항 (저출산 분야) .....	41
<표 1- 2>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별 및 성과평가방법별 해당사항 (고령화 분야) .....	44
<표 1- 3>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별 및 성과평가방법별 해당사항 (성장동력 분야) .....	47
<표 2- 1>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실적 .....	58
<표 2-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추진실적 .....	60
<표 2- 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추진실적 .....	62
<표 2- 4> 유연근로제 확산 추진실적 .....	65
<표 2- 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추진실적 .....	67
<표 2- 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실적 .....	69
<표 2- 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추진실적 .....	71
<표 2- 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추진실적 .....	74
<표 2- 9>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	75
<표 2-1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	77
<표 2-11>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추진실적 .....	78
<표 2-1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추진실적 .....	80
<표 2-13>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추진실적 .....	82
<표 2-14>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	83
<표 2-1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	84
<표 2-16>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	86
<표 2-17> 양육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	87
<표 2-18>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추진실적 .....	89
<표 2-1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추진실적 .....	90

<표 2-20>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실적 .....	91
<표 2-21>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	94
<표 2-22>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	96
<표 2-2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	97
<표 2-24>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추진실적 .....	98
<표 2-25>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실적 .....	102
<표 2-26>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	104
<표 2-2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추진실적 .....	105
<표 2-28>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추진실적 .....	106
<표 2-29>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추진실적 .....	108
<표 2-30>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추진실적 .....	108
<표 2-31>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추진실적 .....	111
<표 2-3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추진실적 .....	113
<표 2-33>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추진실적 .....	115
<표 2-34>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	116
<표 2-35>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실적 .....	118
<표 2-36>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추진실적 .....	122
<표 2-37>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	124
<표 2-38>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추진실적 .....	125
<표 2-39>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	128
<표 2-4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	131
<표 2-41>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	133
<표 2-42>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추진실적 .....	136
<표 2-4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	138
<표 2-44>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추진실적 .....	139
<표 2-4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141
<표 2-46>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추진실적 .....	143



<표 2-4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	148
<표 2-48> 노후설계 기반조성 추진실적 .....	149
<표 2-49>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추진실적 .....	150
<표 2-50>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추진실적 .....	152
<표 2-51> 일자리 사업 체계화 추진실적 .....	153
<표 2-52>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	154
<표 2-53>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추진실적 .....	155
<표 2-54>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추진실적 .....	156
<표 2-55>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	158
<표 2-56>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	159
<표 2-57>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실적 .....	161
<표 2-58>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	162
<표 2-59>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	163
<표 2-6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	166
<표 2-6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추진실적 .....	168
<표 2-6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	171
<표 2-6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	172
<표 2-6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	174
<표 2-65>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	175
<표 2-66>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추진실적 .....	176
<표 2-67>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	180
<표 2-68>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실적 .....	183
<표 2-69>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추진실적 .....	185
<표 2-70>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	187
<표 2-71>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실적 .....	190
<표 2-72>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	192
<표 2-73>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	194

<표 2-74>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	197
<표 2-75>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추진실적 .....	199
<표 2-7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	200
<표 2-77>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	204
<표 2-78> 주택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	206
<표 2-79> 금융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	208
<표 2-80>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추진실적 .....	210
<표 2-8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실적 .....	211
<표 2-8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실적 .....	213
<표 2-8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추진실적 .....	214
<표 2-84> 국내 수요기반 확충 추진실적 .....	216
<표 2-85>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 .....	217
<표 2-86>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추진실적 .....	218
<표 2-87>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체 및 분야별 목표달성도 .....	219
<표 2-88> 2011년도 저출산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	221
<표 2-89>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	222
<표 2-90>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목표달성도 .....	224
<표 2-91>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227
<표 2-92> 2011년도 고령화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	230
<표 2-9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목표달성도 .....	231
<표 2-94>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목표달성도 .....	233
<표 2-95>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234
<표 2-96> 2011년도 성장동력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	236
<표 2-9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목표달성도 .....	238
<표 2-9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 목표달성도 .....	241
<표 2-99>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242
<표 2-10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집행률 .....	244

<표 2-101> 저출산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	246
<표 2-102> 저출산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	247
<표 2-103>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	248
<표 2-104>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예산집행률 .....	250
<표 2-105>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252
<표 2-106> 고령화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	255
<표 2-107> 고령화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	256
<표 2-108>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예산집행률 .....	258
<표 2-109>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예산집행률 .....	259
<표 2-110>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261
<표 2-111> 성장동력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	264
<표 2-112> 성장동력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	265
<표 2-113>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예산집행률 .....	266
<표 2-114>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개선 중영역 예산집행률 .....	267
<표 2-115>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268
<표 3-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73
<표 3- 2> 결혼·출산·양육부담경감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76
<표 3-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78
<표 3- 4>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79
<표 3- 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83
<표 3- 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85
<표 3- 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87
<표 3- 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88
<표 3- 9> 고령친화산업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	289
<표 3-10> 저출산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	290
<표 3-11> 고령화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	291
<표 3-12> 성장동력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	292

<표 3-13> 총 28개부문 핵심과제사업 기준의 목표달성률별 사업수 분포 .....	294
<표 4- 1>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성별 분포 .....	299
<표 4- 2>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	299
<표 4- 3> 표본과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	301
<표 4- 4>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	303
<표 4- 5>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성과평가 .....	306
<표 4- 6>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우선 추진 사업 .....	307
<표 4- 7> 결혼·출산·양육부담의 경감: 성과평가 .....	309
<표 4- 8> 결혼·출산·양육부담의 경감: 우선 추진 사업 .....	310
<표 4- 9>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성과평가 .....	312
<표 4-10>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우선 추진 사업 .....	313
<표 4-11>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성과평가 .....	315
<표 4-12>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우선 추진 사업 .....	316
<표 4-13>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성과평가 .....	318
<표 4-14>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우선 추진 사업 .....	319
<표 4-15>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과평가 .....	321
<표 4-1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우선 추진 사업 .....	322
<표 4-1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성과평가 .....	324
<표 4-18>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우선 추진 사업 .....	325
<표 4-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성과평가 .....	327
<표 4-20>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우선 추진 사업 .....	328
<표 4-21> 고령친화산업 육성: 성과평가 .....	330
<표 4-22> 고령친화산업 육성: 우선 추진 사업 .....	331
<표 4-23> 국민일반의 효과성 평가 .....	333
<표 4-24> 20~30대 국민의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 .....	334
<표 4-25> 50~60대 국민의 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	335
<표 4-2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수준/중요도(대영역) .....	341

<표 4-27> 저출산 정책 성과수준/중요도(중영역) .....	341
<표 4-28> 일과 가정의 양립화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42
<표 4-29>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42
<표 4-3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43
<표 4-3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3
<표 4-3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4
<표 4-3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4
<표 4-34>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4
<표 4-35>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5
<표 4-36>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5
<표 4-3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6
<표 4-38>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6
<표 4-39>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7
<표 4-4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7
<표 4-41>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48
<표 4-42> 고령화 정책 성과수준/중요도(중영역) .....	348
<표 4-4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49
<표 4-44>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49
<표 4-45>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50
<표 4-46>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0
<표 4-47>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1
<표 4-48>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1
<표 4-49>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1
<표 4-50>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2
<표 4-51>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2
<표 4-52>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3
<표 4-53>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3

<표 4-5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3
<표 4-55>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4
<표 4-56> 성장동력 정책 성과수준/중요도(중영역) .....	354
<표 4-5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55
<표 4-5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56
<표 4-59> 고령친화산업 육성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	356
<표 4-6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6
<표 4-61>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7
<표 4-62>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7
<표 4-63>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8
<표 4-64>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 분야 제도개선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8
<표 4-65>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 분야 제도개선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8
<표 4-66>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성과수준/중요도 (세부영역) .....	359
<표 4-67>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359
<표 4-68> 국내·외 시장 활성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	359
<표 4-69> 저출산 분야 신뢰도 분석결과 .....	361
<표 4-70> 저출산 분야 종합 .....	361
<표 4-71> 일과 가정의 양립화 분석결과 .....	363
<표 4-7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분석결과 .....	364
<표 4-7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분석결과 .....	365
<표 4-74> 고령화 분야 신뢰도 분석결과 .....	366
<표 4-75> 고령화 분야 종합 .....	367
<표 4-76>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분석결과 .....	368
<표 4-77>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분석결과 .....	370
<표 4-7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분석결과 .....	371
<표 4-79> 성장동력분야 신뢰도 분석결과 .....	372

<표 4-80> 성장동력 분야 종합 .....	373
<표 4-8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분석결과 .....	374
<표 4-8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제도 개선 분석결과 .....	375
<표 4-83> 고령친화산업 육성 분석결과 .....	376

### <그림 목차>

[그림 2-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	56
[그림 2-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	74
[그림 2-3]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	103
[그림 2-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	126
[그림 2-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	151
[그림 2-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	169
[그림 2-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	177
[그림 2-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	201
[그림 2-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	210
[그림 2-1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	243
[그림 2-11] 저출산분야 예산 .....	244
[그림 2-12] 고령화분야 예산 .....	253
[그림 2-13] 성장동력분야 예산 .....	262
[그림 4-1] 저출산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362
[그림 4-2] 일과 가정의 양립화 IPA 분석 매트릭스 .....	363
[그림 4-3]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IPA 분석 매트릭스 .....	364
[그림 4-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IPA 분석 매트릭스 .....	366
[그림 4-5] 고령화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367
[그림 4-6]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IPA 분석 매트릭스 .....	369
[그림 4-7]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IPA 분석 매트릭스 .....	370

[그림 4-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IPA 분석 매트릭스 .....	371
[그림 4-9] 성장동력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373
[그림 4-1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IPA 분석 매트릭스 .....	374
[그림 4-1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제도 개선 IPA 분석 매트릭스 .....	375
[그림 4-12] 고령친화산업 육성 분석결과 IPA 분석 매트릭스 .....	376



# 요약

## I. 서론

### 1.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고, 그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제1차 기본계획의 종료를 앞두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음.
-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실행 중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2008년도에 수정보완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서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후 차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2011년도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2011년도에 성과평가의 기준 및 핵심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개발하였음.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음.

- 본 보고서는 2011년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즉, 제2차 기본계획의 실시초년도인 2011년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음.

## 2. 평가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의 평가방법은 2가지의 형태로 진행되었음.
- 첫 번째의 방법은 정량평가로 2011년도에 수립하였던 성과목표치와 실제로 추진하여 나타난 달성치를 비교하여 목표량 대비 달성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률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여기에서 평가의 대상은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 부문 등에 해당하는 총 2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 부문 중에서 핵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을 선정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성과평가로 총 45개가 작성되어 있음.
  - 핵심과제 45개의 성과지표 중 세부과제(231개) 내의 성과지표와 동일한 경우가 있음.
  - 이 중 몇 개의 과제는 목표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상에서 장기적으로 성과 및 추이를 보는 핵심과제의 특성과 개별과제들의 특성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달성수준을 개별적으로 접근함.
- 두 번째의 평가방법은 정성평가로 2011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일반국민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먼저,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E-mail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II.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

### 1. 전 분야

#### 가. 목표달성 실적

- 분야별로 당초 사업목표(성과지표상) 90% 달성한 비율은 저출산분야(90.0%), 고령화분야(93.0%), 성장동력분야(91.1%)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70% 미만인 사업들은 저출산분야의 경우 6개(5.0%), 고령화분야 5개(5.0%), 성장동력분야 3개(3.3%)로 저출산 분야가 가장 많음(영역 내 비율은 고령화 분야와 동일).

<표 1>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체 및 분야별 목표달성도

(단위: 성과지표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전체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11(3.5)	3(1.0)	13(4.2)	283(91.3)	310(100.0)
저출산분야	5(4.2)	1(0.8)	6(5.0)	108(90.0)	120(100.0)
고령화분야	4(4.0)	1(1.0)	2(2.0)	93(93.0)	100(100.0)
성장동력분야	2(2.2)	1(1.1)	5(5.6)	82(91.1)	90(100.0)

주: 1) 표의 수치는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와 사업은 있으나 성과지표 책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수임.

#### 나. 예산집행 실적

-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예산사업 138개, 비예산사업 93개로 구성되어 있음<sup>1)</sup>.
- 예산은 총 14조 3,501억원으로 저출산분야 7조 3,950억원(51.5%), 고령화분야 5조 4,534억원(38.0%), 성장동력분야 1조 5,016억원(10.5%)으로 구성됨.
- 2011년도 예산결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현액은 총 14조 3,861억원으로 저출산분야 7조 6,589억원(53.2%), 고령화분야 5조 5,444억원(38.6%), 성장동력분야 1조 1,828억원으로 구성됨(8.2%)<sup>2)</sup>.

1) 과제 수로 구분하되, 전체 231개 과제 중 같은 과제(번호)이나 세부사업내용이 예산/비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는 예산사업(과제)로 분류하며, 이하 세부내용 역시 동일하게 적용함.

2) 이하 모든 내용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예산현액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2011년도 예산 결산내역을 기준으로 함.

- 예산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 비율은 86.3%로 대부분이며, 70~90%인 사업의 비율은 7.2%, 70% 미만인 사업의 비율은 6.5%로 나타남.
- 분야별로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 비율은 저출산분야 84.7%, 고령화분야 82.2%, 성장동력분야 94.1%임.
-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저출산분야가 5개로 가장 높음(저출산 예산사업 대비 8.5%).

<표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4(2.9)	5(3.6)	10(7.2)	119(86.3)	138(100.0)	93
저출산분야	2(3.4)	3(5.1)	4(6.8)	50(84.7)	59(100.0)	36
고령화분야	2(4.4)	2(4.4)	4(9.0)	37(82.2)	45(100.0)	33
성장동력분야	-	-	2(5.9)	32(94.1)	34(100.0)	24

## 2. 저출산 분야 추진실적 평가

### 가. 목표달성 실적

- 저출산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비율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92.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 91.2%,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85.3% 순으로 높음.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 90.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 83.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 83.2% 순으로 높음.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의 10개 성과지표 중 9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가 50% 미만의 달성도를 보임.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의 6개 성과지표 중 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는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의 18개 성과지표 중 1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에 1개, 50~70%에 1개, 50% 미만에 1개의 성과지표가 속함.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 100.0%,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 95.8%,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영역 88.9%,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 80.0% 순으로 높음.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의 10개 성과지표 중 8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가 50% 미만의 달성률을 보임.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영역의 9개 성과지표 중 8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가 70~90%의 달성률에 속함.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의 24개 성과지표 중 23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가 70~90%에 속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소영역이 모두 100.0% 수준을 보였고,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이 82.4%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의 17개 성과지표 중 1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3개가 70~90%에 속함.

<표 3> 2011년도 저출산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성과지표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저출산분야	5 (4.2)	1 (0.8)	6 (5.0)	108 (90.0)	120 (100.0)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3 (8.9)	1 (2.9)	1 (2.9)	29 (85.3)	34 (100.0)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1 (10.0)			9 (90.0)	10 (100.0)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 (16.7)			5 (83.3)	6 (100.0)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1 (5.6)	1 (5.6)	1 (5.6)	15 (83.2)	18 (100.0)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2 (3.8)		2 (3.8)	48 (92.4)	52 (100.0)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2 (20.0)			8 (80.0)	10 (100.0)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9 (100.0)	9 (100.0)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 (11.1)	8 (88.9)	9 (100.0)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4.2)	23 (95.8)	24 (100.0)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 (8.8)	31 (91.2)	34 (100.0)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5 (100.0)	5 (100.0)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11 (100.0)	11 (100.0)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3 (17.6)	14 (82.4)	17 (100.0)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1 (100.0)	1 (100.0)

주: 1) 표의 수치는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와 사업은 있으나 성과지표 책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수임.

## 나. 예산집행 실적

- 저출산분야 정책은 예산사업 59개, 비예산사업 3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7조 6,589억원임
  - 전체 예산사업 중 84.7%는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70~90%를 집행한 사업은 6.8%, 예산을 70% 미만 집행한 사업은 8.5%로 나타남.
- 중영역별 예산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6조 6,613억원(86.98%),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5,645억원(7.37%),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4,331억원(5.65%) 순임.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95.2%로 양호하며,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은 86.2%로 다소 낮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는 55.6%로 가장 부진함.

<표 4> 저출산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 만	50~70 %	70~90 %	90%이상		
저출산분야	76,589	100.0	2 (3.4)	3 (5.1)	4 (6.8)	50 (84.7)	59 (100.0)	36
1.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5,645	7.37	2 (22.2)	1 (11.1)	1 (11.1)	5 (55.6)	9 (100.0)	15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 만	50~70 %	70~90 %	90%이상		
1-1.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확대 개선	5,151	6.73	1 (25.0)	1 (25.0)	-	2 (50.0)	4 (100.0)	6
1-2.유연한 근무형태 확 산	107	0.14	1 (50.0)	-	-	1 (50.0)	2 (100.0)	4
1-3.가족친화 직장 사회환경 조성	387	0.51	-	-	1 (33.3)	2 (66.7)	3 (100.0)	5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66,613	86.97	-	1 (3.4)	3 (10.3)	25 (86.2)	29 (100.0)	17
2-1.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163	0.2	-	-	1 (50.0)	1 (50.0)	2 (100.0)	5
2-2.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346	3.06	-	-	-	7 (100.0)	7 (100.0)	2
2-3.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	49,164	64.19	-	-	-	5 (100.0)	5 (100.0)	6
2-4.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4,940	19.51	-	1 (7.0)	2 (13.0)	12 (80.0)	15 (100.0)	4
3.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331	5.65	-	1 (4.8)	-	20 (95.2)	21 (100.0)	4
3-1.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682	0.89	-	-	-	4 (100.0)	4 (100.0)	0
3-2.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1,812	2.37	-	-	-	6 (100.0)	6 (100.0)	1
3-3.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1,837	2.40	-	1 (9.1)	-	10 (90.9)	11 (100.0)	0
3-4.아동정책추진기반조성	비예산	-	-	-	-	-	-	3

주: 1) 예산액 비중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3. 고령화분야 추진실적 평가

#### 가. 목표달성 실적

□ 고령화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비율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중영역 100%,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90.0%,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85.8% 순으로 높음.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소영역 100.0%,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소영역 100.0%,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 88.0%,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소영역 80.0% 순으로 높음.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의 25개 성과지표 중 22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 미만인 1개, 50~70% 미만 1개, 50% 미만 성과지표가 1개로 나타남.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소영역의 10개 성과지표 중 8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는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에 속한 모든 소영역(일자리 사업 내실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은 당초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이상 달성한 비율은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소영역 100.0%,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 71.4% 순으로 높음.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의 7개 성과지표 중 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 미만의 1개,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인 성과지표가 1개로 나타남.

<표 5> 2011년도 고령화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성과지표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고령화분야	4 (4.0)	1 (1.0)	2 (2.0)	93 (93.0)	100 (100.0)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3 (6.0)	1 (2.0)	1 (2.0)	45 (90.0)	50 (100.0)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 (4.0)	1 (4.0)	1 (4.0)	22 (88.0)	25 (100.0)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	-	11 (100.0)	11 (100.0)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2 (20.0)	-	-	8 (80.0)	10 (100.0)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	-	-	4 (100.0)	4 (100.0)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	36 (100.0)	36 (100.0)
2-1. 일자리 사업 내실화	-	-	-	4 (100.0)	4 (100.0)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	-	6 (100.0)	6 (100.0)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	14 (100.0)	14 (100.0)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	-	12 (100.0)	12 (100.0)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7.1)	-	1 (7.1)	12 (85.8)	14 (100.0)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1 (14.3)	-	1 (14.3)	5 (71.4)	7 (100.0)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	-	7 (100.0)	7 (100.0)

주: 1) 표의 주치는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와 사업은 있으나 성과지표 책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수임.

## 나. 예산집행 실적

□ 고령화분야 정책은 예산사업 45개와 비예산사업 3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5조 5,444억원임.

○ 전체 예산사업 중 82.2%는 예산을 90%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70~90%를 집행한 사업은 8.9%, 예산을 70%미만 집행한 사업은 8.8%로 나타남.

□ 중영역별 예산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조 8,997억원(88.37%),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122억원(7.4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325억원(4.19%) 순임.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94.1%로 양호하며,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경우 85.7%로 다소 낮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은 71.4%로 가장 부진함.

<표 6> 고령화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	90%이 상		
고령화분야	55,444	100.0	2 (4.4)	2 (4.4)	4 (8.9)	37 (82.2)	45 (100.0)	33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325	4.19	2 (9.5)	1 (4.8)	3 (14.3)	15 (71.4)	21 (100.0)	15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993	1.79	1 (7.7)	1 (7.7)	1 (7.7)	10 (76.9)	13 (100.0)	5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	90%이 상		
1-2.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1,017	1.83	-	-	1 (50.0)	1 (50.0)	2 (100.0)	6
1-3.사전예방 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311	0.56	1 (20.0)	-	1 (20.0)	3 (60.0)	5 (100.0)	2
1-4.노년기 생애대비 노후 생활 설계 강화	4	0.01	-	-	-	1 (100.0)	1 (100.0)	2
2. 안정되고 활기 찬 노후생활 보장	48,997	88.37	-	-	1 (5.9)	16 (94.1)	17 (100.0)	13
2-1.일자리사 업의 내실화	3,438	6.20	-	-	-	1 (100.0)	1 (100.0)	2
2-2.노인빈곤예 방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 마련	38,595	69.61	-	-	-	3 (100.0)	3 (100.0)	3
2-3.건강한 노 후생활 및 의료 비 지출적정화	6,538	11.79	-	-	1 (16.7)	5 (83.3)	6 (100.0)	7
2-4.다양한 사 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426	0.77	-	-	-	7 (100.0)	7 (100.0)	1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122	7.43	-	1 (14.3)	-	6 (85.7)	7 (100.0)	5
3-1.고령친화 적 주거·교통환 경 조성	2,528	4.56	-	1 (33.3)	-	2 (66.7)	3 (100.0)	3
3-2.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 공경기반마련	1,594	2.87	-	-	-	4 (100.0)	4 (100.0)	2

주: 1) 예산액 비중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4. 성장동력분야 추진실적 평가

##### 가. 목표달성 실적

- ☐ 성장동력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비율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93.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 87.5%,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87.5%임.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소영역 100.0%,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소영역 100.0%,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 90.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소영역 85.7% 순으로 높음.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의 22개 성과지표 중 20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에 2개가 속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소영역의 14개 성과지표 중 12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의 목표달성률에 2개가 속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소영역 100.0%,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소영역 83.3%,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소영역 80.0% 순으로 높음.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의 5개 성과지표 중 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50~70%의 목표달성률에 1개가 속함.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의 6개 성과지표 중 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한 개가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소영역 100.0%, “국내·외 시장 활성화” 소영역 8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소영역 50.0% 순으로 높음.
  - “국내·외 시장 활성화” 소영역의 6개 성과지표 중 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가 70~90%에 속함.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소영역의 2개 성과지표 중 1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1개는 50%에 미치지 못함.

&lt;표 7&gt; 2011년도 성장동력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성과지표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성장동력분야	2 (2.2)	1 (1.1)	5 (5.6)	82 (91.1)	90 (100.0)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4 (6.9)	54 (93.1)	58 (100.0)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2 (14.3)	12 (85.7)	14 (100.0)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14 (100.0)	14 (100.0)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2 (9.1)	20 (90.9)	22 (100.0)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8 (100.0)	8 (100.0)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1 (6.25)	1 (6.25)		14 (87.5)	16 (100.0)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1 (20.0)		4 (80.0)	5 (100.0)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1 (16.7)			5 (83.3)	6 (100.0)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5 (100.0)	5 (100.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1 (6.25)		1 (6.25)	14 (87.5)	16 (100.0)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8 (100.0)	8 (100.0)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1 (16.7)	5 (83.3)	6 (100.0)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1 (50.0)			1 (50.0)	2 (100.0)

주: 1) 표의 수치는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와 사업은 있으나 성과지표 책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수임.

## 나. 예산집행 실적

□ 성장동력분야 정책은 예산사업 34개와 비예산사업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1조 1,828억원임.

○ 전체 예산사업 중 94.1%는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70~90%를 집행한 사업은 5.9%로 나타남.

□ 중영역별 예산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조 422억원(88.1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400억원(11.84%), ‘고령친화산업육성’ 6억원(0.05%) 순임.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00.0%, ‘고령친화산업육성’의 경우 100.0% 집행하였고<sup>3)</sup>,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는 91.3%로 대체로 양호함.

<표 8> 성장동력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 만	50~70%	70~90 %	90%이 상		
성장동력분야	11,828	100.0	—	—	2 (5.9)	32 (94.1)	34 (100.0)	24
1.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0,422	88.11	—	—	2 (8.7)	21 (91.3)	23 (100.0)	8
1-1.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646	5.46	-	-	-	6 (100.0)	6 (100.0)	3
1-2.외국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751	6.35	-	-	-	3 (100.0)	3 (100.0)	4
1-3.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체계확립	8,084	68.35	-	-	1 (12.5)	7 (87.5)	8 (100.0)	1
1-4.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941	7.96	-	-	1 (16.7)	5 (83.3)	6 (100.0)	-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400	11.84	—	—	—	4 (100.0)	4 (100.0)	9
2-1.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1,399	11.83	-	-	-	3 (100.0)	3 (100.0)	2

3) 동 영역의 사업들 중 대다수는 예산이 다른 과제 예산(‘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등 예산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각 사업의 명확한 예산집행률은 알 수 없으나, 총 6억원을 전액 집행함에 따라 해당되는 개별사업들의 예산집행률도 90% 이상인 것으로 간주함.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 만	50~70%	70~90 %	90%이 상		
2-2. 인구고령 화에 대비 주 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비예산		-	-	-	-	-	5
2-3. 중장기 재 정의 지속가능 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 개선	1	0.01	-	-	-	1 (100.0)	1 (100.0)	2
3. 고령친화산업 육성	6	0.05	-	-	-	7 (100.0)	7 (100.0)	7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 상을 통한 산 업경쟁력 확보	6	0.05	-	-	-	4 (100.0)	4 (100.0)	3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	3 (100.0)	3 (100.0)	2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비예산	-	-	-	-	-	-	2

주: 1) 예산액 비중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7개 예산사업 중 6개 예산사업은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예산으로 통합운영.

### III.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핵심과제 45개)에 의한 평가

#### 1.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 가. 저출산 분야

#####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71.8	71.3	9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도입	도입	10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3.0	5.9	196.7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7.0	11.9	150.6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42	106	252.4

##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9.0	10.3	114.4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356.0	367.3	103.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수(개소)	48	48	1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3.2	16.3	123.5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42.3	48.7	115.1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70	78.6	112.3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20.7	21.2	102.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135	195	144.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수혜율	35.6	38.9	109.3
			소계	216,800	237,195	
			초등돌봄	113,400	124,013	
지역아동			95,000	104,982		
청소년			8,000	8,200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7	9.9	141.4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35,500	42,470	119.6
안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0만명 당 명)	5.0	4.1	122.0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0.59	0.62	105.1

## 나. 고령화 분야

##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61.2	62.1	101.5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율(%)	64.6	67.0	103.7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가입율(%)	60.8	60.6	99.7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율(%)	35.0	39.2	112.0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세 ~ 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69.0	71.62	103.8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기반 조성	5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67.5	67.5	100.0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수	20만	225,497	112.7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	82.7	83.7	101.2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명)	4만	55,825(신규)	139.6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5.8	5.7	98.3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51.8	근거자료 없음	미평가 대상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천명)	55	15	27.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율	7.0%	근거자료 없음	미평가 대상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수도권) 5.0 (지방) 3.0	(수도권) 5.89 (지방) 3.1	(수도권) 117.8 (지방) 10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노인교통사망률(명)	34	30.2	112.6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노인돌봄 서비스수혜자(만명)	17	25.5	150.4
	학대노인 보호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	24	24	100.0

## 다. 성장동력 분야

##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34.32	34.87	101.6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53.3	62.8	117.8
외국국적 동포· 외국 인력 활용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50,482	44,264	87.7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25	27.7	110.8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31.1	32.4	104.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0.72	0.65	110.8

##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5.20	5.56	106.9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5.1	34.0	103.2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개)	19	17	89.5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2	3	150.0

## 2. 분야별 성과평가 및 가중치에 의한 평가

- 보건복지부에서는 핵심과제 평가에 있어 전체 부문별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소영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2011년 12월에 고시함.
- 전문가(83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3개 영역 각각을 10점 만점으로 하여 가중치를 설정함.
- 가중치 적용의 의미는, 각 부문별로 해당되는 사업의 중요도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부문별 총량적 평가를 하기 위함임.

##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부문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한개 부문의 목표달성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의 확대 및 개선 영역에서만 99.7%의 목표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반면에 가족친화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영역(201.5%)이나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영역(196.7%)에서는 상대적으로 200%에 가까운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이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특성상 본 사업이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낮을 가능성이 있음. 즉, 본 사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학대 피해아동보호율이 그리 높지 않아 전반적인 목표달성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학대피해아동이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이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

- 한편, 개별 핵심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저출산영역의 전체적인 목표의 달성수준을 가늠해 보면, 가중치의 합이 10.000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목표달성률의 가중치의 합을 구하면, 13.339로 나타나, 33.4%(=13.339/10.000 x 100)의 초과달성 수준을 보였음.

&lt;표 9&gt; 저출산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사업명	조정된 목표달성률 (A)	(가중치) (B)	가중치 적용값 {(A/100)*B}
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99.7	(1.147)	(1.143)
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96.7	(1.123)	(2.209)
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201.5	(1.098)	(2.212)
4.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108.8	(0.946)	(1.029)
5.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11.8	(0.950)	(1.062)
6.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15.1	(1.064)	(1.225)
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17.3	(1.142)	(1.339)
8.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141.4	(0.838)	(1.185)
9.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119.6	(0.811)	(0.944)
1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113.6	(0.881)	(1.001)
합계	-	(10.000)	(13.339)

주: 1) 조정된 목표달성률은 두 개 이상의 성과지표의 경우 산술평균을 제시함.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영역에 성과지표가 18개이나 가중치부분에서는 19개임. 여기에서는 가중치중 마지막 영역인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삭제하고 가중치 합이 10이 되도록 다시 만들어 사용하였음.

## 2. 고령화 분야

□ 고령화부문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한 부문의 목표달성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기회제공영역에서만 27.3%의 목표달성율을 나타냈음.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가 상당히 저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저조한 데에는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의향을 보인 고령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선호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지표의 재검토가 요구됨.

- 그리고, 나머지의 영역에서는 100%(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영역)에서부터 125.2%(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영역)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개별 핵심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령화영역의 전체적인 목표의 달성수준을 가늠해 보면, 가중치의 합이 10.000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목표달성률의 가중치의 합을 구하면, 10.093로 나타나, 약 0.9%(=10.093/10.000 x 100)의 초과달성수준을 보였음.

<표 10> 고령화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사업명	조정된 목표달성률 (A)	(가중치) (B)	가중치 적용값 {(A/100)*B}
1. 다양한 고용기회제공	102.6	(1.116)	(1.145)
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105.9	(1.085)	(1.125)
3.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03.8	(0.988)	(1.026)
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	100.0	(0.901)	(0.901)
5.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112.7	(1.097)	(1.236)
6.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101.2	(1.103)	(1.116)
7.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지출 적정화	119.0	(1.098)	(1.307)
8.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제공	27.3	(0.930)	(0.254)
9.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환경 조성	111.2	(0.867)	(0.964)
10.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125.2	(0.814)	(1.019)
합계	-	(10.000)	(10.093)

### 3.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부문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2개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100%이상의 목표달성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 다시 말하면, 목표달성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영역은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

용영역(87.7%)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영역(89.5%)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개별 핵심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장동력영역의 전체적인 목표의 달성수준을 가늠해 보면, 가중치의 합이 10.000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목표달성률의 가중치의 합을 구하면, 10.778로 나타나, 약 7.8%(=10.778/10.000 x 100)의 초과달성 수준을 보였다.

<표 11> 성장동력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사업명	조정된 목표달성률 (A)	(가중치) (B)	가중치 적용값 {(A/100)*B}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109.7	(1.439)	(1.579)
2.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력 활용	87.7	(1.155)	(1.013)
3.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체계 확립	107.5	(1.326)	(1.425)
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방지	110.8	(1.196)	(1.325)
5.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106.9	(1.295)	(1.384)
6. 중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제도 개선	103.2	(1.307)	(1.349)
7. 제품 및 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89.5	(1.191)	(1.066)
8. 국내외 시장 활성화	150.0	(1.091)	(1.637)
합계	-	(10.000)	(10.778)

#### IV.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sup>4)</sup>

##### 1. 전화조사(일반국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일반의 효과성 평가

- 효과성 점수를 살펴보면 각 중영역별 점수를 단순 산술평균했을 경우,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균은 2.55점,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수는 2.59점, 그리고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점수는 2.61점으로 나타난다.

4) 동 부분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조사 2종류를 실시한 것으로 앞의 정량평가 결과와 matching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수치는 영역구분을 막론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효과성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그 중에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lt;표 12&gt; 국민일반의 효과성 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	별로	전혀	효과성 점수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	1.3	14.7	31.1	43.6	9.4	2.55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1.5	17.0	35.8	38.8	6.9	2.67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0.9	10.9	29.8	45.7	12.7	2.42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6	12.3	30.3	46.8	8.9	2.51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3	16.2	33.7	42.7	6.0	2.6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7	14.7	34.9	41.5	7.1	2.62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5	19.0	39.0	34.7	5.9	2.76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1.1	8.9	35.7	45.4	8.9	2.48
고령친화산업 육성	1.9	12.7	37.5	39.7	8.3	2.60

주: 1) 효과성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숫자는 각 범주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것임.

- 중영역별로 살펴보면 저출산 중에서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한 정책의 효과성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가장 문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평가를 살펴보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 성장동력분야와 관련해서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분야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 저출산 정책에 대한 20-30대 국민의 효과성 평가

- <표 13>은 20-30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보여주고 있음.
- 이를 앞의 <표 12>와 비교해 보면 20~30대에서 정책 효과성 평가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세 가지 중영역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지적할 수 있음.
  - 정책의 실수요자인 20~30대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민일반은 육아휴직관련 제도들의 도입이 커다란 정책적 성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이 사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야할 20~30대가 혜택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경험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예를 들어 20~30대는 서구 사회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 한국의 현실이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변화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즉 젊은 층일수록 변화지향적인 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크게 생각하는 성향으로 인해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lt;표 13&gt; 20~30대 국민의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	별로	전혀	효과성 점수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	1.0	11.0	32.7	43.8	11.6	2.46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0.8	11.0	38.3	41.9	8.1	2.5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1.0	6.8	31.4	45.7	15.1	2.33

주: 1) 효과성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숫자는 각 범주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것임.

#### □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50~60대 국민의 효과성 평가

- <표 14>는 50~60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보여주고 있음.
  - 이를 앞의 <표 12>과 비교해 보면 고령사회정책에 대해 50~60대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세 가지 중영역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50~60대의 평가가 아무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들 계층이 고령사회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라 여겨짐. 즉,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부분이나,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부분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의 구축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낮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국민의 전체적인 효과성점수에 비하면 그 증가분이 다른 두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을 고려해야 함. 즉, 정책수혜자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정부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절대적 수치에서는 보통 이하를 기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표 14> 50~60대 국민의 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	별로	전혀	효과성 점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3.4	18.0	25.1	47.4	6.1	2.6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0	22.7	27.9	41.7	5.7	2.7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4	21.3	27.3	42.5	5.5	2.75

주: 1) 효과성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숫자는 각 범주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것임.

## 2. 전문가 설문조사

- 전문가 조사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2011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기업의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중요도(importance) 및 성과수준(performance)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도입하여 분석하도록 함.
- IPA 매트릭스의 각 사분면을 살펴보면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성과수준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노력지속 분야).
- 2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그 성과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중점개선 분야).
- 3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항목들로 성과수준 역시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보완개선 분야).
- 본 영역에 있어서는 타 영역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기는 하지만 정책적 추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보완 및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4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낮은 중요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수준을 보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음(현상유지 분야).
- 본 영역 역시 중요도가 낮다는 것이 정책적 추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타 영역에 비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의 높은 성과수준을 유지 및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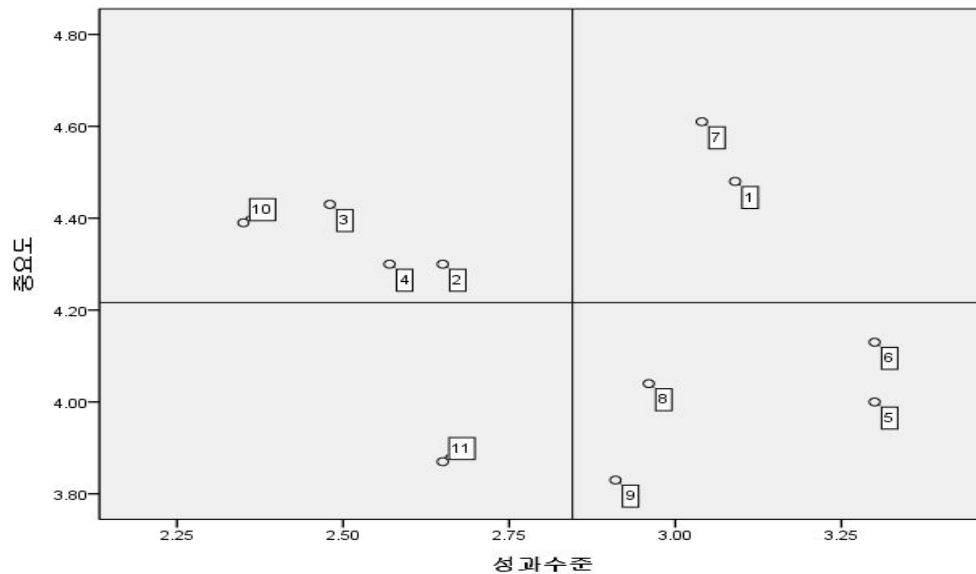
### 가. 저출산 분야 분석결과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수준 IPA 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4.22(5점 만점), 만족도 평균은 2.85(5점 만점)로 나타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확대·개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분야.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분야,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표 15> 저출산 분야 종합

구분	중영역	소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일과 가정의 양립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3.09	4.48
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2.65	4.3
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2.48	4.43
4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2.57	4.3
5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3.3	4.0
6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3.3	4.13
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04	4.61
8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2.96	4.04
9		아동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2.91	3.83
1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2.35	4.39
11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2.65	3.87
계(종합)			2.85	4.22

[그림 1] 저출산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나. 고령화 분야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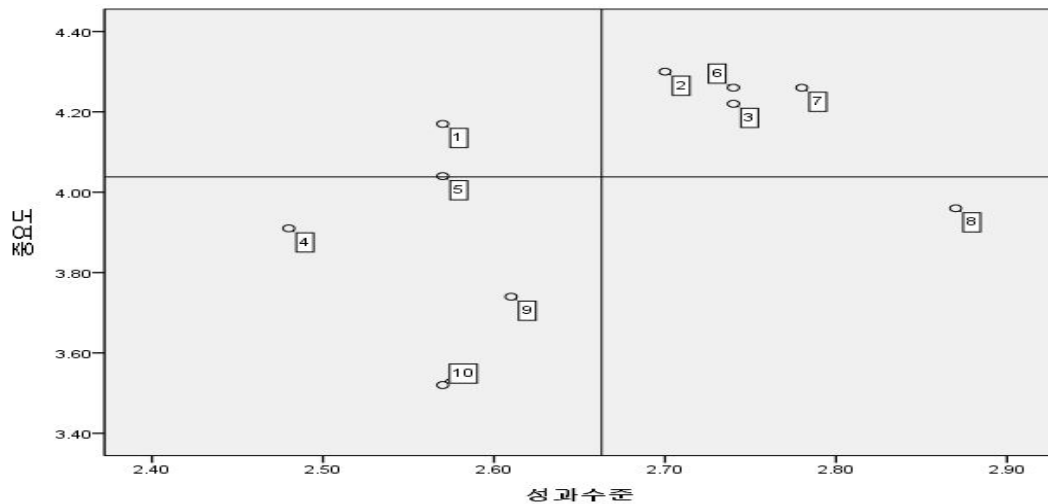
□ 고령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수준 종합 IPA 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4.04(5점 만점), 성과도 평균값은 2.66(5점 만점)으로 나타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표 16> 고령화 분야 종합

구분	중영역	소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2.57	4.17
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2.70	4.30
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2.74	4.22
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2.48	3.91
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2.57	4.04
6		노약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2.74	4.26
7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2.78	4.26
8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2.87	3.96
9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2.61	3.74
10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2.57	3.52
계(종합)			2.66	4.04

[그림 2] 고령화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다. 성장동력 분야 분석결과

□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수준 IPA 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3.70, 만족도 평균값은 2.63으로 나타남.

- 중요도 가장 높은 분야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성과수준 가장 낮은 분야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분야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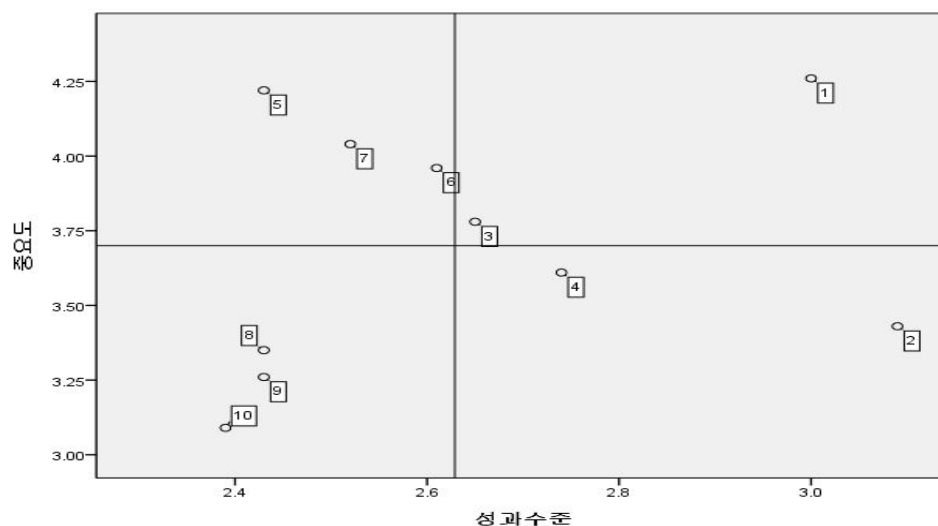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국내·외 시장 활성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외국 국적 동포·외  
국 인력 활용

<표 17> 성장동력 분야 종합

구분	중영역	소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잠재인력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3.00	4.26
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3.09	3.43
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2.65	3.78
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2.74	3.61
5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43	4.22
6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2.61	3.96
7		중장기 재정·외국인력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2.52	4.04
8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2.43	3.35
9		국내·외 시장 활성화	2.43	3.26
10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2.39	3.09
계(종합)			2.63	3.70

[그림 3] 성장동력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V. 종합평가

### 1. 저출산 분야

- ☐ 성과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을 통해 살펴본 성과는 대부분의 세부과제에서 100%이상의 달성률을 보여 매우 흡족할 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과제의 경우 약간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과제수혜대상자들의 만족도로 성과를 측정하는 과제들의 경우 애초의 계획대로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연간 접속건수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지표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100%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라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핵심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18개 지표의 목표 달성률도 하나를 제외하고는 100%를 넘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육아휴직사용후 1년이상 고용유지율과 같은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에 있어서 분모가 산전후휴가자수라고 나와 있으나 모든 출산근로자수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임.
  
- ☐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하여 저출산 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면 5점 만점을 기준(평균 3점)으로 2.4에서 2.7점 정도를 기록하여 약간 낮은 성과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중영역별 성과점수에서 차이를 보여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이 가장 높은 2.7점을 기록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가 2.5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 이에 반해 전문가조사에서 중영역별 성과수준에 대한 평가가 2.4에서 2.9점을 기록하여

평균인 3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인식 성과평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영역 수준에서 성과점수를 살펴보면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이 가장 높은 2.9점을 기록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가 2.8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2.4점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과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 영역들에서 전문가들은 일반국민들보다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은 같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문가들도 일반국민들과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역의 소영역인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에 대한 평가가 평균을 넘어 3.3점을 보여주지만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서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은 가장 낮은 2.4점을 기록하여 앞서 일반국민 성과인식에서 제시한 설명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줌.

## 2. 고령화 분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평가 중에서 정량평가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각 사업의 목표달성률 차원에서 평가해 본 결과, 몇 가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90%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여기에서 목표달성률이 부진했거나, 또는 상당히 미진했던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사업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관련법의 개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진한 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나, 관련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고, 향후에도 사업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업폐기, 또는 사업추진노력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의 차이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지만,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제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하 국민인식 조사)고령화부문에 대한 성과정도를 물어본 결과,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고령화대응체계 구축’부문에서의 부정적 응답률이 55.7%,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부문에서는 48.7%,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부문에서는 48.6%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고령화대응체계 구축’부문에 대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각 부문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응답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보장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장, 노인권익보장을 지정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평가를 해보면, 각 3대 부문(저출산부문, 고령화부문 및 성장동력부문)간 평균점수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못함. 이는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전체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하 전문가 조사)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화부문의 중영역에 대한 성과평가수준을 보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음.

- 각 사업의 중요도측면과 아울러 평가해 보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부문이 중요도도 높은 만큼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요약하면, 일반국민 및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정성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중심이고, 특히 전문가집단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 성과는 대체적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즉, 전문가집단에서 중요도를 감안하여 성과수준을 평가해 볼 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노년기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 및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실제로 피부



로 느끼는 사업성고가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사업성고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비롯하여 향후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제도개선보다는 관련법의 개정이나 신설을 전제로 하거나, 사회적 환경 및 분위기자체를 조성시켜야 하는 부문에서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3. 성장동력 분야

- 2011년도 성장동력 분야 정책들의 성과는 성장동력분야 90개 지표와 국민인식 전화설문조사, 그리고 성장동력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 성장동력분야 90개 지표 중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지표는 82개로 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율은 91.1%, 비예산 분야를 제외한 예산분야의 90% 이상 예산집행률은 94.1%로 높은 수준을 기록. 그러나 정책성고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별로이다”가 평균 39.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나서 국민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는 정책의 중요도는 5점만점에 평균 4.17, 만족도는 2.57로 조사됨.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의 성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성과지표 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93.1%, 예산집행률 91.3%). 정책성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 “별로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나타나 타 영역에 비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도 중요도(3.83) 대비 성과수준(2.74)이 높게 나타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의 성과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정책의 추진실적 목표달성률이 낮았고(성과지표 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87.5%, 예산과제의(비예산과제 제외) 예산집행률 100%), 정책성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별로이다”가 45.4%,

“보통이다”가 35.7%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조사에서도 중요도(4.09)대비 성과수준(2.52)이 낮게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성과 역시 비슷한 수준임. 정부정책의 추진실적 목표달성률(성과지표 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87.5%, 예산과제의 집행률 100%),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별로이다” 39.7%, “보통이다” 37.5%로 비슷한 수준. 전문가 조사에서는 다른 중영역 분야에 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역의 중요도(3.52)와 성과수준을 낮게 평가.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할 수 있으나 인식도가 아직 낮고, 성과면에서도 체감도가 낮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VI. 결론

- 본 보고서에서 발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11년 성과평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정부의 시행계획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의 모든 영역의 정책들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국민인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살펴본 성과는 상이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은 산술평균이 각각 2.55점, 2.59점, 그리고 2.61점으로 나타나 중간수준(3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조사에서는 순서대로 3.22점, 3.00점, 그리고 2.57점을 기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을 제외한 분야에서 중간수준(3점)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국민인식과 전문가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평가지표도 향후에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음.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치밀하면서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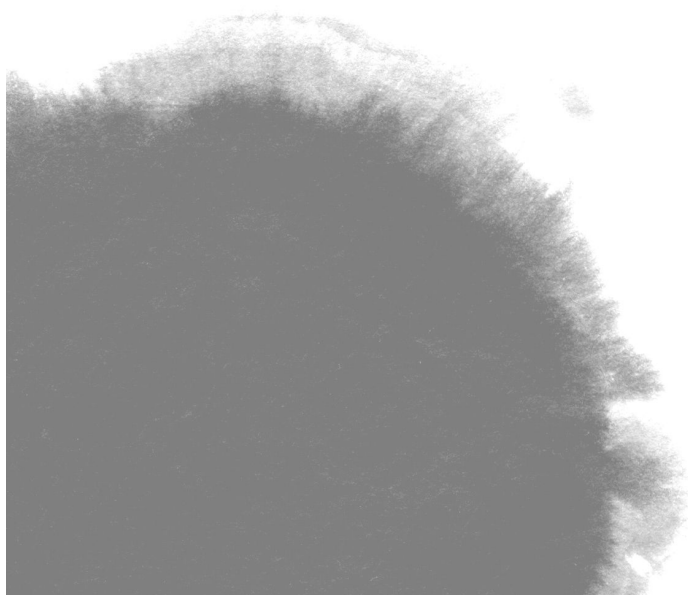
- 또한, 성공적인 정책의 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정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한 대국민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장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보다 나은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11년은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며, 본 보고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를 처음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성과관련 보고서들이 정부의 시행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성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인식조사와 전문가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다층적인 성과평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임.
  - 더불어 새로 시작되는 기본계획 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특히 성과평가에 있어 측정의 문제를 되새겨 봄으로써 향후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토대를 닦은 측면이 있음.

\*핵심주제어(Key Word)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1장

## 서론





# 제1장 서론

##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고, 그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제1차 기본계획의 종료를 앞두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음.
-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실행 중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2008년도에 수정보완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서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가를 평가한 후 차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2011년도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2011년도 성과평가의 기준 및 핵심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개발하였음.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음.

- 본 보고서는 2011년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즉, 제2차 기본계획의 실시 초년도인 2011년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음.

## 제2절 평가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의 평가방법은 2가지의 형태로 진행되었음.
  - 첫 번째의 방법은 정량평가로 2011년도에 수립하였던 성과목표치와 실제로 추진하여 나타난 달성치를 비교하여 목표량 대비 달성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률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여기에서 평가의 대상은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 부문 등에 해당하는 총 2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 부문 중에서 핵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을 선정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성과평가로 총 45개가 작성되어 있음.
    - 핵심과제 45개의 성과지표 중 세부과제(231개) 내의 성과지표와 동일한 경우가 있음.
    - 이 중 몇 개의 과제는 목표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상에서 장기적으로 성과 및 추이를 보는 핵심과제의 특성과 개별과제들의 특성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달성수준을 개별적으로 접근함.
  - 두 번째의 평가방법은 정성평가로 2011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일반국민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먼저,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E-mail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다만, 인식조사에는 설문조사기법의 제약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는 중영역(9개)을 중심으로 설문하되,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한 내용에서는 각 중영역별 소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하여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였음.
  -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설문하여 성과수준과 중요도수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였음.
- 평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lt;표 1-1&gt;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별 및 성과평가방법별 해당사항 (저출산 분야)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	○
1-1-1. 육아휴직제도개선				○
	▪육아휴직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		
1-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여건 조성	○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1-1-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		
	▪가족간호휴직제 활성화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
1-2-1. 유연근로제 확산				○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		
	▪시간제근무 활성화	○		
	▪시간제일자리 확산·지원	○		
1-2-2. 유연근로형태도입 여건조성				○
	▪유연근무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
1-3-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		
1-3-2.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 마련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		
1-3-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①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②	○		
	▪공무원 정상근무관행 확산·초과근무관리 강화	○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
2-1-1.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		
	▪미입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		
2-1-2.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	○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저소득층 중가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		
2-1-3.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
2-2-1.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		
	▪자연분만 수가인상 등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		
2-2-2.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지원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의 단계적 확대	○		
2-2-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2-2-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
2-3-1.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①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②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③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		
2-3-2.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2-3-3.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다자녀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		
2-3-4.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2-4-1.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		
2-4-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		
2-4-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유치원 종일반 확대	○		
	▪저소득층, 맞벌이 입소 우선순위 부여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		
2-4-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		
2-4-5.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		
2-4-6.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		
	▪초등 돌봄교실 확대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①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②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①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②	○		
	▪나홀로 아동 가정돌봄 서비스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
3-1-1.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3-1-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3-1-3.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		
	▪두드림 확대 보급작업계획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
3-2-1.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확대 실시	○		
3-2-2.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
	▪휴먼네트워크 확대	○		
3-2-3.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실차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확대	○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
3-3-1.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②	○		
3-3-2.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①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②	○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	○		
3-3-3.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3-3-4.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②	○		
3-3-5.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
	▪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		
	▪ 흡연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		
	▪ 음주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		
	▪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	○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	○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3-4-1.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3-4-2.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		

&lt;표 1-2&gt;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별 및 성과평가방법별 해당사항 (고령화 분야)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
1-1-1. 고령자 고용연장				○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인원)	○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사업장)	○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		
	▪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		
1-1-2.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		
	▪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기관육성)	○		
	▪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직업훈련)	○		
	▪ 중고령자 대상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참여)	○		
	▪ 중고령자 대상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취업)	○		
	▪ 중고령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3.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예산증가율)	○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인력풀확보수)	○		
	▪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회적 기업 육성	○		
	▪ 시니어 창업지원	○		
1-1-4.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		
	▪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①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②	○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		
1-1.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
	▪에이지 캠페인 실시(고령자고용강조주간운영)	○		
	▪에이지 캠페인 실시(언론홍보)	○		
	▪에이지 캠페인 실시(이벤트실시)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
1-2-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기초연구)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해외대체투자)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	○		
1-2-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확대	○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1-2-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교육실시)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사업장수)	○		
	▪개인연금 활성화(사망보험금 설정의무 완화)	○		
	▪개인연금 활성화(무배당 세제적격 연금보험 허용)	○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
1-3-1.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설문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지원실적)	○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의료법개정안)	○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표준안개발)	○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원격의료)	○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
1-4-1. 노후설계 기반 조성				○
	▪노후설계 기반조성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		
1-4-2.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협의회 운영)	○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2-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
2-1-1.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		
2-1-2. 일자리 사업 체계화				○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
2-2-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2-2-2.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		
	▪ 연기연금 제도 활성화	○		
2-2-3.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	○		
	▪ 농지연금 도입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2-3-1.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	○		
	▪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		
2-3-2.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		
	▪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치매환자 인식개선			
2-3-3.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 예방적서비스 공급역량 강화(시범사업추진)	○		
	▪ 예방적서비스 공급역량 강화(지역사회모형개발)	○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직무교육)	○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기관평가)	○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2-3-4.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 노인 운동사업 활성화	○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지도자배치)	○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대회개최)	○		
2-3-5.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
2-4-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클럽수)	○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프로그램)	○		
	▪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		
	▪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구축 ①	○		
	▪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구축 ②	○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2-4-2.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②	○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 문화바우처 지원	○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프로그램)	○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수혜자)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	○
3-1-1.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1-2.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도시철도이동편의시설확충)	○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저상버스도입보조)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②			
	▪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
3-2-1.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
	▪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①	○		
	▪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②	○		
	▪ 농촌 가사도우미	○		
3-2-2.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노인학대사례종결률)	○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학대피해노인 정서적안정 비율)	○		
3-2-3.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		
	▪ 노인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		

&lt;표 1-3&gt;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별 및 성과평가방법별 해당사항 (성장동력 분야)

중·소· 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
1-1-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중앙부처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지자체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국공립대 여성교수임용률)	○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여성 교장·교감 임용률)	○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		
	▪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집합교육)	○		
	▪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사이버·원격교육)	○		
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
	▪ 청소년, 여대생 등에 대한 직업·진로지도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①	○		
	▪ 청소년, 여대생 등에 대한 직업·진로지도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②	○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①	○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②	○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	○
1-2-1.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		○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1-2-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 (외국인 콜센터 신설)	○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① (고용허가제 정착 제도개선)	○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① (숙련 생산기능 F-2 인력 지침 개정)	○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②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② (기능테스트 확대 여부)	○		
1-2-3.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학생 학습역량강화)	○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학생 학습역량강화)	○		
	▪ 체류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①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②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
1-3-1.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중·소·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다양한 작업습관검사 개발 및 진로작업정보 제공 확대①	○		
	▪다양한 작업습관검사 개발 및 진로작업정보 제공 확대②	○		
	▪학교 취업지원기능 강화(대학취업지원평가지표)	○		
	▪학교 취업지원기능 강화(취업지원관 채용인원)	○		
1-3-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주훈련 직무능력 향상정도)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훈련참여자 훈련성과조사)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훈련참여자 훈련만족도조사)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능력개발용자 지원 수혜자 만족도)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 (중소기업 학습조작화 지원)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향상지원)	○		
1-3-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체제 구축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체제 구축 (계약학과 개설 확대)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평생학습 선도 중심대학)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성인학습자)	○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Competency Map)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국가기술자격출제기준)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출제 및 검토 현장전문가 확대)	○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
1-4-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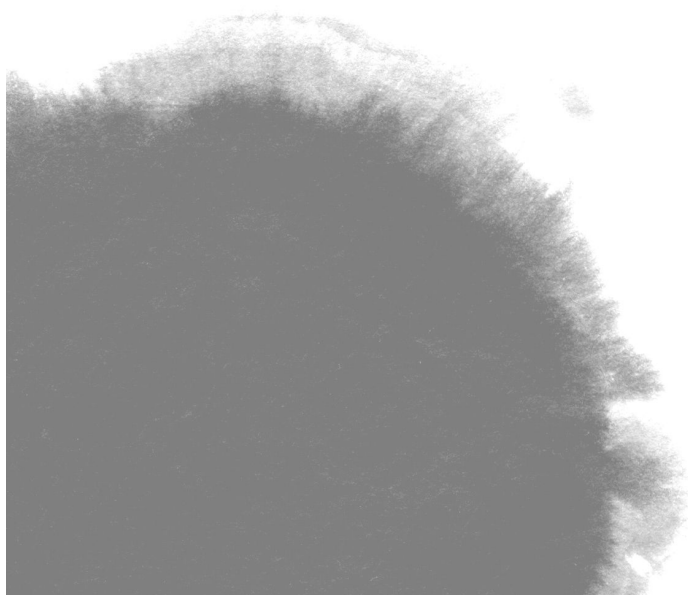
중·소· 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1-4-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강화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
2-1-1. 교육분야제도 개선				○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		
	▪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마련	○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소규모학교 통폐합)	○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학교수용시설재정투자심사강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
2-2-1. 주택분야제도 개선				○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		
2-2-2. 금융분야제도 개선				○
	▪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		
	▪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펀드투자규제완화검토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
2-3-1.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GDP 대비 국가채무)	○		
	▪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관대대상지 대비 GDP)	○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장기재정전망)	○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재정통계개편)	○		
	▪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
3-1-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3-1-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확대	○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3-1-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
	▪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제도운영추진)	○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서비스 질 향상교육)	○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법적근거 마련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3-2-1. 국내 수요기반 확충				○
	▪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우수제품홍보)	○		
	▪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		
3-2-2.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중·소· 세부영역	세부사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		
	▪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		



# 2장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평가





##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평가

### 제1절 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저출산 정책의 기본목표는 제2차 기본계획 상 점진적 출산율 회복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확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주요 전략이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주요 정책 대상이 저소득 가정이었던 반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였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은 주로 보육지원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인 접근임.
- 저출산 분야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음.

####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의 3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 [1] 육아휴직제도 개선

##### □ 육아휴직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육아휴직정률제,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육아휴직정률제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정책제에서 육아휴직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상한선 100만원, 하한선 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40%에서 15%를 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 육아휴직급여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2011년도의 추진실적을 전체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 중 육아유지급여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당초 목표치인 53.0%에 비해 추진실적이 64.3%로 초과달성(121.3%)하였으며, 예산집행은 2,763억원 중 2,763억원을 집행하여 1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모성보호 급여를 지급하였음(2011년 12월 기준).
  - 육아휴직 급여 58,137명, 276,261백만원 지원
  - 산전후휴가 급여 90,290명, 232,915백만원 지원



#### □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건강보험료의 감면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 사업계획 당시 약 2만 5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연간 13억 원 정도 추가 경감하여 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07년 7월~2008년 6월 기준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으로 당시 육아휴직자수는 25,124명이었으며, 경감보험료는 64억원, 고지보험료는 64억원이었음.
- 2011년 11월 육아휴직자 경감률을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한 보험료경감 고시 개정이 이루어져 당초 목표치를 달성(100.0%)하였음.
  - 연간 약 5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약 49억원의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혜택 예상

####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 정부는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대체인력지원체계개발의 일환으로 사업장 내 상시대체인력 운영과 직업훈련기관의 연계 등을 지원
  - 사업주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체인력을 소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포함한 모성보호 홍보자료를 배포하려고 하였음.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포함한 모성보호 홍보자료를 2011년 3월 3만부, 11월에 3만부 등 총 6만부를 제작하여 지방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음. 또한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음(2011년 11월 기준).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사업은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지침 제정 및 홍보자료 배포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lt;표 2-1&gt;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수급자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53	64.3	121.3	2,763	2,763	100.0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확대	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50%→60%로 조정	고시개정	고시개정 (‘11.11월)	100.0	비예산		
대체인력지원 체계개발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지침 제정	지침제정	지침시달	100.0	비예산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를 부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가정양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하지만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업무숙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완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도입 사업장이 표본사업장수에 비해 6.8%로 당초 목표치인 5%에 비해 초과달성(136.0%) 하였음.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9월 9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관계 부처 협의(4.22~5.4) → 입법예고(5.13~6.1) → 자체 규제심사(6.8~6.14) → 규제위 규제심사(8.16) → 법제처 법제심사(8.29) → 차관회의(9.2) → 국무회의(9.6) → 국회제출(9.9)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음(2011년 12월 29일 기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여건 조성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함으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분을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함.
- 이러한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

보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함.
-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함(예: 주 40시간 → 주 30시간 단축시  $10/40 \times$  육아휴직급여액)
-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함.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의 4%인 2,81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 고용보험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수는 당초 목표치인 2,810명에 비해 39명으로 달성률이 미흡(1.4%)하였음. 예산집행은 39억원 중 18억원을 집행하여 46.2%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2011년 9월 22일 시행).
- 201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39명에게 18백만원 지원
- 국회 교착 상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보험법 통과 및 시행이 지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이 목표치보다 낮게 나타남.

#### □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고 고용안정 및 소득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또한 기업의 측면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통해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였음.
- 근로시간저축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시 꺼내어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한 이후에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임.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당초의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였음(2011년 4월 14일 기준).

&lt;표 2-2&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성화	근로시간 단축도입 사업장(%): 도입사업장수/표본사업장수	5%	6.8%	136.0	비예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여건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지수	2,810명	39명	1.4	39	18	46.2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 제출	개정안 제출	100.0	비예산		

## [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 □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등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하였음.
- 이는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와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시 등 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임.
- 하지만 산후 45일은 연속사용토록 하였음.
- 2011년 산전후휴가분할사용 허용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치를 달성(100.0%) 하였음. 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급여에 관한 예산은 2,330억원이 산정되었으며, 그 중 2,330억원을 집행하여 1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1년 9월 9일 기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2011년 12월 30일 기준).

##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배우자 출산시 남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추가기간은 무급으로 하되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급.
- 최근 공무원의 경우 유급 3일에서 유급 5일로 확대(2010년 7월 15일 기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당초 목표치를 달성(100.0%) 하였음.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2011년 9월 9일 기준).
- 관계 부처 협의(4.22~5.4) → 입법예고(5.13~6.1) → 자체 규제심사(6.8~6.14) → 규제심사(8.16) → 법제처 법제심사(8.29) → 차관회의(9.2) → 국무회의(9.6) → 국회제출(9.9).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2011년 12월 29일 기준).
- 시행 시기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포 6개월 후이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포 1년 후.

#### □ 가족간호휴직제 활성화

- 본 사업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해,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급으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간호 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자 함.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2011년 9월 9일 기준) 이 개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당초 목표치를 달성함.
-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포 6개월 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포 1년 후 시행토록 함.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 시행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누락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이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임신 및 출산을 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자 함.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로 당초 목표를 100.0% 달

- 성.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예산 19억 원 중 12억 원을 집행하여 63.2%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예산집행률 저조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대상자(파견/계약)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재계약은 고용주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년 초과 근무 시 근로자 전환 규정(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의해 고용주의 재계약 유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2011년 9월 9일 기준).
  - 관계 부처 협의(4.22~5.4) → 입법예고(5.13~6.1) → 자체 규제심사(6.8~6.14) → 규제위 규제심사(8.16) → 법제처 법제심사(8.29) → 차관회의(9.2) → 국무회의(9.6) → 국회제출(9.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2011년 12월 29일 기준).
  -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개선을 위하여 현행 근로 및 파견 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규정을 근로 및 파견 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규정으로 개선함(2011년 1월 1일 시행).
  - 2011년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으로 435명의 근로자에게 1,148백만 원을 지원함.

&lt;표 2-3&gt;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전후휴가분 할사용허용	근로기준법개정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국회제출	100.0	2,330	2,330	100.0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국회제출	100.0	비예산		
가족간호휴직 제활성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국회제출	100.0	비예산		
비정규직여성 근로자 모성보호강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국회제출	100.0	19	12	63.2

##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1] 유연근로제 확산

#### □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유연근무제 확산)

- 2011년도 시행계획에서 본 과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1-11-①과 1-11-②) 2011년도 추진실적보고서에는 하나로 통합되었기에 본 보고서에서도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함.
- 본 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 시대에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1-11-①), 공공부문의 선도적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해 민간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1-11-②).
  - 이러한 목적 하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유연근무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었음 (1-11-①).
  - 이와 더불어 2010년 2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제 근무제 시범운영 실태조사 및 적합모델 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또한 행정안전부 등 협력을 통해 유연근무제 기관별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미진한 기관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전파를 기획하였음 (1-11-②).
- 유연근무제 활용인원은 2010년 말 5,972명에서 2011년 12월말 기준 총 21,021명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유연근무제 활용인원 대비 당해연도 활용인원의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살펴보면, 당초 목표치인 10%에 비해 252%를 달성함으로써 사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유연근무제 활용수기 우수작 9편을 ‘공감코리아’에 연재(2011년 1월7일 ~1월 31일) 하는 등 2011년도 사업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음.
  - 유연근무제 운영에 대한 직접 근거 마련 및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금지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011년 7월 4일 기준) 하는 등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2011년 8월 5일) 유연근무제 도입 1주년을 맞이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건의사항 및 의견들을 수렴하였음.

#### □ 시간제근무 활성화

- 행정안전부는 가사와 업무의 병행이 가능한 시간제근무를 전 정부적으로 확산하여 출산·육아 등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무공유제(job sharing)와 연계하여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시간제 근무자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시간제 근무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시간제 근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음.
  - 호봉승급 시 근무시간에 비례하던 방식에서 시간제 근무 최초 1년은 100% 반영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2011년 1월)하였으며,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줄어든 시간만큼 업무량을 조정하도록 임용규칙을 제정하였음(2011년 12월).
  - 시간제 근무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제 경력직 채용에 따른 조직 및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 부처 인사·복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5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시간제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운영매뉴얼을 7월에 배포함.
- 당초 연구용역 추진 시 시간제 근무자 및 기관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 운영성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성과지표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적합직무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으로써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 현재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 등 시간제를 대체할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가 시행중이며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되어 ‘시간제근무활성화’를 저출산 대책으로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감소하였음.

#### □ 시간제일자리 확산·지원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일자리나누기,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컨설팅 지원 및 신규 고용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일·가정 양립형 시간제 근로 확산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시간제일자리확산 컨설팅 사업장수를 당초 100개소 목표에서 실제 104개소에서 실시하였으나, 예산집행은 67억원 중 18억원을 집행하여 26.9%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예산집행률 저조는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사업주의 신규채용건수의 부족 및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야근 금지 등 추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하고, 사업장 공모·선정·승인·지원금지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일 소요로 인해 '11년도 실적이나 '12년도에 집행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및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104개소에서 실시함
- 새로운 직무개발과 장시간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 월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함.
- 시간제근로자를 283개소 1,457명을 신규로 채용함

<표 2-4> 유연근로제 확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유연근무제 확산)	유연근무제 활용인원 증가율 ((당해년도 활용인원 - 전년도 활용인원)/전년도 활용인원×100)	10%	252%	2,520	비예산		
시간제근무 활성화	시간제근무 운영성과 만족도(시간제근무자 및 기관인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70점	0	0	비예산		
유연근로 시간제확산	컨설팅 실시 사업장수	100개소	104개소	104	67	18	26.9

## [2]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 ☐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 고용노동부는 유연한 근로형태 촉진을 위한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도입 여건을 조성하고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과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간담회·워크숍을 4회 개최함으로써 원래 목표인 3회 개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간제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FT를

- 통해 조정하였으며,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산정시 0.5인으로 산정하도록 함.
- 또한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정책의 취지 설명 등 이해도를 제고
- 시간제근로 도입 우수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간제근로가 질 낮은 임시직 일자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였음.

#### □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 행정안전부는 스마트워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추진,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스마트워크 확산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센터의 시범운영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스마트센터 이용자 만족도가 75.2점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치인 70점을 웃돌아 본 과제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음. 예산집행은 40억 원 중 40억 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 집행률을 보임.
- 2010년 시범 구축(2개소)에 이어 2011년도 8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였으며, 36개 기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하여 저변을 확대하였음.
- 스마트워크 시범기관의 체험근무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3%가 센터 근무에 만족하고 83.6%는 동료에게 스마트워크를 권하겠다고 답변하여 스마트워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스마트워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 여성가족부는 유연근무제의 개념과 필요성 홍보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광고를 추진하고 기업·노동·여성계 등과 유연근무제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CEO 포럼과 같은 공동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유연근무제 시범 운영 등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유연근무제 및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시범운영이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족친화포럼운영』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중심의 유연근무제, 가족친화경영 등의 확산을 유도하였음.
- 가족친화인증기업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1만 5천부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
- 민간 부문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하여 10개 기업을 대상에서 시범 운영함.

&lt;표 2-5&gt;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결과보고 간담회·워크숍 개최실적	보고 여부 3회	보고 (4.20) 4회	100.0	비예산		
스마트워크 활성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70점	75.2점	107.4	40	40	100.0
민간기업 유연근무제 시범운영	시범운영 민간기업수	10	10	100.0	비예산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직장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관리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장

수와 융자지원 사업장수에서는 목표달성을 초과하였으나 인건비지원 사업장수와 중소기업 운영비지원 사업장수에서는 목표에 약간 미달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예산집행은 370억원 중 333억원을 집행하여 90%의 예산 집행률을 보임.

- 이 중 목표달성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2011년도 시행 초기에 따른 홍보부족과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에 따른 탈락 등 수요 미충족 발생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의 수가 1/2 이상일 것 등.

- 이에 대해 이러한 삭감지급규정의 완화를 추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정 개정사항으로 2012년 상반기에 추진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44개소, 유구비품비 60개소로 11,057백만 원을 지원
- 8개 사업장에 1,326백만 원의 설치용자 지원
- 229개 사업장에 21,680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 45개 사업장에 573백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함.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보육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일하는 여성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들이 없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1년 보육실 설치가능 층수를 완화하고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직장보육시설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는 등 당초의 과제목표를 달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2011년 4월 7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층수를 3층에서 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1년도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하여(2011년 1월 기준) 인근놀이터 인정기준을 완화하였음.
- 의무사업장별 접근방식 다양화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였음.

####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의무이행 강제조항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제 수단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공포함으로써(법률 제 11144호, 2011년 12월 31일 기준)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음.

<표 2-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장수	41	44	107.3	370	333	90.0
	직장어린이집 용자지원	직장어린이집 용자지원 사업장수	6	8	133.3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사업장수	261	229	87.7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사업장수	65	45	69.2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보육시설 설치가능층 수 완화방안 마련	보육시설 설치층수 (3층 → 5층)	보육시설 설치층수 완화	보육시설 설치층수 완화 (3층 → 5층)	100.0	비예산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이용가능 차도(왕복 2차선)	인근 놀이터 안양준 완화	왕복 2차선 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 놀이터 이용 가능	100.0			
	접근방식 다양화를 통해 직장보육시 설 활성화	실태조사 실시, 분석, 독려	실태 조사실시 (2회)	실태조사실시 (2회)	10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제수단 관련 입법추진	영유아보육법 개정	영유아 보육법 개정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관련 법률 개정 (2011.12.31.)	100.0	비예산		

## [2]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 마련

- 여성가족부는 기업이 자사의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필요정보제공 및 자문 등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였음. 이를 위해 기업의 규모·업종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인증기준 개선 및 가족친화 경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가족친화 인증제에 대한 홍보강화 및 인식개선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 등 제도를 개선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관심기업 및 전문가 간 협의체인 ‘가족친화 포럼’을 창립 및 운영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
  - 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등급제를 폐지하며 심사비·심사일수 축소 등 고시개정함(여성가족부 고시 2011-14호:15호).
  - 재평가 및 유효기간 연장 심사 간소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함(2011.4.6 시행)
  - 가족친화포럼 출범(3.2) 및 회원 워크숍 실시(6~12월, 총 3회)로 가족친화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

###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및 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친화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중기청·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를 추진.
  -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홍보, 가족친화 인증표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목표치인 1건을 넘어 2건(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및 가족친화 우수기업 및 기관 정부포상 수여)을 발굴함으로써 기존의 목표를 초과달성.
  - 조달청, 국방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가점 부문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추가하였으며 가족친화 우수기업 및 기관 정부포상을 신규로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를 추진.
  - 주요 경제일간지 및 주간지 가족친화인증신청을 홍보하고 대국민 광고를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 인증제 및 인증기업을 홍보하였음.

##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 및 인증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상시적·안정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인증기관 등 사업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는 등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음. 예산집행은 8억 원 중 8억 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인프라를 구축.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제를 추진하고 가족친화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 또한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기업의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음(2011년 12월 30일 기준).

&lt;표 2-7&gt;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	가족친화인증기준 (여성가족부 고시 2010-1)개정	고시개정	고시개정 (여성가족부고시 2011-14호, 2011.4.1시행)	100.0	비예산		
	가족친화 포럼 활동	가족친화 포럼창립	가족친화포럼창립 (2011.3.21)	100.0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	인센티브 추가 제공	신규1건 추가	신규2건 추가	200.0	비예산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지정	지정(2.18)	100.0	8	8	100.0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법률 개정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12.30국회통과)	100.0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인증신청 기업수 80개소	인증신청기업 123개소	153.8			

###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 노사정은 고용창출 기반 확대 및 생산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단축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2011년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감독을 강화하며 근로시간 줄이기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나, 연간 근로시간이 과제 목표인 2,030시간보다 많은 2,111시간으로 나타남. 예산집행은 9억원 중 8억원을 집행하여 88.9%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도입 및 제도 정착을 추진하였음.
  -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확대.
  - 근로시간감독기동반 및 근로시간개선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근로시간 감독을 강화함.
  - 근로시간줄이기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줄이기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근로시간 줄이기를 지원함.
- 근로시간 줄이기는 오래된 근로관행·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단시간 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사업체 근로시간 점검 등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근로시간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룩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 □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가족사랑의 날 참여 가족 및 기업의 수가 당초 성과 목표인 1천 가족, 500기업을 넘어서서 1,100가족, 510기업에 이르러 과제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작곡가 방시혁과 김정인 어린이의 가족사랑품앗이 참여로 가족송을 제작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무료 CD를 배포하였음.

#### □ 공무원 정상근무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강화

- 공무원 초과근무 관리강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



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 조직담당부서에 매월 통보하여 내역관리를 하고자 하였음. 또한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해 성과연보 등급결정시에 불이익을 조치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초과근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분석하고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협조요청을 시행하는 등 지침 미이행 기관 및 부당수령 기관에 대한 관리강화가 이루어져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초과근무를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 지표로서 각 부처 평가에 활용.
- 운영실태 점검결과 각 부처 공유 및 재발방지 강구 등 관리강화 요청.
- 초과근무대상이 50명 이상일 경우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명령권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제도관련 부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관련 평가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재정인센티브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함.
- 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시 저출산·고령화 지표 평가를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이루었음.
- 저출산·고령화 관련 평가지표를 중점과제 분야에 포함시키고 가중치 비중을 2010년 14.4점에서 2011년 15.8점으로 조정.
- 저출산·고령화 시책 평가 우수 지자체에는 타 평가분야 우수지자체보다 재정인센티브를 1.5배로 확대 지급.

&lt;표 2-8&gt;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근로시간줄이기	연간근로시간	2,030	2,111	0	9	8	88.9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	가족사랑의날 참여 가족 및 기업의 수	1천가족 500기업	1,100가족 510기업	107.0	비예산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	초과근무 관리강화 대책 이행여부 점검·평가	지침 미이행 기관 및 부당수령기관 에 대한 관리강화	지침 미이 행기관 및 부당수령기 관에 대한 관리강화	100.0	비예산		
출산장녀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제공	평가지표 가중치 비중 상향 조정 및 제정 인센티브 제공	가중치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가중치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100.0	비예산		

##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1]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부여 하는 등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주거비용 경감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국민주택기금 이용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무주택요건을 완화하도록 업무매뉴얼을 개정(2011년 2월 17일)함으로써 과제의 목표를 달성.
  - 소득요건을 주택구입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전세입주시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무주택요건도 완화하여 6개월이상 무주택지를 대출신청 시 무주택자로 변경.

##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자립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여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조기출산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11년 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지원방안을 결정하였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2012년 1분기 중 관련 규정 개정완료 후 시행 예정.
  - 최초 입주지정기간 3개월 전까지 공급물량의 20% 이상이 임대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지원방안 결정.
- 다른 사회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책추진 필요에 따라 지원방법·수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서 2012년 1분기 중 관련규정 개정완료 후에 시행 예정하도록 함.

&lt;표 2-9&gt;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신혼부부대상 주택자금 지원확대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	100%	100%	100.0	비예산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지원	규정 개정 여부	100%	0%	0	비예산		

## [2]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 □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

- 국방부는 군 복무중 배우자가 출산한 현역병사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군 입대 전 유자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역별 복무중 배우자 출산 시 희망지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을 위한 병역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2011년 11월 25일 시행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
- 종전에는 입대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입대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 군 복무 중 배우자의 자녀 출산으로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이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병역법령 정비 완료.

### □ 학생부부를 위한 국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혼자 학생의 학업 및 가정생활을 위한 대응기반 조성으로 국립대학 기숙사내에 기혼자실을 확대하여 신규 기숙사 건립 시 수용규모의 5%수준으로 기혼자실 우선 설치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국립대학 BTL 기숙사 확충 계획을 추진하여 2012년 국립대학 BTL 기숙사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민투심의 확정 및 민자 적격성 평가 수행을 2011년 5월 기준으로 완료하여 국립대학 BTL 기숙사 한도액을 2011년 6월 기재부에 요구 및 국회에 2011년 10월에 제출함.
- 본 내용의 기혼자 기숙사는 기존의 기숙사가 아닌 새롭게 건설되는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혼자 기숙사(방 2개 이상의 구조로) 5% 생성하는 것임. 이러한 계획의 경우, 계획 이후 다음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 후 설계 및 시공까지 약 2~3년의 시간이 소요됨. 이에 따라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의 실적은 향후에 산출됨.

### □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학업 유지가 곤란한 학생부부의 등

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에서 저소득층 기혼자에게 우선지원 혜택을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본 과제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으로 1,590명에게 3,248백만원을 지원함

<표 2-1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병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100.0	비예산		
기숙사 확충 사업	신규기숙사 기혼자 실수/신규 기숙사 전체 실수×100	5%	0	0	비예산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반영된 계획 수/대상 계획 수	2개	2개	100.0	비예산		

### [3]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①

- 보건복지부는 결혼 관련 포괄적 정보제공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건전한 관심을 제고하고 결혼 및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만남의 준비·결혼준비·결혼·결혼 후 가정생활 등 결혼관련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 가능한 전문적인 포털사이트를 운영.
- 2011년 결혼누리사이트(www.wed-info.kr)를 통한 만남의 준비 및 결혼준비 그리고 가정생활로 이어지는 단계별 종합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 사이트의 회원을 10,000명 확보하려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10,240명을 보유함으로써 과제의 목적을 달성. 예산집행은 5억원 중 4억원을 집행하여 8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결혼정보 제공 등을 위한 페이스북, 트위터를 개설하고 결혼친화 플래시를 제작하였으며 결혼예비학교를 총 4회 개최한 바 110명이 참여하였음.

##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②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결혼으로의 유도과 결혼초기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족해체 예방 및 가족의 안정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전국 1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결혼준비교실이용자수와 남성대상교실 이용자수의 당초 목표인 17,000명 및 36,000명을 넘어서는 26,667명 및 49,063명이 이용함으로써 성공적인 과제목표를 달성.
-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가족의 기능 등에 대한 『결혼준비교실』을 실시.
- 부모의 연령과 출산,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남성의 가족생활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남성대상 교육』을 실시.

##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138개소 930,000명 이용자수가 과제 목표였으나 138개소 1,290,645명이 이용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예산집행은 158억원 중 15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기존의 137개소에서 2011년 138개소로 확대.
- 전국 1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1,220,897명이 지원서비스를 이용.

&lt;표 2-11&gt;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결혼전문포털사이트 운영	회원 확보 여부	회원 확보수 10,000명	회원 10,240명 확보	102.4	5	4	80.0
결혼준비프로그램운영	결혼준비교실 이용자수	17,000명	26,667명	156.9	비예산		
	남성대상교실 이용자수	36,000명	49,063명	136.3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	센터이용자수	930,000명	1,290,645명	138.8	158	158	100.0
	센터 개소수	138개소	138개소	100.0			

##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1]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분만 취약지 유형에 따른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
-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지원
-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개설 전체 목표 21개소 설정 후 약 14%인 3개소 개소의 목표치 중 3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100.0%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38억원 중 3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영동지역에 영동병원, 예천지역에 예천권 병원, 강진지역에 강진의료원을 두었음.
- 취약지 분만센터는 외래 산부인과 운영, 24시간 분만,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함.

#### □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 권역별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확충하여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기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0개 병상 추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및 사업운영비를 지원하여 병상부족 해소 및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고위험신생아 적기치료를 위하여 신생아 집중치료 5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목표하에 목표치인 50병상을 확보해 100.0% 달성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집행은 90억원 중 9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2008년도 3개소 30병상으로 45억을 지원하고 2009년도 2개소에 20병상으로 30억 지원, 2010년도 3개소에 30병상으로 54억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 5개소에 50병상으로 90억을 지원함.
- 2011년 고려대안산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원광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에 지원

#### □ 자연분만 수기인상 등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 보건복지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적정 수 유지 등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

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고자 자연분만 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 건강 보험 수가 개선사업을 하였음.

-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개선을 위하여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려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2011년 이 목표를 달성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표 2-1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자원 강화	해당연도 누적 설치 개소/전체목표(21개소)	3개소	3개소	100.0	38	38	100.0
신생아 집중 치료실 설치지원	계획 설치병상수/설치병상수	50병상	50병상	100.0	90	90	100.0
자연분만 수가인상 등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 개선	자연분만 수가 인상	자연분만 수가 50%가산	자연분만 수가 50%가산	100.0	비예산		

## [2]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 □ 난임부부 지원강화

- 보건복지부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등 시술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난임부부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지원건수 대비 임신건수를 산정한 결과, 목표치인 31건에 비해 30건수로 96.8% 달성률을 보였으며(9월 지자체 실적 보고 근거함) 예산집행은 835억원 중 835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및 횟수를 확대하여 150만원 지원금을 18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음. 지원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으며 4회 시술시 100만원 범위의 지원을 하였음.
  - 또한 임신성공률 등 제고를 위한 시술기관 질 관리를 추진하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기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시술기관 담당의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함.
  - 더불어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변경 내용 교육 및 의견을 조회함.



- 사술 지원간수 대비 임신 건수를 나타내는 임신율이 30.0%로 성과달성률 96.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상 체외수정임신율이 30% 전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가 아님.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부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임신 및 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으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1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산전 진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확대로 임신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건강보험에서 부가급여 형태로 임신당 40만원을 지원하여 임신부 부담 의료비가 50만원~90만원 수준으로 경감되었음.
- 제도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1일 사용한도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에는 1일 사용한도 적용을 예외로 하여 임신부의 사용 편의를 제고하였음. 전담금융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대하여 신청·발급의 편의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였음.

####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의 단계적 확대

- 예방접종비용을 국가부담으로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의 퇴치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민간 병·의원 접종시,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약 30% 수준의 백신비를 국가에서 지원.
- 실효성 있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율을 당초 70% 목표치로 두었으며, 84.6%의 추진실적으로 120.9%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예산집행은 732억원 중 727억원을 집행하여 99.3%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발령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으로 2011년 민간의료기관 백신비 지원비용 변경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2011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 개정을 발간하였고, 시도 및 보건소 사업

추진 현황을 방문 점검하였음.

- 또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예방접종 툴킷(Toolkit)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음.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 백신을 8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였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비용의 백신비만 지원되어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아 국민들의 사업만족도는 23%에 그치고 있고, 지원확대요구는 94%로 국민체감도 및 의료기관 참여도가 낮음.

<표 2-13>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 시술 지원건수 대비 임신건수	31건	30건	96.8	835	835	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성평가	법령개정	'11.3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완료	100.0	비예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70.0%	84.6%	120.9	732	727	99.3

### [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감기약, 피임약 등 약물복용시 부작용 여부 및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1천여 약물정보 및 6천여 약물상담 사례를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
- 2011년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으로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건수를 산정하여 목표치 5,000건에 비해 6,765건으로 135.3% 달성률을 보였으며(2010년 11월말까지 3,405대비 150%증가함) 예산집행은 12억원 중 1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전문상담센터 확대·운영으로 임신부의 직접방문 및 진료 편의성 제고하고자 2010년 3개소에서 2011년 6개소 확대 운영함.

- 안전한 약물사용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 약물 상담사례 DB 구축·운영함.
- 권역별 의료인 교육을 3회 실시하고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강좌를 25회 진행하였으며 생식발생독성연구 및 마더리스크 최신동향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음.
- 프로그램에 관한 대국민 교육 실시함. 보건소용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홍보 리플렛 제작·보급함. 임신부 치과치료 지침을 개발하여 치과의사, 보건소에 배포함.

####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등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여부를 출생 후 조기 발견하여 치료 개입함으로써 영구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치료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신체적·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강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장애 예방률로 두고 98.2%의 목표치를 두었으며 추진실적으로 98.2%를 달성하여 100.0% 달성률을 보였고 예산 집행은 269억원 중 269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됨.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1,000명에게 75억을 지원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로 46억을 지원함.
- 46만명에게 6종 무료검사로 39억을 지원하고, 1,219명에게 4억원의 특수조제분유 및 햇반지원을 하였으며, 39,000명에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로 5억을 지원함.

<표 2-14>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건수	5,000건	6,765건	135.3	12	12	100.0
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장애 예방률(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없는 pku 환아수/전체 pku 환아수 × 100)	98.2%	98.2%	100.0	269	269	100.0

#### [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였음
- 지원내용으로 12일, 2주를 원칙으로 하고 쌍생아의 경우 3주, 3태아 이상이나 중증장애인 산모의 경우 4주를 지원
- 이용가능한 서비스로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으로 시도별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을 성과목표로 두고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13.2%에 비해 16.3%를 달성하여 123.5% 달성률을 보였으며 예산집행은 370억원 중 37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부족액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연간 수혜자 수는 77,005명임(연간 출생아수: 471,300명)

<표 2-1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연간수혜자수/연간출생아수 ×100	13.2%	16.3%	123.5	370	370	100.0

###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1]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 가구 만 3~5세 학비를 지원하여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만 5세이는 균등지원하고 만 3~4세이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둘째아이상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를 정부지원단가로 전액지원하고 종일반비의 경우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로 국공립은 30천원, 사립은 50천원까지 지원
- 만 3·4세아 유아학비 부담경감을 위해 취원이동수대비 수혜자 백분율을 높였으며 당초 목표치인 48.1%에 비해 56.7%로 목표를 117.9% 달성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비로 수혜자를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51.1%에 비해 53.5%로 104.7%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6,232억원 중 6,23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만 3~4세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함.
- 소득인정액 기준(4인가구) 2010년 436만원 이하에서 2011년 480만원 이하로 확대함.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2010년도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차감에서 2011년 부부합산 소득의 25%차감 계산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부지원단가를 3%로 인상함.

####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영유아 가구에 대해 이동연령별, 가구 소득수준별 정부지원보육료 지원측면으로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만0~4세 보육료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 연령별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만5세아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 5세 아동에 보육료를 전액지원.
- 장애인무상보육료의 경우, 만 12세 이하 장애인동에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이는 소득과 무관
-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가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맞벌이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계산하여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강화.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을 위한 수요자중심 보육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로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비율을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인 70%에 비해 73%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집행은 40,532억원 중 40,53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을 2010년 761천명에서 2011년 922천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2010년 16,322억원에서 2011년 20,023억원으로 확대지원하고자 하였음.
- 보육료 지원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991천명으로 2010년 878천명보다 113천명 증가하였음.

- 0~5세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2010년 소득하위 50% 0~4세 761천명에서 2011년 소득하위 70%로 0~4세 922천명으로 확대지원하였음.
- 다문화가구 자녀에 대하여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하여 6천명 대상으로 116억원을 지원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20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 25% 차감으로 18천명 대상 97억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 부부 합산소득 25% 차감으로 27천명 대상 438억원을 지원하였음.

####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 동 사업은 농어업인 자녀 만 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는 측면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농식품부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농특회계)이 2012년부터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음.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인 만족도는 목표치 80%에 비해 86.7%의 수준을 보여 173.4%의 달성률을 보였고, 예산집행은 492억원 중 490억원을 집행하여 99.6%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표 2-16>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유아 교육 비 지원 확대	만3·4세아 교육비	수혜자/취원아동수×100	48.1%	56.7%	117.9	6,232	6,232	100.0
	만5세 아무상 교육비	수혜자/취원아동수×100	51.1%	53.5%	104.7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이동비율(전액지원아동수/ 전체이용아동수)	70%	73%	104.0	40,532	40,532	100.0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지원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상위 40% 해당자 / 전체 설문대상자)%	80%	86.7%	173.4	492	490	99.6

## [2] 양육수당 지원 확대

###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12개월 미만 아동은 20만원을 지원하고 24개월 미만은 15만원을 지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
- 2011년 양육수당 수혜율을 당초 목표치 80%로 두었으나 57.6%로 나타나 달성률 72.0%를 나타냈으며 예산집행은 1,908억원 중 1,90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2010년 24개월 미만에서 2011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였음.
- 양육수당 지원액을 2010년 월 10만원에서 2011년 월 10~20만원으로 인상함.
- 지원인원은 98천명임.
- 양육수당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면 예산의 제약과 함께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임

<표 2-17> 양육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양육수당 수혜율(양육수당지원아동수/보육시설미이용아동 중 차상위계층)	80%	57.6%	72.0	1,908	1,908	100.0

##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의 고교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 ~ 2027년 단위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통해 둘째아 이상의 고교수업료를 지원

- 2027년부터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교 수업료를 지원
- 본 사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7년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수행하는 것도 있음.
- 2011년도 지원현황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통하여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여 324천명 대상 3,758억원으로 목표달성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해당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국가근로장학사업 대상 선정 시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 우선선발
-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국가장학제도 신설시 수혜가능인원수가 정해진 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가구 자녀에게 우선순위 부여
- 2011년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을 위하여 관련제도 개선과 관련된 대상계획 수 대비 반영된 계획 수 2개를 만족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의 제도를 개선함
- 2011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으로 3,179명에게 6,89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다자녀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 행정안전부는 출생자 기준으로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 퇴직 후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3년까지 6급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중, 국가재정부담이나 높은 청년실업과 부정적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이후에 실시.
- 2013년 이후부터 다자녀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을 추진함에 따라 2011년도 세부추진내용은 없음.
- 일본 등 외국의 재고용 제도 사례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사례 등 관련 제도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함.



## □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가구에 세제지원을 하고자 18세미만 3자녀이상 자녀 양육 가정은 자동차 1대에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였음.
- 이미 2010년도에 ‘지방세법’ 273조의3(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이 신설되어 수행함에 따라 기완료되었음(새로운 성과지표 필요). 이에 2011년도 성과목표달성도는 측정할 수 없으나, 2011년도 다자녀가구 세제지원은 약 288억원으로 56,955건으로 추정됨.

## □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함.
  -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혜택 부여함.
- 2011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을 확대하고자 국민주택기금 업무메뉴얼을 개정하여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2010년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확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함.
  -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혜택 부여함.

&lt;표 2-18&gt;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학비지원	학비지원	100.0	비예산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반영된 계획 수/대상 계획 수	2개	2개	100.0	비예산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 후 재고용 <sup>1)</sup>	-	-	-	-	비예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sup>2)</sup>	-	-	-	-	비예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업무메뉴얼 개정	100%	100%	100.0	비예산		

주: 1) 2013년 이후부터 다자녀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을 추진함에 따라 2011·2012년도 세부추진내용은 없음

2) 2010년에 기완료된 사업임.

#### [4]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2009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학원운영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하고자 하였음.
- 사교육 시장 동향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및 정책성과를 홍보
- 2011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2010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분석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100.0%달성률을 보임.
-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으로 총 사교육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통계조사 실시 이후 최초로 감소하였음.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발표함.
- 2011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과제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점검함.

<표 2-1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사교육비 경감대책	조사결과 분석 및 발표	1회	1회	100.0	비예산		

####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1]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을 통하여 보육인프라 확보 및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확충 시설수 목표치 30개소에 비해 45개소를 확충한 것으로 나타나 150.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예산집행은 596억원 중 562억원을 집행하여 94.3%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국공립어린이집 총 45개소 설치 중 국공립신축으로 22개소, 장애아전담 2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21개소 설치를 지원함.

####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건소, 마을회관 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한 소규모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보육수요는 있으나 이동수가 적어 민간시설이 진입을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보육시설 설치 외에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 2011년 소규모 보육시설 20개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14개소 확보(이동식놀이버스 4개포함)에 그쳐 목표달성률 70%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집행은 26억원 중 17억원을 집행하여 65.3%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표 2-20〉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확충 시설수	30개소	45개소	150.0	596	562	97.3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설치 또는 이동놀이차량 운영 개수	20개소	14개소	70.0	26	17	65.3

주: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은 2012년도부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음.

## [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였음.
-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규모 등에 따른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심의.
- 2011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평가인증을 70%를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 추진실적으로 78.6%로 나타나 112.3%의 달성률을 나타내었고, 예산집행은 59억원 중 59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참여시설 6,976개소 중 3,054개소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였고 2011년 중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923개 어린이집에 대해 재인증을 실시함.
-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및 ‘좋은어린이집 찾가어플’을 제공함.

####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보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보육료 수납, 보육운영과정·내용 등 제한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였음.
-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한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 시범사업 내용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형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
- 2011년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여 당초 목표치를 3.68점으로 두었으며, 실제 4.41점으로 나타나 119.8%의 달성률을 나타냈고, 예산집행은 148억원 중 14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선정을 진행함.
- 지역별 설명회 및 현장방문, 선정 어린이집 교육, 지역별 자율공부모임운영 등 품질관리를 진행함.
- 홍보용 리플렛·포스터제작·배포, 인터넷 부모카페·홈페이지로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을 통하여 홍보함.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함.

####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종사자인 보육시설장·보육교사 등의 자격관리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보육시설 종사자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의 접수, 검정, 교부 등 자격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시설장, 보육교사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2011년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이수인원을 산정하여 52,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58,000명을 교육하여 달성률 111.5%를 보임. 예산집행은 33억원 중 31억원을 집행하여 93.9%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함.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직무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 병행을 실시함.
- 보육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보수교육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함.

#### □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유치원의 운영 개선을 지원하고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하여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제2주기 2011년부터 2013년으로 유치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제2주기 1년차인 2011년 3월부터 12월간 유치원 평가를 추진.
- 2011년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2주기내(1년차) 유치원 평가실사율 30%를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 27.4%로 나타나 91.3%의 달성률을 보였고, 예산집행은 42억원 중 4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제1주기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설립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과 기준을 차별화하여 평가 편람 및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제시함.
- 제2주기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8,124개원 중 2,227개원 실시함.
- 유치원 평가 우수 사례 개최 및 우수사례 홈페이지 공개 등 평가 결과를 공개함.
-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일반화 자료로 활용하고 미흡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을 연계함.
- 우수 유치원에 대한 교육감 표창 및 재정을 차등 지원함.
- 보건복지부 '맞춤형 업무' 시스템에 구축된 유치원 평가 DB를 활용함.
- 당초 목표는 30%였으나 유치원의 전체 일정 및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되어 27.4%가 추진되었음.

&lt;표 2-21&gt;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인증율(평가인증통과시 설/전체어린이집)	70%	78.6%	112.3	59	59	100.0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만족도(5점척도)	3.68 점	4.41 점	119.8	148	148	100.0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시도별 보수교육 인원 및 온라인 보수교육 인원	52,000명	58,000명	111.5	33	31	93.9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2주기(1년차)내 유치원 평가 실시율	30%	27.4%	91.3	42	42	100.0

## [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시간연장형 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월급여 형태의 인건비 지원방식 외에 근무수당 지원 방식을 병행 운영.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로 월급여 7천명, 근무수당 3천명으로 총 10,000명에게 지원
- 2011년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지원확대로 시간연장형 보육이용이동수를 취합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37,000명 대비 40,484명으로 나타나 109.4%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예산집행은 8,681억 원 중 8,681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10월 현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8,191개소로 전년 대비 17.5%로 증가함.
  -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이동수는 40,484명으로 전년 대비 14.7%(7,610명) 증가함.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방식 다양화 및 지원기준 합리화로 시간연장보육을 활성화함.

## □ 유치원 종일반 확대

-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일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종일반 운영의 단계적 확대와 종일제 보조인력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환경개선비도 지원.
- 2011년 종일반 운영 유치원을 99%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 유치원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를 99%로 두었으며 실제 추진 실적이 99.3%로 나타나 100.3% 달성률

을 보였고, 예산집행은 486억원 중 486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종일반 운영 확대에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으며, 유아발달에 적합한 시설환경개선으로 종일반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였음.
- 종일반 운영 유치원을 99%까지 확대함.
- 종일반 운영 유치원에 냉·난방시설, 급·간식시설, 보안시설 등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함.
- 종일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교원 임용 근거를 마련함.
- 종일제 보조인력 활용으로 종일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종일제 프로그램을 개발·공동활용함.
- 종일제 특성화 강사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원격교육연수’를 개설·운영함.
- 수요자 중심의 돌봄사업을 운영함.

#### □ 저소득층 맞벌이 입소 우선순위 부여

-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에 저소득 맞벌이의 우선 입소 조치를 강화하여 시설양육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저소득층 맞벌이 우선순위부여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에 대한 시설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을 수립을 완료하였음.
- 현행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이면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와 같이 동순위 내 2개 이상이 중복 해당되면 이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함.

####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 보육시설 지원기준에 맞벌이 등 종일보육 필요성을 도입하여 실제 보육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운영시간과는 별도로 이용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육수요에 따른 다양한 이용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였음.
- 보육료 지원방식을 현행 12시간 종일 보육 기준에서 맞벌이 등 종일보육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여 단축형, 종일형, 시간연장형으로 전환하여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추진
- 2011년 어린이집이용시간다양화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예산집행은 62억원 중 48억원을 집행하여 77.4%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어린이집 보육과정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인천 남동구 민간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함.

## □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양육친화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가족 커뮤니티와 품앗이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자조능력을 고양하고자 하였음.
-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품앗이’ 그룹을 구성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품나눔과 이웃간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지역사회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자녀의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을 제공.
- 2011년 가족문화조성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확충과 이용자수확대를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공간개소의 경우 목표치를 50개소로 두었으며 실제 60개소의 추진실적을 나타내어 120.0%의 달성률을 보임. 또한 공공육아나눔터 전체 이용자수의 경우 당초 14,680명의 목표치에 비해 36,976명의 추진실적으로 251.9%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4억원 중 3억원을 집행하여 75.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실시하여 23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60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함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역리더양성교육을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 개발연구를 실시함.

&lt;표 2-22&gt;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이동수 취합	37,000명	40,484명	109.4	8,681	8,681	100.0
종일반 운영 확대	종일반 운영 유치원/전체유치원×100	99%	99.3%	100.3	486	486	100.0
저소득층 맞벌이 우선순위 부여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수립	완료	완료	100.0	비예산		
어린이집이용 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100.0	62	48	77.4
가족문화조성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공간(개소)	50개소	60개소	120.0	4	3	75.0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이용자수(명)	14,680명	36,976명	251.9			



#### [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 여성가족부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을 사유로 한 돌봄을 지원하고자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
  - 맞벌이 가정의 영아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함.
- 201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의 경우 당초 135만건으로 목표치를 두었으며, 실제 추진실적은 195만건으로 144.4%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는 당초 81점의 목표치에 비해 87점의 달성실적을 보여 107.4%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630억원 중 63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시간제 실 이용가구 수는 2010년 27,339가구에서 2011년 37,934가구로 증가함.
  - 맞벌이·한부모 등 취업가정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2010년 124가구에서 2011년 1,204가구로 증가하였음.
  -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에게 아이돌보미 활동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동 수가 2010년 7,262명에서 2011년 10,758명으로 증가함.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 근거를 마련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함.

<표 2-2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	135만건	195만건	144.4	630	630	100.0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81점	87점	107.4			

#### [5]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 □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 여성가족부는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부분 표준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정 내 영아 돌봄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
- 가정 내 돌봄 서비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인력 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 201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가정내 영아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내 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의 일환으로 법 제·개정을 당초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 추진실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100.0%의 달성률을 나타냄.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함.
- 아이돌보미 자격, 보수교육, 결격사유,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임무를 규정함.

&lt;표 2-24&gt;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정내 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법 제·개정	법 제정	100.0	비예산		

## [6]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측면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방과후 이용서비스 만족도 82.8을 목표로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84점을 나타내어 달성률 101.4%를 나타냄. 예산집행은 977억원 중 977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방과후 아동센터 지원내용으로 3,324개소 대상 1개소당 월평균 37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3,033명을 파견하였음.
- 감액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지표의 현장성, 서비스가능, 객관성 강화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이의 신청 절차 보완, 평가위원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함.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 전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부모의 맞벌이·경제적 어려움 등과 관련하여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은 2005년 46개소에서 2006년 100개소, 2007년 151개소에서 2008년 185개소, 2009년 178개소에서 2010년 161개소, 2011년 200개소로 확장.
- 2011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용만족도를 효과·만족도조사로 측정하였는데, 청소년만족도의 경우 목표치 83.5에 비해 83.5로 달성률 100.0%로 나타났고 학부모만족도는 당초 목표치 83.2에 비해 83.2로 나타나 100.0%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311억원 중 308억원을 집행하여 99.0%의 예산집행률을 보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서비스 대상 발굴 및 지원을 진행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및 평가 등을 통한 운영의 질을 제고하였음.
- 사업규모는 전국 200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수혜자는 8.2천여명으로 추산됨.
- 아카데미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고 아카데미 활동프로그램 공모전 및 청소년 수가공모전을 실시하였음.

#### □ 초등 돌봄교실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학년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간식·석식 제공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10년부터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통합운영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대상으로 아침부터 야간까지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는 무료로 지원함
- 2011년 초등돌봄교실운영확대를 위하여 계획 지원교실 대비 실제 지원교실비율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당초 목표치인 6,500개 대비 실제 6,639개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02.1%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으며 예산집행은 2,195억원 중 2,195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하였으며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1년 신규로 운영하였음.

-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2010년 6,200교실에서 2011년 6,639교실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수혜자는 2010년 104,496명에서 2011년 124,013명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하였음.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연장하여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2011년 1,000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교실당 50,000천원을 지원하였음.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배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문화예술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예술강사 파견 사업, 소외·취약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우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수혜자 만족도측정을 산정하고자 당초 목표치를 77점으로 두었는데 실제 추진실적은 87.8점으로 114.0% 목표달성하였으며 예산집행은 690억원 중 69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5,772개교 176만명 대상으로 예술강사 4,164명을 파견함.
- 속초 대포초등학교 등 26개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하여 교육성과를 복지시설 등 연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감을 제고하였음.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 학부모 등 방과후학교 수요자에 맞는 질 높고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함.
-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고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함.
- 2011년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교과프로그램수와 특기적성프로그램수를 합산한 결과 당초 목표치 40만개에 비해 실제 53만개 추진실적으로 132.5% 추가달성을 보임.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을 2011년 2월 통계청 자료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교과관련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이 미참여 학생에 비하여 향상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①

-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돌봄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협력기반 조성 및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방과후 학교와의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발굴 등을 위해 교과부와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1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구축으로 시범사업지역 방과후 돌봄연계 서비스 이용이동 만족도 측정으로 당초 목표치 75점을 두었으며, 추진실적으로 83.9점을 나타내어 달성률 111.9%를 보임.
- 방과후 돌봄 수요 공급 예측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함.
-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 연계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함.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②

- 교육과학기술부는 돌봄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습학원 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으로 제도권 내 사설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1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1년 7월 학원법을 개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목표를 100% 달성하였음.
- 교습비등 정보공개를 통한 학원비 안정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유도
- 등록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금지 및 영수증발급 의무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포상금제 법제화 등을 규정하였음.
- 교육서비스업체 등에서 유아대상 유아교육 및 놀이 등 교습행위에 대하여는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기타계열 기타교습과정으로 학원 설립·등록 가능하나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학원 설립·등록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도 및 홍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으로 학원 설립·등록 신청시 해결이 예상되어 향후 제도권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나홀로 이동 가정돌봄 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등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나홀로 이동에 대한 가정 돌봄서비스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제공교사가 1명~3명 이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및 교육하되 등하교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기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코칭 서비스 등 개별육구에 따른 교육 서비스도 별도로 제공하고자 함.
- 2011년 나홀로 이동가정돌봄서비스로 시행지자체수를 산정한 결과 2011년 사업참여 시군구수는 당초 목표치 8개에 비해 실제 27개의 추진실적을 나타내 337.5% 목표달성률을 보임.
- 2011년 나홀로 이동 가정돌봄 서비스를 통해 8개 지자체 928명을 지원하였음('11.2~9월).
-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현장을 점검하였음('11.6~7월)

&lt;표 2-25&gt;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지역아동센터확대 및 내실화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82.8	84.0	101.4	977	977	100.0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청소년만족도 (효과·만족도 조사)	83.5	83.5	100.0	311	308	99.0
	학부모만족도 (효과·만족도 조사)	83.2	83.2	100.0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지원교실 대비 실제 지원교실 비율	6,500개	6,639개	102.1	2,195	2,195	100.0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Σ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X 20}/전체응답자	77점	87.8점	114.0	690	690	100.0
맞춤형방과후 학교운영	교과프로그램수+특기적성 프로그램수	40만개	53만개	132.5	비예산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설문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방과후 돌봄연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들의 만족도 측정	75점	83.9	111.9	비예산		
	학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법령개정	학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	100.0			
나홀로 이동가정돌봄 서비스	'11년도 사업참여 시·군·구 수(개)	8	27	337.5	비예산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3]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1]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보건복지부는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또한 개별사례관리를 통해 예방적·통합적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조직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문제를 조기진단하고 보건·복지·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자 하였음.

- 드림스타트 활성화 영역은 대상이동수를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인 39,300명에 비해 실제 추진 실적이 43,000명으로 109.4%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374억원 중 374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2011년 현재 131개 시군구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확대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2009년 아동 26천명에서 2010년 아동 31천명, 2011년 아동 43천명으로 확대 지원함.
- 드림스타트 사업의 법적근거로 아동복지법 개정 및 시행을 볼 수 있음.

&lt;표 2-26&gt;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드림스타트 사업활성화	사업지역X지역목표아동수	39,300명	43,000명	109.4	374	374	100.0

## [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하여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CYS-Net은 먼저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위기 검사 및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하여 제공 서비스 유형을 도출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청소년 관련 유관 기관간 연계를 통하여 구축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확대사업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및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CYS-Net 서비스지원대상 청소년의 변화정도를 변화율 10%이상으로 목표치를 두었으며, 실제 추진실적이 12.18%로 달성률 121.8%를 나타냄. 또한 CYS-Net 서비스 추혜자의 만족도 측정을 만족도 80%이상으로 목표치를 두었으며 추진실적이 83.88%로 나타나 달성률 104.9%로 나타냄. 예산 집행은 172억원 중 17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확대 및 지원수혜자가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 필수연계기관 지정 등 연계망을 강화하였음.



- 고위험군 청소년의 전문적 사례관리를 위한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간 보호관찰 청소년 동반자 지원사업을 실시함
- 위기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함

&lt;표 2-27&gt;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의 변화정도	변화율 10%이상	12.18%	121.8	172	172	100.0
	CYS-Net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측정	만족도 80%이상	83.88%	104.9			

### [3]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 □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생계·학비지원 등 단기적·사후적 지원을 벗어나 조기개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자산형성 지원 등 장기적·능동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이는 자산형성 지원의 법적 근거 규정 마련 및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지원관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하였음.
- 자립지원사업체계화로 퇴소아동자립률을 당초 목표치 70%로 두었으며 실제 추진실적이 72.1%로 나타나 103.0%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예산집행은 108억원 중 10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함(’11.8.4).
  -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서비스 의무화, 자립지원전담기관설치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및 위탁근거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및 적립금을 증가하였음.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전체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퇴소아동 DB 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함.

## □ 두드림존(토탈자활지원서비스체계) 확대·보급/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 여성가족부는 가출, 학업중단, 요보호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진학 및 학업지원, 생활상담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음. 진로동기강화,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사회진출로 연계하는 자립지원 모형인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운영 및 보급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 두드림존(토탈자활지원서비스체계) 확대·보급/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 수혜 청소년 수를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 15,000명에 비해 실제 추진실적이 18,512명으로 나타나 123.4%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28억원 중 2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자립지원 상설 두드림존 프로그램 보급 및 확대 운영을 진행하고 자립지원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두드림존’프로그램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자립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학업중단 청소년 서비스 제공인원 1,799명, 학업복귀 인원 527명으로 나타남.
- 기숙형 대안캠프 운영으로 고위험군 학업중단 청소년 24명 참가, 검정고시 등 학업 복귀 성공 17명으로 나타남.
-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나는 내인생의 매니저” 및 기숙형 대안캠프 “성장여행”등 2종을 개발하였음.

&lt;표 2-28&gt;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자립지원사업 체계화	(취업자+대학진학자)/ 퇴소아동수×100	70%	72.1%	103.0	108	108	100.0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수혜 청소년 수	15,000명	18,512명	123.4	28	28	100.0

###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1]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는 발달·정서행동문제 및 인터넷 중독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발달검사·발달지체 위험 영유아 중재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진단 및 조기개입 서비스,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치료, 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아동 심리검사·상담·교육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아동발달지원서비스확대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지원아동수를 서비스확대측면으로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 11,410명에 비해 19,152명을 달성하였으며 167.9% 달성률을 나타냄. 예산집행은 243억원 중 243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사업확대추진 및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서비스품질제고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또한 사업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였음.
  -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51개 사업 2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함.
  - 사회서비스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한국사회서비스 박람회 등을 개최함.

#####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확대 실시

- 보건복지부는 취약전 아동 인지발달에 대한 조기투자로 국가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하고 아동기 지적환경 격차를 개선하여 출발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또한 1: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지급, 독서관련 부모교육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확대 실시사업은 취약전아동독서바우처지원을 위하여 바우처 이용자수를 산정한 결과 180천명의 당초 목표치에 비해 246천명을 달성하여 136.7%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319억원 중 319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취약전 아동에 대한 책읽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언어·인지능력 발달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 아동의 독서습관 형성 유도 및 인지발달 향상을 위해 사람의 도서 전달식을 개최함.

&lt;표 2-29&gt;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아동발달지원서비스 확대	'11년도 지원대상 아동수(명)	11,410명	19,152명	167.9	243	243	100.0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수	180천명	246천명	136.7	319	319	100.0

## [2]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 □ 휴먼네트워크 확대

- 보건복지부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신나눔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음. 2009년 3월 “휴먼뉴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근거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를 긴급 지원하는 단기 대응조치로서 추경안에 총 6조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음. 이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정책 기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는 일환으로 휴먼네트워크를 추진하고자 함.
- 휴먼네트워크 확대사업은 멘토·멘티 확대를 위하여 당초 목표치 멘토는 30,000명, 멘티 50,000명에 비해 멘토 30,348명, 멘티 51,233명으로 달성률이 각각 멘토 101.0%, 멘티 102.5%로 초과달성하였음. 예산집행은 17억원 중 17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인프라구축으로는 핵심협력기관 9개 기관을 선정 및 지원, 멘토링 운영메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용역, 멘토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함.
- 멘토링 연계로 일반협력기관 신규등록, 멘토·멘티 연계, 휴먼성공사례 발굴·홍보를 진행함.
- 대국민 홍보로 휴먼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

&lt;표 2-30&gt;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휴먼네트워크 확대	멘토·멘티 참여 현황	멘토-30,000 멘티-50,000	멘토-30,348 멘티-51,233	멘토-101.2 멘티-102.5	17	17	100.0

### [3]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1990년대 초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과후나 주말 등에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하여 이에 방과후 주말 등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중 소규모의 청소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사업은 청소년시설확충으로 청소년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지수를 당초 목표치 36,000천명으로 산정한 결과 42,470천명을 달성하여 118.0%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1,157억원 중 1,157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청소년활동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완을 지원함.

####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쉽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연계터전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동아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분야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신규연계터전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나눔 인성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또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를 두고 지원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사업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으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터전 신규 확보를 위하여 신규확보수를 당초 목표치인 450개로 산정한 결과 567개를 달성하여 126.0% 달성률을 보임. 또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으로 청소년동아리활동활성화를 위하여 수혜 청소년수로 당초 목표치 280,000명을 두었으며 388,062명의 실적을 달성하여 138.6%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22억원 중 2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인증터전을 확대하였음.
- 2,000개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하여 1개당 100만원을 지원함.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터전 확대로 8,620개(11년말 누적터전수), 신규 567개소 확대함.

####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을 통한 국제적 역량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교류 참가국과의 우호·협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 및 국제행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은 청소년 교류 국가 이해증진도 향상측면으로 이해증진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치 76점 대비 76.5점으로 100.1% 달성률을 보이며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으로 해외체험활동참가자수를 확인한 결과 목표치 2,000명 대비 2,019명으로 101.0%의 달성률을 나타냄.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지원으로 국제행사참가 청소년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80점에 비해 80.5점으로 만족도가 나타나 100.6%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54억원 중 53억원을 집행하여 98.1%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국가간 청소년 교류 및 국제행사와 회의 개최를 지원함.
- 국가간 청소년 교류 약정에 의한 청소년 대표단의 상호 초청 및 파견 실시.
- 청소년교류 약정체결 국가 확대를 통한 교류 대상국 다변화.
-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로 상호 초청 및 파견을 실시함.

####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확대

- 고용노동부는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로 대학,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으로 학교와 직업현장을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자신감 제고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확대사업은 청년직장·직업체험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치 80%이상에 비해 87.8%를 달성하여 109.8% 달성률을 보임.
- 200개 대학·특성화고에서 청년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 경력형성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함.

&lt;표 2-31&gt;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청소년 시설확충		청소년시설 청소년이용자수 (천명, 연인원):50 천명 X 720개소 (‘10.12 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목표)	36,000천명	42,470천명	118.0	1,157	1,157	100.0
아동·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자원 봉사활동	청소년자원봉사 활동터전 신규확보수(개)	450개	567개	126.0	22	22	100.0
	청소년 동아리활 동지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수혜 청소년수(명)	280,000명	388,062명	138.6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	국가간 청소년교 류	청소년교류국가 이해증진도 설문조사실시	76점	76.5점	100.1	54	53	98.1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해외체험활동 참가자수확인	2,000명	2,019명	101.0			
	국제행사 회의개최 지원	국제행사 참가 청소년 만족도조사	80점	80.5점	100.6			
청년직장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5단계척도)결과 ‘매우만족 및 만족’비율	80%이상	87.8%	109.8	비예산		

###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1]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부모대상 아동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아동안전사고 사망 및 발생건수를 감소시키고자 하였음.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인 만 5세 이하와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영역은 이동안전사고예방사업으로 10만명당 이동안전 사고 사망률을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5.3%에 비해 4.1%를 달성함. 성과지표의 정의상 낮은 수치가 좋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임. 예산집행은 11억원 중 10.4억원을 집행하여 94.5%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부모 배포용 교육 도구를 개발하였음.
- 오프라인 교육으로 939개소 23,860명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2,120명을 실시 진행함(2011년 11월 기준).
- 강사용 교육 매뉴얼 및 강의용 교구를 개발하고 교육 미참여 보육시설을 위한 시설장 및 교사 교육을 실시함.
- 캠페인 홍보를 진행하여 교육관련 보도자료 등을 배포함.

####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①

-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로 보행안전지도자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등을 직접 알려주고 학생들을 인솔하여 직접 등하교 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2011년 보호구역개선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며 이 사업의 국비집행률을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 95%이상에 비해 100%를 집행하여 달성률 105.3%를 보임. 예산집행은 12억원 중 1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진행함.

####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②

- 교육과학기술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어린이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하였음.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사립유치원 지정률(어린이 보호구역)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확



대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치 90%이상에 비해 65.4%를 달성하여 72.7%의 달성률을 보임.

- 학교보호구역내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킹스쿨버스 시범운영 확대 및 위킹스쿨버스 학교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DB 구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음. 또한 학교장·원장에 대한 안전 관련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음.
- 사립유치원 지정률의 달성도가 낮은 것은 동 사업이 비예산 사업인데 반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시설보완 등에 대한 예산의 소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예산상의 제약에 따름.

<표 2-3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sup>1)</sup>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5.3	4.1	129.3	11	10.4	94.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국비 집행률(국비집행실적/전체 국비×100%)	95%이상	100%	105.3	12	12	100.0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립유치원 지정율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	90%이상	65.4%	72.7	비예산		

주: 1) 성과지표의 정의상 낮은 수치가 높은 성과를 의미함

## [2]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 행정안전부는 학교주변, 도시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CCTV설치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어린이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사업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으로 CCTV 및 관제센터 설치 확대를 위하여 당초 목표치 CCTV 1,208개 설치 및 관제센터 34개 설치에 비해 CCTV 국비 151억 원 집행 및 관제센터 구축 국비 204억원 집행으로 추진실적이 100.0%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722억원 중 712억원을 집행하여 98.6%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①

- 법무부는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의 효과적인 재범억제를 진행하고자 하고자 하였음. 약물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의 과도한 성적충동·환상, 과잉성행동 등의 문제를 감소시켜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였음.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사업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성공적 거행의 기존 목표치(하위법령 제정)를 달성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성충동약물 치료제도 시행준비를 성과목표로 두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성공적 거행을 목표치로 두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성공적 거행을 진행함.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②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1년 또는 20년간 등록하여 관리하고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의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공개하고자 하였음.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사업은 성범죄자신상 정보등록, 공개제도 운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알람사이트 연간 접속건수를 성과지표로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인 6,200천명에 비해 4,800천명으로 77.4%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8억원 중 4억원을 집행하여 5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를 진행하였음.
- 성범죄자 알람사이트 연간 접속건수가 애초 목표치보다 낮은 이유는 한편으로 목표치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었거나, 홍보부족 및 관심부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성과지표(접속건수)의 실효성 및 적절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또한 예산집행률 저조는 성범죄자 알람사이트는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가 2011년 1월1일 이후 범죄발생건부터 적용되는 반면에 우편고지제도대상건 확정판결의 시일 소요로 인해 당해년도 6월부터 집행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

- 여성가족부는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통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자 보호·지원 시설 확충을 통하여 아동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 아동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하여 센터이용현황을 당초 목표치 22,638명에 비해 19,084명으로 84.3% 달성률을 보임. 또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구축으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73점으로 목표치로 두었으며 산정결과 89점 만족도를 나타내어 달성률 121.9% 초과달성하였음. 예산집행은 127억원 중 126억원을 집행하여 99.2%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각급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및 통합센터 확대 설치하고,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함.
- 아동청소년 전용센터 설치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성폭력 피해청소년 교육의무화 등 재범예방을 강화함.
- 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수혜자수의 합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은 목표치 설정의 문제, 센터홍보부족, 당사자 신고의 어려움 등으로 판단됨.

<표 2-33>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CCTV 1,208개 설치 -관제센터 34개 설치	-CCTV 국비 151억원 집행 -관제센터 구축 국비 204억원 집행	100.0	722	712	98.6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sup>1)</sup>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성충동약물 치료제도 시행준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성공적 거행 (하위법령제정)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성공적 거행 (하위법령제정)	100%	비예산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 운영	성범죄자 알람e 사이트연간접속건수(365일)	6,200천명	4,800천명	77.4	8	4	50.0
성보호를 위한교육 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	아동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서비스 내실화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수혜자수의 합	22,638명	19,084명	84.3	127	126	99.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구축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이용자만족도	73점	89점	121.9			

주: 1) 성범죄자 재범방지조치과제 통합

## [3]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보호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학대피해아동의 원활한 원가정보호가 가능하도록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학대아동보호건수를 당초 목표치로 5,783건으로 두었으나 추진실적은 6,058건으로 나타나 104.8% 달성하였음. 예산집행은 13억원 중 13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아동학대예방 홍보 활성화로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였음.

&lt;표 2-34&gt;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아동의 보호건수	5,783건	6,058건	104.8	13	13	100.0

## [4]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 범정부대책 수립, 정책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단체 지원, 각종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하고자 하였음.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단위학교 대응 능력 및 책무성 제고,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4시간 이상 실시학교비율을 70% 목표로 산정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학교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11년도 추진실적을 '12.11월에 산출가능함. 예산집행은 678.4억원 중 677.4억원을 집행하여 99.9%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학교폭력(성폭력)예방 교원 연수를 확대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지정·운영함. 학교단위 분쟁 조정 및 학부모연수 등 민간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음. 또한 단위학교 자율성을 강조한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함.
-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확대·지정을 통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였음.
- 디지털 콘텐츠 환경 적극 대처 및 졸업앨범 제작방향 다양화를 통한 지리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함.
- 학생들의 건전한 언어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함.
- 민관합동 캠페인, 선도학교·선도교실 운영, UCC·실천사례 공모전, 교사·학생 언어표준화 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범사회적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필요성 제고 및 교육현장의 실천운동을 확산하고자 하였음.
-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음.
- 학교폭력 예방, 가·피해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다중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함.
- 생활지도(학교폭력) 컨설팅 지원이 완료되는 12월 말 만족도 조사가 예정됨.

####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② (아동안전지킴이)

- 보건복지부는 퇴직경찰관 등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을 순찰함으로써 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 및 비행소년 선도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중 세부과제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대상 범죄발생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008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아동범죄 예방 및 아동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2009년 2월에 복지부, 경찰청,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등 4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음. 2009년 10월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확대를 통한 아동보호시스템의 강화를 추진하고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음.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동안전지킴이 확대배치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248개

소, 2,270명 지원의 당초 목표치를 100.0% 달성하였음. 예산집행은 72억원 중 7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아동안전지킴이 배치확대를 추진함.
- 경찰서 249개소, 2,270명을 배치하고 7,190백만원을 지원함.

<표 2-35>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sup>1)</sup>	비율=4시간이상 실시 학교수/총학교수	70%	-	-	678.4	677.4	99.9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확대배치	아동안전지킴이 248개소, 2,270명	아동안전지킴이 248개소, 2,270명	100.0	72	72	100.0

주: 1) 학교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11년도 추진실적을 '12.11월에 산출가능함.

## [5]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 □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인터넷 중독 치유를 지원하는 측면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발굴 강화 및 중독위험 단계별 예방교육, 상담·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정책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의 부정적 인식 극복 및 조기 개입 필요성 홍보하고자 하였음.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법제도·환경을 개선하고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전체 18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사업은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효과율 65.0%를 목표치로 두었으며 65.08%를 달성하여 100.1%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20억원 중 2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홍보 강화와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별 예방 및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 흡연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해 담배에 대한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학교 흡연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학교 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음. 학교별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예방 지원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 흡연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사업은 학교흡연예방 교육으로 청소년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근거로 청소년 흡연율을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 12.6%에 비해 12.1%를 달성하여 달성률 104.1%을 나타냄(흡연율은 떨어질수록 성과수준이 높음). 예산집행은 52억원 중 5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학교별 흡연예방교육사업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였음.
  -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교과목 시간 또는 특별활동 등을 이용하여 금연 홍보물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함.
  - 금연활동 지원으로 금연동아리, 또래 금연지도자, 학생회 금연활동, 금연캠프, 흡연실태조사 등을 지원함.
  -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장 및 교사 대상으로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지원함.
  - TV·라디오 등 공익광고,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대상자별 금연캠페인을 통한 금연을 홍보함.

#### □ 음주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였음. 음주를 조장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건전음주캠페인 등 홍보·교육을 전개하고 불법 주류광고 및 청소년대상의 주류판매를 모니터링하고자 하였으며 문제음주자에 대한 치료·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음주폐해예방으로 청소년음주율을 감소하고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근거로 한 월간음주율을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 21.0%에 비해 21.1%를 달성하여 99.5%의 달성률을 보임(음주율은 떨어질수록 성과수준이 높음). 예산집행은 68억원 중 6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공익광고 송출 및 절주 서명운동 전개를 통한 건전음주 문화를 확산하여 절주 서명운동에

전국적으로 3만 789명이 참여함.

- 전국단위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을 시행함.
- 지하철 및 영화상영관에서의 주류광고를 금지시킴.
- 대학 절주동아리 60개를 지원하여 대학 및 지역사회 내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알코올사용장애자 사례관리를 진행함.

#### □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및 치료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음주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영역은 음주·흡연 청소년 교육 및 치료지원으로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치료지원 건수를 당초 목표치인 2,350명에 비해 2,488명을 달성하여 105.8%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2억원 중 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주류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개선하여 상표면적 기준에서 주류용량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화하였음.
- 유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를 금지시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유해물건 고시를 통하여 담배사업법 사각지대인 교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대상 판매행위 규제근거를 마련함.
-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실시함.
- 청소년 음주예방 공동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함.
-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함.
-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조기예방교육을 위한 유아용 놀이교구를 제작하고 배포함.

####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 집단급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음.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 지원·평가업무를 진행하고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대상 기준을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소 중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 설치운영을 당초 목표치로 두었으며 실제 추진실적으로 12개소를 달성하여 달성률 133.3%를 보임. 예산집행은 38억원 중 3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였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함.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등을 진행함.

####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등록관리율과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서비스효과율의 목표치를 각각 8.0%, 20.0%로 두었으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등록관리율의 실적달성이 14.8%로 185.0%의 달성률을 보이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서비스효과율은 30.6% 달성하여 153.0%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14억원 중 14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2011년 상반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지원 센터 42개소 외에 미지원 센터의 실적도 포함함.
- 선별검사 및 심층사정평가로 K-ARS, BDI, 기타 검진도구 활용 평가를 시행함. 사례관리로는 회원 대상 가정방문, 전화, 내소상담, 지역사회방문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집단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집단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함. 연계처리로 병의원과 관련복지시설 및 기타 연계를 진행함.

&lt;표 2-36&gt;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매체활용 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효과율	65%	65.08%	100.1	20	20	100.0
학교흡연 예방교육 <sup>1)</sup>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근거로 한 청소년흡연율	12.6%	12.1%	104.1	52	52	100.0
음주폐해예방 <sup>1)</sup>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근거로 한 월간음주율(현재음주율)	21.0%	21.1%	99.5	68	68	100.0
음주·흡연 청소년교육 및 치료지원	음주·흡연 청소년 교육 및 치료지원 건수	2,350명	2,488명	105.8	2	2	100.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 설치 운영	9개	12개	133.3	38	38	100.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록관리율(%) {(사례관리건수+집단프 로그램이용자수/만18세 이하 인구수)×1,000}	8%	14.8%	185.0	14	14	100.0
	서비스효과율(%) (초기심층사정평가 당시 SDQ-Kr점수 - 6개월 이후SDQ-Kr점수) 가 호전된아동청소년수/ 심층사정평가수행이후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된아동청소년수×100	20%	30.6%	153.0			

주: 1) 목표치보다 낮은 실적이 높은 성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표치/실적치\*100로 성과달성률 계산

###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1]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접근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아동정책 종합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음. 아동정책 및 서비스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분절  
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중복 및 사각지대 등의 해소를 위해 종합적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간 조정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사업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내년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연구용역진행중으로 (기초조사를 실시중으로) 추후 결과물 산출로 목표치 및 실적확인 가능함.
  -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는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8월 5일에 시행됨.
-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본 계획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계획이 원활히 수립 및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음.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매 5년 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수립·추진하고자 하였음. 『청소년기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음.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당초 목표치인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진행하여 100.0%의 달성률을 나타냄.
  -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의 수립을 위해 부내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추진하였음.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2011년 8월~12월).

&lt;표 2-37&gt;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중장기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sup>1)</sup>	정량적 수치 제시 곤란	-	-	-	비예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수립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100.0	비예산		

주: 1) 내년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연구용역진행중으로(기초조사를 실시중으로) 추후 결과물 산출로 목표치 및 실적확인 가능함.

## [2]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 보건복지부는 현실성 있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음.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5년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였음. 이는 아동복지법에 정기적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건강, 영양, 정서, 안전 등 전 부분 및 가구소득별, 가구유형별 전체 아동실태를 포함함. 현재 아동복지 관련 통계의 미흡한 항목, 조사시기 등을 검토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 통계 생산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정기적 아동실태 조사 및 통계정비사업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내년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연구용역진행중으로 추후 결과물 산출로 목표치 및 실적확인이 가능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기 어려움.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는 2011년 8월 4일 공포하여 2012년 8월 5일에 시행함.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법적근거가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1년 8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본 조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lt;표 2-38&gt;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sup>1)</sup>	정량적 수치 제시 곤란	-	-	-	비예산		

주: 1) 내년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연구용역진행중으로(기초조사를 실시중으로) 추후 결과물 산출로 목표치 및 실적확인 가능함.

## 제2절 고령화 분야(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고령사회분야 정책의 추진방향은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이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주요 정책 대상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었던 반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50세 이상을 포괄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였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은 주로 소득보장과 요양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이었음.
- 고령사회분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음.

###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은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1] 고령자 고용연장

#####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 연장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정년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50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80%이하 감액분 지원
  -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조건으로 소정근로시간이 50%이하로 감소한 경우, 피크임금 대비 50%이하 감액분 지원
  -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년 이전 감액 시는 피크임금 대비 80%이하 감액분을, 정년 이후 감액 시는 피크임금 대비 70%이하 감액분 지원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10년 12.1%(1,019개)에서 2011년 12.3%(1,232개)로 증가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12개 사업장, 2,843명에게 8,624백만원을 지원하였음(2011년 12월 기준).
  - 임금피크제 도입률: 2006년 3.3% → 2007년 4.4% → 2008년 5.7% → 2009년 9.2% → 2010년

12.1%, 2011년 12.3%

- 임금피크제 지원금: 2007년 584명(1,538백만원) → 2008년 997명(3,032백만원) → 2009년 1,497명(6,785백만원) → 2010년 1,869명(7,861백만원), 2011년 2,843명(8,624백만원).
- 이 밖에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였음.
- 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형·재고용형 등 유형별 지원요건 차등, 최대 지원기한 연장(6년 → 10년), 정년보장형 지원폐지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월).
- 현장에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하여 업종별 임금피크제 표준매뉴얼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음(2.17).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적용 근로자수 증가율이 당초 목표치에 비해 초과달성(173.7%)을 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지원금지급 사업장 증가율은 다소 부족한 성과수준(64.2%)을 보임.
- 예산집행은 125억원 중 86억원을 집행하여 68.8%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임금피크제 지원금지급 사업장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증가율이 목표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이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고 기업의 개별적 상황 및 경제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예산집행을 저조 역시 목표달성미흡의 이유와 일맥상통하며,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의 변동이 생김. '12년도 예산액은 '11년 대비 22억을 감액하여 103억원 책정.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12년도 성과지표에서는 근로자수 증가율만 고려하여 기존의 부적절한 사업장수 증가율 성과지표는 삭제함.

####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다수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급하였음(신규지원은 폐지).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급함.
-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 동안(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급함.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년연장 지원금

은 362개소의 6,188명에게 5,10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장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은 1,085개소의 3,974명에게 2,91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장년퇴직자 재고용 및 장년연장 인원증가율이 당초 목표치에 비해 초과달성(198.7%)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은 400억원 중 399억을 집행하여 99.8%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대책을 마련하고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전직지원, 직업능력개발, 노후소득보장, 정년제도 개편 등에 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6월 10일에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 2011년 10월 28일에는 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및 사회회공헌활동지원, 노후소득보장강화, 미래유망산업육성 등에 대해 「베이비붐세대 퇴직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반영하였음.
- 베이비붐 세대 및 다가올 100세 시대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2011. 12. 27, 국무회의 보고).

<표 2-39>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임금피크제 지원금	[(당해연도 수혜인원/전년도 수혜인원)×100]	30%	52.1%	173.7	125	86	68.8
	[(당해연도 수혜사업장/전년도 수혜사업장)×100]	19%	12.2%	64.2			
고령자고용 연장지원금	[(당해연도 장년퇴직자 재고용 및 장년연장인원/전년도 장년퇴직자 재고용 및 장년연장인원)×100]	7.8%	15.5%	198.7	400	399	99.8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	-	-	-	비예산		

주: 1)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은 중장기 추진과제로 예산 및 연도별 성과설정이 곤란함.



## [2]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전적인 퇴직지원 노력이 미흡하여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라 노동시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마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비자발적 이직자의 퇴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재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진로에 대한 모색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퇴직자의 심리적 변화 및 경력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변화관리와 재취업 및 창업 컨설팅,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음.
- 2011년도에 전직지원장려금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문 전직지원 컨설팅기관 6개를 선정하여 전국 12개소의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이수자 787명으로 당초 목표치(720명)에 비해 109.3%의 초과달성을 이루었음.
- 예산집행은 18억원 중 13억원을 집행하여 72.2%의 예산집행률을 보였음. 이는 기존의 전직지원장려금제도에서 전직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됨에 따름.

### □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준·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미흡하고,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 특화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육성하여 준·고령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자에 대비하여 실직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중 2개소 이내에서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기관을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실직 고령자의 취업지원.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고령자 민간취업기관 운영 내실화 및 기능강화를 통해 고령자 인재은행의 경우 취업건수가 2011년 75,436건으로 지속적인 취업실적 증가가 있었으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역시 취업건수 2,582건으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고령자인재은행 수와 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수의 합이 당초 목표치인 51개소에 비해 52개소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101.9%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고령지특화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취업률 40%의 목표치가 있었으나 달성되지 않았음.
- 고령지특화 직업훈련과 관련된 참여자 취업률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미 실시 되었기 때문임
- 예산집행은 총 48억원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중·고령자 대상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 고용노동부는 50세 이후 재취업이 어렵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이 낮아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은 중·고령자에게 훈련위주의 취업 패키지 서비스(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중·고령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2010년 3,125명에서 2011년 12,056명으로 크게 확대시켰음.
- 2011년부터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50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대폭 증가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당초 목표치였던 5,000명에 비해 12,056명이 참여하여 241.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동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률은 목표치 57.7%에 비해 64.8%로 112.3%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85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부는 중·고령 여성의 여건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고령 여성 진출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중·고령 여성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중·고령 여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510명에게 22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하였음.
- 실버웃웃트레이너, 어린이국악문화전문지도사, 노인여가지도사 등
- 이는 당초 성과목표치였던 120명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425.0%의 달성률을 보임.

&lt;표 2-40&gt;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전직지원	이수자 수	720	787	109.3	18	13	72.2
맞춤형고령자 취업서비스 기관육성	고령자인재은행 수 + 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수	51개소	52개소	101.9	48	48	100.0
고령자특화 직업훈련	취업자수 / 수료인원 × 100	40%	-	0.0	예산 미확보		
중·고령층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수	5,000명	12,056명	241.1	85	85	100.0
	(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종료자) × 100	57.7%	64.8%	112.3			
중·고령여성 맞춤형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중·고령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참여인원	120명	510명	425.0	비예산		

## [3]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자생력 있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유휴 인력인 중·고령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여 능동적·예방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장수요 변화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 확충과 전략적 재정 투자를 통한 돌봄 분야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품질관리 강화 및 제공인력 선진화를 추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돌봄분야(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42,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제공인력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1. 8. 4)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4개의 돌봄분야의 일자리 합계가 당초 목표치 35,606개에 비해 42,450개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119.2%의 달성률을 보임.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령 전문 인력의 유아교육 참여를 통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회 각계의 중·고령층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여 질 높은 유치원 기본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별 관련 전문가풀 확보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중·고령 지식인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축하였고(지혜나눔 전문가 풀 구축), 전문가를 지역별·교육프로그램별로 D/B화하여 유치원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음(지혜나눔 시스템 구축).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을 고려할 때, 목표치 41억에 비해 50억의 추진실적으로 122.0%의 달성률을, 전문 인력풀 확보 인원은 목표치 1,930명에 비해 2,796명을 확보하여 144.9%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률은 예산 50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회적기업 육성

-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취약계층 중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자 적합 직종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령 전문인력 채용(예비)사회적기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고령자 적합 직종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 자격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고령 인력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알선하고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추진실적으로, 12월말 기준 전문인력 채용 총 310명 중 고령자 38명이 지원하였으며, 이는 당초 목표치 40명에 비해 95.0%의 달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은 총 7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시니어 창업지원

- 중소기업청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시니어(50대 전후,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 전문성 등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니어 창업에 맞는 유망업종별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유망업종 개발 및 업종별 교육교재·과정을 개발하며, 정보습득, 커뮤니티 활동 등 시니어 창업·취업 준비 공간 운영 등을 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시니어 창업·취업을 활성화하였음.
- 500명의 창업목표대비 522명의 실적과 1,000명의 재취업목표대비 1,263명의 실적, 4,200

명의 창업스쿨 교육목표대비 4,311명의 실적이 나타남.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시니어 창업취업 성공률이 당초 목표치 20%에 비해 41.4%의 추진실적을 보여 207.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65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표 2-41>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4개 돌봄분야 일자리 합계 (돌봄분야: 가사간병문도우미 노인돌봄 (종합),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35,606명	42,450명	119.2	비예산		
세대간 지혜나눔사업	예산증가액	41억	50억	122.0	50	50	100.0
	확보 인원수	1,930명	2,796명	144.9			
고령전문 인력활용	전문인력 지원인원 중 고령자 수	40명	38명	95.0	7	7	100.0
시니어 창업취업 활성화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인원 대비 창업취업 성공 시니어 비율 (창업+재취업실적 / 창업스쿨 교육실적 × 100)	20%	41.4%	207.0	65	65	100.0

#### [4]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 지식경제부는 고급인력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인력의 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공계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를 위하여 이공계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당초 목표 800명에 비해 865명이 지원하였음.
  - 신규 394명, 2년차 계속지원 238명, 3년차 233명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108.1%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률은 총 120억원을 전액 집행함으로써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평생활용체제를 구축하고 학·연·산 R&D

- 활동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며 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및 과학꿈나무 지원을 하고자 과학기술정보분석, 과학관 큐레이터, ReSEAT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287명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풀을 구축하였고, 6,633과제에 대하여 모니터링분석과 131개 과제에 대한 심층정보분석, 266편 논문 및 원고 기고, 과학관 큐레이터 28명의 활동을 전시주제 심층 해설 및 초·중등학생을 과학꿈나무로 선발하여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진실적을 보임.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고경력 과학 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의 핵심이용자 지수가 목표치 235.4에 비해 243.1의 추진실적을 보여 103.3%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27억원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①

-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 진로지도 및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종합상담을 강화하고자 교사, 사회단체 상담 전문가 출신 등 고령자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취업애로 중·고령 구직자 종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퇴직 전문인력 100명을 42개 고용센터에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초 목표치에 대해 100.0%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7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②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흥미·적성 중심의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로코디네이터 765명을 전국에서 선발하고 30시간 이상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퇴직교원, 기업체 퇴직자 등 594명을 30~40시간 정도 사전 연수 후 커리어코치로 선발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자기이해 및 생애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법 교육 등에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 467,741명을 교육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당초 목표치였던 전국 선발 인원수 200명에 비해 594명을 커리어코치로 선발하여 활용함으로써 297.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6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상인조직 역량강화)

- 중소기업청은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상인회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과 동법 제66조에 의한 전국상인연합회 산하 지회에 인건비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자조적 상인조직을 육성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82명의 퇴직인력을 전통시장에 투입하여 상인회 등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자조적 상인조직으로 변화하게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퇴직인력 80명 활용의 목표에 비해 82명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102.5%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0억원 전액 집행함으로써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연계 매칭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퇴직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하거나,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 이상 고용시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이상 고용시 648만원 지원(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75% 한도)
- 기업당 3명 한도로 지원하되,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1명 추가지원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연 6회 사업공모를 통해 1,226개사 2,248명이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이중 1,068개사 1,798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자 수는 목표치 150명에 비해 389명을 달성함으로써 259.3%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22억원 중 3억원을 집행함으로써 13.6%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성과목표는 초과달성하였으나, 동 사업이 공모제 방식으로 새로이 개편

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다소 적게 나타난 것임.

- 고용창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1차 지원금 지급, 12개월 이후 2차 지원금 지급.

□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 여성가족부는 중·고령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멘토링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사회적 네트워크 향상과 경력개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업무경험이 있는 중·고령 여성의 전문경력을 활용한 멘토링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기존의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성상 대부분 청년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었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중·고령 여성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 여성들의 진로상담 및 고충 해결에 기여하고자 중·고령 여성을 멘토로 활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멘토링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50대 이상 여성 멘토 활용 목표치 80명에 비해 71명을 활용함으로써 88.7%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표 2-42>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협약체결한 지원인력	800명	865명	108.1%	120	120	100.0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핵심이용자 지수 (당해연도 핵심이용자수 / 06'년 핵심이용자수 × 100)	235.4	243.1	103.3	27	27	100.0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제 공	명예상담원 채용 인원수	100명	100명	100.0	7	7	100.0
커리어코치 선발	전국 선발 인원수	200명	594명	297.0	6	6	100.0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	추진실적 / 목표치 × 100	80명	82명	102.5	10	10	100.0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자 수	150명	389명	259.3	22	3	13.6
사이버멘토링 운영	50대 이상 여성멘토(명)	80명	71명	88.7	비예산		



## [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 □ 에이지 캠페인 실시

- 고용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중·고령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원하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령차별금지 관행 정착을 위한 종합적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업종별 임금피크제 표준매뉴얼’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여 임금피크제를 홍보하였으며 이를 역시 각종 언론에 홍보하였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홍보하고, 고령자고용강조주간 행사를 추진하였음.
  - 고령자고용강조주간 행사 : 고령자고용 우수기업 및 유공근로자 포상, 재취업수기 당선자 시상, 사진전시, 전국 51개 고용센터에서 고령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실시, SNS를 이용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시행함.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기념행사 1회, 언론홍보 10회 이상, 이벤트 행사 4회를 실시함에 따라 당초 목표의 100.0%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3억원을 전액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모집·채용을 포함, 임금·교육훈련·해고 등 고용상 전 과정에서 연령차별 관행을 개선하고자 모집·채용 관련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및 제도를 홍보하고, 사전적 예방·홍보를 실시하며,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려고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5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매분기마다 지방관서에 외국 사례, 인권위 결정례 등을 토대로 연령차별 판단 참고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연령차별 해소를 위해 연령차별 금지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모니터링 실시 결과 경고 282건, 시정지시 236건, 사법처리 1건의 조치를 취함

&lt;표 2-43&gt;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고용 촉진캠페인	고령자고용강조주간 운영	행사1회	행사1회	100.0	3	3	100.0
	대국민 언론 홍보	10회이상	10회이상				
	이벤트 실시	행사2회	행사4회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100.0	비예산		

##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 보건복지부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년) 재정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기금 수익률 제고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추진실적으로, 제3차 재정계산을 대비한 사전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6%에서 17.2%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기초연구 수행 2건, 해외·대체투자 비중 17.2%로 당초 목표치에 비해 각각 100.0%, 95.6%의 달성률을 보임.
- 해외투자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주식(-)수익을 실현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음.

####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높은 신뢰달성으로 든든한 전 국민 연금체계를 달성하고자 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내 연금 갖기 - 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교육에 있어, 초·중등 교과서에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여 조기에 교육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연금 교육 활성화, 노후설계서비스(CSA) 상담 활성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월평균 신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자발적 소득신고자 수가 증가하였음.
  - 임의가입자 : 6,291명(2010년) → 9,966명(2011년), 월평균 58.4% 증가.
  - 지역가입자 : 54,194명(2010년) → 68,188명(2011년), 월평균 25.8% 증가.
  - 자발적 소득신고자 : 8,744명(2010년) → 12,464명(2011년), 월평균 42.5% 증가.
- 또한 캠페인 전개 및 외부단체와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연금 인식제고를 위해 교과서에 국민연금제도 수정·수록하였음(14종 반영).
  -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 행사참여(2011년 10월말, 419회), 노후설계 상담서비스(349천건) 및 대외교육(6,421건) 실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6개 직능단체와 공동협약 체결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홍보효과도 조사에서 목표치 73점에 비해 74점의 추진실적을 달성함으로써 101.4%의 달성률을 보임.

&lt;표 2-44&gt;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재정평가 방법론 연구, 혼인력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발전방향	2건	2건	100.0	비예산		
	해외·대체투자액 / 금융부문 기금투자액) × 100	18%	17.2%	95.6			
신뢰제고	홍보효과도 조사	73점	74점	101.4	비예산		

##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확대

- 보건복지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공적자료가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회피(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하는 현상이 있어 이들에 대한 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업장 가입 적용 방안(신고·관리, 보험료 부담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였음.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자 회의 3회.
  -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및 지사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추진 방안 논의 1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장 가입자 특례적용 방안 검토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4회 실시함으로써 당초 목표의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그러나 이들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은 근로자성 인정여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여부 등 정부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에 추진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 더구나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적용이 미미하여 제도 편입의 효과성이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동 과제는 장기 과제로 지속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내실화하고자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6회 개최하였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2011년 12월).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2011년도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당초 목표치 1,896만 명에 비해 1,989만명이 가입함으로써 104.9%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 기초생활수급자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하여 수급권 확보를 강화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으며(2011년 6월 공포, 12월 시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2011년 12월 공포·시행)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및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100.0% 달성하였음.

####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농어민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

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려고 하였음.

- 기준소득금액 이상은 기준소득금액 수준의 보험료를 정액 지원, 기준소득금액 미만은 납부할 보험료의 50% 지원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어업인 월 평균 229천명에 대해 905억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규지원자가 증가하였음.
- 신규지원자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36,503명 → 59,707명, 2011년 10월)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 납가내 장수인원이 당초 목표치 89%에 비해 95.2%를 달성함으로써 107.0%의 달성률을 보임(12월 누적 기준).
- 예산집행은 총 984억원을 전액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표 2-4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전문가 의견수렴 횟수	4회	4회	100.0	비예산		
사각지대 해소	2011년도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	1,896만명	1,989만명	104.9	비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연금보험료 지원방안마련	법령개정	법령개정	법령개정	100.0	비예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납가내 장수율 (납가내 장수인원 / 고지인원 × 100)	89%	95.2%	107.0	984	984	100.0

### [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이행하게 하고자 퇴직연금 교육·컨설팅 사업 등을 실시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설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1년 이내에 우선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

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사외적립 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내 유보 퇴직급여 총당금에 대한 손비인정(현행 25%)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려고 하였음.

- 2011년 추진실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 완료하였으며(2011년 6월), 2011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적용하였고, 도입 당사자,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에 5,330개 사업장의 12,622명이 참여하여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간 과열·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2011년 10월).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퇴직연금 교육 실시 횟수와 컨설팅 실시 사업장 수가 각각의 목표치 50회, 200개사에 비해 136회의 교육과 200개사의 사업장 수를 기록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272.0%,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은 총 33억원 중 27억을 집행하여 81.8%이며, 이를 통해 당초의 목표치를 달성함.

#### □ 개인연금 활성화

- 금융위원회는 개인이 스스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적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고자 연금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유인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적 개인연금 개발을 유도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사망보장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연금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보험업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상품선택권 확대 및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고, 배당보험에 한해 판매가 허용되던 상품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연금저축보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무배당보험 상품을 허용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사망보험금 설정의무 완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형의 연금보험 상품 개발과 무배당 세제적격 연금보험 허용관련 해당연금보험 상품 판매의 목표치를 100.0% 달성하였음.

&lt;표 2-46&gt;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 교육 실시 횟수	-교육 50회	-136회 -200개	272.0	33	27	81.8
	- 컨설팅 실시 사업장 수	-컨설팅 200개		100.0			
개인연금 활성화	연금보험상품 다양화 정도	새로운 유형의 연금보험 상품개발	해당연금 보험상품 판매중	100.0	비예산		
	무배당 세제적격 연금보험상품 허용 여부	무배당 세제적격 연금보험 상품판매	해당연금 보험상품 판매허용	100.0			

###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1]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가능하도록 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ISP에 따라 단계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가칭) 건강 e-음”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지역보건의료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2011년 7~12월)하였고, 통합시스템 전국 확산 및 장비보강사업을 실시하여 12월 22일 전국보건기관 253개소에 확산을 완료하였음.
- 또한 다빈도 질병, 의료정보 등 건강·의료정보제공 확대와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5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2011년 12월), 전국 보건기관 민원 서비스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였음(2011년 9월).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전략계획(ISP)을 수립함으로써 100.0%의 달성률을 보였음.
- 예산집행률은 총 예산 5억원을 집행함으로써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 보건복지부는 검진기관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해 검진수준을 제고하여, 취약계층 검진 형평성을 제고하여 검진 사후관리 강화로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검진기관에 대한 주기적 평가, 결과공개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검진기관 관리 강화.
- 검진 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개인의 건강행태를 개선 강화.
- 취약계층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및 맞벌이 가정 등 대상자 특성별 검진 편의 서비스 확대.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100개소의 건강검진기관 전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포털 시스템(공단)과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보건소)의 연계를 추진하고,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과 차상위 계층 영유아 대상 1인당 최대 40만원의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장애인 검진도우미·다문화 가정 통·번역서비스·공휴일 검진기관 인센티브 도입 등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을 제고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국가건강검진기관 대상 전문평가 여부를 위한 전문평가 참여율이 목표치 80%에 비해 100%의 추진실적을 보여 125.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률은 2억원 중 1.5억원을 집행하여 75.0%이며, 이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가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생활터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및 상담 활성화.
-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건강증진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건강교육 및 캠페인 실시.
-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사회적 접근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추진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영역(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16개 건강증진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2011년 8월말 기준 1회성 교육은 286만명, 반복교육은 59만명(실인원), 홍보는 38,772건, 캠페인은 1,668건이 이루어졌으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는 58,600명이 참여하여 1인당 4.75회의 평균 상담수준을 보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건강생활실천율이 목표치 56%에 비해 84.1%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150.2%의 달성률을 보였음.
- 예산집행률은 총 236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 보건복지부는 비만인 자나 혈압·당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건강위험도를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하여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영양·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도하며, u-Health디바이스, 전화, 메일 등을 활용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함.
-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허가를 실시하였고, 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에 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상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국회 토론회·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칼럼 기고, 지하철 동영상 홍보, 무가지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도 세부 모형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건강관리서비스 만족도가 목표치 65점에 비해 76.1점으로 117.1%의 달성률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자 수는 목표치 2,000명에 비해 2,897명이 지원하여 144.9%의 달성률을 보임(2011년 11월 기준).

#### □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기반 보건교육 활성화(1차 예방),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65세 이상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2차 예방)을 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지속치료를 향상을 위한 민간협력모형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을 확대하였음.
  - 경기도에서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위해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건강캠페인 및 순회교육 등 지역사회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음.
  -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규 지역으로 15개소를 선정하였음(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충남 연기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인천시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 실시를 계속하였음(의료기관 참여: 병의원 328개, 환자등록 현황: 총 79,894명).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율이 목표치 75%에 비해 76%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101.3%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54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 네트워크 등 IT기술과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의료-IT 융합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높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 방문설명, u-Health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차원의 로드쇼 개최 등 제도개선 노력과 u-Health 관련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정보·센싱기술 등 국가 표준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음.
  - 해외 원격의료의 경우, 해외 3개국(미국, 러시아, 몽골)에서의 시범사업을 필리핀, 레비논 등 2개국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해외 5개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원활한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다국어 기반의 PHR 시스템 및 모바일 기반의 당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범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환경 검증을 실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u-Health 서비스 표준 등 개발 건수는 목표치 16건에 비해 19건으로 118.8%의 달성률을 보였고, 해외 원격의료 실시 건수는 목표치 500명에 비해 522명을 달성함으로써 104.4%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률은 총 14억 중 0억원 사용으로 0%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동 금액은 2012년도로 이월되어 집행.
- 특히, 의료법 개정(안)의 미통과는 대형병원 환자 편중우려 등 의료단체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료법 개정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 보건복지부는 건강수명 연장 및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노화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화의 원인 및 발달 기전에 대한 규명,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의 총체적 노화·고령화 관련 연구를 위한 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근거조항 신설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2009년 4월),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2011년 3월), 법사위 상정 및 법안2소위에 회부(2011년 4월 4일)하였음. 또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에 관해 신청하였음(2011년 5월).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근거 법령 마련을 목표로 하였지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심사에서 포함이 되지 않음에 따라 차후로 연기되어 미흡하게 나타남.

&lt;표 2-47&gt;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전략계획(ISP) 수립 여부(비계량)	수립	수립	100.0	5	5	100.0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전문평가 참여율 (전문평가 참여기관/전문평가 대상기관 × 100)	80% 이상	100%	125.0	2	1.5	75.0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 관리체계 구축	건강행태실천자 수/프로그램 참여자 × 100	56%	84.1%	150.2	236	236	100.0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바우처 수혜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환산 평균점수)	65점	76.1점	117.1	비예산		
	바우처 사업 지원실적	2,000명	2,897명	144.9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	65세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관리율(경기도 지역) (① 사업지역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록환자 수) / (② 사업지역 65세이상 고혈압·당뇨추정환자수) × 100	75%	76%	101.3	54	54	100.0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 통과	미통과	0.0	14	0	0.0
	- 표준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 교육 프로그램 운영	16건	19건	118.8			
	해외 원격의료 실시 건수의 합	500명	522명	104.4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및 근거 법령 마련	차년도 목표로 연기	0.0	비예산		

####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1] 노후설계 기반조성

###### □ 노후설계 기반조성

-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평균장년연령(55세)을 고려할 때, 은퇴이후 약 25~30년의 노년기를 갖게 됨에 따라 체계적인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이 있어 노후설계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은퇴자들의 제2기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어 고령층이 증대될 예정이며, 은퇴 후 기간에 비해 부모·자녀부양과 자식의 교육비 등으로 은퇴 준비율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대학교수, 노후설계교육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상자의 생애경력과 특성에 맞춘 총 11개 영역의 노후설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음.
- 변화관리, 가족 및 대인관계, 재무, 건강, 여가, 주거, 경력 개발·설계, 사회참여, 평생학습, 인생설계, 영역별 특강(창업, 귀농, 세무 등)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가 목표치(3개)에 비해 11개를 개발하여 366.7%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4억원 전체를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 보건복지부는 노후설계 교육기관 인증을 통해 교육의 신뢰성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자격관리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질 높은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교육시설, 인력 등 일정 규모의 기준시설을 갖추고 있는 노후설계 교육기관을 인증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 교과목 등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학계 전문가, 관련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노후설계교육 제공단체 관련자 등 총 12인)하고 운영하였으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의해 분석한 결과, 협의체 운영에 대한 목표치(3회)를 전부 수행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표 2-48> 노후설계 기반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노후설계 지원사업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	3개	11개	366.7	4	4	100.0
노후설계 지원사업	협의체 운영	연 3회	3회	100.0	비예산		

## [2]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노후설계 수행기관 간 연계로 정보축적 및 실효적인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공공-민간 노후설계기관 간 상호보완적 협력체를 구성하고,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지자체(순창군) 노후설계 교육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노후설계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시범사업에서는 세대별 노후생활 준비, 건강한 노후생활 관리 등 지자체 특화형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육 운영하였음.
  -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은 2011년 8월 3일에 교육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설계 교육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노후설계협의회 실무 협의 및 모니터링을 5회 실시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지자체 특화형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수가 총 3개로 목표치(2개)를 초과달성(150.0%)하였으며, 노후설계 협의회를 운영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표 2-49>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후설계 교육기반 조성	지자체 특화형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수	2개	3개	150.0	비예산		
	지자체 노후설계 협의회 운영	운영여부	여	100.0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은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 2-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1]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보건복지부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중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정부지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등 공공분야 일자리와 시험감독관, 아파트택배 등 민간분야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 18.7만개를(9월 기준) 창출하였으며,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노인일자리 ‘종합평가대회’ 및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노인일자리 창출 수의 총합은 225,497개로 목표치 200,000개를 상회하여 112.7%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3,438억원 중 3,408억원을 집행하여 99.1%의 집행률을 보임.

## □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 보건복지부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분야는 사회적 가치제고와 근로형태 다양화 및 급여 차등화를 추진하고, 민간분야는 사업의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지원, 노-노케어 등 사회적 유용 일자리 30천개를 실시하고, 16개 시도별 60세 이상 참여노인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한 사업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노인일자리 품질 향상 및 만족도를 제고시켰고, 노인생산물 판매 촉진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서포터즈’ 운영으로 경영컨설팅 지원을 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및 2011년도 참여노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만족도가 3.9점으로 목표치 4점 이상(만족)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97.5%의 달성률을 보임.

&lt;표 2-50&gt;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일자리 확대	Σ 노인일자리 창출 수 합	200,000개	225,497개	112.7	3,438	3,408	99.1
노인일자리 확대	Σ 참여노인 만족도(5점척도)	만족(4점) 이상유지	3.9	97.5	비예산		

## [2] 일자리 사업 체계화

##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 보건복지부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 확충 및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구축 및 지원을 확대하며, 직능·직장 시니어클럽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진단 결과와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원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확대하였고, 중기 경영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2010년에 비해 12개소를 신규지정하고(2011년 99개소), 시니어직능클럽 역



시 2010년에 비해 8개소를 신규지정 하였음(2011년 10개소).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제23조의 2)하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 센터의 민간취업 기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2011년 10월).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시니어클럽 확대 수가 당초 목표치 15개에 비해 20개의 추진실적을 보여 133.3%의 달성률을 나타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개편 역시 이루어져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표 2-51> 일자리 사업 체계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일자리 확대	Σ 직능직장 및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수	15개	20개	133.3	비예산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 통폐합 및 민간분야 일자리 기능 강화	1회	1회	100.0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2010년 371만명에서 2011년 379만명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음.
  - 선정기준액 : 2010년 70만원(부부 112만원) → 2011년 74만원(부부 118.4만원)
  - 연금액 : 2010년 9만원(부부 14.4만원) → 2011년 9.1만원(부부 14.6만원)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당초 목표치였던 379만명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37,930억원 중 37,883원을 집행함으로써 99.9%의 집행률을 보임.

##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금융위원회는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주택연금의 가입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약 6,500명에 대해 1,320억원의 주택연금을 지급하였음.
  -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2,939건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의하면 당초 목표치였던 1,300억원에 비해 1,320억원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101.5%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표 2-52〉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379만명	379만명	100.0	37,930	37,883	99.9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연금 공급실적	1,300억원	1,320억원	101.5	비예산		

## [2]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수용성이 낮은 재직자노령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연금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재정중립적인 방향에서 감액률을 개선하려고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당초 목표였던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을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11.4), 법안소위 계류('11.12 현재 : 심사 중)

## □ 연기연금 제도 활성화(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연기연금 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현행 재직자노령연금에서 60~64세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가산율도 연가기간 1년당 6%에서 7.2%로 인상하고, 연기

연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입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동월 31일에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음.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됨으로써 100.0%의 달성률을 보였음.

<표 2-53>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	개정추진	개정안국회 법안소위 계류	100.0	비예산		
연기연금 제도활성화	연기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개정안 국회제출	국회제출 및 통과	100.0	비예산		

### [3]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의 안정을 꾀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65세 이상 70세 이하, 10년 이상 농업경영)이 3년 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을 60세 이하의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영농경력 만 3년 이상인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ha당 3,000천원/년, 최대 2ha)을 지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고령은퇴농업인 3,186명에게 1인당 연간 평균 1,472천원의 소득보전을 하여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였으며, 경영이양 대상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45세 이하 농업인(3년 이상 농업경영)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직불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1인당 경영이양 면적 달성률이 당초 목표치의 120.0%를 달성함.
- 예산집행은 총 593억원을 전액 집행함으로써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 농지연금 도입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의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도입하여 고령농업인 1,007명에게 월평균 97만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였음. 또한 농지연금 시행결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연금액 지출증가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부족분을 확보하였고, 농지연금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중점홍보를 추진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농지연금 농가가입률이 당초 목표치 3.3%를 넘는 6.7%의 추진실적을 보여 203.0%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냄.
  - 예산집행은 총 72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표 2-54>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경영이양 직불제	1인당 경영이양 면적 달성률	100% (0.75)	120% (0.9)	120.0	593	593	100.0
농지연금	농지연금 농가가입률(%) (당해연도지원농가수) / (총 목표농가수) × 100	3.3%	6.7%	203.0	72	72	100.0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1]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 질병특성에 맞는 급여확대는 부족하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골다공증 등 노인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고 노인들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당뇨 치료제 복용시 보험급여 인정약제를 2종에서 3종으로 확대

하였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수와 확대 시행 항목수가 일치하여 당초 목표치에 대해 100.0%의 달성률을 나타냄.

#### □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개발)

- 질병관리본부는 관절염, 눈, 귀 질환, 골다공증 등 다빈도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하여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안질환, 난청, 수면무호흡증, 관절염 등 총 4종에 대한 예방관리 수칙 책자를 만들어 종별로 1.2만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사업지침을 만들고,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하였음. 또한 주간건강과질병(5건), 보도자료(5건), 뉴스레터(6건)를 통한 각종 건강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건강정보 생산 수가 당초 목표치였던 51건을 달성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8억원 중 1.5억원을 집행하여 83.3%이며, 이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함.

#### □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는 의치(틀니)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보급하고 관리하며, 노인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구강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의치보철·불소도포·스케일링에 대한 지원, 의치보철 사후관리를 수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16천명, 사후관리 6,896명을 통해 의치(틀니)지원 및 관리를 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72,638명에게 불소도포·스케일링 기술을 지원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구강보건사업 만족도가 당초 목표치인 80에 비해 93.3을 기록함으로써 116.6%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344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lt;표 2-55&gt;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질병 특성에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행 항목수 /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수) × 100	100%	100%	100.0	비예산		
만성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및보급	건강정보 생산 수	51건 (‘10년대비 11% 증)	51건	100.0	1.8	1.5	83.3
노인 구강건강증진서 비스 확대	구강보건사업 만족도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실 등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임)	80	93.3	116.6	344	344	100.0

## [2]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인식개선

-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 예방 및 체계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전문인력 양성 등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전국 노인가구의 9.7%(757천명)를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61,357명에게 월 3만원 상한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 관련 의료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였음. 또한 지속적인 치매홍보 추진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치매노인 및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음(8.4).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지역사회 치매조기 검진률이 당초 목표치인 9.6%에 비해 9.7%의 추진실적을 보여 101.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률은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가 총 279억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lt;표 2-56&gt;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치매조기 검진사업	지역사회 치매조기 검진률 (지자체에서 실시한 조기검진건수 / 만 60세 이상 인구수) × 100	9.6%	9.7%	101.0	279	279	100.0

## [3]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 예방적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치매·중풍·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노인이 전체의 77%로 장기요양 이용자의 기능 및 건강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요양-의료서비스간 적극적 연계를 위한 요양시설 전담주치의를 도입하고, 시설입소 방지 및 재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통해 시설방문을 통한 현행 촉탁의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요양시설(500개소) 및 촉탁의(500명)을 대상으로 방문횟수, 시간대, 만족도, 필요성, 계약기간, 진료방식, 애로사항, 보수액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적용을 수행하였음. 또한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요양-의료서비스간 적극적 연계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 모형개발을 함으로써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 및 소비자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개선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추진하며, 결과지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 직무교육 자율적 시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수교육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교재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교재 배포 등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전 직무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평가

대상을 기존의 신청기관에 한하였던 것을 전체 입소시설(3,454개소) 의무평가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안전, 환경, 서비스 질 향상 지표 보강 및 추가를 위한 고시 개정(6.2)을 하여 평가지표를 보완하였음. 또한 평가매뉴얼을 개발하고 평가전담반 교육 및 운영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2011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직무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완료기관 수가 95%에 이르러 당초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각각 100.0%, 105.6%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168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 보건복지부는 IT기술을 활용하여 방문급여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증감·증량 등 허위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장기요양보험의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RFID 방식 ‘재가서비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가급여 중 방문서비스(요양, 목욕, 간호) 제공내역과 자동 청구시스템을 연계하여 청구·심사·지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41개 시군구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였음(1차 사업 : 재가기관 302개, 수급자 1.1만명, 요양요원 9천명). 또한 실시간 전송내역에 대한 청구·심사 교육 및 장애대응 요령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체 방문서비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였음(전체 방문급여 수급자 16만명 중 93.2%인 14.8만명 참여 중, 2011년 11월 10월 기준).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참여도가 목표치 50%에 비해 91%의 추진실적을 보여 182.0%의 달성률을 보임.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국정과제로서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를 기존 1~3등급에서 등급외자 일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차매중증도가 낮아도 문제행동이 빈발하여 가족수발부담이 큰 경증치



매어르신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여 2011년 11월말 5,811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음.

- 3등급 → 2등급 1,213명, 등급외A → 3등급 4,598명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당초 목표치인 33만명에 비해 32만명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97.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4,609억원 중 4,583억원을 집행하여 99.4%의 집행률을 보임.
- 고려해야할 점은 요양필요가 큰 중증의 노인이 제도시행초기(2008년 7월 ~ 2009년 6월)에 대거로 유입되었고, 1등급자 중 사망자는 증가하는 반면, 요양서비스 이용으로 2등급자 중 1등급 진입 증가세가 완만하다는 것임.

<표 2-57>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요양-의료서비스간 적극적 연계	사범사업 모형개발 및 사범사업 실시	모형개발 및 실시	모형개발 및 실시	100.0	비예산		
재가노년층의 지역사회자원연계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 모형개발	모형개발	모형개발	100.0			
품질높은 요양서비스제공	직무교육 도입	직무교육 계획마련	직무교육 계획마련	100.0	1,168	1,168	100.0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평가완료기관 수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90%이상	95%	105.6			
재가노년층의 지역사회자원연계 강화	(참여기관수 / 참여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수) × 100	50%	91%	182.0	비예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33만명	32만명	97.0	4,609	4,583	99.4

#### [4]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 노인 운동사업 활성화

-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노인건강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3,221개 시설에서 65,027명에게 강습 183,670회를 실시하였고, 노인운동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경로당 외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공원 등 운동 공간을 다양화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노인건강운동교실 실시 횟수 당초 목표치인 180,000회에 비해 183,670회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102.0%의 달성률을 보임.

####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층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각종 노인병 예방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경로시설 등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직접 방문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활동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전국규모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각 지역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550명을 배치하여 4,736,115명을 대상으로 234,635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어르신 생활체육지원과 관련하여 지도자 배치율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여 100%의 달성률을 보였고,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이 역시 1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36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의 집행률을 보임.

<표 2-58>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건강운동교실	노인건강운동교실 실시 횟수	180,000회	183,670회	102.0	비예산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지도자 배치율 (배치인원 / 정원) × 100	100%	100%	100.0	136	136	100.0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대회 개최수	1회	1회	100.0			

#### [5]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보건복지부는 높은 비급여 본인부담, 급속한 고령화 추세, 약품비 증가 등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단기 재정안정대책의 실행으로 재정위협(2010년 말 당기적자 1.3조원)을 극복하고 2011년말 당기흑자 전환을 이루었음. 또한 장관 직속 보건 의료미래위원회(4~8월) 운영을 통해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이후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였음('11.12.29).
- 단기 재정안정대책 : 고혈압치료제 기동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을 통해 3,504억의 지출절감을 이루었고, 보험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가 직장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징수 제고 등을 통해 1,738억의 수입을 확충함.
- 2011년말 기준 6,008억의 흑자 및 적립금 1조 5,600억원을 보유.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당해년도 총 급여비 대비 당해년도 적립금 비율이 목표치였던 2%를 상회한 4.3%를 기록함으로써 215.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lt;표 2-59&gt;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당해년도 적립금 / 당해년도 총급여비) $\geq$ 2%	2%	4.3%	215.0	비예산		

##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행정안전부는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여 자아실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어르신자원봉사단’을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고, 노인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실정 및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며, 우수 어르신 봉사 활동자에 대해 표창 등 각종

포상을 수여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노인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안부 장관상 등 각종 포상을 수여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60세 이상 자원봉사자 등록 비율이 목표치 2011년도 센터 등록자의 10%에 비해 9.6%의 추진실적을 보여 96.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0.2억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령지식인이 본인의 전문성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이루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여 14개 지역별로 노인자원봉사클럽 732개가 구성되고, 14,800여명의 자원봉사자 활동, 클럽지도자(540명) 및 클럽코치(2,100여명)를 양성하였음. 또한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였으며, 200개 노인복지관에서 440개(25명 단위) 자원봉사단(12천명), 노인복지관 협회 리더센터(15개)의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복지관 전문자원봉사조직화를 지원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전문자원봉사클럽 구성이 당초 목표치 700개에 비해 732개의 추진실적을 보여 104.6%의 목표달성률을 보였고,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수 역시 당초 목표치 20개를 달성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42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계 원로(과학자, 공직자 등)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강, 과학관 전시품 해설·안내, 탐구활동 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학들에게 은퇴 후 사회활동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과학특강, 과학관 관람객 안내 및 전시품 해설, 과학체험 부스 운

영 및 녹색생활과학 보급 등 전문 봉사체제를 확충하고, 소외계층 대상 자원봉사를 추진하여 사회 일반의 자원봉사를 강화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과학이야기 특강 과학관 봉사, 녹색생활과학 보급 등 참가횟수가 당초 목표치인 700회에 비해 1,218회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174.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구축 ①

- 보건복지부는 노령 지식인이 본인의 전문성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원봉사 등록, 수요처 조회, 신청, 배치, 교육정보, 분야별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형성 등 자원봉사 정보망을 연계하고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직 및 퇴직노인 단체의 DB 확보 및 신규단체를 발굴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전문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VMS와의 연계를 추진하고(계속), 홈페이지 개설 등 노인자원봉사자의 정보교류 및 홍보 등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자원봉사를 지원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전문직 퇴직 노인 단체 DB 구축 단체 수가 목표치인 100개를 상회한 115개를 달성함으로써 115.0%의 달성률을 보임.

#### □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②

- 행정안전부는 노인, 고령자의 사회 경험 및 지식을 어려운 이웃과 사회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환원하고 전이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통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다양하고 충실한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 자원봉사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인증시스템), 여성가족부(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자원봉사시스템) 등 유관기관 자원봉사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당초 목표치인 5개 기관 자원봉사 유관시스템 연계 완료를 수행함으로써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lt;표 2-60&gt;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화	(60세 이상 포털시스템 등록 자원봉사자 / 포털시스템 등록 전체 자원봉사자) × 100	11년 센터 등록자의 10%	9.6%	96.0	0.2	0.2	100.0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전문자원봉사 클럽 수	700개	732개	104.6	42	42	100.0
고령자자원 봉사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수	20개	20개	100.0			
원격과학인 봉사활동지원	과학이야기특강, 과학관봉사, 녹색생활과학보급 등 참가횟수	700회 (4,203인)	1,218회 (4,887인)	174.0 (116.3)	비예산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	DB 구축 단체 수	100개	115개	115.0	비예산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	유관시스템 일감정보, 봉사자 정보 등 자원봉사 관련 정보 연계 구축	5개 기관 자원봉사 유관시스템 연계	연계 완료	100.0	비예산		

주: 1)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유관시스템 연계)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나 11년 예산에는 미반영됨

## [2]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 보건복지부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대부분이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어 노인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및 교육실시, 노인복지관 확충 지원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여가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집 및 노인복지관의 여가매트리스 모형을 개발하여 제작 및 보급하였음(250개소)
  - 이는 당초 목표치인 250개소를 충족시킴으로써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②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호시설 및 저소득 노인 등 여건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노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개인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사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에 연간 30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전국 132개 노인복지관 대상 3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에 예술강사 87명을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3,060명의 수혜실적을 나타냄.
  - 이는 당초 목표치인 2,800명을 상회한 것으로 109.3%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9억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보건복지부는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신축을 지원하여, 노인복지관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노인복지관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2010년 노인복지관 수가 237개소에서 2011년 259개소로 증가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당초 목표치인 13개소 신축지원을 달성함으로써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3억원을 전액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이고 미설치 지역의 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므로 분권교부세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문화바우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관람비용을 지원하여 문화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공연·전시 관람비용을 지원함.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12월 기준 문화카드 37.6만매를 발급하여 발급률 69.6%, 이용률 53.3%의 실적을 보였으며, 저소득층이 접하기 어려운 공연·전시의 무료관람 기회와 개인 취향에 따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여 만족도를 제고시킴.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문화카드 이용자 수(가구)가 당초 목표치인 130만명

(68만 가구)에 비해 121만명(64만 가구)을 기록하여 94.1%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347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문화체육관광부는 퇴직자, 노인 등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어르신 강사 및 전문강사 파견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운영
-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운영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202개의 프로그램을 2,010백만원의 예산에서 실행하였으며, 어르신 문화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중앙일간지 및 공중파 보도 10회 이상)를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가 당초 목표치인 150개에 비해 202개의 추진실적을 보여 134.7%의 달성률을 보였고, 수혜자 수는 목표치 4,000명을 상회하는 6,900명을 기록함으로써 172.5%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25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표 2-6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례집 발간보급	250개소	250개소	100.0	비예산		
노인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수혜자 수 합산	2,800명	3,060명	109.3	9	9	100.0
노인복지관 신축	13개소 신축지원	13개소	13개소	100.0	3	3	100.0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이용자 수(가구)	68만가구 (130만명)	64만가구 (121만명)	94.1	347	347	100.0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 수	150개	202개	134.7	25	25	100.0
	수혜자 수	4,000명	6,900명	172.5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의 2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 [1]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토해양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 주거지원을 통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수준을 제고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통해 고령자 주거지원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고령자 주거안정법」 및 「장애인 주거지원법」을 병합하여 제정.
    -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여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 국토해양부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고령자 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을 통하

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인편의시설 구비 등 무장애(barrie-free) 설계를 반영한 고령자용 보금자리(국민·영구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장기공공임대(국민·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이상(지방3%)을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주거환경이 양호한 저층부 배치 및 편의시설 항목 추가 등 보다 강화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마련 등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적 공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1년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총 1,380호 공급하였음(사업승인).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수도권 5%, 지방 3%를 달성함으로써 100.0%의 달성률을 보임(수도권 5.89%, 지방 3.10%).

####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농촌진흥청은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 정비, 소득·경제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농촌 노년 장수생활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촌노인의 4영역 활동 지원을 통한 바람직한 농촌 노인생활모델마을을 육성하고자 하였음.
  - 건강생활 활동(게이트볼, 노인체조 등),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사회활동(원예, 한글, 무용 등), 노년 안전생활환경 정비(계단 및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노년에 적절한 소득·경제활동(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등).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148개소에 74억원을 지원하여 2011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2011 농촌지원사업 신규대상자 교육, 2011선정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촌노인 맞춤형 건강생활체조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하였음.
- 그 밖에 농촌건강장수마을 국비사업 점검 및 현장지원(17지역), 농촌형 노인돌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책자 발간 및 배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 등이 있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의해 분석한 결과, 수혜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목표치인 66점을 상회하는 72.1점으로 109.2%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74억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lt;표 2-62&gt;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법제정	법제정	100.0	비예산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목표치(5%, 3%) ≤ 고령자용 임대주택 / 전체 임대주택 × 100	수도권 5% 지방 3% 공급	수도권 5% 지방 3% 공급완료	100.0	비예산		
농촌건강장수 마을육성	수혜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외부전문기관 설문조사)	66	72.1	109.2	74	74	100.0

## [2]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국토해양부는 2003년 이전에 건설된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안전도를 제고하며,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버스 승·하차가 편리한 친환경 CNG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에 엘리베이터 76대, 에스컬레이터 78대를 설치하였고, 저상버스 693대를 도입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도시철도 이동편의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실적 대비 320억원의 추진실적으로 100.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저상버스도입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 실적 대비 82억원의 추진실적으로 82.0%의 달성률을 보임.
  - 전체 예산집행은 총 2,448억원 중 1,568억원을 집행하여 64.1%의 집행률을 보임.
  - 추진상 애로사항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차령연장(9년 → 11년, 차령연장 201대)에 따른 대·폐차 물량 축소로 저상버스 도입 수요가 대폭 감소하였고, 기타 일부 지자체 버스업체 재정난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국토해양부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등을 통해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법제화하고 인증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총 23개소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BF 인증대상 시설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발주조건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지침 및 조례 등 개정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96건, 보행우선구역 5개소의 추진실적을 보여 당초 목표치의 154.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6억원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 경찰청은 고령자의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요령 등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 등이 추가적으로 실시하다는 판단 하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26개소)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희망자에 한해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개발원과 협조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대도시권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우선 시범 실시 후, 매년 5개소씩 확대추진하려 했던 것이 5명만 주말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함.
-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추진계획에서 삭제되었으며, 사업의 취지에 대한 목표치 설정 역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6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도시철도 이동편의 시설확충	예산집행 실적 대비	320억원	320억원	100.0	2,448	1,568	64.1
저상버스도 입보조	예산집행 실적 대비	100억원	82억원	82.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건수/계획×100×0.5+②보행 우선구역선정실적/계획×100×0.5	-인증46건 -보행우선 구역5개소	-인증96건 -보행우선 구역5개소	154.0	6	6	100.0
노인교통 안전교육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시	면허시험장 6개소실시	-	0	비예산		

###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1]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 □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①

- 보건복지부는 일상적 위협에 취약한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득·주거·건강·사회적 접촉 수준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 B 자에 대한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등 5,750명이 독거노인 153천명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하였으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화재·가스경보기, 응급호출버튼, 활동감지센터 등)을 49천가구에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독거노인사랑잇가사업을 통해 35천명의 독거노인에게 주2회 이상 안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독거노인 보호강화 및 생활지원에 대한 수혜노인 수가 당초 목표치인 190천명을 상회한 255천명을 기록함으로써 134.2%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473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②

- 여성가족부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건강악화, 손자녀 양육·학습지원 스트레스, 정서적 상실감 등이 큰 상태로써 의료 및 가사지원, 상담프로그램, 정서지원, 건강관련 문화활동 증진 등 지원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 노인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양육상담 및 정서지지, 건강·보건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업기관수 4개소에 심리정서지원 661명, 학습정서지원 1,339명, 생활가사지원 404가구, 가족문화지원 1,239명, 주거환경개선지원 34건의 사업 실적을 나타냈으며, 조손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조손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가 당초 목표치인 85점에 비해 94.6점을 기록함으로써 111.3%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8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농촌 가사도우미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고령 가구, 다문화, 조손, 장애인 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취약 농가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구당 연 최대 12일의 한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추진실적으로 농어촌 고령취약 13천 농어가에 11억원을 사용하여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의해 분석한 결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만족도가 당초 목표치인 92%에 비해 91.1%의 추진실적을 보여 99.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1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표 2-6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노인 수 (사업실적 보고)	190천명	255천명	134.2	1,473	1,473	100.0
조손가족통합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85	94.6	111.3	8	8	100.0
농어촌 가사도우미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가사도우미) 고객만족도(5등급 척도에서 상위 2등급까지 100점 만점으로 환산)	92%	91.1%	99.0	11	11	100.0

## [2]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사례 발굴을 통해 학대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신고·접수(1577-1389, 24시간 운영)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후 응급 보호조치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구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전국에 16개소 신설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노인학대사례 종결률이 목표치 82%에 비해 88.8%의 추진실적을 보여 108.3%의 목표달성률을 보였고, 학대피해노인 컴퓨터입소자의 우울감소는

당초 목표치 70.0%에 비해 97.6%를 기록하여 139.4%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01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표 2-65>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학대사례 종결률(%)	노인학대 종결실적 / 연간 전체신고건수 × 100	82.0	88.8	108.3	101	101	100.0
학대피해노인 정서적안정비율	우울감 감소노인 수 / 응급사례학대피해노인수 × 100	70.0	97.6	139.4			

### [3]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 보건복지부는 효행자, 장한아버지 등을 발굴하여 포상 및 격려를 하여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 효의 달 운영 및 효행자 발굴 포상을 실시하고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효행장려 활동 등을 홍보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제39회 어버이날 효행자를 발굴하여 총 169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동 행사에서의 효행자 포상실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 국민훈장 4명, 국민포장 5명, 대통령표창 16명, 총리표창 20명, 장관표창 124명.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가 목표치인 185명에 비해 169명의 추진실적을 보여 91.4%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예산집행률은 100.0%를 기록함.

#### □ 노인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 보건복지부는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부모의 부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일부를 공급하고,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하며,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한 경로 우대 공제를 하고, 일정기간 효행을 한 자에 대하여 지자체별 효행수당 지급을 확대 권장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동 사업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2012년 추진계획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음.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율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적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화 수준에 따른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발전모델 개발안을 구체적 지침으로 마련하고 보급하여 지자체의 노인복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우수 시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제15회 노인의날을 기념하여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실시 단체에 대해 대통령 표창 1개소, 총리표창 8개소, 장관표창 11개소 등 총 20개의 포상을 실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포상 수가 당초 목표치인 16개를 상회한 20개를 기록함으로써 125.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표 2-66>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효문화정착을 위한 효행장려 여건마련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	185명	169명	91.4	1	1	100.0
노인유대사회분위기	-	-	-	-	비예산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사업개발	- 자체우수사례수집및사업개발 - 우수 프로그램 포상	16개 프로그램 포상	20개 프로그램 포상	125.0	비예산		

### 제3절 성장동력 분야(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성장동력정책의 기본목표는 제2차 기본계획 상으로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육성이 주요 전략이었음.
-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가 향후 10년 안에 가시화될 전망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등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였으나 거시적 차



원에서 사회 총체적 구조 변화를 위한 대응은 미흡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인력·교육·주택·금융·재정 등 사회시스템을 고령사회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함.

- 성장동력 분야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음.

###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차별 개선 및 여성고용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전국의 500인 이상 사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 산업별 여성고용비율 평균 기준을 산출함. 제도 이행에 필요한 기업의 여성고용수준 평가 및

고용평등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함.

-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사업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여성고용률을 전체근로자수대비 여성근로자수로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34.15%에 비해 34.87%로 102.1%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8억원 중 8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2011년 남녀근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고용비율은 전년대비 0.75%p 상승하고 여성관리자비율은 1.0%p 상승하였음.
- 직급별 임원급 여성비율은 1,000인 이상·999인이하 각각 6.81%, 7.73%로 전년 대비 각각 0.58%p, 0.44%p 증가하여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직종별 관리직과 전문직 여성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16.96%, 32.56%로 전년대비 0.81%p, 0.58%p 상승, 999인 이하 사업장이 각각 15.41%, 34.91%로 전년대비 1.08%p, 0.70%p 상승하였음.

####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 결정의 대표성·민주성을 제고하고, 여성이 차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년~2011년)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자체 관리직(6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 추진하였음.
- 여성대표성 제고로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는 목표치 10%에 비해 8.4%로 84.0%의 달성률을 보이며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는 목표치 9.6%에 비해 9.0%로 93.8%의 달성률을 보임.
- 추진상 애로점은 '08년 초 정부조직개편 후 5개년 계획('07~'11) 재설정 시, '08~'10년 연도별 목표치는 하향조정했으나, '11년 목표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최종연도에 목표달성이 곤란해진 것임.
-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을 추진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률을 제고하였음.
- 2011년 정부업무합동평가에 5·6급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 등을 반영하였음.

####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통해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와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의 여성교원 임용확대를 통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

고 및 대학 내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과 여성 교장·교감임용으로 여성교수비율을 목표치 14.0%에 비해 13.6%로 97.1%의 달성률을 보이고 여성교장·교감임용률 제고로 21.8%의 목표치에 비해 21.8%를 달성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3억원 중 3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대학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사업 추진 계획을 2011년 4월 수립하였고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를 위한 위탁계약과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였음.
- 사업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2011년도 초 중등학교 관리직교원 총 18,830명 중 여성이 4,107명으로 21.8%를 차지함.

####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통한 과학기술인력 활용 극대화 및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 제고를 통한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사업은 정부출연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을 기존 목표치 17%로 두었으며 추진실적으로 14.6%를 나타내어 달성률 85.9%를 보임.
- 개별 정부출연(연)에서 신규채용시 여성비율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여성비율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하였음.
-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으로 과학기술인력 활용 극대화 및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함.
- 정부산하 98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채용인원 중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였음.

#### □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사업은 양성평등교육확대로 집합교육 수료자를 기존 목표치 8,880명에 비해 9,728명으로 109.5%의 달성률을 보이며 사이버·원격교육 수료자로 기존 목표치 28,920명에 비해 45,576명으로 157.6%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54억원 중 54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공무원 및 사회선도층 대상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4개 분야 9,728명) 대국민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진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넓은 양성평등의식 교육 기회를 제공함.
-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의식 확산 교육을 실시함(3,290명).
- 양성평등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을 진행함(남부권역 초등학교 8개교).
- 아동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초등학교 8개교) 등.
- 사이버 교육 실시(44,725명), 사이버 교육 35개 과목 콘텐츠 개발 등.

&lt;표 2-67&gt;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여성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100	34.15%	34.87%	102.1	8	8	100.0
여성대표성 제고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4급이상 여성공무원 수/4급이상 공무원수)×100	10.0%	8.4%	84.0	비예산		
	지자체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급상당 이상 여성공무원 수/5급상당 이상 전체 공무원 수)×100	9.6%	9.0%	93.8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확대	국공립대 여성교수임용율제고	여성교수비율	14%	13.6%	97.1	3	3	100.0
	여성교장·교감임용율제고	전체 교장·교감 대비 여성 교장·교감 비율	21.8%	21.8%	100.0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확대		정부출연(연)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	17%	14.6%	85.9	비예산		
양성평등교육확대		집합교육 수료자인원	8,880명	9,728명	109.5	54	54	100.0
		사이버·원격교육수료자인원	28,920명	45,576명	157.6			

##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 청소년 여대생 등에 대한 직업·진로지도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①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진입이전 단계인 학교단계에서 직업진로, 취업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인력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청년직장·직업체험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치로 80%이상에 비하여 87.8%로 109.8%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157억원 중 156억원을 집행하여 99.4%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200개 대학·특성화고에서 청년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 경력형성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함.

#### □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②

-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젠더의식 강화, 커리어코칭 등 여대생의 커리어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여성의 “중단없는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사업은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실적에 대한 목표치로 52,500명에 비하여 67,593명으로 128.7% 목표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10억원 중 1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실시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현장점검 및 운영 컨설팅을 실시함.
- 전국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11년 여대생커리어개발 서포터즈 25개 센터 53명을 구성함.
- 2011년 여대생커리어개발 우수제안 공모전을 개최함.

####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①

-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 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또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등 구직희망 여성의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공동으로 기존 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민간단체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하여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직업훈련 또는 인턴제, 취업알선 및 취업후사후관리를 연계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사업은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율을 측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95%에 비해 100.5%를 달성하여 105.8%의 달성률을 나타

낸 예산집행은 67억원 중 66억원을 집행하여 98.5%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3개소를 추가지정하여 90개소를 운영하였음. 더불어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새일센터 사업 운영 평가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음.
-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일센터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음.

####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②

-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기관 기능을 강화함. 여성구직자 및 직업훈련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함.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강화로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하여 새일센터 이용자 증가율을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로 5%를 두었으며 추진실적으로 13.8%를 나타내 달성률 276.0%를 보임. 예산집행은 333억원 중 331억원을 집행하여 99.4%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였음.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구직여성 및 재직여성의 가사·자녀 양육 부담완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였음.

####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에 따라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수요에 따른 일자리 발굴 및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지역 내 여성인력 현황, 일자리 수요 등 실태조사 진행함. 지역별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구축을 위하여 여성능력 및 일자리지원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여성인력현황 실태조사로 8개 시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8개 시도별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하여 달성률 106.0%를 보임. 또한 지역특화 직종개발을 위하여 당초 목표치 8개 시도별 특화직종 2건 개발에 비해 8개시도 특화직종 총 17개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여 106.0%의 달성률을 보임.
- 지역 내 여성인력 실태조사 및 직종발굴을 진행하고 지역특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2012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였음.

## □ 이주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결혼이민여성·장애여성 등 취업애로계층 특화 직업교육훈련 및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연계 운영을 하고자 하였음.
- 이주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인턴으로 여성능력 및 일자리를 강화하고자 인턴참여실적을 산정하였음. 이는 당초목표치 466명에 비해 570명을 달성하여 122.3%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14억원 중 14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적합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운영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특화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74명을 교육하였음.
  - 장애여성 특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8명을 교육하였음.

&lt;표 2-68&gt;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청년직장·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5단계척도)결과 ‘매우만족 및 만족’비율	80%이상	87.8%	109.8	157	156	99.4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실적	52,500명	67,593명	128.7	10	10	100.0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자수/집단상담프로그램목표자수)×100	95%	100.5%	105.8	67	66	98.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강화	새일센터 이용자 증가율(%) (금년도 이용자-전년도이용자/전년도이용자)×100	5%	13.8%	276.0	333	331	99.4
지역단위 여성일자리지원체계구축	-지역별 여성인력현황실태조사 -지역특화 직종개발	-8개시도별 실태조사 추진 -8개시도별특화직종 2건개발	-8개시도별 실태조사 추진완료 -8개시도별 특화직종 17개프로그램개발완료	106.0	비예산		
결혼이민여성 인턴	인턴참여실적(참여인원/목표인원)	466명	570명	122.3	14	14	100.0

##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 [1]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 법무부는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 대비 차원에서 동포 등의 국내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방문 취업 자격 동포 가운데 외국인 인력수요가 많은 농축산업·어업·제조업 등의 분야 장기근속 등 우수인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함.
- 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사업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 자격 국내 체류자수를 성과목표로 두어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 40,000명에 비해 71,854명으로 179.6%의 달성률을 보임
  - 한·중 수교 이전 입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국민의 일자리 확보 등을 고려,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부여 허용업종 및 근속요건을 조정하였음.
  - 중국 및 CIS 국적 재외동포 교류를 확대하였음.

####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법무부는 글로벌 경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해외 우수인재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온라인 사증 발급 신청 시스템을 활성화함.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 자격 부여 제도를 활성화함.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로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건수를 산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 445건에 비해 실제 709건을 달성하여 달성률 159.3%를 보이고 있음.
  - 온라인 사증발급 시스템을 통한 전문인력 유치를 활성화하였음. 온라인 사증발급 시스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발급 건수로 70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회원 357명, 기업회원 546개를 나타내고 있음.
  -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함.



&lt;표 2-69&gt;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경제활동참여확대	중국, CIS(구소련)지역 재외동포(F-4) 자격 국내 체류자수	40,000명	71,854명	179.6	비예산		
개방적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적극유치	온라인 사증발급·추천시스템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건수	445건	709건	159.3	비예산		

## [2]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

- 고용노동부는 적정 수준의 비전문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면서 노동시장과 조화를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체류지원 등을 통하여 외국 인력의 빠른 취업적응을 유도하였음. 국내 고용시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함.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교육 및 한국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상시 고충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및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함.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사업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으로 외국인력도입계획을 수립하고자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하여 100.0%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 콜센터 신설에 대해 콜센터 기능의 외국인력상담센터를 개소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는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설치하였음.
  - 경기상황 및 국내 노동시장 여건, 불법체류자 출국 등에 따른 대체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반외국인의 경우 신규쿼터를 48천명으로, 총 체류인원을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는 303천명으로 결정하였음.
  -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외국인력 관련 노동문제 및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음.
  -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였음.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①

-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또한 산업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활용하여 인력난 해소, 장기적으로 안정적 고용인력 확보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숙련생산기능인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음. 외국인고용변동신고 통합서식 마련 및 신고절차 일원화함. 단순노무 외국인력제도 정비로 신속한 인력도입을 지원함.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을 완화함.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로 고용허가제 정착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지침을 정비하여 100.0%의 달성을 보이고 숙련생산기능 인력(F-2)으로 숙련생산기능 인력지침을 개정하여 달성률 100.0%를 나타냄.
  -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로서 전문인력으로 발전한 자에 대해 특정활동 자격을 부여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함.
  - 비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 중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전문인력으로 발전한 자에 대해 특정활동 자격으로 변경하여 허용함.
  - 외국인 숙련생산 기능인력에 대한 거주 자격 부여 요건 중 국내 취업경력 요건을 완화함.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②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하여 기업이 원하는 생산성 높은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 통계 인프라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를 정비함. 숙련 생산기능 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완화 여부를 검토함.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실태, 관련 업체의 기능자격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함.
-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 인력확보로 고용변동신고일원화를 위하여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서비스를 2011년 10월부터 개시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이며 기능테스트 확대실시를 2011년 9월부터 진행하여 100.0%의 달성률을 나타냄.
  - 2011년 10월 17일부터 온라인 통합 고용변동신고 서비스를 개시하여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모두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음. 또한 기능테스트 대상 업종 및 실시 국가를 확대하였음.
  - 사업주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확보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조업에도 기능테스트를 실시하고 기능테스트 실시 국가를 미얀마, 네팔 등 6개국으로 확대함.

&lt;표 2-70&gt;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외국인 고용허가제관리 및 지원	외국인력 수급계획 수립 여부	2011년 외국인력도입 계획 수립	2011년 외국인력도입 규모결정	100.0	비예산		
	외국인력 콜센터 신설여부	외국인력콜센터 신설	콜센터기능의 외국인력상담 센터개소	100.0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침·제도 개선	지침·제도 개선	관련제도 및 지침 정비	100.0	비예산		
	지침개정	지침개정	관련법령 개정	100.0			
	고용변동 신고일원화	고용변동 일원화	고용변동신고일원화서비스개시	100.0			
	기능테스트 확대	기능테스트 제조업으로 확대 실시	제조업 확대 실시	100.0			

## [3]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는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조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임신·출산·자녀양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지도 역량 강화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장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도록 하였음.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를 당초 목표치로 1,305천명으로 두어 실제 1,621천명을 달성하여 124.2%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674억원 중 672억원을 집행하여 99.7%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One-Stop 서비스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을 강화하였음. 또한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음.

- 센터를 159개에서 201개소로 확대하여 종합 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함.
- 방문자녀생활서비스 시범사업실시, 언어영재교실운영,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강화하고자 하였음.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력 증진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다문화가족 자녀다수(10명 내외) 재학하는 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학생 맞춤형교육지원으로 다문화 학생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거점학교 운영수를 당초 목표치 80개에 비해 80개를 달성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이며 다문화이해 교육확산을 위하여 다문화강좌 지원학교수를 당초 목표치 30개에 비해 30개를 달성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54억원 중 54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다문화 거점학교 및 멘토링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강좌 개설 대학을 지원하였음.
- 다문화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 다문화 멘토링 지원을 확대하였음.

□ 체류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18개의 외국어로 행정·생활 안내 서비스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였음. 더불어 국내 체류외국인과 공공기관 민원담당자와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국어 전화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체류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으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상담 처리건수를 당초 목표치 2,499,015건에 비해 3,010,133건으로 120.5%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21억원 중 20억원을 집행하여 95.2%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야간 상담원 확충 및 야간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원 교육을 위한 상담매뉴얼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야간 상담사원 7명을 증원하고 재한 외국인 편의 확대를 위하여 야간상담을

실시함(18:00 ~ 22:00).

-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및 안내 정보 등에 대한 관련 법규나 지침 개정시 상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음.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①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한국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유네스코 이념전파를 위한 ASPnetrks 협력활동을 확산하도록 하였음.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등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사업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으로 사업실시 대상학교수를 당초 목표치 360개교에 비해 360개교를 달성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2억원 중 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240개 학교를 운영하고 ASPnet 학교 120개교를 운영하였음.
- CCAP 전국 240개 초·중·고등학교 총 960여회 정규수업을 실시함.
- CCAP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을 8회 진행하고 워크숍 3회, 포럼 1회, 전국보고회 1회를 진행함.
- CCAP 오지학교 문화수업·홈스테이 7회 진행함.
- 기존학교 관리 및 신규학교 가입을 준비함.
- ASPnet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함.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②

-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의 측면으로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에게 열린사회로서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및 한국인과의 공동 문화 체험 현장 제공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인식전환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로 외국인참여 TV 프로그램의 정규편성을 위하여 당초 목표치 52편에 비해 52편으로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외국인참여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으로 2종 110편을 진행함.

&lt;표 2-71&gt;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자수	1,305천명	1,621천명	124.2	674	672	99.7
다문화가정학생 맞춤형교육지원	다문화거점학교 운영수	80	80	100.0	54	54	100.0
	다문화강좌 지원학교수	30	30	100.0			
체류외국인 한국생활적응 지원체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상담 처리건수	2,499,015건	3,010,133건	120.5	21	20	95.2
외국인과의 문화교류유네스코협동학교사업	사업실시대상학교수	360개교	360개교	100.0	2	2	100.0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위한 대국민교육·홍보강화	(52/52)×100	52편	52편	100.0	비예산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1]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①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 대학생, 일반인 등 전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진로교육 DB 제공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학년 단계별 활용가능한 국가 차원의 진로지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함.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사업은 진로개발 표준모델 개발로 진로직무 매뉴얼 1종을 개발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42.2억원 중 42.2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직업적성검사를 개정하고 진로정보 DB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였음. 또한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초등용)를 개발하여 보급함.
  - 직업적성검사 점수 해석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작하여 적용함.
  - 검사결과표의 개정으로 학생들의 직업 선택 효율성을 강화함.
  - 교사를 위한 직업적성 검사 활용 안내서를 개발하고 보급함.

- 직업사전, 학교·학과정보, 상담사례, 진로자료 등을 제공함.
- 150개의 직업정보를 업데이트함.

####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②

- 고용노동부는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청년층의 진로인식 부족 및 고용불안에 따른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직업진로지도로 체계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청년층의 진로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함.
- 다양한 직업심리 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로 직업정보 및 직업지도 간행물 발간 횟수를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 3개에 비해 8개를 추진하여 달성률 266.7%를 보임. 예산집행은 49억원 중 49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직업심리검사를 보급하여 확대하고 청소년 및 구직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직업정보를 개발하고 보급함. 또한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도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함.
-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직업 심리검사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확대 추진하였음.
- 직업체험 확대를 위한 2011년 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함.

#### □ 학교 취업지원기능 강화

- 고용노동부는 학교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학교의 노동시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도모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학교 취업지원관을 지원하고 대학취업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학교 취업지원기능 강화사업은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으로 대학취업지원 역량평가지표를 개발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이며 취업지원관 채용인원은 당초 150명 목표치에 비하여 298명을 달성하여 198.7%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85억원 중 84억원을 집행하여 98.8%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대학 및 특성화고 등 236개교에서 298명의 취업지원관을 채용지원하여 각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2011년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을 배치 확대하여 각 학교 특성에 맞는 구인업체 발굴 및 알선, 산·학·연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기존 대학진학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함.
- 대학생에게는 졸업생 뿐만 아니라 1~3학년에 맞는 취업프로그램 운영, 심층상담 등으로 스펙위주에서 개인에게 맞는 진로설정 및 취업으로 연결하였음.

&lt;표 2-72&gt;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진로개발표준모델	진로직무매뉴얼 1종	1종	1종	100.0	42.2	42.2	100.0
다양한직업심리검사개발 및 진로직업정보제공확대	직업정보 및 직업지도간행물 발간 횟수	3개	8개	266.7	49	49	100.0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대학취업지원평가지표 개발완료여부	지표 개발	지표 개발	100.0	85	84	98.8
	취업지원관채용인원 150개교×평균1명 =150명	150명	298명	198.7			

##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 고용노동부는 실업자 훈련 계좌제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사업은 계좌제훈련으로 훈련참여비율을 당초 60% 목표치로 산정한 것에 비해 73.3%를 달성하여 122.2% 목표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714억원 중 676억원을 집행하여 94.7%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계좌제를 통한 훈련을 지원하여 224,367명을 2,680억원으로 지원함.
- 더불어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 인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2011년 8월 2일부터 내일배움카드 내실화방안을 추진함.

###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제고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및 근로자 훈련 지원을 통한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다양한 근로자 개인지원방식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능력개발카드제, 수강지원금, JUMP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단계적 통합을 진행하고 자 하였음.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제고 과제는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참여율이 당초 44.1% 목표치에 비해 31.3%를 달성하여 71.0%의 달성률을 보임. 사업주훈련직무능력향상정도 조사에서 당초 75.0에 비해 80.3을 달성하여 107.1%의 초과달성을 하고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당초 75.0에 비해 84.6의 만족도를 보여 112.8%의 달성률을 보임.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지원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제, JUMP 사업 훈련성과율에 대한 조사결과 당초 목표치 55.0에 비해 72.6으로 132.0%의 달성률을 보임. 또한 훈련참여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77.5점 목표치 대비 92.7을 기록함으로써 119.6%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에 대하여 능력개발융자 지원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당초 81.5목표치를 두었으며 88.7을 달성하여 달성률 108.8%를 나타냄. 예산집행은 5,683억원 중 4,375억원을 집행하여 77.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저조는 수요자들의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화된 학원들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2,964억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으로 286억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능력개발카드를 311억원, 근로자 단기직무능력향상으로 42억원을 지원하였음.

####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향상’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기관수를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 112개소에 비해 118개소로 105.4%의 달성률을 보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으로 2011년도 Best-HRD 인증기업수 중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수를 당초 22개소에 비해 29개소로 131.8%의 달성률을 보임.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향상지원으로 업무능력향상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목표치 75에 비해 79.5로 106.0%의 달성률을 나타냄. 예산집행은 1,457억원 중 1,457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으로 119,369개 중소기업 근로자 251,895명에 대한 1,229억

원을 지원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으로 33,654명에 대해 146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으로 334개 기업에 대하여 78억원을 지원하였음.

<표 2-73>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계좌제훈련		참여율 (훈련참여자/계좌발급자)	60%	73.3%	122.2	714	676	94.7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 발사업효율 성 제고	사업주능력개 발지원금	재직자 직업훈련참여 율: (재직자 직업훈 련건수/고용보험피 보험지수)×100	44.1%	31.3%	71.0	5,683	4,375	77.0
		사업주훈련직무 능력향상정도	75.0	80.3	107.1			
		훈련참여자만족도	75.0	84.6	112.8			
	근로자자율적 능력개발지원	훈련참여자 훈련성과조사	55.0	72.6	132.0			
		훈련과정 만족도	77.5	92.7	119.6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능력개발융자지원 수혜자만족도	81.5	88.7	108.8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	국가인적자원 개발전소사업	운영기관수	112개소	118개소	105.4	1,457	1,457	100.0
	중소기업학습 조직화지원	2011년도 Best-HRD 인증기업수 중 학습조직화지원기업수	22개소	29개소	131.8			
	중소기업핵심 직무능력향상 지원	설문조사	75.0	79.5	106.0			

### [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추진학체제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근로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한 진학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으로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를 위하여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대학교 수로 당초 8개교를 목표치로 두었으나 7개교로 추진하여 87.5%의 달성률을 보이며 계약학과 개설확대에 대하여 계약학과 산업체 교육비용 부담완화 법령개정을 진행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정책대상자의 욕구 및 이에 따른 공급자의 수요 등에 대한 우선과약이 필요하며, 직장 내 우호적인 분위기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절대 수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임(8개교 중 7개교).
  -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개설 대학을 확대하고 계약학과 개설을 확대함.
  - 2010년 3개교 240명, 2011년에 8개교 512여명, 2012년 23개교 977명으로 증가함.
  - 2011 학년도 계약학과에 총 11,17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2010년보다 1,955명이 증가함.

####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성인을 새로운 입학자원으로 수용하고 체제개편을 통하여 성인 계속교육 및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습과 학력 그리고 고용의 연계 경로를 확립하도록 하였음.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사업은 2011년 성과목표 15개교 지원대비 24개교를 지원하여 160.0% 달성하였으며 성인학습자 수 36,715명이 수강하여 당초 사업 계획대로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예산집행은 40억원 중 39.8억원을 집행하여 99.5%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평생학습 선도대학 4개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20개교, 총 24개교를 지원함.
  -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인학습자가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 지원 대학 내부적으로 대학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갈 추진체제를 마련함.

#### □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기록하여 학습결과를

학력·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평생학습계좌제 확대사업은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평생학습계좌제 이력관리 인원 수 11,000명을 당초 목표치로 두었으며 실제 13,434명을 진행하여 122.1%의 달성률을 보임. 그러나 당초에 평생학습계좌제가 학습비 지원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행 제도는 학습비 지원 없이 평생학습 이력의 누적·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학습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이에 따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법률 개정 추진 및 타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는 잠정 중단된 상태임. 예산집행은 7억원 중 7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제4차·제5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실시하고 학습과정 평가인정 개선을 추진함.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강화하고 평생학습계좌제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온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표를 개발함.
  -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와의 연계를 위한 평가인정 지표를 개발함.
  -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제도 홍보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자 연수를 진행함.

####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근로자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 강화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개수(NCS)를 당초 30개에 비해 31개로 103.3%의 달성률을 보임. Competency Map 작성개수로 5개를 목표치로 두었는데 이에 비해 10개를 달성하여 200.0%의 달성률을 보이며 국가기술자격출제기준정비로 정비 종목수 83개에 비해 105개로 126.5%의 달성률을 나타냄. 출제 및 검토의 현장전문가 확보로 그 비율을 50%로 두었는데 실제 63.9%를 달성하여 127.8%의 달성률을 나타냄. 예산집행은 7억원 중 7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NCS 개발로 7개 분야, 31개 직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함.
  - 인쇄·출판 분야 등 11개 직종에 대한 표준을 보완함.
  -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를 구축함.
  - 10개 중직무분야를 대상으로 competency map을 작성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재설계 방안을 마련함.
  - 국가기술자격의 산업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출제기준 일몰제 및 법령개정에 따라 105개 종목의 출제기준을 정비함.
  - 문제출제 및 문제검토 과정에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63.9%까지 확대함.

&lt;표 2-74&gt;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구축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도입 대학교수	8교	7교	87.5	비예산		
		계약학과 산업체 교육비용 부담완화 법령개정	산촉법 개정	개정	100.0			
평생학습 선도대학·중심대학 육성지원		평생학습 선도대학·중심대학 육성지원	15개교	24개교	160.0	40	39.8	99.5
평생학습계좌제도입		평생학습계좌제 이력관리 인원 수	11,000명	13,434명	122.1	7	7	100.0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강화	국가직무 능력표준개발	NCS 개발 개수	30개	31개	103.3	7	7	100.0
	Competency Map 작성	Competency Map 작성개수	5개	10개	200.0			
	국가기술 자격출제 기준정비	출제기준 정비 종목 수	83개	105개	126.5			
	출제및검사의 현장전문가 확보	현장전문가 비율	50%	63.9%	127.8			

####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 근로하는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자금·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으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로 당초 20%의 목표치에 비해 28.1%를 달성하여 140.5%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650억원 중 65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2010년 지원으로 5,331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7,884개소의 작업장을 지원함.

###### □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 이상 정제되어 있는 재해율 0.7%대의 산업재해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노·사 자율적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등 자율 안전보건실천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제도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우리여건에 맞는 기법·절차 및 제도 도입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사업은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으로 인정서 발급 사업장수가 당초 1,000개소에 비해 2,056개소로 205.6%의 달성률을 나타냄. 예산집행은 17억원 중 17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참여사업장수로 11,284개소로 교육자수는 13,833명, 컨설팅수는 6,560건, 모니터링은 675개소를 진행함.
  - 인정사업장은 2,056개소이고 예비인정사업장은 4,404개소로 인정사업장은 이행수준 확인을 통하여 인정서가 교부된 사업장임.

####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외국인, 고령·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자료보급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외국인·여성·고령·비정규직 등 산재취약 근로자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지원으로 교육지원실적 근로자수를 당초 50,000명에 비해 116,237명으로 232.5%의 달성률을 나타냄. 예산집행은 4억원 중 4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안전보건교육 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교육을 50,021명 진행하고 고령·여성자교육으로 66,216명 진행하였음. 또한 자료개발보급 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교육에 교재, 포스터, 매뉴얼 등 55종, 고령·여성자교육에는 24종을 보급하였음.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산업보건활동 및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사업은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으로 측정대상 사업장의 평균 측정비용을 당초 7,500개소에 비해 10,703개소로 142.7%의 달성률을 보임.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으로 특수검진대상 근로자를 당초 75,000명에 비해 78,163명으로 104.2%의 달성

- 를 보이며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으로 당초 5억원 목표치에 비해 4.7억원을 지원하여 94.0%의 달성률을 보임. 예산집행은 82억원 중 77억원을 집행하여 93.9%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소규모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증진활동 비용을 지원하였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측정 비용을 지원함.
  - 특수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특검비용을 지원함.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추진의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 활동의 실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

&lt;표 2-75&gt;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전 재해율-지원후 재해율)/지원전재해율] × 100	20.0%	28.1%	140.5	650	650	100.0
유해·위험요인자기 관리 시범사업		인정서 발급 사업장수	1,000개소	2,056개소	205.6	17	17	100.0
취약계층 근로자지원		취약계층(외국인,여성· 고령)교육지원 실적	50,000명	116,237명	232.5	4	4	100.0
사업장건 강 증진 및 질병 예방체계 강화	작업환경 측정 비용지원	측정대상 사업장의 평균 측정비용	7,500개소	10,703개소	142.7	82	77	93.9
	특수건강 진단비용 지원	특수검진대상 근로자의 평균 특수검진 비용	75,000명	78,163명	104.2			
	건강증진 활동비용 지원	건강증진활동 비용	5억원	4.7억원	94.0			

## [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 산재 및 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요양기간 단축 및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사업은 재활상담강화 측면으로 재활상담 사례관리에 의한 작업재치 향상을 위하여 작업배치율에 대한 당초 목표치 60%에 비해 73.9%로 123.2%의 달성률을 나타냄. 예산집행은 20억원 중 2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심리재활 지원 강화를 위한 요양단계별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요양 승인 후 최초상담 48,963명,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5,892명, 작업배치자 4,354명을 지원함.
  - 산재환자의 재활의욕 고취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및 산재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진폐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취미활동반을 지원함.
  - 잔존 신체능력 강화를 위한 재활스포츠를 지원함.

#### □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 고용노동부는 산재장해인의 조기 사회정착 도모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원 직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등으로 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사업은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에 대한 목표치 60.0% 대비 70.4%를 달성함으로써 117.3% 달성률을 기록함.
  - 예산집행은 168억원 중 149억원을 집행하여 88.7%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표 2-7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재활상담 강화	작업배치율[당해연도 작업배치자/사례관리대상자수×100]	60.0	73.9	123.2	20	20	100.0
직업재활 급여	신규장해판정을받은 산재근로자중 직업복귀자비율 [(직업복귀산재장해인수/신규장해판 정산재근로자 수)×100]	60.0	70.4	117.3	168	149	88.7



##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의 3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1] 교육분야 제도개선

#####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안정적 교원정원 운영 등을 도입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유아·특수·비교과 교사의 원활한 중장기 수급목표를 제시하고 교원 인력 수요에 맞춘 공급규모를 조정하였음.
- 2011~202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 교원정원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교원 정원령 시행규칙 제정 관련 법제처 심의.
- 2009~2030 초·중등 교원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추진함.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학령인구 감소

에 대비한 학수를 예측하였으며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 세미나를 개최함.

- 주민등록자료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결합하고 공립학교 증가 추세를 반영함.
- 전체 학생 수는 2010년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초등학교는 약 17%,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공립 중·고등학교 재학 학생수는 26%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중장기 교원 수급은 추정된 미래의 학생수를 바탕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공립 교사수를 추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08년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초 16.4명, 중 13.7명, 고 13.5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은 15,878명(매년 1,764명), 중등은 6,450명(매년 717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으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안을 제시하여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마련

- 고교졸업자 수는 '12학년도까지는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여 '18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입학지원 감소로 인하여 대학의 경영악화는 결국 교육부실을 초래하므로,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필요로 하였음.
- 경영부실 사립대학 판정 및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함.
- 상시적 구조조정 기제 마련 및 자율적 퇴출을 지원함.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사립대학 통·폐합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함.
-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대상으로 경영부실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 4개교를 추가적으로 선정함.
- 경영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함.
- 사립대학 통폐합을 승인하고 부실대학 폐쇄를 추진함.
- 부실대학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함.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사립대학경영컨설팅 지원 만족도를 당초 75점 목표치에 비해 80.5점으로 나와 107.3%의 달성률을 나타냄.
- 예산집행은 40억원 중 4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 대학자율화의 정책 기조 속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 및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음.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였음.
- 대학의 자율적 학과 및 정원 조정을 유도함.
- 대학별 강점분야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 위주 정원 조정에 중점을 둠.
-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선진화를 병행함.
- ACE사업 추진에 있어 자율성에 기반한 재정집행과 엄정한 성과관리를 진행함.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강화를 위해 ACE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고 교과부 장관 및 ACE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함.
- 2010년 11개교에 300억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11개교 추가 선정하여 600억을 지원함.
- 이 외에도 ACE 대학간 협의체 활동 확대로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대학의 학부교육 질 제고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ACE 사업의 성과 점검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으로 ACE 사업 선정대학의 건보DB확인 취업률을 산정하여 당초 목표치 46.5%에 비해 60.0%로 129.0%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600억원 중 600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하여 교육과정운동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학교 신설 수요 적정관리를 함.
- 과소규모학교 53개교를 통폐합하고(폐지 44교, 분교장개편 9교),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759억원).
-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학교신설 수요 관리 매뉴얼 발간
- 적정규모 학교 육성관련 연구용역 실시.
- 적정규모 육성 계획 보완방안 대통령 보고('11.12.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11.9)으로 학교 통폐합시 기숙사 시설비 등 지원 확대
- 재정 투·융자심사 강화를 통한 학교 신설 수요 적정관리
- 학교신설 및 통폐합 사업 투자심사 4회 실시하여 전체 146건 3조5천51억원 중 54.8%인 80건 사업 추진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학교시설적정규모로 목표치 대비 통폐합학교수가 100개교에 비해 65개교로 65.0%의 달성률을 보이며, 학교시설적정규모의 학교수용시설재정투자심사강화로 투·융자심사신청건수 대비 적정 및 조건부 추진 건수는 당초 목표치 65%에 비해 54.8%로 118.6%의 달성률을 보임.
- 현행 학생 통학구역 설정방법 및 일부 교원인사제도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학교 통폐합 시 교장(감)정원감축이 이루어져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여 목표달성률이 낮음.
- 예산집행은 759억원을 중 759억원을 집행하여 100.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의 추진실적은 본 영역이 5세 누리과정 도입과 중복된 과제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협의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표 2-77>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재수립	중장기교원수급 계획 수립(안)제시	100%	100%	100.0	비예산		
사립대학경영건설통합지원만족도	대학관계자대상 만족도조사 100점만점 환산	75점	80.5점	107.3	40	40	100.0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취업자/졸업대상자 (진학자,입대자등 취업 불가능자 제외)	46.5%	60.0%	129.0	600	600	100.0
학교시설 적정수준관리	소규모학교통폐합	100교	65교	65.0	759	759	100.0
	중앙 투융자심사 신청건수 대비 적정·조건부 추진 건수	65%	54.8%	118.6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	-	-	-	비예산		

##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1] 주택분야 제도개선

####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는 고령화,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추진실적으로, 「수요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추진방향 연구」 용역을 추진('11.3~'11.10) 하여 1~2인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한 주택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2012년도 주택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방향을 마련('11.12)하였음. 또한 6만호 소형주택 매입, 1.8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 도심내 소형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였음('11.1~'11.11)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당초 목표치인 3만호 소형주택, 8.5천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이 각각 6만호, 1.8만호 공급을 달성함으로써 200.0%, 211.8%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 국토해양부는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주택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주택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추진실적으로, 기 추진 중인 고령자 등에 주택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주택 및 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였음(주택공급규칙 개정, '11.3)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었다면, 개선 후로는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건설·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도 가능하게 되었음.
  - 이는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지원확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1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lt;표 2-78&gt; 주택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	계획목표대비 달성도	소형주택 (3만호),	6만호 도시형 생활주택	200.0	비예산		
		매입·전세 임대주택 (8.5천호)	1.8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11.8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공급규칙 개정 여부	개정	개정	100.0	비예산		

## [2] 금융분야 제도개선

## □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 기획재정부는 장기국채시장을 활성화하여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소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물, 20년물 국고채 발행비중을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등 장기채 발행을 증대하고, 10년물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등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을 활성화하여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을 헷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추진실적으로,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추경 편성 등으로 국채발행 물량이 급증하여 단기물(3년, 5년) 발행비중이 급증한 것을 감안하여 연간 장기물 발행비중을 정상화하였으며, 장기채 보유에 따른 위험헷지 수단 제공을 위하여 '10년 국채선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음('10.10월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제도 도입).
- 2011년 추진실적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의해 분석한 결과, 국고채 평균 잔존 만기가 목표치인 5.50에 비해 5.56를 기록함으로써 101.1%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해외 및 대체투자 증대 등 기금의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운용 역량강화, 위험자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 해외기업 M&A 등 다양한 투자 대상 확대를

통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16%(’10.12.)에서 17.2%(’11.11.)로 확대하였고, 해외사무소 개소(뉴욕, ’11.7월), 해외투자 전문인력 보강(5인증원), 해외 전문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통한 선진 운용기법 연수 등 해외투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금융부문 기금투자액 대비 해외·대체 투자액 비중이 당초 목표치 18%에 비해 17.2%를 기록함으로써 95.6%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해외투자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주식의(-) 수익률 발생 및 주식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함.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규제완화 검토

-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근로자 선택권 확대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DC 및 IRA에 있어 현재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주식형 펀드 등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공정한 퇴직연금 시장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금리차별 금지 및 금리공시 의무 부여 등’ 행정지도 시행(’11. 6월)과 퇴직연금 신탁계약 원리금보장상품의 집중투자한도 도입(70%),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익률 공시 강화, 특별이익 구체화 등의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11. 10월)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DC형의 펀드투자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감독규정 개정 여부에 있어 감독규정을 일부개정(10.19)하였으나 운용규제 완화가 미포함되어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음.
- 이는 근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고용부) 개정이 전면개정을 위해 ’12.7월말까지 유보되면서 관련 규정 개정도 지연된 것에 기인함<sup>5)</sup>.

5) 고용부는 근퇴법시행령 등의 ’11년 내 부분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국회 환노위에 장기 계류 중이던 근퇴법 개정안(’08.11월 상정)이 ’11.6월 통과됨에 따라 이를 유보하고, ’12.7월 시행을 목표로 전면 개정에 착수됨.

&lt;표 2-79&gt; 금융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국고채 평균 잔존 만기	5.50	5.56	101.1	비예산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제고	(해외·대체 투자액/금융부문 기금투자액) × 100	18%	17.2%	95.6	비예산		
DC형의 펀드투자 규제완화	감독규정 개정 여부	개정완료	미완료	0.0	비예산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1]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등 재정총량을 관리하여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의무지출 추진시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Paygo 원칙을 도입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과 중장기 계획의 사전협의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출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로 구분('12년 시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Paygo 원칙 적용 그리고 연간 500억원 이상·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토록 하는 사전협의 강화 등을 '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통보하였음. 또한 '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의무·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게 의무지출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등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수행하였음.
- 의무지출의 범위 :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국제조약·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GDP 대비 국가채무는 목표치 35.1%에 비해 34.0%를 기록하여 103.2%의 목표달성률을 보인 반면에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의



추진실적을 보여 당초 목표치( $\Delta 2.0\%$ )에 비해 181.8%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재정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대비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적연금 등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현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중인 국가채무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재정통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4대 공적연금, 건보, 장기요양, 기초노령 등 7개 분야에 대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실시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 공개토론회 실시, 정부의 종합적 장기재정전망 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음.
- 또한 재정통계 개편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T/F 및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등의 검토 및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통계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01 GFS 등)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및 재정통계 개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세원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세 감면 요구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폐지 방안 또는 재정지출 축소방안을 제출토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 및 국유재산특례법을 제정·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제정 완료,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특례운용계획, 공용재산(청·관사 등) 취득계획 등을 종합 조정한 201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국회 제출 등 국유재산관리체계 개편 및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 확립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통해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표 2-80>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재정분야 제도개선	국가채무/GDP	35.1%	34.0%	103.2	비예산		
재정분야 제도개선	관리대상수지/GDP	△2.0%	△1.1%	181.8	비예산		
장기재정전망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100.0	1	1	100.0
재정통계 개편	재정통계 개편 방안	개편방안 마련	개편방안 마련	100.0			
국유재산 관리체계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	제·개정	제·개정	100.0	비예산		

###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의 3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보건복지부는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인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사용성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각각 제품 특성·사례별 기술 컨설팅을 통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3개 품목에 대한 사용성 평가 지표개발 및 결과를 보급하였고, 사용성 평가 DB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성 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사용성 평가 결과 DB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였음.
- 3개 품목에 대한 사용성 평가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1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5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의 집행률을 보임.

<표 2-8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사용성평가 시스템	사용성 평가 기준개발	3개 품목	3개 품목	100.0	5	5	100.0

#### [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확대

- 지식경제부는 고령친화제품 및 고령자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정·보급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생활안전성 확보 및 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이루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 고령자 이용시설, 고령자의 편리한 생활영위를 위한 접근성 설계를 활용한 생활제품 등의 표준화를 수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요실금 용품 관련 KS 제정 14종, 휠체어 관련 KS 제정 9종, 휠체어

관련 KS 개정 6종의 총 29종 고령자 장애인 관련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노인요양시설의 기본요건,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건강관리·개인위생 등의 일상 서비스, 상담, 여가 등 서비스 수행절차의 KS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KS S 2028(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인증을 실시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노인운동 서비스에 대한 기본 사항 및 제반 절차에 대한 일반 지침(KS S2031)을 제정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 제·개정 중수가 목표치인 15종을 상회한 31종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206.7%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집행은 총 1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보임.
  - 목표달성률은 높으나, 추진상 애로점으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생활제품 설계에 제조회사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고, 고령친화 서비스 관련 KS 및 인증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활용 또는 인증시설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재로 표준화에 의한 실질적인 정책성과 달성이 곤란한 부분이 있음.

####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지식경제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고령친화제품 관련 기술위원회, 주변국과의 표준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동향의 국내전파, 국내 의견개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복지관련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 관련 기술위원회인 TC 159(인간공학), 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 국제표준화 회의참석 및 의견개진, 국제문건 투표·의견제시 등을 수행하고 동북아국가 표준협력포럼 등 국제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고령자·장애인 관련 국제표준 검토를 위한 국내 전문가 3명을 추천하였고,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oint 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 ISO TC159/TC173 WG회의)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동향파악 및 아국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등 고령친화제품 및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설계 표준에 대한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였음. 또한 국내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논의 및 국제문서를 검토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회의참석·국제문건 검토·전문위원회·국가간협력의 건수가 목표치인 22건을 상회한 61건의 추진실적을 보임으로써 277.3%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수준에 비해 산업계의 참여, 관련 전문가, 기술 및 예산 등의 국내적 여건은 취약하다고 판단됨.

&lt;표 2-82&gt;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표준화	표준 제·개정 종수	15종	31종	206.7	1	1	100.0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Σ(회의참석+국제문건검토+ 전문위원회+국가간협력)	22건	61건	277.3	비예산		

## [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 □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제품 중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S-Mark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생산업체의 자기발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품목확대 및 확대품목 표준개발 및 보급을 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동배변처리기, 이송용리프트, 고령자용기저귀 3개 품목 관련 국내·외 표준, 전문가 의견, 항목별 시험을 통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였으며, 3개 품목별 품질기준(표준)에 대한 산·학·연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우수제품 품목확대 수 목표치 2개를 완료함으로써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보급, 서비스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고령친화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노인소비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자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요양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70개소의 복지용구사업소 대상 장기요양기관 시범평가와 연계하여 상위 10% 기관(7개소)을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1년간 시범 지정하였으며, 복지용구사업소 질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우수서비스 사업지정 제도 운영을 목표치인 2회를 모두 추진하였으며, 서비스 질 향상 교육 1회를 수행하여 모두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중소기업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신용보증기관 등) 방문 및 업무협의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고령친화우수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으며,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을 통한 제품 홍보,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실물전시 우선기획 제공, 해외진출 대상 품목 추천 요청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우선 추천 등을 수행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에서 목표치인 5건을 추진함으로써 100.0%의 달성률을 보임.

##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법적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목적, 지정기준, 심사, 사후관리, 포상 및 우대 등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였음.
- 동 과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고시 등 제정을 함으로써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lt;표 2-83&gt;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표준화 확대	우수제품 품목확대수	2개	2개	100.0	-	-	-
우수서비스 사업자지정 제도	제도 운영 추진	2회	2회	100.0	-	-	-
	서비스 질 향상 교육	1회	1회	100.0			
인센티브 발굴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	5건	5건	100.0	비예산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도개선(고시 등 제정)	1건	1건	100.0	비예산		

주. 1) 표준화 확대, 우수서비스 사업자지정 제도의 관련예산은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과제에 통합됨.  
 2) 우수사업자 지정 대상인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기준 제정이 불필요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1] 국내 수요기반 확충

##### □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

-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에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제품에 대한 기능 및 사용방법 등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제품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전문전시회에 우수제품을 전시 및 홍보하고 고령친화산업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며 고령친화산업 정보은행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시니어장애인엑스포(kintex, 9월), 광주국제실버박람회(김대중컨벤션센터, 11월) 등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관 2회 개최,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제심포지움 1회 개최(2011 Smart Aging) 등 산업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4개 업체에 대하여 고령친화우수기업으로서 장관표창을 시상하였고,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홍보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고령친화 우수제품 홍보 수는 목표치인 773개를 100.0% 달성하였고,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목표치 290천명을 상회한 312천명을 기록함으로써 107.6%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 지식경제부는 고령자와 부양가족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을 설립하여 수요기반 확산 및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체험기능, 교육훈련, 기업지원, 정보홍보 기능이 가능하도록 공간 및 콘텐츠를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동 사업은 광주, 대구, 성남에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3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1년 간 전시참관객수 58,051명, 교육훈련 참가자수 2,127명, 제품상담건수 4,133건의 추진실적을 보임('11.1.1 ~ '11.12.31).
-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참관객 수 72천명에 비해 58,051명을 기록함으로써 80.6%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냄.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있음.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제품은 보고, 만지고, 느껴야 소비가 일어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상생활 속에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고령친화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복지관 및 경제력 있는 소비 계층이 거주하는 실버타운 등에 상설 전시 및 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화성시복합복지타운, 의왕시노인복지관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고령친화 우수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사용정보를 제공하고, 총 63개 제품 홍보 및 3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이는 체험관 설치·운영에 대한 목표치 2개소를 상회한 것으로 15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표 2-84> 국내 수요기반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업박람회 운영 내실화	고령친화 우수제품 홍보 수	773개	773개	100.0	-	-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홈페이지 방문자 수	290천명	312천명	107.6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참관객 수	72천명	58,051명	80.6	비예산		
지역사회 밀착형 체험관운영	체험관 설치·운영	2개소	3개소	150.0	-	-	-

주: 1) 산업박람회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관련예산은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과제에 통합됨.

## [2]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지원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조사·분석, 정보제공, 인·허가 지원 등 고령친화제품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로 인허가 정보, 바이어 정보 등 수출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등록비, 기술문서심사비, 컨설팅비 등 실질적 비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고령친화산업 시장정보를 조사하고, KOTRA,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지원 정보 중 고령친화산업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총 108건)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 정보 DB를 구축하였음.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해외 수출 정보 DB 구축건수가 당초 목표치 100건에 비해 108건의 추진실적을 보였고, 해외진출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목표치 3회를 상회하는 4회를 기록함으로써 각각 108.0%, 133.3%의 목표달성률 보임.

<표 2-85>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해외시장선점 인프라 확충	수출정보 DB 구축 건수	100	108	108.0	-	-	-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진출협의체 구성·운영	3회	4회	133.3	비예산		

주: 1)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관련 예산은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과제에 통합됨.

###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영양식품으로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및 취향을 고려한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식품이 개발되어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친화식품의 유형을 분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제 외국 노인용 식품 관리현황 및 제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 시판 특수용도식품 중 노인용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안) 마련

을 위한 연구용역을(노인대상 식품안전·영양 관리방안 연구) 완료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당초 목표는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개정이었지만,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는 ‘노인대상 식품안전·영양 관리방안 연구’ 결과 고령친화식품 유형을 별도로 갖고 있는 제 외국 사례가 없고, 새로운 기준·규격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시험법 확정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까닭임.

#### □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용 식품시장 진흥을 통한 고용유발 효과를(2010년 대비 2020년 139.4% 상승, 150,073명) 감안하여 관련기업의 유도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고령친화식품 관련 국내·외 시장현황 조사와 제도 개선 및 신제품 개발과 제도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려고 하였음.
-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3회의 전문가 협의체 운영, 심포지움 개최, 국내생산 고령자용 식품의 표시사항 및 식품유형 등 사례조사 등을 통한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산업계의 요구를 파악하였고, 베이비붐 세대 등 미래 고령인구의 경제력 변화 및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민간 소비지출 변화, 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실질고령 수요자 비중 분석 등 고령친화식품산업의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의 성장전망을 분석하였음.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들을 도출하였음(평가기준 마련, 인증사업 추진 등).
- 2011년도 추진실적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의해 분석한 결과,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사업과 제 도출과 관련하여 R&D 과제 발굴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표 2-86>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건	0건	0.0	비예산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R&D 과제 발굴 및 제안서	1건	1건	100.0	비예산		

## 제4절 분야별 추진실적 비교 평가

### 1. 목표달성도 비교

- ☐ 분야별로 당초 사업목표(성과지표상) 90% 달성한 비율은 저출산분야(90.0%), 고령화분야(93.0%), 성장동력분야(91.1%)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70% 미만인 사업들은 저출산분야의 경우 6개(5.0%), 고령화분야 5개(5.0%), 성장동력분야 3개(3.3%)로 저출산 분야가 가장 많음(영역 내 비율은 고령화 분야와 동일).

<표 2-87>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체 및 분야별 목표달성도

(단위: 성과지표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전체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11(3.5)	3(1.0)	13(4.2)	283(91.3)	310(100.0)
저출산분야	5(4.2)	1(0.8)	6(5.0)	108(90.0)	120(100.0)
고령화분야	4(4.0)	1(1.0)	2(2.0)	93(93.0)	100(100.0)
성장동력분야	2(2.2)	1(1.1)	5(5.6)	82(91.1)	90(100.0)

주. 1) 표의 수치는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와 사업은 있으나 성과지표 책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수임.

### 가.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 ☐ 저출산분야는 정책특성에 따라 3개 중영역, 11개 소영역, 38개 세부영역, 95개 세부사업(성과 지표 수: 120개)로 구분되어 있음.

#### (1) 중·소영역간 비교

- ☐ 저출산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비율은 ‘결혼·출산 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92.4%,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 91.2%,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85.3% 순으로 높음.
-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 90.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과,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은 83.3%임.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의 10개 성과지표 중 9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가 50% 미만의 달성도를 보임.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의 6개 성과지표 중 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는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의 18개 성과지표 중 1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에 1개, 50~70%에 1개, 50% 미만에 1개의 성과지표가 속함.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 100.0%,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 95.8%,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영역 88.9%,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 80.0% 순으로 높음.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의 10개 성과지표 중 8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가 50% 미만의 달성률을 보임.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영역의 9개 성과지표 중 8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가 70~90%의 달성률에 속함.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의 24개 성과지표 중 23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가 70~90%에 속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소영역이 모두 100.0% 수준을 보였고,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이 82.4%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의 17개 성과지표 중 1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3개가 70~90%에 속함.

&lt;표 2-88&gt; 2011년도 저출산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성과지표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저출산분야	5 (4.2)	1 (0.8)	6 (5.0)	108 (90.0)	120 (100.0)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3 (8.9)	1 (2.9)	1 (2.9)	29 (85.3)	34 (100.0)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1 (10.0)			9 (90.0)	10 (100.0)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 (16.7)			5 (83.3)	6 (100.0)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1 (5.6)	1 (5.6)	1 (5.6)	15 (83.3)	18 (100.0)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2 (3.8)		2 (3.8)	48 (92.4)	52 (100.0)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2 (20.0)			8 (80.0)	10 (100.0)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9 (100.0)	9 (100.0)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 (11.1)	8 (88.9)	9 (100.0)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4.2)	23 (95.8)	24 (100.0)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 (8.8)	31 (91.2)	34 (100.0)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5 (100.0)	5 (100.0)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11 (100.0)	11 (100.0)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3 (17.6)	14 (82.4)	17 (100.0)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1 (100.0)	1 (100.0)

주: 1) 표의 수치는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와 사업은 있으나 성과지표 책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수임.

## (2) 세부영역간 비교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은 34개 성과지표 중 29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고,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에서 1개 성과지표가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으며,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에서 1개가 50% 미만의 달성률을 기록하였고,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에서 각각 1개씩 50% 미만, 50~70%, 70~9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여건 조성이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여건 조성은 국회 교착 상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보험법 통과 및 시행이 지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이 미흡하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목표달성률이 낮게 나타남.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에서는 시간제 근무 활성화가 50% 미만의 달성도를 보임.
  - 시간제 근무 활성화는 만족도 조사가 성과지표였으나, 적합직무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으로써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현재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 등 시간제를 대체할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가 시행중이며,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되어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저출산 대책으로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감소
- “가족친화 직장 사회환경 조성” 소영역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인건비 지원 사업장 수)가 70~90%를,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운영비 지원 사업장 수)가 50~70%,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줄이기)이 50% 미만의 달성도를 보임.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인건비 지원 사업장 수, 운영비 지원 사업장 수)는 2011년도 시행 초기에 따른 홍보부족과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에 따른 탈락 등 수요 미충족 발생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의 수가 1/2 이상일 것 등.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줄이기)은 오래된 근로관행·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단시간 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lt;표 2-89&gt;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 대비 육아휴직급여수급자)				○
	▪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10%상향조정)				○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지침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창구권 도입(도입사업장비율)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여건 조성(수급자수)	○			
	▪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개정안 제출)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근로기준법 개정)				○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개정안 제출)				○
	▪ 가족간호휴직제 활성화(개정안 제출)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개정안 제출)				○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유연근무제 활용인원 증가율)				○
	▪ 시간제근무 활성화(운영성과 만족도)	○			
	▪ 시간제일자리 확산·지원(컨설팅 실시 사업장수)				○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
	▪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이용자 만족도)				○
	▪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사업운영 민간기업 수)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설치지원사업장수)				○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유자지원사업장수)				○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인간지원사업장수)			○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운영지원사업장수)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설치가능충수 완화)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실태조사 실시)				○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영유아보육법 개정)				○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 마련 (가족친화인증기준 개정)				○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 마련 (가족친화 포럼활동)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센터지정)				○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법률개정)				○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인증기업확대)				○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① (근로시간 줄이기)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② (가족사랑의 날 참여가족 및 기업 수)				○
	▪ 공무원 정상근무관행 확산·초과근무관리 강화 (관리강화)				○
	▪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가중치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주: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은 52개 성과지표 중 48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고,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에서 2개 성과지표가 50% 미만의 달성도를 보이고,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영역,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에서 각각 1개 성과지표가 70~90%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에서는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규정 개정)과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규정 개정)은 다른 사회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책추진의 필요에 따라 지원방법·수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서 2012년 1분기 중 관련 규정 개정완료 후에 시행 예정하도록 하였음.
  -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는 신규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의 경우, 계획 이후 다음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반영 후 설계 및 시공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됨.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영역에서는 양육수당 지원 확대(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혜율)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72.0%).
  - 양육수당 지원 확대(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혜율)는 예산의 제약과 함께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임.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보육시설 설치/아동놀이차량 운영 개수)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
  - 이는 보육시설 미확보에 따름(20개소 대비 14개소, 70.0%)

<표 2-90>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매뉴얼 개정)				○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규정 개정)	○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배려 강화	▪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				○
	▪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회원 확보 수)				○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결혼준비교실 이용자 수)				○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남성대상교실 이용자 수)				○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센터 이용자 수)				○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센터 개소 수)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산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산부인과 개설)				○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병상 설치)				○
	▪자연분만 수기인상 등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수가 인상)				○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강화(체외수정 지원건수 대비 임신건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법령개정)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의 단계적 확대 (비용지원율)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상담누적건수)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선천성대사 이상 환자장애 예방률)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수혜율)				○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만3·4세아 교육비경감)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만5세아 무상교육비)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①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②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③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혜율)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다자녀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 자동차 1대 취득세·등록세 면제)	-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업무매뉴얼개정)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조사결과 분석, 발표)				○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국공 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확충 시설수)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설치/아동놀이차량 운영 개수)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평가인증률)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만족도)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보수교육 인원)				○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평가 실시율)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아동 수)				○
	▪유치원 종일반 확대(종일반 운영률)				○
	▪저소득층, 맞벌이 입소 우선순위 부여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시범사업)				○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공동육아나눔터공간)				○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이용자 수)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서비스 연계건수)				○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서비스 만족도)				○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법제정)				○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서비스 만족도)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만족도)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학부모만족도)				○
	▪ 초등 돌봄교실 확대(계획 대비 실제 지원교실 비율)				○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① (학교문화예술교육만족도)				○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② (프로그램 수)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① (시범사업 지역아동 만족도 측정)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② (학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				○
	▪ 나홀로 아동 가정돌봄 서비스 (사업참여 시·군·구 수)				○

주: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2) 다자녀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은 '13년 이후 실시할 예정임.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지방세법」 273조의3(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이 신설되어('10.7.5 시행) 기추진 완료된 과제로 2011년도 성과목표는 없음.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은 34개 성과지표 중 31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고,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에서 3개의 성과지표가 70~9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립유치원 지정률 확대)과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 운영) 그리고 성 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센터 이용 수혜자 수)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각각 72.7%, 77.4%, 84.3%).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립유치원 지정률 확대)은 동 사업이 비예산 사업인데 반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시설보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상의 제약에 따라 목표달성도가 떨어지게 됨.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 운영)는 목표치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었거나, 홍보부족 및 관심부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성과지표(접속

건수)의 실효성 및 적절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센터 이용 수혜자 수)은 목표치 설정의 문제, 센터홍보부족, 당사자 신고의 어려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표 2-91>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대상 아동수)				○
위기청소년 통합 자원체계 확대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변화정도)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CYS-Net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위기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퇴소아동 자립율)				○
	▪ 자립지원 확대(자립지원사업 참여율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수혜 청소년 수))				○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지원 아동수)				○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확대 실시(바우처 이용자수)				○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 휴먼네트워크 확대(멘토 참여현황)				○
	▪ 휴먼네트워크 확대(멘티 참여현황)				○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시설 이용자수)				○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터전 신규 확보 수)				○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수혜청소년 수)				○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청소년교류국가 이해증진도)				○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해외체험활동 참가자수)				○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국제행사 참가 만족도)				○
	▪ 직업재활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프로그램 만족도)				○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집행률)				○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② (사람유치원 지정률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			○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① (성충동약물치료제도 시행준비)				○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②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 운영)				
	▪정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 (센터이용 수혜자 수)			○	
	▪정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 (이용자 만족도)				○
이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이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학대이동 보호건수)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학교폭력 예방교육 4시간 이상 실시학교 비율)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② (아동안전지킴이 확대배치)				○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효과율)				○
	▪흡연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흡연율)				○
	▪음주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월간음주율)				○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 (음주·흡연 청소년 교육 및 치료지원건수)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록관리율)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서비스 효과율)				○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중장기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			

주: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2)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은 '12. 11월에 산출가능함.

3)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는 내년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연구용역이 진행중으로(기초조사를 실시중으로) 추후 결과물 산출로 목표치 및 실적확인 가능함.

## 나. 고령화분야 목표달성도

- 고령화분야는 정책 특성에 따라 3개 중영역, 10개 소영역, 28개 세부영역, 78개 세부사업(성과 지표 수: 100개)으로 구분되어 있음.

### (1) 중·소영역간 비교

- 고령화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비율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중영역 100%,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90.0%,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85.8% 순으로 높음.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소영역 100.0%,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소영역 100.0%,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 88.0%,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소영역 80.0% 순으로 높음.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의 25개 성과지표 중 22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 미만이 1개, 50~70% 미만 1개, 50% 미만 성과지표가 1개로 나타남.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소영역의 10개 성과지표 중 8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는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에 속한 모든 소영역(일자리 사업 내실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은 당초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이상 달성한 비율은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소영역 100.0%,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 71.4% 순으로 높음.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의 7개 성과지표 중 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 미만의 1개,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인 성과지표가 1개로 나타남.

&lt;표 2-92&gt; 2011년도 고령화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성과지표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고령화분야	4 (4.0)	1 (1.0)	2 (2.0)	93 (93.0)	100 (100.0)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3 (6.0)	1 (2.0)	1 (2.0)	45 (90.0)	50 (100.0)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 (4.0)	1 (4.0)	1 (4.0)	22 (88.0)	25 (100.0)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	-	11 (100.0)	11 (100.0)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2 (20.0)	-	-	8 (80.0)	10 (100.0)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	-	-	4 (100.0)	4 (100.0)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	36 (100.0)	36 (100.0)
2-1. 일자리 사업 내실화	-	-	-	4 (100.0)	4 (100.0)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	-	6 (100.0)	6 (100.0)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	14 (100.0)	14 (100.0)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	-	12 (100.0)	12 (100.0)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7.1)	-	1 (7.1)	12 (85.8)	14 (100.0)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1 (14.3)	-	1 (14.3)	5 (71.4)	7 (100.0)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	-	7 (100.0)	7 (100.0)

주: 1) 표의 수치는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와 사업은 있으나 성과지표 책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수임.

## (2) 세부영역간 비교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은 50개 성과지표 중 4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에서 1개 성과지표가 목표의 70~90%를, 1개가 50~70%를, 1개가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으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소영역에서 2개의 성과지표가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에서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의 사업장 증가율,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취업률,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의 목표

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각각 64.2%, 0.0%, 88.7%).

- 기업-고령자 임금피크제 활성화의 사업장 증가율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지급 사업장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증가율이 목표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이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고 기업의 개별적 상황 및 경제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취업률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미 실시 되었기 때문이다.
-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는 목표치 80명에 비해 71명을 활용함으로써 88.7%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소영역에서는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
-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대형병원 환자의 편중우려 등 의료단체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은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근거법령 마련을 목표로 하였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심사에서 미포함됨에 따라 차년도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표 2-9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인원)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사업장)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기관육성)				○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직업훈련)	○			
	▪중고령자 대상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참여)				○
	▪중고령자 대상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취업)				○
	▪중고령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
중고령자 적합 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예산증가율)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인력풀확보수)				○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회적 기업 육성				○
	▪시니어 창업지원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
	▪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①				○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②				○
	▪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
	▪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
고용상 연령차 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	
	▪ 에이지 캠페인 실시(고령자고용강조주간운영)				○
	▪ 에이지 캠페인 실시(언론홍보)				○
	▪ 에이지 캠페인 실시(이벤트실시)				○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기초연구)				○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해외/대체투자)				○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확대				○
	▪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적 소득보장 제도 확충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교육실시)				○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사업장수)				○
	▪ 개인연금 활성화(사망보험금 설정의무 완화)				○
	▪ 개인연금 활성화(무배당 세제적격 연금보험 허용)				○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
	▪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설문조사)				○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지원실적)				○
	▪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의료법개정안)	○			
	▪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표준안개발)				○
	▪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원격의료)				○
	▪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후설계 기반조성	▪ 노후설계 기반조성				○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협의회 운영)				○

주: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2)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은 중장기 추진과제로 예산 및 연도별 성과설정이 곤란함.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은 총 36개의 성과지표 모두 9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표 2-94>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
일자리 사업 체계화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직능·직장시니어클럽 확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 개편)				○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 금제도 내실화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
	▪ 연기연금 제도 활성화				○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				○
	▪ 농지연금 도입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				○
	▪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
	▪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치매환자 인식개선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예방적서비스 공급역량 강화(시범사업추진)				○
	▪ 예방적서비스 공급역량 강화(지역사회모형개발)				○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직무교육)				○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기관평가)				○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노년기 건강 증진을 위한 운 동사업 활성화	▪ 노인 운동사업 활성화				○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지도자배치)				○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대회개최)				○
의료비 지출 적정화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클럽수)				○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프로그램)				○
	▪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구축 ①				○
	▪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구축 ②				○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②				○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 문화바우처 지원				○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수)				○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수혜자수)				○

주 :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은 14개 성과지표 중 12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고,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에서 1개 성과지표가 목표의 70~90%를, 1개가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에서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저상버스도입보조)와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이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저상버스도입보조)의 경우 서울시의 시내버스 차령연장(9년→11년, 차령연장 201대)에 따른 대·폐차 물량 축소로 저상버스 도입 수요가 대폭 감소하였고, 기타 일부 지자체 버스업체 재정난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데 기인함.
-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는 대도시권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우선 시범 실시 후, 매년 5개소씩 확대추진하려 했던 것이 5명만 주말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추진계획에서 삭제되었으며, 사업의 취지에 대한 목표치 설정 역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95>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도시철도이동편의시설확충)				○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저상버스도입보조)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②				
	▪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족의 보호강화	▪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①				○
	▪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②				○
	▪ 농촌 가사도우미				○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노인학대사례종결률)				○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학대피해노인 정서적안정 비율)				○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
	▪ 노인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

주.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2) 노인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의 경우, 동 사업이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 개별 사업으로 진  
행됨에 따라 일률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움.

## 다.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분야는 정책 특성에 따라 3개 중영역, 10개 소영역, 19개 세부영역, 58개 세부  
사업(성과지표 수: 90개)로 구분되어 있음.

### (1) 중·소영역간 비교

□ 성장동력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비율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93.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 87.5%,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87.5%임.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  
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소영역 100.0%, “산업재  
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소영역 100.0%,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 90.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소영역 85.7% 순으로 높음.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의 22개 성과지표 중 20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에 2개가 속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소영역의 14개 성과지표 중 12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70~90%의 목표달성률에 2개가 속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소영역 100.0%,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소영역 83.3%,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소영역 80.0% 순으로 높음.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의 5개 성과지표 중 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50~70%의 목표달성률에 1개가 속함.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의 6개 성과지표 중 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한 개가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비율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소영역 100.0%, “국내·외 시장 활성화” 소영역 8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소영역 50.0% 순으로 높음.
- “국내·외 시장 활성화” 소영역의 6개 성과지표 중 5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가 70~90%에 속함.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소영역의 2개 성과지표 중 1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1개는 50%에 미치지 못함.

&lt;표 2-96&gt; 2011년도 성장동력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성과지표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성장동력분야	2 (2.2)	1 (1.1)	5 (5.6)	82 (91.1)	90 (100.0)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4 (6.9)	54 (93.1)	58 (100.0)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2 (14.3)	12 (85.7)	14 (100.0)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14 (100.0)	14 (100.0)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2 (9.1)	20 (90.9)	22 (100.0)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8 (100.0)	8 (100.0)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1 (6.25)	1 (6.25)		14 (87.5)	16 (100.0)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1 (20.0)		4 (80.0)	5 (100.0)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1 (16.7)			5 (83.3)	6 (100.0)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5 (100.0)	5 (100.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1 (6.25)		1 (6.25)	14 (87.5)	16 (100.0)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8 (100.0)	8 (100.0)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1 (16.7)	5 (83.3)	6 (100.0)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1 (50.0)			1 (50.0)	2 (100.0)

주: 1) 표의 주치는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와 사업은 있으나 성과지표 책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수임

## (2) 세부영역간 비교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은 58개 성과지표 중 54개가 목표치를 90% 이상 달성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소영역에서 2개 성과지표가 목표치의 70~90%를,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에서 2개의 성과지표가 70~90%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소영역에서는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중앙부처 4급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정부출연(연) 신규채용 여성비율)의 목표 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각각 84.0%, 85.9%)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중앙부처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는 '08년 초 정부조직 개편 후 5개년 계획('07~'11) 재설정 시, '08~'10년 연도별 목표치는 하향조정하였으나, '11년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최종연도의 목표달성이 곤란해진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정부출연(연) 신규채용 여성비율)는 개별 정부출연(연)에서 신규채용 시 여성비율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여성비율 준수에 따른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에서는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

- 고(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체제 구축(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각각 71.0%, 87.5%)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는 능력개발카드제, 수당지원금, JUMP 사업 등을 도입하였으나 수요자들의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화된 학원들이 부족하거나 이들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체제 구축(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은 정책대상자의 욕구 및 이에 따른 공급자의 수요 등에 대한 우선과약이 필요하며, 직장 내 우호적인 분위기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절대 수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임(8개교 중 7개교).

&lt;표 2-97&gt;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고용률)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중앙부처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지자체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국공립대 여성교수임용률)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여성 교장·교감 임용률)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정부출연(연)신규채용 여성비율)			○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집합교육 수료자)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사이버·원격교육 수료자)				○
	▪청소년, 여대생 등에 대한 직업·진로지도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①(만족도 조사)				○
	▪청소년, 여대생 등에 대한 직업·진로지도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②(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실적)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①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율)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② (새일센터 이용자 증가율)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여성인력 실태조사, 지역특화직종개발)				○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인턴 참여실적)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F-4 자격 국내 체류자수(중국, CIS지역))				○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 신청건수)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 (외국인 콜센터 신설)				○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① (고용허가제 정착 제도개선)				○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① (숙련 생산기능 F-2 인력 지킴 개정)				○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②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② (기능테스트 확대 여부)				○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
	▪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거점학교 운영수)				○
	▪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강좌 지원학교수)				○
	▪ 체류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상담 처리건수)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 ① (국제어학 교육 사업 실시 학교수)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 ② (외국인 참여 TV프로그램의 정규 편성)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① (진로 직무 매뉴얼 개발)				○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② (간행물 발간 횟수)				○
	▪ 학교 취업지원기능 강화(대학취업지원평가지표)				○
	▪ 학교 취업지원기능 강화(취업지원관 채용인원)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주훈련 직무능력 향상정도)				○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훈련참여자 훈련성과조사)				○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훈련참여자 훈련만족도조사)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능력개발용자 지원 수혜자 만족도)				○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 (국가인적자원개발진흥사업)				○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제고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향상지원)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체제 구축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체제 구축 (계약학과 개설 확대)				○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평생학습 선도 중심대학)				○
	▪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Competency Map)				○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국가기술자격출제기준)				○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 (출제 및 검토 현장전문가 확보)				○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 전문화 확산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재해감소율)				○
	▪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인증서 발급)				○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교육지원실적)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강화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직업배치율)				○
	▪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직업복귀자비율)				○

주: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은 16개 성과지표 중 1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에서 1개가 50~70%를,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에서 1개가 50% 미만의 달성도를 보임.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에서는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65.0%).

- 이는 현행 학생 통학구역 설정방법 및 일부 교원인사제도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학교 통폐합 시 교장(감) 정원감축이 이루어져 시·도 교육청의 적



극적인 추진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 규제 완화 검토가 미흡하게 나타남.
- 이는 근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고용부) 개정이 전면개정을 위해 '12.7월말까지 유보되면서 관련규정 개정도 지연된 것임.

<표 2-9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육분야 제도개선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
	▪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마련 (사립대학경영컨설팅지원 만족도)				○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ACE 사업선정대학 취업률)				○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소규모학교 통폐합)		○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학교수용시설재정투자감사강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주택분야 제도개선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소형주택)				○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매입·전세임대주택)				○
	▪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공급규칙개정)				○
금융분야 제도개선	▪ 장기금융시장 활성화(국고채 평균 잔존 만기)				○
	▪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해외·대체 투자 비중확대)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펀드투자규제완화검토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 정건전성 유지	▪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GDP 대비 국가채무)				○
	▪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관대상지 대비 GDP)				○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장기재정전망)				○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재정통계개편)				○
	▪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국유재산관리체계개편)				○

주: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는 5세 누리과정 도입과 중복된 과제로 관계부처간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은 16개 성과지표 중 1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고, “국내·외 시장 활성화” 소영역에서 1개 성과지표가 70~90% 목표달성률에 속하였고, “고령 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소영역에서 1개 성과지표가 50% 미만의 달성도를 보임.

○ “국내·외 시장 활성화” 소영역에서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참관객

수)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

- 이는 종합체험관을 광주, 대구, 성남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소영역에서는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
- 이는 ‘노인대상 식품안전·영양 관리방안 연구’ 결과, 고령친화식품 유형을 별도로 갖고 있는 제외국 사례가 없고, 새로운 기준·규격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임. 또한 기준·규격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시험법 확정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에 기인함.

<표 2-99>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b>3. 고령친화산업 육성</b>					
<b>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b>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사용성 평가 기준 개발)				○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표준화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확대				○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우수제품품목확대수)				○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제도운영추진)				○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서비스 질 향상교육)				○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법적근거 마련				○
<b>3-2. 국내·외 시장 활성화</b>					
국내 수요기반 확충	▪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우수제품홍보수)				○
	▪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홈페이지 방문자 수)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참관객 수)			○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수출정보 DB 구축)				○
	▪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진출협의체 구성·운영)				○
<b>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b>					
식품산업 기반조성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			
	▪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R&D 과제발굴 및 제안서)				○

주: 1) 하나의 사업 내의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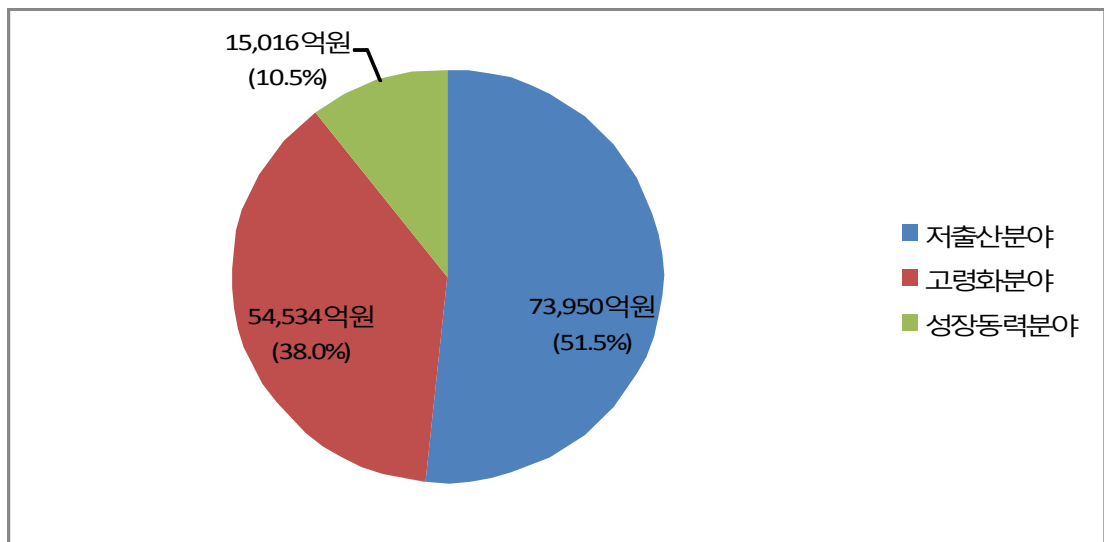
## 2. 예산집행실적

□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예산사업 138개, 비예산사업 93개로 구성되어 있음<sup>6)</sup>.

○ 예산은 총 14조 3,501억원으로 저출산분야 7조 3,950억원(51.5%), 고령화분야 5조 4,534억원(38.0%), 성장동력분야 1조 5,016억원(10.5%)으로 구성됨.

- 2011년도 예산결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현액은 총 14조 3,861억원으로 저출산분야 7조 6,589억원(53.2%), 고령화분야 5조 5,444억원(38.6%), 성장동력분야 1조 1,828억원으로 구성됨(8.2%)<sup>7)</sup>.

[그림 2-1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 예산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 비율은 86.3%로 대부분이며, 70~90%인 사업의 비율은 7.2%, 70% 미만인 사업의 비율은 6.5%로 나타남.

○ 분야별로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 비율은 저출산분야 84.7%, 고령화분야 82.2%, 성장동력분야 94.1%임.

-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저출산분야가 5개로 가장 높음(저출산 예산사업 대비 8.5%).

6) 과제 수로 구분하되, 전체 231개 과제 중 같은 과제(번호)이나 세부사업내용이 예산/비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는 예산사업(과제)로 분류하며, 이하 세부내용 역시 동일하게 적용함.

7) 이하 모든 내용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예산현액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2011년도 예산 결산내역을 기준으로 함.

&lt;표 2-100&gt;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4(2.9)	5(3.6)	10(7.2)	119(86.3)	138(100.0)	93
저출산분야	2(3.4)	3(5.1)	4(6.8)	50(84.7)	59(100.0)	36
고령화분야	2(4.4)	2(4.4)	4(9.0)	37(82.2)	45(100.0)	33
성장동력분야	-	-	2(5.9)	32(94.1)	34(10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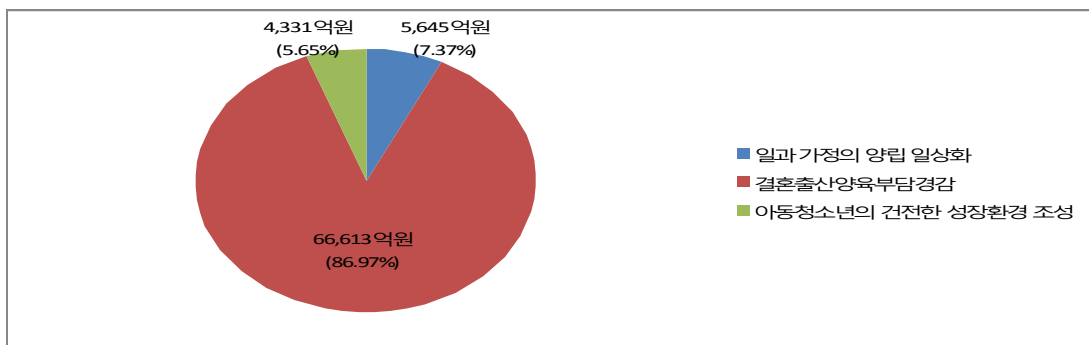
## 가. 저출산분야

- 저출산분야 정책은 예산사업 59개, 비예산사업 3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7조 6,589억원임
- 전체 예산사업 중 84.7%는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70~90%를 집행한 사업은 6.8%, 예산을 70% 미만 집행한 사업은 8.5%로 나타남.

## (1) 중·소영역

- 중영역별 예산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6조 6,613억원(86.97%),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5,645억원(7.37%),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4,331억원(5.65%) 순임.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95.2%로 양호하며,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은 86.2%로 다소 낮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는 55.6%로 가장 부진함.

[그림 2-11] 저출산분야 예산



##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5,645억원으로 저출산분야 전체예산 중 7.37%를 차지함.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의 예산은 5,151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6.73%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의 예산은 387억원으로 0.51%, 그리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의 예산은 107억원으로 0.14%를 각각 차지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이 66.7%로 가장 높으며,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과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은 모두 50.0%로 나타남.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에 포함된 2개 예산사업은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50~70% 집행, 1개 사업은 50%미만 집행함.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에 포함된 2개 예산사업 중 1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50%미만 집행함.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에 포함된 3개 예산사업 중 2개 예산사업은 90% 이상 집행하였고, 나머지 1개 사업은 70~90% 집행함.

####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6조 6,613억원으로 저출산분야 전체예산 중 86.97%가 집중됨.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영역의 예산은 4조 9,164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남(전체 저출산 예산의 64.19%).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의 예산은 1조 4,940억원으로 19.51% 그리고 “임산·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의 예산은 2,346억원으로 3.06%를 각각 차지함.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의 예산은 163억원으로 0.2%에 불과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임산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00.0%,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80.0% 수준이었고,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은 50.0%임.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에 포함된 1개 사업이 예산을 70~90% 이상 집행함.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에 포함된 15개 예산사업 중 12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2개 사업은 70~90%, 1개 사업은 50~70% 집행함.

####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4,331억원으로 저출산분야 전체예산 중 5.65%를 차지함.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의 예산은 1,837억원으로 2.40%, “아동·청소년

년 역량개발 지원” 소영역 예산은 1,812억원으로 2.37%,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소영역의 예산은 682억원으로 0.89%를 각각 차지함.

-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소영역은 비예산 사업임.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100.0%,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100.0%이며,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은 90.9%로 대체로 예산집행률이 높음.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에 포함된 11개 예산사업 중 10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이 50~70% 집행함.

<표 2-101> 저출산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저출산분야	76,589	100.0	2 (3.4)	3 (5.1)	4 (6.8)	50 (84.7)	59 (100.0)	36
1.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5,645	7.37	2 (22.2)	1 (11.1)	1 (11.1)	5 (55.6)	9 (100.0)	15
1-1.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확대개선	5,151	6.73	1 (25.0)	1 (25.0)	-	2 (50.0)	4 (100.0)	6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07	0.14	1 (50.0)	-	-	1 (50.0)	2 (100.0)	4
1-3. 가족친화 직장 사회환경 조성	387	0.51	-	-	1 (33.3)	2 (66.7)	3 (100.0)	5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66,613	86.97	-	1 (3.4)	3 (10.3)	25 (86.2)	29 (100.0)	17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163	0.2	-	-	1 (50.0)	1 (50.0)	2 (100.0)	5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346	3.06	-	-	-	7 (100.0)	7 (100.0)	2
2-3. 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	49,164	64.19	-	-	-	5 (100.0)	5 (100.0)	6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4,940	19.51	-	1 (7.0)	2 (13.0)	12 (80.0)	15 (100.0)	4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4,331	5.65	-	1 (4.8)	-	20 (95.2)	21 (100.0)	4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682	0.89	-	-	-	4 (100.0)	4 (100.0)	0
3-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1,812	2.37	-	-	-	6 (100.0)	6 (100.0)	1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1,837	2.40	-	1 (9.1)	-	10 (90.9)	11 (100.0)	0
3-4. 아동정책추진 기반 조성	비예산	-	-	-	-	-	-	3

주: 1) 예산액 비중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2) 세부영역간 비교

- 저출산분야의 예산은 특정한 몇몇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은 극히 미미함.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사업만 해도 전체 저출산예산 중 61.70%를 차지하며,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12.06%),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5.45%), “육아 휴직제도 개선”(3.61%), “산전후 휴가 등 제도개선”(3.07%), “양육수당 지원 확대”(2.49%),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2.05%) 등 7대 사업의 비중은 전체 예산 중 90% 수준임.
  -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액은 10% 이내에 불과함.

&lt;표 2-102&gt; 저출산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순위	세부영역	예산액(억원)	비중(%)	(단위: 억원, %)
				누적비중(%)
1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47,256	61.70	61.70
2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9,233	12.06	73.76
3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4,173	5.45	79.21
4	육아휴직제도 개선	2,763	3.61	82.82
5	산전후 휴가 등 제도개선	2,349	3.07	85.89
6	양육수당 지원 확대	1,908	2.49	88.38
7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1,567	2.05	90.43
8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1,233	1.61	92.04
9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857	1.12	93.16
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750	0.98	94.14
11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630	0.82	94.96
12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622	0.81	95.77
13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562	0.73	96.50
14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374	0.49	96.99
15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370	0.48	97.47
16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70	0.48	97.95
17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282	0.37	98.32
18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281	0.37	98.69
19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194	0.25	98.94
20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지원	172	0.22	99.16
21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163	0.21	99.37
21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136	0.18	99.55
22	임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128	0.17	99.72
23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67	0.09	99.81
24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40	0.05	99.86
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39	0.05	99.91
26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3	0.03	99.94
27	취학계층 아동 인적네트워크 형성	17	0.02	99.96
28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3	0.02	99.98
29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9	0.01	99.99
30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8	0.01	100.00
전체		76,589	100.00	100.00

주. 1) 비예산 사업은 제외하였음.

□ 세부사업(정책)별로 예산집행률은 대체적으로 90% 이상이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 사업들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여건 조성’사업은 국회 교착 장기화로 인해 고용보험법 통과 및 시행이 지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이 미흡하게 나타나 예산집행률이 46.2%로 저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사업은 성과목표는(개정안 국회제출) 달성했지만,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대상자(과전/계약)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재계약은 고용주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년 초과 근무 시 근로자 전환 규정(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의해 고용주의 재계약 유인이 감소하였음.
-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소영역 사업들 중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 은 역시 성과목표(컨설팅 실시 사업장 수 100개소)를 달성하였으나,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사업주의 신규채용건수의 부족 및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야근 금지 등 추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업장 공모-선정-승인-지원금지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일 소요로 인해 ‘11년도 실적이나’12년도에 집행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임.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 사업들 중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의 예산집행률은 88.9%로 거의 90%에 근접함(9억원 중 8억원 집행).

<표 2-103>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여건 조성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산전후 휴가 등 제도개선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
	가족간호휴직 활성화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 시간제확산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
	시간제근무 활성화					○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	○				
유연근로 형태 도입 여건 조성	유연근무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
	스마트 워크 도입 및 확산				○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추진 등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보육 시설 설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및 운영지원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
가족친화 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자원체계 운영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 -초과근무 관리강화					○
	출산장려 우수지역(자자체) 인센티브 제공					○

##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 사업들 중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80.0%로 나타났으나, 성과목표(결혼전문포탈사이트 회원확보 수 10,000명)를 초과달성하였고, 절대치의 측면에서는 5억원 중 4억원을 집행하여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님(예산액 자체가 작은 영향이 큼).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 사업들 중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의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보육시설 미확보료(목표치: 20개소, 실적: 14개소) 예산집행률이 65.3%로 저조함.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중 시

간제 보육바우처 및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마련은 예산집행률은 77.4%이나 이를 통해 성과 목표(시범사업 실시)를 달성하였음.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도 75%의 예산집행으로 성과목표(공동육아나눔터)를 달성하였고 4억 중 3억을 집행하여 크게 떨어지지는 않음(예산 액 자체가 작은 영향이 큼).

&lt;표 2-104&gt;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확대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강화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혜택 부여					○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				○	
	자연분만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강화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전액 확대 ①				○	
	보육교육비 전액 확대 ②				○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
사교육비 경감 대책						○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내 국공립보육시 설 지속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유치원 종일반 확대				○	
	저소득 맞벌이 가정 입소 우선순위 부여					○
	시간제 보육 바우처 및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마련			○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	
	초등돌봄교실 확대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 사업들 중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강화’ 사

업은 예산집행률이 50.0%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가 2011년 1월1일 이후 범죄발생건부터 적용되나, 우편고지제도대상건 확정 판결의 시일 소요로 인해 당해연도 6월부터 집행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있음.

<표 2-105>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b>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b>						
<b>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b>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위기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확대	두드림존(토탈자활지원서비스체계) 확대·보급				○	
<b>3-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b>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	
취약계층아동 인적네트워크 형성	휴먼 네트워크 확대				○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
<b>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b>						
아동·청소년 생활안전강화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지원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4.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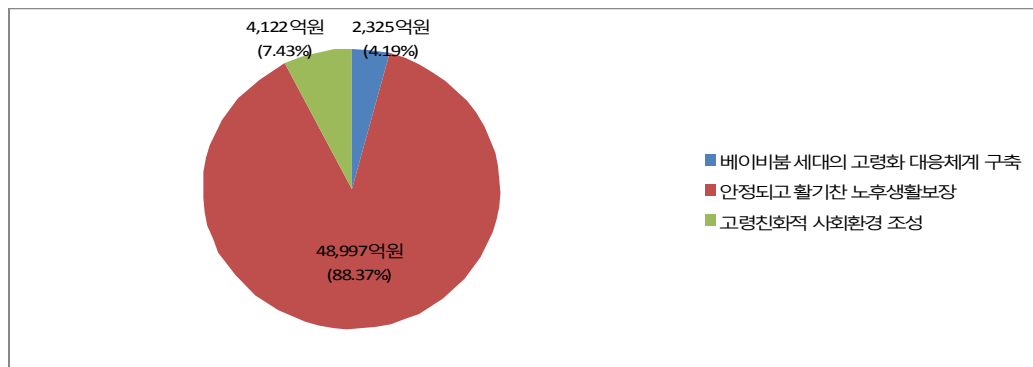
## 나. 고령화분야

- 고령화분야 정책은 예산사업 45개와 비예산사업 3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5조 5,444억원임.
- 전체 예산사업 중 82.2%는 예산을 90%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70~90%를 집행한 사업은 8.9%, 예산을 70%미만 집행한 사업은 8.8%로 나타남.

### (1) 중·소영역

- 중영역별 예산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조 8,997억원(88.37%),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122억원(7.4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325억원(4.19%) 순임.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94.1%로 양호하며,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경우 85.7%로 다소 낮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은 71.4%로 가장 부진함.

[그림 2-12] 고령화분야 예산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2,325억원으로 고령화분야 전체예산 중 4.19%를 차지함.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소영역의 예산은 1,017억원으로 1.83%으로 동 영역에서 가장 많음.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의 예산은 993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79%, 그리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구축” 소영역의 예산은 311억원으로 0.56%를 각각 차지함.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소영역의 예산은 4억원으로 0.01%에 불과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76.9%,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60.0%,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50.0%의 순으로 나타남.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에 포함된 13개 예산사업 중 10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70~90%, 50~70%, 50% 미만에 각각 1개 사업이 속함.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소영역에 포함된 5개 예산사업 중 3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또 다른 1개 사업은 50% 미만 집행함.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소영역에 포함된 2개 예산사업 중 1개 사업이 90% 이상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로 집행함.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4조 8,997억원으로 고령화분야 전체예산 중 88.37%가 집중됨.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미련” 소영역의 예산은 3조 8,59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남(전체 고령사회 예산의 69.61%).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적정화” 소영역의 예산은 6,538억원으로 11.79%,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소영역의 예산은 3,438억원으로 6.20%를 차지함.
  -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 제공” 소영역의 예산은 426억원으로 0.77%에 불과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제공”이 모두 100.0%로 높게 나타나지만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는 83.3%로 다소 떨어짐.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소영역에 포함된 5개 예산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고, 1개 사업이 70~90% 집행함.

##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4,121억원으로 고령화분야 전체예산 중 7.43%를 차지함.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의 예산은 2,52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6% 그리고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기반마련” 소영역의 예산은 1,594억원으로 2.87%를 각각 차지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이 66.7%로 낮게 나타났고,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기반마련”은 100.0%로 나타남.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에 포함된 2개 예산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고, 1개 사업이 50~70% 집행함.

&lt;표 2-106&gt; 고령화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고령화분야	55,444	100.0	2 (4.4)	2 (4.4)	4 (8.9)	37 (82.2)	45 (100.0)	33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325	4.19	2 (9.5)	1 (4.8)	3 (14.3)	15 (71.4)	21 (100.0)	15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993	1.79	1 (7.7)	1 (7.7)	1 (7.7)	10 (76.9)	13 (100.0)	5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1,017	1.83	-	-	1 (50.0)	1 (50.0)	2 (100.0)	6
1-3. 사전예방적 간병보장체계 구축	311	0.56	1 (20.0)	-	1 (20.0)	3 (60.0)	5 (100.0)	2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 생활 설계 강화	4	0.01	-	-	-	1 (100.0)	1 (100.0)	2
2. 안정되고 활기 찬 노후생활보장	48,997	88.37	-	-	1 (5.9)	16 (94.1)	17 (100.0)	13
2-1. 일자리사 업의 내실화	3,438	6.20	-	-	-	1 (100.0)	1 (100.0)	2
2-2. 노인빈곤예 방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 마련	38,595	69.61	-	-	-	3 (100.0)	3 (100.0)	3
2-3. 건강한 노 후생활 및 의료 비 지출적정화	6,538	11.79	-	-	1 (16.7)	5 (83.3)	6 (100.0)	7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4. 다양한 사회 참여 여가문화기 회 제공	426	0.77	-	-	-	7 (100.0)	7 (100.0)	1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122	7.43	-	1 (14.3)	-	6 (85.7)	7 (100.0)	5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2,528	4.56	-	1 (33.3)	-	2 (66.7)	3 (100.0)	3
3-2.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 경기반마련	1,594	2.87	-	-	-	4 (100.0)	4 (100.0)	2

주: 1) 예산액 비중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2) 세부영역간 비교

□ 세부영역별로 소요된 예산의 비중은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가 68.41%, “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10.42%, “노인일자리 양적확충 및 질적 고도화”가 6.20%,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이 4.43%로 4개 사업에 전체예산의 90% 정도가 집중됨.

○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액은 약 10%에 불과함.

<표 2-107> 고령화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순위	세부영역	예산액(억원)	비중(%)	(단위: 억원, %)
				누적비중(%)
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37,930	68.41	68.41
2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5,777	10.42	78.83
3	노인일자리 양적확충 및 질적 고도화	3,438	6.20	85.03
4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2,454	4.43	89.46
5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1,492	2.69	92.15
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984	1.77	93.92
7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665	1.20	95.12
8	고령자 고용연장	525	0.95	96.07
9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384	0.69	96.76
10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346	0.62	97.38
1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311	0.56	97.94
12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279	0.50	98.44
13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192	0.35	98.79
14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51	0.27	99.06
15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136	0.25	99.31
16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122	0.22	99.53
17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101	0.18	99.71



순위	세부영역	예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중(%)
18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74	0.13	99.84
19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42	0.08	99.92
20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33	0.06	99.98
21	노후설계 기반 조성	4	0.01	99.99
2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3	0.01	100.0
23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1	0.00	100.0
전체		55,444	100.00	100.00

주: 1) 비예산 사업은 제외하였음.

□ 세부사업(정책)별로 예산집행률은 약 82.2%가 90%이상이나, 그 밖의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 사업들 중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사업은 68.8%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고 기업의 개별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또한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개편’은 72.2%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전직지원장려금제도에서 전직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된 것에 따름.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은 13.6%의 예산집행률을 기록하여 성과목표(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자 수)는 초과달성하였으나, 예산집행률 저조는 동 사업이 공모제 방식으로 새로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적게 나타난 것임(고용창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1차 지원금 지급, 12개월 이후 2차 지원금 지급).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소영역 사업들 중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는 70~90%의 예산집행률(81.8%)을 기록하였으나, 사업의 성과목표는 모두 달성하였음(교육 실시 횟수, 컨설팅 실시 사업장 수).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구축” 소영역 사업들 중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이 75%의 예산집행률을 보였으나 이 역시 성과목표(전문평가 참여율)를 달성하였고,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은 예산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집행됨에 따라 예산집행률이 0%로 나타남.

&lt;표 2-108&gt;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가장고령자친화적 임금규제 활성화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개편				○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	
	중고령층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회적 기업 육성				○	
	시니어 창업지원				○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제고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 서비스제공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에이지 캠페인 실시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개선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수급자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		
	개인연금 활성화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3.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구축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및 수준 향상			○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				
	노화 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기반조성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구축					○

##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소영역 사업들 중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업  
은 예산집행률이 83.3%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건강정보 생산 수(51건)’ 성과목표  
치 51건을 모두 달성하였음.

&lt;표 2-109&gt;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1.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
일자리 사업 체계화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 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공적연금의 근로유인성 제고	채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	
	농지연금 도입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b>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적정화</b>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			○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	
	효과적 치매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
	치매환자 인식개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 운동사업 활성화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의료비 지출 적정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
<b>2-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제공</b>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마련(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과제에 포함)				○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문화바우처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소영역 사업들 중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차령연장에 따른 대·폐차 물량 축소로 저상버스 도입 수요가 대폭 감소하였고, 기타 일부 지자체 버스업체 재정난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lt;표 2-110&gt;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령자들 임대주택 지속공급					○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기반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의 보호강화				○	
	농어촌 가사도우미				○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노인학대예방 인프라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	
	노인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

#### 다. 성장동력분야

□ 성장동력분야 정책은 예산사업 34개와 비예산사업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1조 1,828억원임.

○ 전체 예산사업 중 94.1%는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70~90%를 집행한 사업은 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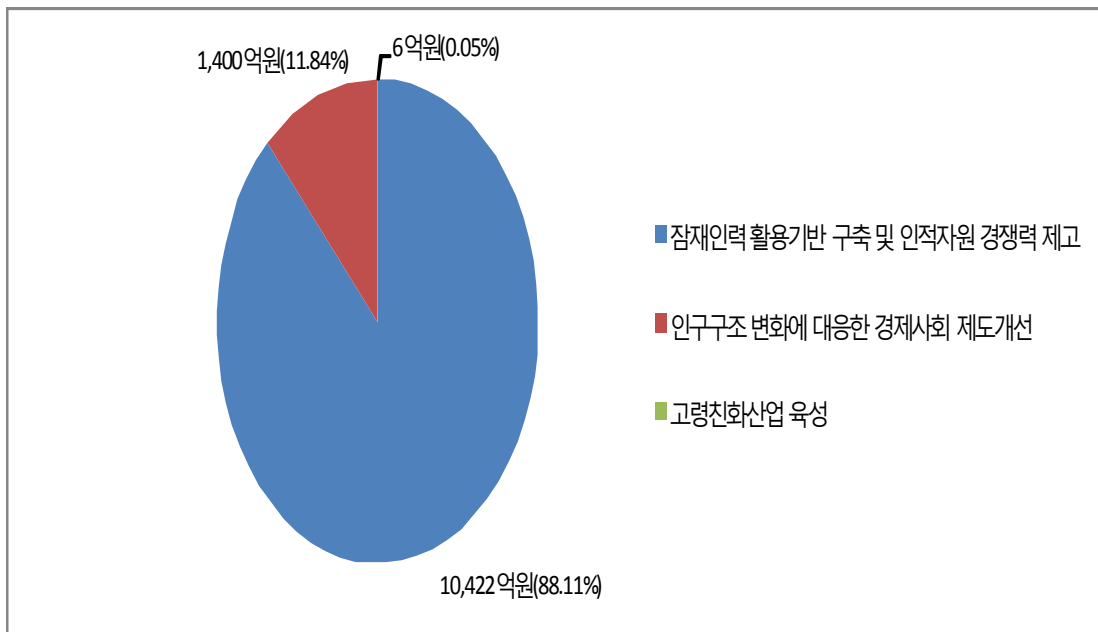
#### (1) 중·소영역

□ 중영역별 예산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조 422억원(88.1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400억원(11.84%), ‘고령친화산업육성’ 6억

원(0.05%) 순임.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00.0%, ‘고령친화산업육성’의 경우 100.0% 집행하였고<sup>8)</sup>,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는 91.3%로 대체로 양호함.

[그림 2-13] 성장동력분야 예산



####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1조 422억원으로 성장동력분야 전체예산 중 88.11%가 집중됨.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의 예산은 8,084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남(전체 성장동력분야 예산의 68.35%).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의 예산은 941억원으로 7.96%, “외국 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소영역의 예산은 751억원으로 6.3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소영역의 예산은 646억원으로 5.46%를 각각 차지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과 “외국국적 동

8) 동 영역의 사업들 중 대다수는 예산이 다른 과제 예산(‘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등 예산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각 사업의 명확한 예산집행률은 알 수 없으나, 총 6억원을 전액 집행함에 따라 해당되는 개별사업들의 예산집행률도 90% 이상인 것으로 간주함.

포·외국인력 활용” 이 100.0%로 가장 높으며,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은 87.5%,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자” 는 83.3%로 나타남.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에 포함된 7개 사업은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고, 1개 사업은 70~90%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자” 소영역에 포함된 5개 사업은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고, 1개 사업은 70~90%의 수준을 보임.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1,400억원으로 성장동력분야 전체예산 중 11.84%를 차지함.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의 예산은 1,399억원으로 전체 성장동력 예산의 11.83%를 차지함.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의 예산은 1억원으로 전체 성장동력예산에 0.01%에 불과하며,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은 비예산 사업임.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모두 100.0% 수준임.

#### □ ‘고령친화산업육성’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6억원으로 성장동력분야 전체예산 중 0.05%에 불과함.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시장 활성화” 소영역의 예산이 동 영역의 전체 예산 6억원을 차지하고,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은 비예산 사업임.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와 “국내·외 시장 활성화” 의 세부예산사업 7개 모두 100.0% 수준을 보임.

&lt;표 2-111&gt; 성장동력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성장동력분야	11,828	100.0	-	-	2 (5.9)	32 (94.1)	34 (100.0)	24
1.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및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10,422	88.11	-	-	2 (8.7)	21 (91.3)	23 (100.0)	8
1-1.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촉진	646	5.46	-	-	-	6 (100.0)	6 (100.0)	3
1-2.외국국적 동 포·외국인력 활용	751	6.35	-	-	-	3 (100.0)	3 (100.0)	4
1-3. 선순환적 작업능력 개발체 계확립	8,084	68.35	-	-	1 (12.5)	7 (87.5)	8 (100.0)	1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 동력 손실방지	941	7.96	-	-	1 (16.7)	5 (83.3)	6 (100.0)	-
2. 인구구조 변 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 제도 개선	1,400	11.84	-	-	-	4 (100.0)	4 (100.0)	9
2-1. 학령인구 감 소에 대비한 교 육분야 제도개선	1,399	11.83	-	-	-	3 (100.0)	3 (100.0)	2
2-2. 인구고령화 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비예산		-	-	-	-	-	5
2-3. 중장기 재정 의 지속가능성 유 지를 위한 재정분 야 제도개선	1	0.01	-	-	-	1 (100.0)	1 (100.0)	2
3. 고령친화산업 육성	6	0.05	-	-	-	7 (100.0)	7 (100.0)	7
3-1. 제품 및 서 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6	0.05	-	-	-	4 (100.0)	4 (100.0)	3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	3 (100.0)	3 (100.0)	2
3-3. 고령자용 식 품산업 기반조성	비예산	-	-	-	-	-	-	2

주: 1) 예산액 비중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7개 예산사업 중 6개 예산사업은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예산으로 통합운영.



## (2) 세부영역간 비교

- 세부영역별로 소요된 예산의 비중은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가 66.40%, “교육분야 제도개선” 이 11.83%로 2개 사업이 전체예산의 80%에 근접함.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6.37%, “다문화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6.35%, 를 합할 경우 총 4개 세부영역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91% 정도를 차지함.
-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액은 10% 이내에 불과함.

&lt;표 2-112&gt; 성장동력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단위: 억원, %)

순위	세부영역	예산액(%)	비중(%)	누적비중
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7,854	66.40	66.40
2	교육분야 제도개선	1,399	11.83	78.23
3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753	6.37	84.60
4	다문화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751	6.35	90.95
5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581	4.91	95.86
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188	1.59	97.45
7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176	1.49	98.93
8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65	0.55	99.48
9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54	0.46	99.94
10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 표시제도 확대,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5	0.04	99.98
11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1	0.01	99.99
12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1	0.01	100.00
전체		11,828	100.00	100.00

주: 1) 비예산 사업은 제외하였음.

- 세부사업(정책)별로 예산집행률은 대부분 90% 이상의 수준을 보이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저조한 수준을 보임.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 사업들 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는 동 사업 내 다양한 성과지표가 있고, 결산 상 각 성과지표에 의한 분류는 되어 있지 않고 합계로 나와 있어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유일하게 성과수준이 낮은 재직자 직업훈련참여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저조는 수요자들의 세분

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화된 학원들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은 77%로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판단됨.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 사업들 중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는 예산 당초 목표치 16,788백만원에 비해 14,926백만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은 88.9%로 90%에 근접했으며, 성과목표(직업재활급여 지원인원)를 초과달성(114.2%)하였음.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모든 사업들은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음.

<표 2-113>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강화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 교감 임용 확대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 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 체계 확대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이주, 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	
1-2.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 활용						
외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유치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다문화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용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다양한 작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제공확대				○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확대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강화				○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영세사업장(50인미만) 작업환경 개선				○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 정착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강화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작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		

&lt;표 2-114&gt;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개선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개선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실시 구조조정 기반마련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주택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
금융분야 제도개선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
	확정가여금 퇴직연금의 주식, 펀드 투자규제 완화검토					○
2-3.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미래 재정위험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	
	산규제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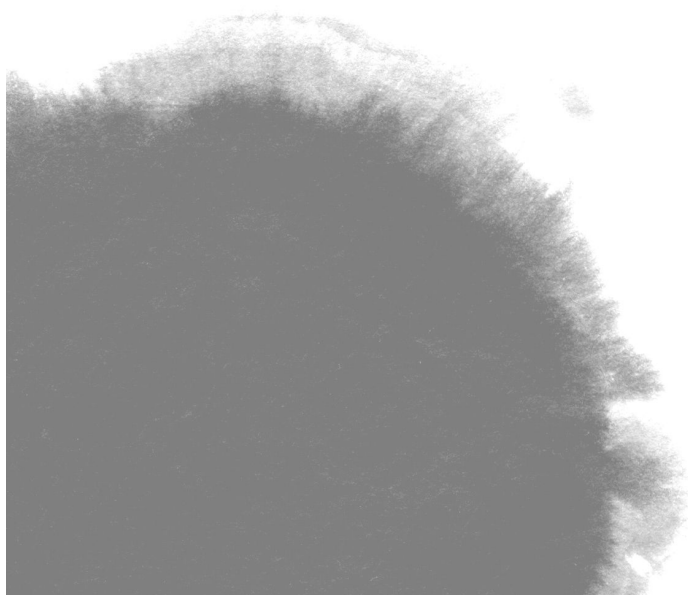
&lt;표 2-115&gt;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고령친화산업육성						
3-1.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운영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 표시제도확대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산업박람회 보관운영 내실화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사업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 규격 신설						○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

# 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  
(핵심과제 45개)에 의한 평가





##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 (핵심과제 45개)에 의한 평가

- 핵심과제 45개의 지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의 전반적인 성과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성과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특히,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각 분야별로 정책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제1절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 1. 저출산부문

##### 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 산식: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수 ÷ 휴직급여 수급근로자수 × 100 = 71.3%  
(목표치의 99.3%, 2011년도 목표치 71.8%)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수는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후에 같은 사업장에 고용유지된 근로자 수, 휴직급여 수급근로자 수는 육아휴직 급여를 사용한 근로자 수(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수)

- 목표치는 71.8%였는데 반해 실적치가 71.3%로 달성률 99.3%를 기록하였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 산식:  $\text{이용자 수} \div \text{산전후휴가자 수} \times 100$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이용자 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수(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산전후휴가자수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수(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 2011년 동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여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2011.9.22.부터 시작하여 과제목표를 달성함.

□ 유연근로제 확산

-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 산식:  $\text{행정기관 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 수} \div \text{대상인원} \times 100$
- 2011년 목표치가 3.0%였으나 실제 대상인원 145,000명에 이용자수 8,607명으로 이용률 5.9%로 나타나 달성률 196.7% 기록.
- 한계: 중앙부처 공무원만의 유연근무제 이용자 비율이며, 경찰·교원·교대·현업근무자 등을 제외하였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 산식:  $(\text{당해년도 총 개소 수} - \text{전년도 총 개소 수}) \div \text{전년도 총 개소 수} \times 100$
- 목표치는 7.0%이었으나 직장보육시설이 2010년 기준 401개이고, 2011년도 총 449개로 나타나 11.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50.6%의 달성률을 나타냄.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소)
  - 당초 42개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106개소를 인증하여 252.4%의 달성률을 보임.



&lt;표 3-1&gt;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71.8	71.3	9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도입	도입	10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3.0	5.9	196.7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7.0	11.9	150.6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42	106	252.4

## 나.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

## ○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 산식: (특별공급 + 임대주택 + 전세임대) ÷ 연간초혼건수 × 100

○ 목표치는 9%였으나, 2011년 특별공급 15,342호, 임대주택 8,299호, 전세임대 4,509호를 달성하고, 연간초혼건수는 272,551건(통계청 인구동향조사)으로 결과치가 10.3%로 나타나 114.4%의 달성률을 기록함.

## □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 ○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 목표치가 356,000명이었으나, 2011년 참여인원은 367,399명으로 나타나 103.2%의 달성률을 보임.

##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 ○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개소)

- 분만 취약지 선정 기준 ①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어서 관내에서 분만이 가능하지

않아 총 분만 건수 중 70% 이상이 타 시군에서 분만한 지역

- 분만 취약지 선정 기준 ②: 1시간 내 분만 가능 병원 접근 불가능하여 분만이 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전체 시·군·구 면적의 30% 이상인 지역
- 2012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해당하는 분만 취약지는 총 48개 지역임
- 48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1년 48개소를 지원하여 목표치 달성함.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 산식:  $\text{연간수혜자수} \div \text{연간 출생아 수} \times 100$
- 2011년 목표치는 13.2%였으나 연간 수혜자수는 77,005명이고, 연간 출생아수는 471,300명이어서 16.3%의 수혜율을 달성하여 달성률 123.5%를 기록함.

#### □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 교육비 지원율(%):
  - 산식:  $(\text{영유아보육비 혹은 교육비수혜자 수}) \div 0\sim 5\text{세 아동 수} \times 100$
- 2011년 목표치가 42.3%였으나, 48.7%의 실적치를 기록하여 115.1%의 달성률을 기록
- 영유아보육비수혜자 수: 1,019,305명, 영유아교육비수혜자 수: 280,000명
- 0~5세 아동 수: 2,668,526명

####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산식:  $\text{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div \text{전체 어린이집} \times 100$
  - 평가인증률은 2011년도 12월 기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수 누계를 2010년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수로 나눈 것인데 당해년도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은 사후관리로 신설 및 취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나눔.
- 2011년 목표치는 70%였으나, 실적치 78.6%를 기록하여 112.3%의 달성률을 보임.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수는 29,882개소이고, 전체어린이집수는 38,021개소(2010년 기준)였음.

## □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

- 산식:  $(\text{돌봄유치원수} + \text{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수}) \div (\text{유치원수} + \text{어린이집수}) \times 100$

○ 2011년 목표치는 20.7%였으나, 실적치가 21.2%로 나타나 102.4%의 달성률을 보임.

- 전체 어린이집수 39,842개소 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수는 9,703개소였으며, 전체 유치원수 8,424개소 중 돌봄 유치원 수가 516개소였음.

##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 2011년 목표치는 1,350,000건이었으며, 실적치는 1,959,179건으로 145.1%의 달성률을 보임(단위를 ‘만’건으로 환산시 144.4%).

##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 산식:  $\text{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수}(\text{초등돌봄} + \text{지역아동센터} + \text{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text{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 수} \times 100$

- 초등돌봄교실(교과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 돌봄 필요아동의 수는 0~15세 아동 중 기초수급아동과 중위소득 70%미만의 아동 수임.

○ 2011년 목표치는 35.6%였으나, 실적치 38.9%를 달성해 109.3% 달성률을 보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수는 ‘11년 12월 기준 237,195명이었으며,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 수는 ’08년 기준 609,586명이었음.

- 절대치 측면에서는 2010년에 비해(196,708명) 크게 증가하였음.

- 한계: 핵심과제 지표상 산정근거인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 수의 시점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함.

&lt;표 3-2&gt; 결혼·출산·양육부담경감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9.0	10.3	114.4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356.0	367.3	103.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수(개소)	48	48	1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3.2	16.3	123.5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42.3	48.7	115.1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70	78.6	112.3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20.7	21.2	102.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135	195	144.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수혜율	35.6	38.9	109.3
			소계	216,800	237,195	
			초등돌봄	113,400	124,013	
			지역아동	95,000	104,982	
			청소년	8,000	8,200	

## 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 산식:  $\text{드림스타트 수혜아동 수} \div \text{취약계층 아동 수} \times 100$
- 취약계층 아동 수는 전체 아동에서 저소득층 아동 수 비율을 곱하여 사용.
- 저소득층 아동 수 비율은 기초수급자가구 비율 3.2%와 차상위 가구 비율 3.8%를 합친 7.0%로 추정.

- 2011년 목표치는 7%였으나, 실적치는 9.9%로 나타나 141.4%의 달성률을 기록.
- '11년 0~12세 아동은 6,476천명으로 추정되어 드림스타트 대상자는 453천명으로 추정
- '11년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는 44,651명

####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 2011년 35,500,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42,470,281명을 지원하여 119.6%의 달성률을 나타냄.

####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 산식:  $0\sim14\text{세 아동 사망자 수} \div 0\sim14\text{세 아동 수} \times 100,000$
- 14세 미만 아동 중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의 수에서 질병, 자살·타살로 사망하는 경우 제외하였으며, 0~14세 아동 수는 연령별 추계인구를 사용함.
- 2011년 목표치는 5.0%였으나, 실적치는 4.1%를 기록. 본 지표는 적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목표치/실적치\*100으로 달성률을 계산하면 122%의 달성률을 보임.
- 0~14세 아동 사망자 수는 '11년 12월 기준 322천명이었으며, 0~14세 아동 수는 '11년 12월 기준 7,771천명임.

#### □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 산식:  $0\sim17\text{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10\text{만명 당}) \div 0\sim17\text{세 아동 수} \times 100$
- 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는 44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사례의 수임.
- 2011년 목표치는 0.59%이었으나, 실적치는 0.62%로 105.1%의 달성률을 보임.
- 전년도 0~17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10만명 당 6,058명이었으며, 0~17세 아동 수는 9,835천명임.

&lt;표 3-3&gt;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7	9.9	141.4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35,500	42,470	119.6
안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0만명 당 명)	5.0	4.1	122.0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0.59	0.62	105.1

## 2. 고령화부문

### 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 □ 고령자 고용연장

##### ○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 산식:  $(55 \sim 64 \text{세 고용자 수}) \div (55 \sim 64 \text{세 인구 수}) \times 100$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 비율로서, 고령자 고용 지원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데, 2011년도 목표치는 2010년 실적 60.9대비 0.3%p 증가율을 반영한 것임.
- 2011년도의 목표치는 61.2%이었으나, 실제로 달성된 수치는 62.1%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101.5%로 나타남. (출처: 통계청(KOSIS))

####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 산식:  $(50 \text{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자}) \div (50 \text{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자 수}) \times 100$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종료 자 대비 취업률로 산정함. (출처: 워크넷)

- 2011년도의 목표치는 64.6%이었으나, 실제로 달성된 수치는 67.0%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103.7%로 나타남.

<표 3-4>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61.2	62.1	101.5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율(%)	64.6	67.0	103.7

#### 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국민연금가입율(%)

- 산식: 국민연금가입자수 ÷ (18~59세 인구) × 100
- 2011년도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5,911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18~59세 인구 수는 32,792,993명으로 집계됨.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국민연금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함. (출처: 국민연금통계연보(국민연금공단), 연령별 인구현황(18~59세 인구수)).
- 2011년도의 목표치는 60.8%이었으나, 실제로 달성된 수치는 60.6%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99.7%로 나타남.

##### □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 ○ 퇴직연금 가입률(%)

- 산식: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자) ÷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100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수와 전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도입현황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 2011년도의 목표치는 35.0%이었으나, 실제적으로 달성된 수치는 39.2%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112.0%로 나타남.

####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 45세 ~ 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 산식:  $\text{건강검진 수검자} \div \text{건강검진대상자} \times 100$
- 2011년도의 건강검진 수검자수는 6,179,484명이고, 건강검진대상자수는 8,627,880명으로 집계됨.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건강검진대상자는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건강검진수검자는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임.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년도의 목표치는 69.0%이었으나, 실제적으로 달성된 수치는 71.62%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103.8%로 나타남.

#### □ 노후설계 기반 조성

##### ○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 산식:  $50\text{대 이상 노후준비용답자} \div \text{조사대상자 중 } 50\text{대 이상 수} \times 100$
- 50대 이상 노후준비 응답자수는 50~59세는 83.1%, 60세 이상은 52.0%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67.5%의 달성률을 기록함(조사대상자 중 50대 이상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 제공은 없음).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통계청 ‘노후준비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자. (출처: 통계청 「2011년도 사회조사」)
- 2011년도의 목표치는 67.5%이었으나, 실제적으로 달성된 수치는 67.5%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100.0%로 나타남.

####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 노인일자리 창출수

- 산식:  $\text{노인일자리 창출 수}(\text{공공분야} + \text{민간분야})$
- 2011년도의 노인일자리 창출 수는 공공분야 194,480개, 민간분야 31,017개로 총



225,497개로 집계됨.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새누리시스템)
- 2011년도의 목표치는 20만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달성된 수치는 225,497개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112.7%로 나타남.

####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 공적소득보장률(%)

- 산식:  $(\text{기초노령연금} + \text{공적연금 수급자} - \text{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중복수급자}) \div 65 \text{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 2011년도의 기초노령연금자수는 3,796,465명, 공적연금 수급자수는 1,846,078명,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의 중복수급자수는 907,531명으로 집계됨.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5,656,000명으로 집계됨.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출처: 연금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참고자료(2012년 3월))
  - 기초노령연금: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 수준에게 국민연금 A값의 5% 연금액 지급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공적연금 동시 수급자 수
  - 65세 이상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1년도의 목표치는 82.7%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달성된 수치는 83.7%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101.2%로 나타남.

####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명)

- 산식: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치매 검진 인지조사(2단계) 예산투입으로 산정 (출처: 지자체 보고자료)
- 2011년도의 목표치는 4만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달성된 수치는 55,825명으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139.6%로 나타남.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산식: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3등급) ÷ 노인인구 × 100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수는 324,412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5,700,972명으로 집계됨.(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 노인수 : 노인장기요양인정자수, 65세 이상 통계추계 노인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월보)
- 2011년도의 목표치는 전체노인인구대비 5.8%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달성된 수치는 5.7%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98.3%로 나타남.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노인의 생활체육참여율(%)

- 산식: 생활체육참여 60세 이상 인구 ÷ 60세 이상 인구×100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노인의 생활체육참여율’의 근거자료인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 실태조사」 (체육과학연구원)
- 2011년도에는 근거자료인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2011년도의 목표대비 달성률은 산출 불가능하고, 2012년도에 평가가 가능함.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천명)

- 산식: 사회복지분야 65세 이상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 사회복지분야 65세 이상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15천명으로 집계됨.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  
(출처: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2011년도의 목표치는 전체노인인구대비 1%(55천명)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달성된 수치는 15천명으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의 달성률이 27.3%로 나타남.
- 한계: 65세 이상의 노인을 분모로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고령자의 여가문화향유기반 확대

○ 노인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산식: 노인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 65세 이상 노인 수 × 100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노인문화예술교육 경험율’의 근거자료인 「문화향수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1년도에는 근거자료인 문화향수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2011년도의 목표대비 달성률은 산출 불가능하고, 2012년도에 평가가 가능함.

<표 3-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가입율(%)	60.8	60.6	99.7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율(%)	35.0	39.2	112.0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세 ~ 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69.0	71.62	103.8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기반 조성	5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67.5	67.5	100.0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수	20만	225,497	112.7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82.7	83.7	101.2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명)	4만	55,825(신규)	139.6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5.8	5.7	98.3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51.8	근거자료 없음	미평가 대상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천명)	55	15	27.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율	7.0%	근거자료 없음	미평가 대상

다.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 총 임대주택 대비(%)

- 산식: 고령자용 임대주택사업승인실적 ÷ 장기공공(국민,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실적 × 100 (출처: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 수도권인 경우, 2011년도의 고령자용 임대주택사업승인실적은 798호, 장기공공(국민,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실적은 13,549호로 집계되었고, 지방의 경우는 각각 582호와 18,780호로 집계됨.
- 2011년도의 목표치는 수도권이 5%, 지방이 3%로 설정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각각 5.89%와 3.1%로 나타나, 목표치대비 달성률은 각각 117.8%와 103.3%로 나타남.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 노인교통사망률(노인인구 10만명당)

- 산식: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 65세 이상 노인 수 × 10만
- 2011년도의 사망자 수는 1,724명, 65세 이상 노인 수 는 5,700,972명(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으로 각각 집계됨.
- 2011년도의 목표치는 34.0명으로 설정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30.2명으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112.6%로 나타남.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 산식: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노인돌봄서비스에는 요양서비스의 필요 여부에 따라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로 구성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출처: 복지부 내부자료)
- 2011년도의 목표치는 170천명으로 설정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255,728명으로 나타나 목표치대비 달성률은 150.4%로 나타남.

□ 학대노인 보호강화

○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

- 산식: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 수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전국 16개 시도 위탁 국고보조금 운영비 지원기관 (출처: 복지부 공식인정기관으로 전국 16개 시도 위탁 국고보조금 운영비 지원기관)
- 2011년도의 목표치는 24개소로 설정되었으나, 실제적으로도 24개소로 나타나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100.0%로 나타남.

&lt;표 3-6&gt;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수도권) 5.0	(수도권) 5.89	(수도권) 117.8
			(지방) 3.0	(지방) 3.1	(지방) 10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노인교통사망률(명)	34	30.2	112.6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노인돌봄 서비스수혜자(만명)	17	25.5	150.4
	학대노인 보호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	24	24	100.0

### 3. 성장동력부문

#### 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 산식: 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근로자수 ÷ AA제도적용사업장 전체근로자수 × 100
-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2011년 목표치는 34.32%이었으나 실적치는 34.87%로 101.6%의 달성률을 보임.

#####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률(%)

- 산식: (취업자 수 / 구직등록인원) × 100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2011년도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결과, 2011년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광역포함) 실적현황

- 2011년 목표치는 53.3%이었으나, 실적치는 62.8%로 117.8%의 달성률을 보임.
- 전년도 구직등록 인원수는 185,940명이었으며, 취업자 수는 117,370명

□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 파악은 어려운 현실, E-1~E-7만 파악할 수 있음
- 2011년 목표치는 50,482명이었으나 실적치는 44,264명으로 87.7%의 달성률을 보임.
- 2011년 12월 기준 전문인력 수(합법체류자 기준)는 E-1(교수) 2,468명, E-2(회화지도) 22,435명, E-3(연구) 2,599명, E-4(기술지도) 199명, E-5(전문직업) 614명, E-6(예술 흥행) 2,800명, E-7(특정활동) 13,149명으로 총 44,264명임.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 산식: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재학생 수 × 100
- 개별수치 개념 및 기준: 재학생의 1.4이상이 진로·취업프로그램에 참여
- 2011년 목표치는 25%이었으나, 실적치는 27.7%로 110.8%의 달성률을 보임.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참여율(%)
- 산식: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참여자 ÷ 25~64세 성인 × 100
- 실제 조사된 표본수가 아닌 가중치 적용 후의 자료로 표본조사의 경우 실제 조사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된 값을 사용함.
- 2011년 목표치는 31.1%이었으나, 실적치는 32.4%로 104.2%의 달성률을 보임.
-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자: 1,191,267명
-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자: 8,510,549명
-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동시) 참여자: 547,076명

- 25~64세 성인: 28,285,287명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산업재해율(%)

- 산식: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요양승인을 받은 자와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를 합산), 근로자수(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 근로자수)

○ 2011년 목표치는 0.72%이었으나 실적치는 0.65%로 재해율이 감소되어 110.8%의 달성률을 보임

<표 3-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34.32	34.87	101.6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53.3	62.8	117.8
외국국적 동포· 외국 인력 활용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50,482	44,264	87.7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25	27.7	110.8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31.1	32.4	104.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0.72	0.65	110.8

## 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 금융 분야 제도개선

○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11년 말)

- 현재 유통 중인 국고채(3, 5, 10, 20년 만기)의 평균 잔존만기(만기까지 남은 기간)

○ 2011년 목표치는 5.20년이었으나, 실적치는 5.56년으로 106.9%의 달성률을 보임.

□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GDP는 국내총생산

○ 2011년 목표치는 35.1%이이었으나 실적치는 34.0%로 103.2%의 달성률을 보임.

<표 3-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5.20	5.56	106.9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5.1	34.0	103.2

#### 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품목 개수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품목(17개 품목)

\*구매제품: 1.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 보행기, 4.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6.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7.지팡이, 8.욕창예방방석, 9.자세변환용구

\*대여제품: 1.수동휠체어, 2.전동침대, 3.수동침대, 4.욕창예방메트리스, 5.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7.배회감지기(매트형), 8.경사로(휴대용)

○ 2011년 목표치는 19개 품목이었으나 실적치는 17개 품목으로 89.5%의 달성률을 보임.

□ 국내 수요기반 확충

○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 센터 수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설치 및 사업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수

○ 2011년 목표치는 2개 센터이었으나, 실적치는 3개 센터로 150%의 달성률을 보임.

-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3개 센터): 서울 은평 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아래울, 의왕시 노인복지관 아름채



&lt;표 3-9&gt; 고령친화산업 핵심과제별 목표달성률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개)	19	17	89.5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2	3	150.0

## 제2절 분야별 성과평가 및 가중치에 의한 평가

- 보건복지부에서는 핵심과제 평가에 있어 전체 부문별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소영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2011년 12월에 고시함.
- 전문가(83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3개 영역 각각을 10점 만점으로 하여 가중치를 설정함.
- 가중치 적용의 의미는, 각 부문별로 해당되는 사업의 중요도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부문별 총량적 평가를 하기 위함임.

###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부문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1개 부문의 목표달성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의 확대 및 개선 영역에서만 99.7%의 목표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반면에 가족친화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영역(201.5%)이나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영역(196.7%)에서는 상대적으로 200%에 가까운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특성상 본 사업이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낮을 가능성이 있음. 즉, 본 사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학대 피해아동보호율이 그리 높지 않아 전반적인 목표달성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학대피해아동이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학대

피해 이동이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

- 한편, 개별 핵심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저출산영역의 전체적인 목표의 달성수준을 가늠해 보면, 가중치의 합이 10.000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목표달성률의 가중치의 합을 구하면, 13.339로 나타나,  $33.4\%(=13.339/10.000 \times 100)$ 의 초과 달성수준을 보였음.

<표 3-10> 저출산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사업명	조정된 목표달성률 (A)	(가중치) (B)	가중치 적용값 {(A/100)*B}
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99.7	(1.147)	(1.143)
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96.7	(1.123)	(2.209)
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201.5	(1.098)	(2.212)
4.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108.8	(0.946)	(1.029)
5.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11.8	(0.950)	(1.062)
6.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15.1	(1.064)	(1.225)
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17.3	(1.142)	(1.339)
8.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141.4	(0.838)	(1.185)
9.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119.6	(0.811)	(0.944)
1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113.6	(0.881)	(1.001)
합계	-	(10.000)	(13.339)

주: 1) 조정된 목표달성률은 두 개 이상의 성과지표의 경우 산술평균을 제시함.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영역에 성과지표가 18개이나 가중치부분에서는 19개임. 여기에서는 가중치중 마지막 영역인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삭제하고 가중치 합이 10이 되도록 다시 만들어 사용하였음.

## 2. 고령화 분야

□ 고령화부문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한 부문의 목표달성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기회제공영역에서만 27.3%의 목표달성율

을 나타냈음.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가 상당히 저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저조한 데에는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의향을 보인 고령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선호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지표의 재검토가 요구됨.

- 그리고, 나머지의 영역에서는 100%(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영역)에서부터 125.2%(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영역)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개별 핵심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령화영역의 전체적인 목표의 달성수준을 가늠해 보면, 가중치의 합이 10.000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목표달성률의 가중치의 합을 구하면, 10.093로 나타나, 약 0.9%(=10.093/10.000 x 100)의 초과달성수준을 보였음.

<표 3-11> 고령화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사업명	조정된 목표달성률 (A)	(가중치) (B)	가중치 적용값 {(A/100)*B}
1. 다양한 고용기회제공	102.6	(1.116)	(1.145)
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105.9	(1.085)	(1.125)
3.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03.8	(0.988)	(1.026)
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	100.0	(0.901)	(0.901)
5.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112.7	(1.097)	(1.236)
6.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101.2	(1.103)	(1.116)
7.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지출 적정화	119.0	(1.098)	(1.307)
8.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제공	27.3	(0.930)	(0.254)
9.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환경 조성	111.2	(0.867)	(0.964)
10.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125.2	(0.814)	(1.019)
합계	-	(10.000)	(10.093)

### 3.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부문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2개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100%이상의 목표달성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다시 말하면, 목표달성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영역은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영역(87.7%)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영역(89.5%)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개별 핵심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장동력영역의 전체적인 목표의 달성수준을 가늠해 보면, 가중치의 합이 10.000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목표달성률의 가중치의 합을 구하면, 10.778로 나타나, 약 7.8%(=10.778/10.000 x 100)의 초과 달성수준을 보였음.

<표 3-12> 성장동력부문의 총량적 목표달성 수준

사업명	조정된 목표달성률 (A)	(가중치) (B)	가중치 적용값 {(A/100)*B}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109.7	(1.439)	(1.579)
2.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력 활용	87.7	(1.155)	(1.013)
3.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체계 확립	107.5	(1.326)	(1.425)
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방지	110.8	(1.196)	(1.325)
5.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106.9	(1.295)	(1.384)
6. 중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제도 개선	103.2	(1.307)	(1.349)
7. 제품 및 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89.5	(1.191)	(1.066)
8. 국내외 시장 활성화	150.0	(1.091)	(1.637)
합계	-	(10.000)	(10.778)

### 제3절 종합평가

- 저출산부문의 핵심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18개 지표 중에서 한 개의 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모든 지표에서 목표 달성률이 100%이상을 나타내어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여기에서 목표달성률이 100%에도 미치지 못한 지표는 육아휴직사용후 1년이상 고용 유지율인데, 이는 100%에 가까운 99.3%의 목표달성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에 있어서 분모가 산전후휴가자수라고 나와 있으나 모든 출산근로자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고령화부문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의 차이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
  - 총 17개의 핵심과제 중에서 목표대비달성률이 100%에 못 미치고 있는 과제는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00%이상의 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과제는 국민연금가입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노인자원봉사등록자수인데, 국민연금가입률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의 평가를 통한 핵심과제는 해당부처의 노력이 미흡했다기 보다는 국민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운영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의 달성률을 정확하게 이루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2010년 하반기이후 제도의 안정화추세로 신규 장기요양인정자수의 증가정체가 발생하였고, 노인인구가 점진적인 증가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수혜율의 수치가 미세하나마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노인자원봉사등록자수는 단순한 수치의 적용(전체노인인구의 1%)으로 인하여 달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성장동력부문의 핵심과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총 10개의 지표 중에서 목표대비 달성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과제는 2개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외국국적 동포활용 및 우수외국인력 유치와 고령친화제품의 우수제품 지정품목 개수인데, 각각 87.7%, 89.5%의 달성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은 부문은 주로 국가의 산업경제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호황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에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핵심과제사업을 기준으로 조정된 목표달성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즉, 100%에 못 미치는 사업은 저출산부문에 1개, 고령화부문에 1개, 성장동력부문에 2개로 성장동력부문이 저출산부문이나 고령화부문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런데, 110%이상의 성과를 보인 사업은 저출산부문이 8개로 고령화부문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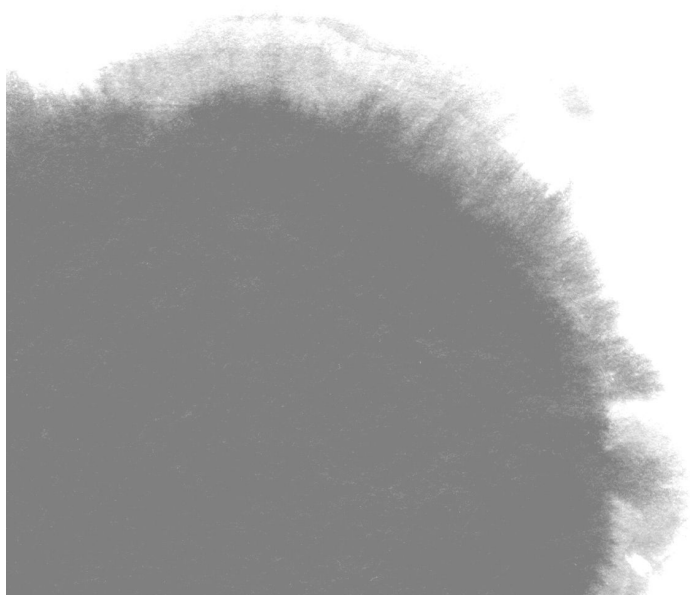
<표 3-13> 총 28개부문 핵심과제사업 기준의 목표달성률별 사업수 분포

사업명	99%이하	100~109%	110%이상	합계
1. 저출산부문	1	1	8	10
2. 고령화부문	1	5	4	10
3. 성장동력부문	2	4	2	8

□ 한편, 저출산영역, 고령화영역 및 성장동력영역의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토대로 총량적인 목표달성수준을 가늠해 보면, 저출산영역에서는 약 33%, 고령화영역에서는 0.9%, 성장동력영역에서는 7.8%의 초과달성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영역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4장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sup>9)</sup>

### 제1 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설문조사

#### 1. 전화설문조사 개요

##### 가. 전화설문조사 목적

- 1)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11년도 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측정하고,
  - 2)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전반적 필요를 파악하며,
  - 3) 향후 보다 올바른 정책평가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 정책 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효과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본 절에서는 그 방법의 하나로 국민들의 각 영역별 성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임.
- 여러 정책영역에서 이전에 있었던 성과인식에 관한 국민조사와 비교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성과가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성과가 향상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

9)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전문가 대상으로 2종류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임. 정량평가의 결과와 matching 되지 않을 수 있음.

역을 비교함으로써 차별적인 성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입안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본 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첫 번째 국민인식조사로서 그 의의가 있음.
- 현재 국민들의 영역별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책영역과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구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방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임.
- 각 하위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구별해내고 이러한 영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정책성과와 중요도에 대한 현재의 국민인식에 대한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축적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나. 전화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 개요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통계청, 2011)를 활용하여 16개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인구추계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규모에 따라 1,500명을 표본추출한 후 전화면접조사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전화조사를 위하여 활용한 표본의 추출방법 및 표본특성은 다음과 같음.

- 모집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 표본의 특성 및 크기: 확보된 예산과 조사일정, 신뢰수준을 감안하여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1,500명으로 결정.
-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적용.

&lt;표 4-1&gt;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성별 분포

(단위: 명)

특성 성별 지역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서울	3,645,736	3,737,479	7,383,215	159	163	322
부산	1,228,694	1,242,452	2,471,146	54	54	108
대구	851,958	847,978	1,699,936	37	37	74
인천	980,942	937,451	1,918,393	43	41	84
광주	493,371	494,724	988,095	22	21	43
대전	541,745	530,742	1,072,487	24	23	47
울산	408,405	374,313	782,718	16	18	34
경기도	4,291,068	4,109,731	8,400,799	187	179	366
강원도	498,192	463,800	961,992	22	20	42
충북	518,647	477,244	995,891	22	21	43
충남	695,774	618,829	1,314,603	30	27	57
전북	563,592	531,420	1,095,012	25	23	48
전남	560,729	514,901	1,075,630	24	23	47
경북	903,428	834,294	1,737,722	40	36	76
경남	1,114,282	1,034,519	2,148,801	48	45	93
제주도	185,848	175,209	361,057	8	8	16
계	17,482,411	16,925,086	34,407,497	761	739	1,500

○ 지역별·성별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는 <표 4-1> 에서와 같이 지역별·성별 인구추계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추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lt;표 4-2&gt;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연령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3,433,959	3,106,375	6,540,334	150	135	285
30대	4,085,691	3,836,634	7,922,325	179	167	346
40대	4,275,034	4,117,058	8,392,092	184	179	363
50대	3,689,331	3,692,489	7,381,820	159	163	322
60대	1,998,396	2,172,530	4,170,926	89	95	184
계	17,482,411	16,925,086	34,407,497	761	739	1,500

○ <표 4-2> 에서 연령대별·성별 모집단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인구가 50.8%, 여자인구는 49.2%의 비율로 구성되어있으며 남성 인구가 약 1.6% 정도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한편 60대 이후부터 남녀 모두 인구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화조사의 표본 인구 구성은 모집단의 성별·연령별 비율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추출되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음.

- 본 연구는 전화조사 면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표본은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전화조사원들에게 분배하는 표본 할당방법을 적용하였음.
- 전화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명전화번호부에서 계통추출방법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조사시간은 1가구당 1명의 응답자를 목표로 하여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와 오후 1시~밤 9시까지 주·야간 병행하였음.
- 숙련된 전화조사원들이 유효 표본 1,500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명전화번호부에서 채택한 가정집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조사대상자의 성·연령별 조건을 확인한 후 표본특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표본 특성에 일치하는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을 간략히 안내하고 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 진행 중에 응답자의 개인사정으로 중단하게 되면 응답이 가능한 시간에 약속을 정한 후 재접속을 시도하여 전화조사를 완료하였고, 이 밖에도 설문조사 중 강한 응답 거부나 중단과 같은 부정적 태도, 부재 중 이거나 통화 중인 경우, 결번, 직장전화번호, 팩스 등과 같은 부정확한 전화번호의 노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음.

□ 응답성공률 및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표본인구 분포에 대한 응답자 분포의 일치도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응답자는 30대의 경우 표본보다 1명 적게 응답한 반면 40대는 1명 증가하였으며, 여자응답자는 표본보다 50대에서 1명 감소한 반면 60대는 1명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30대 남성들이 직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연령대에 속하여 집전화로 접속하는 시간대에 이들과 통화하기 매우 어려워 4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응답받은 것으로 사료됨.
- 60대 여성 응답자가 50대 여성보다 1명 더 많이 응답받게 된 이유는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이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킨 후 취업하는 인구가 급증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lt;표 4-3&gt; 표본과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연령	표본			응답자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150	135	285	150	135	285
30대	179	167	346	178	167	345
40대	184	179	363	185	179	364
50대	159	163	322	159	162	321
60대	89	95	184	89	96	185
계	761	739	1,500	761	739	1,500

○ 본 전화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출한 유효표본 1,500명을 얻기 위하여 표본의 34.9배인 52,285명을 과표본(oversample)으로 사용하였음.

- 과표본 대상자 중에서 전화면접설문조사에 응했었던(중도 완전포기자 98명 포함) 참여자들은 12,352명(23.6%)이었고, 부재자 및 결번 등은 39,933명(76.4%)이었음.
- 전화면접설문조사에 참여했었던 통화지들 중에서 유효표본 1,500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응답성공률은 12.1%를 얻었으며, 총 응답자 중에서 전화면접설문에 응답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하였다가 재통화약속을 했던 45명에게 재접속한 결과 24명이 최종 협조함으로써 53.3%의 재응답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음.

○ 본 전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를 나타내고 있음.

□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음(부록 1 참조).

○ 기본적으로 성과수준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성과수준에 대해서는 중영역 차원에서 조사하였음.

- **저출산 분야**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고령화 분야**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성장동력 분야**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은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분야의 각 중영역 내의 하위

항목으로서의 소영역 수준에서 조사하였음.

#### - 저출산 분야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고령화 분야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 성장동력 분야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외국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특히 설문문항 질문 시 세부과제들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과제에 대한 응답자의 적절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 일반사항으로서, 거주지역(지역단위 포함), 성별,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 혼인상태, 고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미취학 아동수, 재학 아동수 등을 질문하였음.

## 다. 전화조사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 다음의 <표 4-4>는 앞에서 살펴본 성별·연령별·지역별 외에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사용할 다양한 변수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lt;표 4-4&gt;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구분	특성	사례수	비율	구분	특성	사례수	비율
전체		1,500	100.0	전체		1,500	100.0
성별	남성	761	50.7	혼인상태	기혼	1053	70.2
	여성	739	49.3		사별/이혼/별거	33	2.2
연령	20대	285	19.0		미혼	414	27.6
	30대	345	23.0	고등학생	있음	539	35.9
	40대	364	24.3	이하	없음	547	36.5
	50대	321	21.4	자녀 유무	비해당	414	27.6
	60대	185	12.3		0	345	23.0
학력	중학교이하	155	10.3	미취학	1	132	8.8
	고등학교	455	30.3	아동수	2이상	62	4.1
	대학교이상	890	59.3		비해당	961	64.1
종사상지위	자영업	341	22.7		0	121	8.1
	비정규직	408	27.2		1	179	11.9
	정규직	148	9.9	재학 아동수	2	206	13.7
	무급가족종사자	375	25.0		3이상	33	2.2
	무직/군인	228	15.2		비해당	961	64.1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37	22.5	지역	서울	322	21.5
	200-299만원	345	23.0		경인	450	30.0
	300-399만원	344	22.9		충청	147	9.8
	400-499만원	212	14.1		전라	138	9.2
	500-599만원	142	9.5		경상	385	25.7
	600만원이상	106	7.1		강원/제주	58	3.9
	무응답	14	0.9	시군구	시	449	29.9
					군	190	12.7
					구	861	57.4

- 이들 변수들은 이후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과 하위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설명변수들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분포(marginal distribution)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에 더하여 이러한 변수들의 분포는 본 연구에 사용된 응답자들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한계 및 성과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함.
-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는 앞서 조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생략함.

- 다만 향후 분석에서는 지역변수를 광역사·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표 4-5>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경인·충청·전라·경상·강원/제주권으로 구분할 것임. 이는 광역사·도별로 구분할 경우 각 변수 값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통계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학력별 분포를 보면 전문대학교를 포함하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59.3%로 나타났다.
- 설문지 상에는 초등학교 이하라는 개별적인 변수 값이 있었으나 그 사례가 적기 때문에 중학교 이하로 통합하였음.
-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가 22.7%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근로자가 37.1% (비정규직 27.2%와 정규직 9.9%)를 차지하고 있음.
- 무급가족종사자가 25.0%인 것으로 나타나 무급가족종사자가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무직과 군인이 15.2%를 차지하고 있음. 군인의 경우 설문지에서 기타 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분류로 편입시킨 것임.
- 가구소득별 분포를 보면 약 1%에 못 미치는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응답에 의한 분석상의 오류가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됨.
- 가구소득의 세부분포를 보면 월 소득 199만원이하의 계층이 22.5%를 보이고 있음. 200-299만원과 300-399만원의 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유사하게 약 30%임. 이후의 소득구간에서는 응답자 비율이 줄어들어 월 소득이 400-499만원과 500-599만원인 응답자는 각각 14.1%와 9.5%임. 600만원이상의 경우도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70.2%를, 사별/이혼/별거가 2.2%를, 그리고 미혼이 27.6%를 이루고 있음.
- 고등학생이하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35.9%이고 없는 경우는 36.5%였으며 나머지 27.6%는 비해당으로 나타났다. 앞서 혼인상태에서 미혼의 경우 비해당으로 처리되었음.
- 미취학 아동이 없는 경우는 23.0%, 1명과 2명이상이 있는 경우는 각각 8.8%와 4.1%로 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 없음과 비해당에 속하는 64.1%는 본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학 이동수별 분포를 보면, 없는 경우가 8.1%, 1명이 있는 경우가 11.9%, 2명이 있는 경우가 13.7%, 그리고 3명 이상의 경우가 2.2%임.
-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29.9%가 시에서, 12.7%가 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7.4%가 구에서 거주하고 있음.

## 2. 전화설문조사 분석결과

###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 성과평가 (표 4-5)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정책의 성과에 대한 질문응답을 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이고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에 이르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학력별로도 차이를 보여 교육이 높을수록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확률이 높음.
-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 우선 추진 사업 (표 4-6)

- 소분류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그리고 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순서대로 35.5%, 22.4%, 그리고 43.1%로 나타나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성의 경우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을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경향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임.
- 또한 비정규직과 미혼의 경우도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음.

&lt;표 4-5&gt;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19	220	466	654	141	1500	
	%	1.3	14.7	31.1	43.6	9.4		
성별	남성	0.9	14.1	32.9	41.5	10.6	761	7.5
	여성	1.6	15.3	29.2	45.7	8.1	739	
연령	20대	1.1	12.6	34.0	43.2	9.1	285	58.0***
	30대	0.9	9.6	31.6	44.3	13.6	345	
	40대	0.5	13.7	30.2	42.9	12.6	364	
	50대	1.6	16.8	30.5	46.1	5.0	321	
	60대	3.2	25.4	28.1	40.0	3.2	185	
학력	중학교이하	1.9	23.9	31.0	36.1	7.1	155	22.4**
	고등학교	1.8	16.9	28.6	43.5	9.2	455	
	대학교이상	0.9	11.9	32.4	44.9	9.9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8	16.1	26.4	46.6	9.1	341	15.0
	비정규직	0.5	12.5	34.3	42.4	10.3	408	
	정규직	1.4	12.8	31.1	43.2	11.5	148	
	무급가족	1.1	15.7	30.7	44.8	7.7	375	
	무직/군인	2.2	15.8	32.9	39.5	9.6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4	16.6	32.6	40.1	8.3	337	22.5
	200-299만원	0.6	15.9	33.0	40.6	9.9	345	
	300-399만원	0.9	12.8	32.0	43.6	10.8	344	
	400-499만원	1.9	12.3	31.6	46.7	7.5	212	
	500-599만원	0.7	13.4	22.5	54.2	9.2	142	
	600만원이상	0.9	16.0	27.4	43.4	12.3	106	
혼인상태	기혼	1.5	15.6	29.4	43.8	9.7	1053	10.4
	사별/이혼/별거	0.0	21.2	39.4	33.3	6.1	33	
	미혼	0.7	11.8	34.5	44.0	8.9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0.7	11.9	31.7	42.7	13.0	539	28.6***
자녀 유무	없음	2.2	19.6	27.8	44.2	6.2	547	
미취학 아동수	0	0.3	13.3	33.6	42.0	10.7	345	13.2
	1	2.3	8.3	28.0	45.5	15.9	132	
	2이상	0.0	11.3	29.0	40.3	19.4	62	
재학 아동수	0	0.8	9.9	28.1	44.6	16.5	121	10.7
	1	0.6	12.8	34.1	38.0	14.5	179	
	2	0.5	13.1	32.5	43.7	10.2	206	
	3이상	3.0	6.1	27.3	54.5	9.1	33	
지역	서울	1.6	14.6	28.3	46.9	8.7	322	15.4
	경인	1.1	16.2	30.7	42.7	9.3	450	
	충청	2.0	19.0	27.2	40.8	10.9	147	
	전라	0.7	13.0	31.2	46.4	8.7	138	
	경상	0.8	12.5	34.3	42.9	9.6	385	
	강원/제주	3.4	10.3	37.9	37.9	10.3	58	
시군구	시	0.9	14.3	28.7	44.1	12.0	449	13.1
	군	1.1	18.4	31.6	44.7	4.2	190	
	구	1.5	14.1	32.2	43.1	9.2	861	

&lt;표 4-6&gt;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우선 추진 사업

구분		육아휴가·휴직	유연근무	가족친화환경	N	$\chi^2$
전체	빈도수	518	336	646	1500	
	%	34.5	22.4	43.1		
성별	남성	30.6	21.8	47.6	761	14.4***
	여성	38.6	23.0	38.4	739	
연령	20대	43.9	22.5	33.7	285	49.1***
	30대	40.9	24.1	35.1	345	
	40대	28.3	25.3	46.4	364	
	50대	32.1	20.6	47.4	321	
	60대	24.9	16.8	58.4	185	
학력	중학교이하	31.0	15.5	53.5	155	11.9*
	고등학교	31.9	25.1	43.1	455	
	대학교이상	36.5	22.2	41.2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29.6	20.2	50.1	341	20.6**
	비정규직	40.4	23.3	36.3	408	
	정규직	27.0	26.4	46.6	148	
	무급가족	33.9	22.9	43.2	375	
	무직/군인	37.3	20.6	42.1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0.9	18.7	50.4	337	15.1
	200-299만원	39.4	24.1	36.5	345	
	300-399만원	34.0	23.8	42.2	344	
	400-499만원	33.5	24.1	42.5	212	
	500-599만원	35.2	22.5	42.3	142	
	600만원이상	32.1	21.7	46.2	106	
혼인상태	기혼	31.7	22.6	45.7	1053	32.9***
	사별/이혼/별거	15.2	12.1	72.7	33	
	미혼	43.2	22.7	34.1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33.0	24.5	42.5	539	7.2*
자녀 유무	없음	29.4	20.1	50.5	547	
미취학 아동수	0	28.7	25.5	45.8	345	10.3*
	1	43.9	22.0	34.1	132	
	2이상	33.9	24.2	41.9	62	
재학 아동수	0	39.7	20.7	39.7	121	7.1
	1	27.4	27.4	45.3	179	
	2	33.5	25.7	40.8	206	
	3이상	36.4	15.2	48.5	33	
지역	서울	32.3	26.4	41.3	322	12.5
	경인	33.1	23.6	43.3	450	
	충청	41.5	17.0	41.5	147	
	전라	35.5	16.7	47.8	138	
	경상	34.0	22.9	43.1	385	
	강원/제주	41.4	15.5	43.1	58	
시군구	시	32.3	21.6	46.1	449	3.5
	군	37.4	20.0	42.6	190	
	구	35.1	23.3	41.6	861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성과평가 (표 4-7)

- 결혼·출산·양육부담의 경감과 관련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보통이다”가 35.8%,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38.8%를 이루어 성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평가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미혼에서 부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추진 사업 (표 4-8)

- 소분류 영역 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꼽으라는 질문에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절반에 못 미치는 49.3%인 것으로 나타남. 26.1%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라고 응답하여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얻었음.
- 여성의 경우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함.
-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여 30대는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40대 이상에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음.
- 비정규직의 경우와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lt;표 4-7&gt; 결혼·출산·양육부담의 경감: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22	255	537	582	104	1500	
	%	1.5	17.0	35.8	38.8	6.9		
성별	남성	1.3	16.0	38.1	36.4	8.1	761	9
	여성	1.6	18.0	33.4	41.3	5.7	739	
연령	20대	0.7	11.6	39.3	42.1	6.3	285	94.4***
	30대	0.9	10.4	37.4	41.7	9.6	345	
	40대	0.5	13.2	40.4	39.0	6.9	364	
	50대	2.5	22.4	32.4	36.8	5.9	321	
	60대	3.8	35.7	24.3	31.4	4.9	185	
학력	중학교이하	3.2	28.4	25.2	38.1	5.2	155	44.5***
	고등학교	2.2	20.2	34.7	33.8	9.0	455	
	대학교이상	0.8	13.4	38.2	41.5	6.2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2.1	19.6	34.3	35.5	8.5	341	18.9
	비정규직	1.0	12.7	38.7	41.4	6.1	408	
	정규직	1.4	16.9	34.5	42.6	4.7	148	
	무급가족	1.9	20.3	32.8	38.4	6.7	375	
	무직/군인	0.9	15.4	38.6	37.3	7.9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1	21.7	31.2	38.0	7.1	337	22
	200-299만원	1.7	17.1	36.2	38.0	7.0	345	
	300-399만원	0.9	16.0	38.4	36.6	8.1	344	
	400-499만원	0.9	14.2	42.0	37.3	5.7	212	
	500-599만원	1.4	16.9	31.0	42.3	8.5	142	
	600만원이상	1.9	11.3	35.8	47.2	3.8	106	
혼인상태	기혼	1.9	19.2	34.8	37.4	6.7	1053	23.8**
	사별/이혼/별거	0.0	24.2	39.4	36.4	0.0	33	
	미혼	0.5	10.9	38.2	42.5	8.0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0.7	14.1	40.1	37.7	7.4	539	31.7***
자녀 유무	없음	2.9	24.5	29.8	37.1	5.7	547	
미취학 아동수	0	0.9	14.5	40.9	38.3	5.5	345	7.5
	1	0.0	13.6	38.6	37.9	9.8	132	
	2이상	1.6	12.9	38.7	33.9	12.9	62	
재학 아동수	0	0.8	10.7	41.3	36.4	10.7	121	6.9
	1	0.6	17.3	38.0	36.3	7.8	179	
	2	1.0	13.6	40.3	39.8	5.3	206	
	3이상	0.0	12.1	45.5	36.4	6.1	33	
지역	서울	1.6	16.8	36.6	37.6	7.5	322	30.3
	경인	0.7	17.8	35.1	39.8	6.7	450	
	충청	2.7	23.8	25.2	44.2	4.1	147	
	전라	2.2	14.5	38.4	38.4	6.5	138	
	경상	1.0	15.8	37.4	38.2	7.5	385	
	강원/제주	5.2	8.6	46.6	29.3	10.3	58	
시군구	시	1.8	16.5	35.9	37.6	8.2	449	12.3
	군	1.1	24.2	36.3	34.2	4.2	190	
	구	1.4	15.7	35.7	40.4	6.9	861	

&lt;표 4-8&gt; 결혼·출산·양육부담의 경감: 우선 추진 사업

구분		가족형성 여건조성	임산·출산 지원확대	자녀양육 비용 지원	육아지원 인프라	N	$\chi^2$
전체	빈도수	154	215	740	391	1500	
	%	10.3	14.3	49.3	26.1		
성별	남성	10.1	15.6	52.2	22.1	761	13.8**
	여성	10.4	13.0	46.4	30.2	739	
연령	20대	8.8	17.2	54.0	20.0	285	70.6***
	30대	9.0	10.7	60.6	19.7	345	
	40대	8.2	10.7	52.2	28.8	364	
	50대	14.3	16.2	34.3	35.2	321	
	60대	11.9	20.5	41.6	25.9	185	
학력	중학교이하	9.7	17.4	43.9	29.0	155	5.9
	고등학교	11.0	13.8	47.0	28.1	455	
	대학교이상	10.0	14.0	51.5	24.5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3.5	16.1	45.2	25.2	341	36.0***
	비정규직	7.4	14.5	57.6	20.6	408	
	정규직	13.5	15.5	48.0	23.0	148	
	무급가족	10.1	11.2	44.5	34.1	375	
	무직/군인	8.8	15.8	49.6	25.9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9.5	18.4	49.0	23.1	337	26.6*
	200-299만원	12.2	12.5	50.7	24.6	345	
	300-399만원	8.7	13.7	52.3	25.3	344	
	400-499만원	12.3	14.6	44.8	28.3	212	
	500-599만원	10.6	9.9	54.9	24.6	142	
	600만원이상	8.5	14.2	36.8	40.6	106	
혼인상태	기혼	9.7	13.5	48.8	28.0	1053	12.4
	사별·이혼·별거	15.2	9.1	42.4	33.3	33	
	미혼	11.4	16.9	51.2	20.5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5.8	9.6	60.7	23.9	539	68.1***
자녀 유무	없음	13.9	17.0	36.7	32.4	547	
미취학 아동수	0	7.5	9.3	57.1	26.1	345	13.1*
	1	3.0	12.9	63.6	20.5	132	
	2이상	1.6	4.8	74.2	19.4	62	
재학 아동수	0	3.3	9.1	69.4	18.2	121	16.1
	1	9.5	8.4	54.7	27.4	179	
	2	3.9	11.2	58.7	26.2	206	
	3이상	6.1	9.1	72.7	12.1	33	
지역	서울	14.6	15.8	40.4	29.2	322	34.0**
	경인	8.7	11.6	54.7	25.1	450	
	충청	8.2	21.8	45.6	24.5	147	
	전라	8.0	17.4	52.9	21.7	138	
	경상	11.2	13.0	49.9	26.0	385	
	강원/제주	3.4	10.3	55.2	31.0	58	
시군구	시	9.6	12.7	54.1	23.6	449	12.6*
	군	6.8	11.6	52.1	29.5	190	
	구	11.4	15.8	46.2	26.6	861	

##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 성과평가 (표 4-9)

-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45.7%,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2.7%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응답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왕따 현상과 청소년 성범죄 및 청소년 자살과 같은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성과평가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여 20대와 30-40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음.
- 가구소득별로도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구에서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서 이러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여짐.

### ○ 우선 추진 사업 (표 4-10)

- 소영역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4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른 세 소영역(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은 17-18%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 사업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았으며 낮은 소득에서 이 소영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음.

&lt;표 4-9&gt;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14	163	447	685	191	1500	
	%	0.9	10.9	29.8	45.7	12.7		
성별	남성	1.2	10.2	33.5	41.1	13.9	761	17.4**
	여성	0.7	11.5	26.0	50.3	11.5	739	
연령	20대	1.1	8.4	31.2	44.6	14.7	285	44.7***
	30대	0.9	5.5	31.6	46.7	15.4	345	
	40대	0.3	11.3	33.0	41.2	14.3	364	
	50대	1.2	14.0	25.9	49.2	9.7	321	
	60대	1.6	18.4	24.9	48.1	7.0	185	
학력	중학교이하	0.6	21.9	28.4	43.9	5.2	155	44.8***
	고등학교	1.5	13.6	25.7	45.1	14.1	455	
	대학교이상	0.7	7.5	32.1	46.3	13.4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0.9	12.0	28.7	43.1	15.2	341	24.6
	비정규직	1.5	9.6	33.8	42.9	12.3	408	
	정규직	0.7	12.2	29.7	48.0	9.5	148	
	무급가족	0.5	11.7	23.5	53.1	11.2	375	
	무직/군인	0.9	9.2	34.6	40.8	14.5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0.9	14.2	29.7	42.1	13.1	337	34.5*
	200-299만원	0.3	11.0	32.2	45.8	10.7	345	
	300-399만원	0.0	9.0	28.8	49.4	12.8	344	
	400-499만원	2.8	9.4	31.1	42.0	14.6	212	
	500-599만원	0.0	9.9	27.5	48.6	14.1	142	
	600만원이상	3.8	10.4	27.4	45.3	13.2	106	
혼인상태	기혼	0.9	12.3	28.0	47.5	11.4	1053	25.1**
	사별/이혼/별거	3.0	15.2	42.4	33.3	6.1	33	
	미혼	1.0	7.0	33.3	42.0	16.7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0.4	8.7	31.7	45.3	13.9	539	26.5***
자녀 유무	없음	1.5	15.9	25.2	48.8	8.6	547	
미취학 아동수	0	0.6	8.4	33.9	45.2	11.9	345	6.1
	1	0.0	8.3	28.0	45.5	18.2	132	
	2이상	0.0	11.3	27.4	45.2	16.1	62	
재학 아동수	0	0.0	7.4	24.8	49.6	18.2	121	13.6
	1	0.6	7.8	31.3	46.9	13.4	179	
	2	0.5	10.7	37.9	39.3	11.7	206	
	3이상	0.0	6.1	21.2	57.6	15.2	33	
지역	서울	0.6	8.4	34.5	43.2	13.4	322	38.6**
	경인	1.6	10.0	30.4	43.6	14.4	450	
	충청	0.0	19.0	30.6	40.1	10.2	147	
	전라	2.9	11.6	23.9	51.4	10.1	138	
	경상	0.0	10.6	26.2	50.6	12.5	385	
	강원/제주	1.7	10.3	34.5	43.1	10.3	58	
시군구	시	1.1	12.5	30.7	42.1	13.6	449	34.9***
	군	2.1	18.9	21.1	50.5	7.4	190	
	구	0.6	8.2	31.2	46.5	13.5	861	



&lt;표 4-10&gt;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우선 추진 사업

구분		취약계층 아동지원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보호구축	정책추진 기반 조성	N	$\chi^2$
전체	빈도수	262	281	690	267	1500	
	%	17.5	18.7	46.0	17.8		
성별	남성	18.1	20.5	41.3	20.1	761	15.1**
	여성	16.8	16.9	50.9	15.4	739	
연령	20대	18.6	22.1	45.6	13.7	285	20.4
	30대	15.9	18.8	48.1	17.1	345	
	40대	17.3	18.7	44.0	20.1	364	
	50대	19.3	20.6	41.4	18.7	321	
	60대	15.7	10.3	54.6	19.5	185	
학력	중학교이하	12.9	16.1	56.8	14.2	155	10.6
	고등학교	18.9	17.4	46.6	17.1	455	
	대학교이상	17.5	19.9	43.8	18.8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9.9	19.1	38.4	22.6	341	31.9**
	비정규직	14.2	19.1	48.8	17.9	408	
	정규직	17.6	20.9	42.6	18.9	148	
	무급가족	15.2	15.7	51.5	17.6	375	
	무직/군인	23.2	21.1	45.6	10.1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4.2	17.2	53.1	15.4	337	25.8*
	200-299만원	19.4	16.8	44.3	19.4	345	
	300-399만원	17.7	17.4	48.8	16.0	344	
	400-499만원	16.0	20.8	39.2	24.1	212	
	500-599만원	20.4	24.6	37.3	17.6	142	
	600만원이상	19.8	21.7	44.3	14.2	106	
혼인상태	기혼	16.9	17.7	46.6	18.8	1053	7.4
	사별/이혼/별거	24.2	12.1	45.5	18.2	33	
	미혼	18.4	22.0	44.4	15.2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14.8	19.1	47.5	18.6	539	5.1
자녀 유무	없음	19.4	15.9	45.7	19.0	547	
미취학 아동수	0	14.5	20.9	43.8	20.9	345	8.7
	1	16.7	17.4	53.0	12.9	132	
	2이상	12.9	12.9	56.5	17.7	62	
재학 아동수	0	14.0	12.4	56.2	17.4	121	14.4
	1	13.4	23.5	48.6	14.5	179	
	2	17.5	18.4	42.7	21.4	206	
	3이상	9.1	24.2	39.4	27.3	33	
지역	서울	19.3	21.7	42.5	16.5	322	20.6
	경인	15.1	20.4	46.7	17.8	450	
	충청	17.0	13.6	50.3	19.0	147	
	전라	25.4	13.0	43.5	18.1	138	
	경상	15.8	18.2	48.8	17.1	385	
	강원/제주	19.0	19.0	36.2	25.9	58	
시군구	시	16.3	18.9	45.2	19.6	449	3.5
	군	15.8	17.4	47.4	19.5	190	
	구	18.5	18.9	46.1	16.5	861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성과평가 (표 4-11)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관련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0.3%이고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6.8%인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이러한 태도는 여러 설명변수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할 확률이 높음.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시군구부분)에 거주할수록 부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았음.

○ 우선 추진 사업 (표 4-12)

- 소영역별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한 선택을 보면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을 꼽은 비율이 39.0%,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를 꼽은 비율이 26.7%인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응답은 연령별로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40대는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과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선택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60대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꼽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학력이 낮을수록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교 이상에서는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lt;표 4-11&gt;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24	185	455	702	134	1500	
	%	1.6	12.3	30.3	46.8	8.9		
성별	남성	1.6	10.4	32.9	44.3	10.9	761	16.8**
	여성	1.6	14.3	27.7	49.4	6.9	739	
연령	20대	0.7	11.9	33.7	45.6	8.1	285	85.2***
	30대	0.0	6.4	33.0	50.1	10.4	345	
	40대	1.4	10.4	32.4	43.7	12.1	364	
	50대	3.4	12.8	25.2	50.2	8.4	321	
	60대	3.2	27.0	24.9	42.7	2.2	185	
학력	중학교이하	1.3	25.2	31.6	39.4	2.6	155	55.0***
	고등학교	2.6	15.8	26.8	46.2	8.6	455	
	대학교이상	1.1	8.3	31.9	48.4	10.2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8	12.6	30.5	44.6	10.6	341	25.5
	비정규직	0.7	10.3	30.6	46.3	12.0	408	
	정규직	0.0	13.5	33.1	48.0	5.4	148	
	무급가족	3.2	13.3	27.7	48.3	7.5	375	
	무직/군인	1.3	13.2	32.0	47.8	5.7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8	16.6	33.8	40.1	7.7	337	26.5
	200-299만원	2.3	12.5	28.4	47.0	9.9	345	
	300-399만원	0.3	12.2	29.7	48.5	9.3	344	
	400-499만원	1.9	9.4	28.3	48.6	11.8	212	
	500-599만원	1.4	9.2	31.0	50.0	8.5	142	
	600만원이상	2.8	9.4	29.2	53.8	4.7	106	
혼인상태	기혼	1.8	13.2	28.6	47.1	9.3	1053	23.1**
	사별/이혼/별거	9.1	9.1	39.4	39.4	3.0	33	
	미혼	0.5	10.4	34.1	46.6	8.5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0.9	8.2	32.8	45.6	12.4	539	45.1***
자녀 유무	없음	3.1	17.9	25.0	48.1	5.9	547	
미취학 아동수	0	1.4	10.7	29.0	45.8	13.0	345	15.4
	1	0.0	3.8	38.6	46.2	11.4	132	
	2이상	0.0	3.2	41.9	43.5	11.3	62	
재학 아동수	0	0.0	3.3	38.8	45.5	12.4	121	15.5
	1	1.7	8.9	29.6	50.8	8.9	179	
	2	1.0	10.2	33.0	41.7	14.1	206	
	3이상	0.0	9.1	27.3	42.4	21.2	33	
지역	서울	0.9	13.4	31.4	45.7	8.7	322	29.3
	경인	1.8	10.0	24.7	52.0	11.6	450	
	충청	0.7	15.6	32.7	42.9	8.2	147	
	전라	2.9	11.6	23.9	51.4	10.1	138	
	경상	0.0	10.6	26.2	50.6	12.5	385	
	강원/제주	1.7	10.3	34.5	43.1	10.3	58	
시군구	시	1.1	12.5	30.7	42.1	13.6	449	34.9***
	군	2.1	18.9	21.1	50.5	7.4	190	
	구	0.6	8.2	31.2	46.5	13.5	861	

&lt;표 4-12&gt;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우선 추진 사업

구분		다양한 고용기회	노후소득보장	건강관리 시스템	노후생활 설계서비 스	N	$\chi^2$
전체	빈도수	585	335	180	400	1500	
	%	39.0	22.3	12.0	26.7		
성별	남성	39.0	23.9	12.0	25.1	761	3.2
	여성	39.0	20.7	12.0	28.3	739	
연령	20대	35.8	26.7	9.8	27.7	285	30.7**
	30대	37.4	21.2	10.7	30.7	345	
	40대	42.9	23.4	9.1	24.7	364	
	50대	39.9	19.9	13.1	27.1	321	
	60대	37.8	20.0	21.6	20.5	185	
학력	중학교이하	35.5	19.4	21.3	23.9	155	31.2***
	고등학교	35.8	20.9	15.8	27.5	455	
	대학교이상	41.2	23.6	8.4	26.7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39.3	18.5	12.9	29.3	341	18.5
	비정규직	38.7	27.2	9.8	24.3	408	
	정규직	39.2	28.4	12.2	20.3	148	
	무급가족	39.7	18.9	13.3	28.0	375	
	무직/군인	37.7	21.1	12.3	28.9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4.1	23.7	16.6	25.5	337	19.7
	200-299만원	36.5	23.8	13.0	26.7	345	
	300-399만원	41.9	20.9	10.5	26.7	344	
	400-499만원	40.6	19.8	10.4	29.2	212	
	500-599만원	47.9	21.8	7.0	23.2	142	
	600만원이상	39.6	22.6	10.4	27.4	106	
혼인상태	기혼	40.7	20.8	12.5	25.9	1053	18.1**
	사별/이혼/별거	21.2	27.3	27.3	24.2	33	
	미혼	36.0	25.8	9.4	28.7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40.6	20.8	11.1	27.5	539	3.9
자녀 유무	없음	39.7	21.2	14.8	24.3	547	
미취학 아동수	0	44.3	19.4	9.9	26.4	345	13.7*
	1	35.6	24.2	9.1	31.1	132	
	2이상	30.6	21.0	22.6	25.8	62	
재학 아동수	0	33.9	23.1	14.9	28.1	121	11.9
	1	41.9	19.6	9.5	29.1	179	
	2	43.7	22.8	9.7	23.8	206	
	3이상	39.4	6.1	15.2	39.4	33	
지역	서울	41.0	22.4	10.2	26.4	322	13.4
	경인	41.3	20.9	11.1	26.7	450	
	충청	35.4	21.1	10.9	32.7	147	
	전라	36.2	21.7	14.5	27.5	138	
	경상	39.0	24.2	13.5	23.4	385	
	강원/제주	25.9	25.9	15.5	32.8	58	
시군구	시	36.7	22.3	13.1	27.8	449	10.6
	군	34.2	21.6	17.4	26.8	190	
	구	41.2	22.5	10.2	26.0	861	

##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성과평가 (표 4-13)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3.7%이고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42.7%인 것으로 나타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그리고 40~50대의 경우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6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이었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음.
- 농촌에 비해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두드러짐.

### ○ 우선 추진 사업 (표 4-14)

-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소영역에 대한 응답은 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의 순서대로 38.5%, 20.1%, 22.1%, 19.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고연령층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
-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선호하였으나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중요시함.

&lt;표 4-13&gt;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20	243	506	641	90	1500	
	%	1.3	16.2	33.7	42.7	6.0		
성별	남성	1.1	13.3	35.2	43.0	7.5	761	15.8**
	여성	1.6	19.2	32.2	42.5	4.5	739	
연령	20대	0.7	15.1	39.6	40.7	3.9	285	64.9***
	30대	0.3	8.7	39.4	43.8	7.8	345	
	40대	1.9	15.1	31.9	44.8	6.3	364	
	50대	1.2	18.7	29.3	45.5	5.3	321	
	60대	3.2	29.7	25.4	35.1	6.5	185	
학력	중학교이하	1.9	29.0	27.7	36.1	5.2	155	39.0***
	고등학교	1.5	20.2	33.8	39.1	5.3	455	
	대학교이상	1.1	11.9	34.7	45.7	6.5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2	13.2	31.7	46.0	7.9	341	34.3**
	비정규직	0.5	14.5	35.5	43.1	6.4	408	
	정규직	0.7	20.3	34.5	37.8	6.8	148	
	무급가족	2.4	22.1	29.3	41.9	4.3	375	
	무직/군인	1.8	11.4	40.4	41.7	4.8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1	21.1	31.8	39.2	5.9	337	28.5
	200-299만원	0.6	13.9	38.0	42.0	5.5	345	
	300-399만원	1.2	12.5	36.0	43.3	7.0	344	
	400-499만원	0.9	17.9	28.8	46.7	5.7	212	
	500-599만원	0.7	16.2	34.5	40.8	7.7	142	
	600만원이상	3.8	16.0	27.4	49.1	3.8	106	
혼인상태	기혼	1.3	17.3	31.1	43.8	6.5	1053	21.4**
	사별/이혼/별거	6.1	24.2	30.3	36.4	3.0	33	
	미혼	1.0	12.8	40.6	40.6	5.1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0.7	13.4	34.7	43.6	7.6	539	21.4***
자녀 유무	없음	2.2	21.6	27.6	43.5	5.1	547	
미취학 아동수	0	0.9	15.7	31.6	44.6	7.2	345	9
	1	0.8	9.1	39.4	43.9	6.8	132	
	2이상	0.0	9.7	41.9	37.1	11.3	62	
재학 아동수	0	0.0	7.4	38.8	46.3	7.4	121	23.1*
	1	0.0	16.8	34.1	39.7	9.5	179	
	2	1.9	14.6	34.5	44.7	4.4	206	
	3이상	0.0	9.1	24.2	48.5	18.2	33	
지역	서울	1.2	16.1	31.7	44.7	6.2	322	28.3
	경인	0.7	15.3	32.9	44.4	6.7	450	
	충청	0.7	21.8	40.1	33.3	4.1	147	
	전라	3.6	15.9	29.7	44.9	5.8	138	
	경상	1.3	14.8	35.1	43.9	4.9	385	
	강원/제주	3.4	19.0	36.2	29.3	12.1	58	
시군구	시	1.3	15.8	35.0	41.2	6.7	449	20.3**
	군	3.7	23.2	28.4	40.5	4.2	190	
	구	0.8	14.9	34.3	44.0	6.0	861	

&lt;표 4-14&gt;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우선 추진 사업

구분		노인 일자리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사회참여 와 여가문화	N	$\chi^2$
전체	빈도수	578	302	331	289	1500	
	%	38.5	20.1	22.1	19.3		
성별	남성	36.7	19.7	22.1	21.6	761	5.7
	여성	40.5	20.6	22.1	16.9	739	
연령	20대	31.2	23.5	20.4	24.9	285	27.8**
	30대	40.3	21.4	20.9	17.4	345	
	40대	37.9	22.3	19.8	20.1	364	
	50대	43.0	15.9	23.1	18.1	321	
	60대	40.0	15.7	29.7	14.6	185	
학력	중학교이하	39.4	19.4	31.0	10.3	155	26.2***
	고등학교	36.9	16.5	25.9	20.7	455	
	대학교이상	39.2	22.1	18.5	20.1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41.1	16.4	22.9	19.6	341	14.5
	비정규직	36.8	24.0	20.8	18.4	408	
	정규직	41.2	18.9	19.6	20.3	148	
	무급가족	40.3	19.5	23.7	16.5	375	
	무직/군인	33.3	20.6	21.9	24.1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6.5	18.4	27.6	17.5	337	26.7*
	200-299만원	38.3	20.9	23.5	17.4	345	
	300-399만원	43.6	20.6	19.8	16.0	344	
	400-499만원	36.3	17.5	20.3	25.9	212	
	500-599만원	38.7	21.1	16.2	23.9	142	
	600만원이상	35.8	26.4	16.0	21.7	106	
혼인상태	기혼	40.8	18.4	22.5	18.2	1053	15.7*
	사별이혼별거	30.3	21.2	33.3	15.2	33	
	미혼	33.3	24.4	20.0	22.2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39.1	22.1	21.7	17.1	539	9.1*
자녀 유무	없음	41.9	15.0	23.9	19.2	547	
미취학 아동수	0	39.1	23.5	20.3	17.1	345	6.7
	1	41.7	17.4	21.2	19.7	132	
	2이상	33.9	24.2	30.6	11.3	62	
재학 아동수	0	41.3	22.3	20.7	15.7	121	6
	1	38.5	19.0	25.7	16.8	179	
	2	38.8	22.8	19.4	18.9	206	
	3이상	36.4	33.3	18.2	12.1	33	
지역	서울	41.6	21.4	19.9	17.1	322	12.9
	경인	38.0	19.3	22.9	19.8	450	
	충청	37.4	20.4	19.7	22.4	147	
	전라	37.7	18.1	26.1	18.1	138	
	경상	39.5	20.8	20.8	19.0	385	
	강원/제주	24.1	19.0	32.8	24.1	58	
시군구	시	35.2	18.5	24.9	21.4	449	13.8*
	군	33.7	18.9	26.8	20.5	190	
	구	41.3	21.3	19.5	17.9	861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성과평가 (표 4-15)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보통이다”가 34.9%를 이루고 있고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41.5%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40대나 50대에 비해 60대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시군구별 차이를 보면 군에 비해 시나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우선 추진 사업 (표 4-16)

-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을 고른 응답자가 43.9%였고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56.1%였음.
-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에서는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음.



&lt;표 4-15&gt;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25	221	524	623	107	1500	
	%	1.7	14.7	34.9	41.5	7.1		
성별	남성	1.6	12.6	36.9	40.6	8.3	761	9.7*
	여성	1.8	16.9	32.9	42.5	6.0	739	
연령	20대	1.1	11.9	48.8	33.0	5.3	285	97.5***
	30대	0.9	9.3	37.7	42.9	9.3	345	
	40대	0.5	12.9	32.1	45.6	8.8	364	
	50대	2.2	17.4	28.3	46.7	5.3	321	
	60대	5.4	28.1	25.4	35.1	5.9	185	
학력	중학교이하	3.2	29.7	23.9	37.4	5.8	155	43.5***
	고등학교	1.8	16.5	33.6	40.7	7.5	455	
	대학교이상	1.3	11.2	37.5	42.7	7.2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5	12.6	33.1	43.7	9.1	341	20.4
	비정규직	1.0	13.5	36.3	42.4	6.9	408	
	정규직	0.7	16.9	35.1	40.5	6.8	148	
	무급가족	2.9	17.9	31.2	42.4	5.6	375	
	무직/군인	1.8	13.6	41.2	36.0	7.5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8	17.2	38.0	35.3	7.7	337	28.2
	200-299만원	2.0	12.8	36.5	40.3	8.4	345	
	300-399만원	1.2	14.8	36.6	40.1	7.3	344	
	400-499만원	0.5	16.5	30.2	47.6	5.2	212	
	500-599만원	2.1	10.6	31.0	47.9	8.5	142	
	600만원이상	3.8	14.2	29.2	50.0	2.8	106	
혼인상태	기혼	1.7	16.1	31.4	43.4	7.3	1053	29.1***
	사별/이혼/별거	6.1	9.1	27.3	51.5	6.1	33	
	미혼	1.2	11.6	44.4	36.0	6.8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0.6	10.8	35.4	44.7	8.5	539	36.0***
자녀 유무	없음	3.1	21.0	27.2	42.6	6.0	547	
미취학 아동수	0	0.6	11.6	32.5	46.7	8.7	345	8.3
	1	0.0	7.6	40.2	44.7	7.6	132	
	2이상	1.6	12.9	41.9	33.9	9.7	62	
재학 아동수	0	0.0	8.3	43.0	39.7	9.1	121	17.6
	1	1.1	15.1	31.3	44.7	7.8	179	
	2	0.0	8.7	36.4	45.6	9.2	206	
	3이상	3.0	9.1	24.2	57.6	6.1	33	
지역	서울	1.9	15.5	32.3	41.9	8.4	322	32.1*
	경인	1.3	11.3	34.7	45.6	7.1	450	
	충청	0.0	22.4	40.1	34.0	3.4	147	
	전라	2.2	12.3	34.1	41.3	10.1	138	
	경상	1.8	15.8	35.3	41.0	6.0	385	
	강원/제주	5.2	15.5	37.9	31.0	10.3	58	
시군구	시	1.6	11.6	35.9	42.8	8.2	449	21.2**
	군	1.1	23.2	38.9	31.6	5.3	190	
	구	1.9	14.5	33.6	43.1	7.0	861	

&lt;표 4-16&gt;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우선 추진 사업

구분		주거와 교통 환경	권익 및 노인공경 기반	N	$\chi^2$
전체	빈도수	658	842	1500	
	%	43.9	56.1		
성별	남성	41.4	58.6	761	3.8
	여성	46.4	53.6	739	
연령	20대	46.3	53.7	285	10.8*
	30대	41.4	58.6	345	
	40대	49.5	50.5	364	
	50대	42.4	57.6	321	
	60대	36.2	63.8	185	
학력	중학교이하	35.5	64.5	155	8.4*
	고등학교	41.3	58.7	455	
	대학교이상	46.6	53.4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43.1	56.9	341	1.9
	비정규직	45.6	54.4	408	
	정규직	39.9	60.1	148	
	무급가족	45.1	54.9	375	
	무직/군인	42.5	57.5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8.9	61.1	337	5.8
	200-299만원	43.8	56.2	345	
	300-399만원	44.8	55.2	344	
	400-499만원	47.2	52.8	212	
	500-599만원	45.8	54.2	142	
	600만원이상	49.1	50.9	106	
혼인상태	기혼	43.5	56.5	1053	0.6
	사별/이혼/별거	39.4	60.6	33	
	미혼	45.2	54.8	414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있음	44.9	55.1	539	1
	없음	41.9	58.1	547	
미취학 아동수	0	45.2	54.8	345	2
	1	47.7	52.3	132	
	2이상	37.1	62.9	62	
재학 아동수	0	42.1	57.9	121	1.9
	1	48.6	51.4	179	
	2	42.7	57.3	206	
	3이상	48.5	51.5	33	
지역	서울	48.1	51.9	322	10.7
	경인	46.2	53.8	450	
	충청	36.7	63.3	147	
	전라	37.7	62.3	138	
	경상	43.9	56.1	385	
	강원/제주	34.5	65.5	58	
시군구	시	41.6	58.4	449	2.6
	군	41.1	58.9	190	
	구	45.6	54.4	861	

##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 성과평가 (표 4-17)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0%에 이르고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인 것으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는 빈도가 상대적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빈도가 높았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통이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 우선 추진 사업 (표 4-18)

- 우선 추진 소영역을 묻는 질문에 54.3%가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을 들고 있으며 24.3%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지목하였음. 15.9%와 5.6%가 각각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와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을 선택하였음.
- 남성의 경우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함.
- 미혼의 경우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을 상대적으로 우선시 하였으며 기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함.

&lt;표 4-17&gt;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22	285	585	520	88	1500	
	%	1.5	19.0	39.0	34.7	5.9		
성별	남성	1.4	17.9	41.4	32.1	7.2	761	11.2*
	여성	1.5	20.2	36.5	37.3	4.5	739	
연령	20대	1.4	16.1	43.9	31.9	6.7	285	35.1**
	30대	0.9	15.1	44.6	33.0	6.4	345	
	40대	2.2	16.8	40.4	34.1	6.6	364	
	50대	1.2	24.9	32.4	36.1	5.3	321	
	60대	1.6	24.9	29.7	40.5	3.2	185	
학력	중학교이하	1.9	28.4	29.0	38.1	2.6	155	29.0***
	고등학교	1.1	22.6	35.6	33.8	6.8	455	
	대학교이상	1.6	15.5	42.5	34.5	6.0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5	18.2	38.4	34.6	7.3	341	12
	비정규직	1.7	18.4	41.2	32.6	6.1	408	
	정규직	0.7	23.6	35.8	36.5	3.4	148	
	무급가족	1.6	20.0	36.0	37.6	4.8	375	
	무직/군인	1.3	16.7	43.0	32.5	6.6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0.9	18.7	39.8	35.0	5.6	337	10.2
	200-299만원	0.9	19.1	38.6	35.9	5.5	345	
	300-399만원	2.3	19.8	39.8	32.0	6.1	344	
	400-499만원	0.9	18.9	42.5	31.6	6.1	212	
	500-599만원	2.1	18.3	35.9	38.0	5.6	142	
	600만원이상	2.8	17.9	34.0	38.7	6.6	106	
혼인상태	기혼	1.7	20.3	36.9	35.9	5.1	1053	19.0*
	사별/이혼/별거	0.0	15.2	57.6	27.3	0.0	33	
	미혼	1.0	15.9	42.8	32.1	8.2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1.7	16.0	43.6	33.2	5.6	539	22.3***
자녀 유무	없음	1.6	24.3	31.6	38.0	4.4	547	
미취학 아동수	0	1.7	19.1	39.7	33.3	6.1	345	12.6
	1	1.5	9.8	47.7	34.8	6.1	132	
	2이상	1.6	11.3	56.5	29.0	1.6	62	
재학 아동수	0	0.0	9.9	52.9	35.5	1.7	121	21.7*
	1	3.4	17.9	36.9	34.6	7.3	179	
	2	1.0	18.0	44.7	31.1	5.3	206	
	3이상	3.0	15.2	39.4	30.3	12.1	33	
지역	서울	2.2	22.4	32.0	38.2	5.3	322	46.5***
	경인	0.9	16.9	41.1	35.3	5.8	450	
	충청	0.0	29.9	30.6	36.7	2.7	147	
	전라	3.6	12.3	42.8	31.9	9.4	138	
	경상	1.6	16.4	43.9	32.2	6.0	385	
	강원/제주	0.0	22.4	41.4	27.6	8.6	58	
시군구	시	0.7	18.9	43.7	29.4	7.3	449	26.4***
	군	3.2	25.3	28.4	36.8	6.3	190	
	구	1.5	17.7	38.9	36.9	5.0	861	

&lt;표 4-18&gt;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우선 추진 사업

구분		여성의 경제활동	외국동포 및 외국인 활용	직업능력 개발시스템	노동력 손실 방지	N	$\chi^2$
전체	빈도수	364	84	814	238	1500	
	%	24.3	5.6	54.3	15.9		
성별	남성	18.9	6.4	56.9	17.7	761	25.5***
	여성	29.8	4.7	51.6	13.9	739	
연령	20대	18.2	3.5	57.9	20.4	285	22.6*
	30대	28.1	5.8	51.0	15.1	345	
	40대	24.7	6.0	56.0	13.2	364	
	50대	24.0	5.0	56.7	14.3	321	
	60대	25.9	8.6	47.0	18.4	185	
학력	중학교이하	25.8	9.7	47.1	17.4	155	9.6
	고등학교	25.9	5.7	52.3	16.0	455	
	대학교이상	23.1	4.8	56.5	15.5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24.6	7.0	51.3	17.0	341	27.6**
	비정규직	26.0	4.7	54.4	15.0	408	
	정규직	24.3	8.1	52.0	15.5	148	
	무급가족	28.3	5.3	53.9	12.5	375	
	무직/군인	14.0	3.9	60.5	21.5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1.7	5.3	57.0	16.0	337	10
	200-299만원	22.9	5.2	53.9	18.0	345	
	300-399만원	25.3	6.1	53.5	15.1	344	
	400-499만원	24.1	6.6	56.6	12.7	212	
	500-599만원	26.1	4.9	52.8	16.2	142	
	600만원이상	33.0	5.7	47.2	14.2	106	
혼인상태	기혼	25.6	6.2	53.6	14.6	1053	22.6***
	사별/이혼/별거	27.3	15.2	30.3	27.3	33	
	미혼	20.5	3.4	58.0	18.1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25.8	6.9	53.1	14.3	539	0.7
자녀 유무	없음	25.6	6.0	52.7	15.7	547	
미취학 아동수	0	26.1	7.0	54.2	12.8	345	3.8
	1	24.2	5.3	53.8	16.7	132	
	2이상	27.4	9.7	45.2	17.7	62	
재학 아동수	0	25.6	8.3	44.6	21.5	121	10.5
	1	26.8	5.6	53.1	14.5	179	
	2	24.8	7.3	57.8	10.2	206	
	3이상	27.3	6.1	54.5	12.1	33	
지역	서울	24.2	7.1	54.7	14.0	322	24.5
	경인	24.7	6.0	55.6	13.8	450	
	충청	30.6	4.8	53.7	10.9	147	
	전라	19.6	2.9	58.7	18.8	138	
	경상	21.8	4.7	52.7	20.8	385	
	강원/제주	32.8	8.6	43.1	15.5	58	
시군구	시	22.0	6.5	56.1	15.4	449	5.5
	군	27.4	3.2	55.3	14.2	190	
	구	24.7	5.7	53.1	16.5	861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성과평가 (표 4-19)

- 35.7%의 응답자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정책의 성과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45.4%의 응답자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림.
-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중학교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음.
- 혼인상태로 보면 기혼의 경우가 미혼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우선 추진 사업 (표 4-20)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영역을 묻는 문항에 40%가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를 꼽았으며 35.1%가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24.9%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들었음.
-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를 우선하였으며 낮은 연령일수록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을 꼽는 경향이 보임.

&lt;표 4-19&gt;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17	134	535	681	133	1500	
	%	1.1	8.9	35.7	45.4	8.9		
성별	남성	1.8	7.8	39.3	41.3	9.9	761	22.4***
	여성	0.4	10.1	31.9	49.7	7.8	739	
연령	20대	0.7	6.7	42.8	42.5	7.4	285	39.5***
	30대	1.2	6.7	36.2	45.5	10.4	345	
	40대	0.8	7.4	37.6	42.6	11.5	364	
	50대	0.9	12.5	32.4	47.7	6.5	321	
	60대	2.7	13.5	25.4	51.4	7.0	185	
학력	중학교이하	1.9	14.8	30.3	45.8	7.1	155	27.4***
	고등학교	0.7	12.5	36.3	43.1	7.5	455	
	대학교이상	1.2	6.1	36.3	46.5	9.9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8	9.1	32.6	46.0	10.6	341	21.2
	비정규직	0.7	7.6	38.5	43.6	9.6	408	
	정규직	0.7	10.8	37.8	46.6	4.1	148	
	무급가족	0.8	10.7	30.9	49.1	8.5	375	
	무직/군인	1.8	7.0	41.7	40.8	8.8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1	11.9	31.5	44.2	10.4	337	23.9
	200-299만원	1.2	8.7	39.4	41.7	9.0	345	
	300-399만원	1.2	5.8	38.7	46.8	7.6	344	
	400-499만원	0.0	9.9	33.0	48.6	8.5	212	
	500-599만원	0.7	7.0	38.7	45.1	8.5	142	
	600만원이상	0.9	9.4	28.3	51.9	9.4	106	
혼인상태	기혼	1.2	10.1	32.3	47.6	8.8	1053	22.7**
	사별/이혼/별거	3.0	3.0	45.5	42.4	6.1	33	
	미혼	0.7	6.5	43.5	40.1	9.2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1.1	8.0	36.2	44.2	10.6	539	14.6**
자녀 유무	없음	1.5	11.7	29.3	50.6	6.9	547	
미취학 아동수	0	0.9	9.3	34.5	45.5	9.9	345	9.1
	1	2.3	5.3	37.9	40.2	14.4	132	
	2이상	0.0	6.5	41.9	45.2	6.5	62	
재학 아동수	0	0.8	7.4	38.8	38.8	14.0	121	14.9
	1	2.8	10.1	33.0	45.8	8.4	179	
	2	0.0	6.3	38.8	44.2	10.7	206	
	3이상	0.0	9.1	27.3	54.5	9.1	33	
지역	서울	0.9	9.6	31.1	50.6	7.8	322	22.3
	경인	0.7	7.8	36.4	45.6	9.6	450	
	충청	0.0	10.2	39.5	42.9	7.5	147	
	전라	1.4	6.5	32.6	45.7	13.8	138	
	경상	2.1	9.9	37.7	43.1	7.3	385	
	강원/제주	1.7	10.3	39.7	36.2	12.1	58	
시군구	시	0.9	7.3	36.7	44.3	10.7	449	9.4
	군	1.6	13.2	33.7	45.3	6.3	190	
	구	1.2	8.8	35.5	46.0	8.5	861	

&lt;표 4-20&gt;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우선 추진 사업

구분		교육분야 제도개선	주택 및 금융분야	국가재정 건정성 확보	N	$\chi^2$
전체	빈도수	373	527	600	1500	
	%	24.9	35.1	40.0		
성별	남성	24.6	33.5	41.9	761	2.6
	여성	25.2	36.8	38.0	739	
연령	20대	23.5	40.4	36.1	285	16.2*
	30대	24.1	39.1	36.8	345	
	40대	27.5	33.5	39.0	364	
	50대	26.5	30.5	43.0	321	
	60대	20.5	30.8	48.6	185	
학력	중학교이하	27.7	31.0	41.3	155	1.8
	고등학교	24.0	35.2	40.9	455	
	대학교이상	24.8	35.8	39.3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26.7	33.4	39.9	341	3.7
	비정규직	24.8	35.0	40.2	408	
	정규직	24.3	39.9	35.8	148	
	무급가족	25.1	33.6	41.3	375	
	무직/군인	22.4	37.3	40.4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2.6	31.8	45.7	337	21.3*
	200-299만원	22.0	39.4	38.6	345	
	300-399만원	27.6	35.5	36.9	344	
	400-499만원	26.9	35.4	37.7	212	
	500-599만원	32.4	35.9	31.7	142	
	600만원이상	18.9	30.2	50.9	106	
혼인상태	기혼	25.2	33.7	41.1	1053	8.9
	사별/이혼/별거	24.2	21.2	54.5	33	
	미혼	24.2	39.9	36.0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26.9	34.3	38.8	539	3.6
자녀 유무	없음	23.4	32.4	44.2	547	
미취학 아동수	0	25.8	34.2	40.0	345	9
	1	22.7	36.4	40.9	132	
	2이상	41.9	30.6	27.4	62	
재학 아동수	0	28.1	38.0	33.9	121	10.3
	1	31.8	30.7	37.4	179	
	2	20.4	35.4	44.2	206	
	3이상	36.4	33.3	30.3	33	
지역	서울	25.2	37.9	37.0	322	10.4
	경인	22.4	35.3	42.2	450	
	충청	21.8	35.4	42.9	147	
	전라	23.9	36.2	39.9	138	
	경상	29.6	32.7	37.7	385	
	강원/제주	20.7	31.0	48.3	58	
시군구	시	22.9	34.3	42.8	449	3
	군	27.9	33.7	38.4	190	
	구	25.2	35.9	38.9	861	



## □ 고령친화산업 육성

### ○ 성과평가 (표 4-21)

-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37.5%가 “보통이다”는 응답을 하였고 39.7%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을 하였음.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거나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통이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반면 양쪽의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거나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음.
-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의 응답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 우선 추진 사업 (표 4-22)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35.4%가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꼽았으며 33.9%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선택하였고 나머지 30.7%가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들었음.
-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선호하는 편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선호하였음.
- 학력별로도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 바, 고학력일수록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선택하였으나 저학력일수록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우선시하였음.
- 기혼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중요시하였으나 미혼의 경우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중요시하였음.
-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선호하였으나 없는 경우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

&lt;표 4-21&gt; 고령친화산업 육성: 성과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이다	별로	전혀	N	$\chi^2$
전체	빈도수	28	190	563	595	124	1500	
	%	1.9	12.7	37.5	39.7	8.3		
성별	남성	2.1	10.8	40.7	36.5	9.9	761	17.6**
	여성	1.6	14.6	34.2	42.9	6.6	739	
연령	20대	1.8	10.5	45.3	37.5	4.9	285	55.3***
	30대	0.6	8.7	43.5	38.0	9.3	345	
	40대	2.5	9.9	35.2	41.2	11.3	364	
	50대	1.6	17.4	32.7	40.5	7.8	321	
	60대	3.8	20.5	27.6	41.6	6.5	185	
학력	중학교이하	1.9	20.6	29.7	43.2	4.5	155	29.0***
	고등학교	2.2	16.3	35.6	38.2	7.7	455	
	대학교이상	1.7	9.4	39.9	39.8	9.2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1.2	12.9	34.3	39.6	12.0	341	43.5***
	비정규직	1.7	9.6	42.4	38.2	8.1	408	
	정규직	2.7	7.4	41.2	40.5	8.1	148	
	무급가족	1.9	18.1	29.9	44.5	5.6	375	
	무직/군인	2.6	12.3	43.9	33.8	7.5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6	13.9	37.7	35.6	9.2	337	24
	200-299만원	1.2	11.6	39.1	40.6	7.5	345	
	300-399만원	0.9	14.0	34.6	41.6	9.0	344	
	400-499만원	0.9	12.7	37.3	41.0	8.0	212	
	500-599만원	0.7	8.5	42.3	40.1	8.5	142	
	600만원이상	4.7	14.2	34.9	40.6	5.7	106	
혼인상태	기혼	1.7	13.5	34.4	41.9	8.5	1053	23.1**
	사별/이혼/별거	6.1	18.2	30.3	39.4	6.1	33	
	미혼	1.9	10.1	46.1	34.1	7.7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1.3	9.1	38.2	41.2	10.2	539	26.7***
자녀 유무	없음	2.4	18.1	30.3	42.4	6.8	547	
미취학 아동수	0	1.7	11.0	35.4	42.3	9.6	345	13.1
	1	0.0	3.8	40.9	42.4	12.9	132	
	2이상	1.6	9.7	48.4	32.3	8.1	62	
재학 아동수	0	0.0	5.8	41.3	42.1	10.7	121	7.7
	1	1.7	11.2	38.0	39.7	9.5	179	
	2	1.5	9.7	37.4	40.3	11.2	206	
	3이상	3.0	6.1	33.3	51.5	6.1	33	
지역	서울	2.8	14.0	37.9	39.4	5.9	322	15.2
	경인	0.7	12.0	36.9	40.4	10.0	450	
	충청	2.0	15.0	37.4	38.8	6.8	147	
	전라	3.6	10.1	36.2	39.1	10.9	138	
	경상	1.8	12.7	38.4	39.2	7.8	385	
	강원/제주	1.7	10.3	37.9	41.4	8.6	58	
시군구	시	1.1	11.6	35.0	41.0	11.4	449	15.1
	군	3.7	14.2	35.8	38.4	7.9	190	
	구	1.9	12.9	39.3	39.3	6.7	861	

&lt;표 4-22&gt; 고령친화산업 육성: 우선 추진 사업

구분		산업경쟁력 확보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N	$\chi^2$
전체	빈도수	508	531	461	1500	
	%	33.9	35.4	30.7		
성별	남성	31.1	36.7	32.2	761	5.2
	여성	36.7	34.1	29.2	739	
연령	20대	30.2	44.6	25.3	285	51.8***
	30대	35.1	41.2	23.8	345	
	40대	35.2	32.4	32.4	364	
	50대	34.9	33.6	31.5	321	
	60대	33.0	19.5	47.6	185	
학력	중학교이하	32.9	19.4	47.7	155	31.4***
	고등학교	33.4	35.2	31.4	455	
	대학교이상	34.3	38.3	27.4	890	
종사상지위	자영업	33.4	34.6	32.0	341	9.0
	비정규직	34.8	37.5	27.7	408	
	정규직	39.2	33.8	27.0	148	
	무급가족	34.7	32.5	32.8	375	
	무직/군인	28.1	38.6	33.3	22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3.2	32.0	34.7	337	10.0
	200-299만원	31.3	38.6	30.1	345	
	300-399만원	34.3	34.6	31.1	344	
	400-499만원	33.5	35.4	31.1	212	
	500-599만원	38.0	37.3	24.6	142	
	600만원이상	40.6	34.9	24.5	106	
혼인상태	기혼	35.1	33.0	31.8	1053	17.2**
	사별/이혼/별거	30.3	21.2	48.5	33	
	미혼	30.9	42.5	26.6	414	
고등학생 이하	있음	35.4	35.8	28.8	539	7.4*
자녀 유무	없음	34.6	29.6	35.8	547	
미취학 아동수	0	35.9	34.2	29.9	345	6.3
	1	37.9	33.3	28.8	132	
	2이상	27.4	50.0	22.6	62	
재학 아동수	0	32.2	39.7	28.1	121	12.6*
	1	38.0	34.6	27.4	179	
	2	31.1	37.4	31.6	206	
	3이상	60.6	18.2	21.2	33	
지역	서울	38.2	35.1	26.7	322	15.0
	경인	35.3	36.7	28.0	450	
	충청	33.3	35.4	31.3	147	
	전라	26.1	31.9	42.0	138	
	경상	31.9	35.6	32.5	385	
	강원/제주	31.0	34.5	34.5	58	
시군구	시	31.2	38.5	30.3	449	8.1
	군	36.8	27.4	35.8	190	
	구	34.6	35.5	29.8	861	

### 3. 전화설문조사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 앞선 분석은 각 영역에 대해 여러 하위 인구변수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부분에서는 여러 영역간 상대적인 평가를 살펴보도록 함.

○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국민인식 성과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하였음.

- “상당히 이루어졌다”를 5점 만점으로 정하고 그 이후의 범주에 각각 4, 3, 2, 1점을 곱하여 평균을 내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범주를 5점으로 하는 효과성 평가를 측정할 수 있음.

- 이 점수의 평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을 경우의 점수는 3점임.

○ 모든 설문대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 지도 중요한 성과의 척도임.

-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를 볼 필요가 있음.

- 고령화정책과 관련하여 50~60대의 평가를 살펴볼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일반의 효과성 평가

○ <표 4-23>은 국민일반이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보여주고 있음.

- 수치는 각 범주를 선택한 국민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효과성 점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효과성 점수임.

○ 효과성 점수를 살펴보면 각 중영역별 점수를 단순 산술평균했을 경우,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균은 2.55점,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수는 2.59점, 그리고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점수는 2.61점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영역구분을 막론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효과성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그 중에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lt;표 4-23&gt; 국민일반의 효과성 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	별로	전혀	효과성 점수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	1.3	14.7	31.1	43.6	9.4	2.55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1.5	17.0	35.8	38.8	6.9	2.67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0.9	10.9	29.8	45.7	12.7	2.42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6	12.3	30.3	46.8	8.9	2.51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3	16.2	33.7	42.7	6.0	2.6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7	14.7	34.9	41.5	7.1	2.62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5	19.0	39.0	34.7	5.9	2.76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1.1	8.9	35.7	45.4	8.9	2.48
고령친화산업 육성	1.9	12.7	37.5	39.7	8.3	2.60

주: 효과성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숫자는 각 범주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것임.

- 중영역별로 살펴보면 저출산 중에서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한 정책의 효과성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가장 문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이는 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정책이 많이 발표되어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 알려져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 정책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최근 학교 왕따나 청소년 자살 같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적인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위에서 제시한 효과성 점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평가를 살펴보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 이와 같이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부문에서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퇴직연금, 고용연장 및 정년문제, 노후설계 등 경제정세가 불안정하거나 신규사업의 추진으로 아직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노후설계와 관련된 사업이나 추진법안도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장동력분야와 관련해서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분야의 성

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분야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분야는 고용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로 관심도가 높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이나, 외국국적 동포의 인력활용 문제 등은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았고, 정책적인 개선도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 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것은 재정이나 금융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도 정부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유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강화도 요구됨.

#### □ 저출산 정책에 대한 20-30대 국민의 효과성 평가

- <표 4-24>은 20-30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보여주고 있음.
- 이를 앞의 <표 4-23>과 비교해 보면 20~30대에서 정책 효과성 평가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세 가지 중영역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4> 20~30대 국민의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	별로	전혀	효과성 점수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	1.0	11.0	32.7	43.8	11.6	2.46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0.8	11.0	38.3	41.9	8.1	2.5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1.0	6.8	31.4	45.7	15.1	2.33

주: 효과성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숫자는 각 범주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지적할 수 있음.

- 정책의 실수요자인 20~30대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민일반은 육아휴직관련 제도들의 도입이 커다란 정책적 성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이 사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야 할 20~30대가 혜택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경험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예를 들어 20~30대는 서구 사회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 한국의 현실이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변화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즉 젊은 층일수록 변화지향적인 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크게 생각하는 성향으로 인해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50~60대 국민의 효과성 평가

- <표 4-25>는 60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보여주고 있음.
- 이를 앞의 <표 4-23>과 비교해 보면 고령사회정책에 대해 50~60대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세 가지 중영역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으로 나타났음.

<표 4-25> 50~60대 국민의 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구분	상당히	어느 정도	보통	별로	전혀	효과성 점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3.4	18.0	25.1	47.4	6.1	2.6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0	22.7	27.9	41.7	5.7	2.7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4	21.3	27.3	42.5	5.5	2.75

주: 효과성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숫자는 각 범주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50~60대의 평가가 아무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들 계층이 고령사회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라 여겨짐. 즉,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부분이나,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부분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의 구축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낮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국민의 전체적인 효과성점수에 비하면 그 증가분이 다른 두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을 고려해야 함. 즉, 정책수혜자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정부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절대적 수치에서는 보통 이하를 기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 가. 전문가 설문조사 목적

- 2011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당해연도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방향성 설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제1절의 일반 국민 대상의 전화설문조사는 정책적 체감도 및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통해 복지욕구에 대한 전반적 필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일반 국민 대상의 전화설문조사에 비해 전문가 조사는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의 현주소 파악 및 정책의 우선순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분야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방향성 설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효과성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나.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 전문가 조사는 저출산·고령화·성장동력의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을 섭외하여 e-mail을 통해 진행하였고, 총 23명이 최종적으로 응답하여 조사가 완료되었음.
- 당초 섭외(30명) : 저출산 분야 15명, 고령화 분야 8명, 성장동력 분야 7명
- 조사 완료(23명) : 저출산 분야 13명, 고령화 분야 5명, 성장동력 분야 5명



□ 전문가 조사 설문지 구성은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분류 차원에서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성과수준과 각 해당영역 및 정책에 대한 중요도 수준을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성과수준과 중요도가 높음)로 질문하였음(부록 참조).

○ 대영역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저출산),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고령화),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성장동력)**

○ 중영역

- **저출산 분야**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고령화 분야**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성장동력 분야**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 소영역

- **저출산 분야**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고령화 분야**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성장동력 분야**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세부영역

##### - 저출산 분야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유연근로제 확산,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저출산 분야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 저출산 분야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 - 고령화 분야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고령자 고용연장,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후설계 기반 조성,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 - 고령화 분야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일자리 사업 체계화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년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 - 고령화 분야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 - 성장동력 분야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성장동력 분야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교육분야 제도개선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주택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성장동력 분야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 국내·외 시장 활성화 :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가. 종합(대영역)

- ☐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저출산 분야, 고령화 분야, 성장동력 분야를 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과수준이 제일 높은 분야는 저출산 영역으로 나타남.
-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역시 저출산 분야가 가장 높았고, 성장동력 분야는 중요도 및 성과수준 두 측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고령화 분야의 성과 수준은 보통이었으며(3.00), 성과수준 및 중요도 모두 세 분야 중 중간 정도의 실적을 보임.
  -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성과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저출산 분야와 고령화 분야는 보통 이상의 성과수준을 보였고, 성장동력 분야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

&lt;표 4-26&gt;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수준/중요도(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22(±0.74)	4.52(±0.59)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00(±0.80)	4.22(±0.80)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2.57(±0.73)	4.17(±0.89)

## 나. 저출산 분야

### 1) 중영역

- ☐ 저출산 분야를 중영역 차원에서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중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 성과수준 및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보통수준에 근접함)
-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은 성과수준과 중요도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화는 모두 중간 정도의 성과수준과 중요도를 보임.

&lt;표 4-27&gt; 저출산 정책 성과수준/중요도(중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일과 가정의 양립화	2.78(±0.80)	4.48(±0.73)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2.91(±0.79)	4.52(±0.59)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43(±0.73)	4.26(±0.69)

### 2) 소영역

- ☐ 일과 가정의 양립화를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이 성과수준과 중요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음.
- 반면,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은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에 비해 성과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lt;표 4-28&gt; 일과 가정의 양립화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3.09(±0.95)	4.48(±0.59)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2.65(±0.71)	4.30(±0.6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2.48(±0.67)	4.43(±0.66)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보통 이상의 성과수준을 보였으며,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기록하였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 반면,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은 2번째로 중요도가 높았으나 성과수준은 보통에 미치지 않았음.

&lt;표 4-29&gt;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2.57(±0.73)	4.30(±0.70)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3.30(±0.82)	4.00(±0.85)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3.30(±0.97)	4.13(±0.81)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04(±1.02)	4.61(±0.72)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못 미치는 성과수준을 보였고, 그 중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가 성과수준이 가장 높았으며(보통수준에 근접함),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은 성과수준이 가장 낮았음.

○ 중요도는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이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이 가장 낮았음.

○ 특히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은 4.39로 중요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2.35의 가장 낮은 성과수준을 보임.

&lt;표 4-30&gt;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2.96(±0.77)	4.04(±0.88)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2.91(±0.73)	3.83(±0.72)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2.35(±0.83)	4.39(±0.66)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2.65(±0.93)	3.87(±0.63)

### 3) 세부영역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이 중요도와 성과수준이 가장 높았고, 성과수준 역시 보통 이상이었으며,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높았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는 성과수준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고, 다른 항목과의 그 수준의 차이가 다소 컸음.

&lt;표 4-31&gt;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육아휴직제도 개선	3.13(±0.87)	4.43(±0.7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2.61(±0.78)	4.22(±0.67)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3.13(±0.92)	4.43(±0.73)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두 항목 모두 성과수준이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유사하게 나타남.
- 반면, 중요도는 성과수준에 비해 유연근로제 확산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lt;표 4-32&gt;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유연근로제 확산	2.43(±0.84)	4.17(±0.58)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2.39(±1.03)	4.04(±0.71)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은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보통수준에 근접함),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가장 낮았음.

- 특히,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은 중요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성과수준을 보임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는 중요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떨어짐.

&lt;표 4-33&gt;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2.91(±0.79)	4.13(±0.81)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2.43(±0.84)	3.78(±0.85)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30(±0.76)	4.30(±0.70)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이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중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이 그 수준이 가장 높았고,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중요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이 가장 높았고,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음.

&lt;표 4-34&gt;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2.43(±0.90)	4.00(±0.85)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2.26(±0.75)	3.61(±1.08)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2.35(±0.78)	3.39(±1.12)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세부 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성과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가 가장 높았음.
- 반면,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는 중요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성과수준을 보였으며,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는 중요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보임.

&lt;표 4-35&gt;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2.65(±0.93)	4.09(±0.79)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3.35(±0.88)	3.74(±0.8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3.35(±0.71)	3.96(±0.82)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17(±0.72)	3.83(±0.78)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성과수준이 보통 이상을 보였고,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가장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남(중요도는 2번째).
- 특히,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은 중요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성과수준만 보더라도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차이를 보임.
- 중요도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lt;표 4-36&gt;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57(±0.84)	4.13(±0.69)
양육수당 지원 확대	3.22(±1.09)	3.83(±1.23)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3.22(±0.90)	3.65(±1.15)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2.04(±0.77)	4.43(±0.59)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와 취학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제외한 항목들은 성과수준이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은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였으며, 가장 낮은 성과수준을 보인 것은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과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였음.

○ 중요도는 대체로 높았지만,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이 4.43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은 중요도에 비해 성과수준이 낮았음.

<표 4-3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2.87(±0.92)	4.43(±0.79)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2.65(±0.83)	4.35(±0.9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2.83(±0.72)	4.04(±0.82)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3.00(±0.95)	4.22(±0.85)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2.65(±0.93)	4.00(±0.90)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3.13(±0.97)	4.26(±0.62)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를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가 보통 수준의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보였으며,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는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나, 성과수준은 보통에 미치지 않음.

<표 4-38>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3.00(±0.80)	3.87(±0.81)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2.83(±0.72)	4.00(±0.85)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2.74(±0.69)	3.83(±0.89)

- ☐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고, 중요도 역시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 성과수준은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높았고(보통수준에 근접함), 나머지 두 항목은 2.83으로 같은 수준을 보임.

&lt;표 4-39&gt;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2.83(±0.72)	3.87(±0.76)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2.91(±0.67)	3.65(±0.83)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2.83(±0.83)	3.61(±0.72)

-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높은 반면에 성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는 중요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2.13으로 가장 낮은 성과수준을 나타냈으며,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는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보다 성과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lt;표 4-40&gt;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61(±0.58)	4.00(±1.00)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2.13(±0.87)	4.52(±0.67)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2.39(±0.66)	4.30(±0.82)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30(±0.82)	4.43(±0.73)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2.39(±0.72)	4.30(±0.63)

- ☐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성과 수준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고,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보통수준에 근접함), 중요도는 3.83으로 같은

수준을 보임.

<표 4-41>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 수준(M, SD)	중요도(M, SD)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91(±0.90)	3.83(±0.83)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2.83(±0.83)	3.83(±0.72)

## 다. 고령화 분야

### 1) 중영역

- 고령화 분야를 중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성과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중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은 중요도 수준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성과수준이었음.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은 3.70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4.17)에 비해 중요도 수준이 크게 낮았음.

<표 4-42> 고령화 정책 성과수준/중요도(중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65(±0.57)	4.17(±0.6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78(±0.80)	4.17(±0.7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70(±0.82)	3.70(±0.88)

### 2) 소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이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성과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는 중요도의 수준이 3.91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성과수준 역시 가장 저조하였음.

<표 4-4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2.57(±0.84)	4.17(±0.58)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2.70(±0.93)	4.30(±0.70)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2.74(±0.96)	4.22(±0.60)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2.48(±0.99)	3.91(±0.73)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 수준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이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보였고,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가 가장 낮은 성과수준을 보임.
- 특히,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은 중요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기록함.
- 중요도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과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가 4.26으로 가장 높았음.

<표 4-44>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2.57(±0.79)	4.04(±0.71)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2.74(±0.75)	4.26(±0.75)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2.78(±0.90)	4.26(±0.62)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2.87(±0.81)	3.96(±0.71)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성과수준은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이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에 비해

성과수준과 중요도 모두 높았음.

- 여타 소영역에 비해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은 중요도 수준이 다소 낮았음.

<표 4-45>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2.61(±0.99)	3.74(±0.86)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2.57(±0.99)	3.52(±0.85)

### 3) 세부영역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은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낮았음..
- 성과수준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요도는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가 높게 나타났음.

<표 4-46>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고령자 고용연장	2.57(±0.84)	3.83(±0.83)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57(±1.04)	4.13(±0.69)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2.57(±0.95)	4.13(±0.81)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2.52(±0.85)	4.13(±0.9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2.30(±0.82)	3.83(±0.83)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성과수준이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은 보통수준에 미달이었음.
- 특히,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은 중요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음.

<표 4-47>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2.65(±0.78)	4.65(±0.5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83(±0.83)	4.57(±0.59)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2.74(±0.92)	3.91(±1.08)

-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보았을 때, 성과수준은 보통수준에 못 미쳤고, 중요도는 4.35로 높은 수준을 보임.

<표 4-48>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2.87(±0.87)	4.35(±0.78)

-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를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노후설계 기반 조성이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에 비해 다소 높은 성과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함.

- 중요도 수준은 고령화 분야 중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님.

<표 4-49>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노후설계 기반 조성	2.43(±0.84)	3.87(±0.81)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2.39(±0.78)	3.83(±0.78)

-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은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일자리 사업 체계화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는 일자리 사업 체계화에 비해 중요도는 높으나 성과수준은 더 낮았음.

&lt;표 4-50&gt;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2.65(±0.93)	4.13(±0.81)
일자리 사업 체계화	2.70(±0.97)	3.87(±0.87)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가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보였고,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가 가장 낮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수준이었음.
- 특히,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는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나 성과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은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3.65 수준을 보임.

&lt;표 4-51&gt;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2.83(±0.89)	3.96(±0.82)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2.65(±0.93)	4.04(±0.77)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2.74(±0.86)	3.65(±0.98)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와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의료비 지출 적정화가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수준을 보였고,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체계 구축은 보통수준,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은 보통 이상의 성과수준이 나타났음.
- 중요도는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떨어지게 나타났고, 의료비 지출 적정화는 중요도가 가장 높는데 비해 성과수준은 가장 낮았음.



&lt;표 4-52&gt;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체계 구축	3.00(±0.67)	4.00(±0.80)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3.09(±0.73)	4.13(±0.81)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2.96(±0.93)	4.13(±0.87)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2.78(±0.67)	3.87(±1.01)
의료비 지출 적정화	2.65(±0.78)	4.22(±0.90)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성과수준이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이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에 비해 성과수준 및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중요도는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lt;표 4-53&gt;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78(±0.67)	3.83(±0.8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2.70(±0.70)	3.65(±0.83)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성과수준이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비해 성과수준 및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중요도는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lt;표 4-54&gt;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61(±0.72)	3.65(±0.78)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2.83(±0.89)	3.78(±0.74)

-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가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보였고,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이 그 수준이 가장 낮았음.
-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을수록 성과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수준은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대체로 낮았음.
- 중요도에 있어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은 3.57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lt;표 4-55&gt;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2.61(±0.89)	3.96(±0.88)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2.57(±1.04)	3.91(±1.00)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2.48(±0.85)	3.57(±1.04)

## 다. 성장동력 분야

### 1) 중영역

- 성장동력 분야를 중영역 차원에서 비교해볼 때, 성과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중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가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보였으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2.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성장동력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분야에 비해 성과수준 및 중요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음.
-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성과수준 및 중요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lt;표 4-56&gt; 성장동력 정책 성과수준/중요도(중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2.74(±0.92)	3.83(±0.7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2.52(±0.73)	4.09(±0.85)
고령친화산업 육성	2.39(±0.58)	3.52(±0.99)

## 2) 소영역

-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해볼 때,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이 가장 높은 성과수준을 보였고,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이 가장 그 수준이 낮았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제외하고 대체로 중요도 수준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높지 않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은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성과수준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은 성과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중요도는 가장 낮았음.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는 성과수준이 보통에 미치지 못함.

<표 4-5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3.00(±1.00)	4.26(±0.75)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3.09(±0.85)	3.43(±0.99)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2.65(±0.98)	3.78(±0.85)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2.74(±0.81)	3.61(±0.72)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을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해볼 때, 성과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이 그 중에서 2.61로 가장 성과수준이 높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이 2.43으로 가장 낮았음.
-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은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나 성과수준이 가장 낮았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은 중요도가 가장 낮았으나 성과수준이 가장 높았음.
  - 중요도는 성장동력 분야에 있어 소영역 차원에서는 높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됨.

&lt;표 4-58&gt;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43(±0.99)	4.22(±0.67)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2.61(±0.84)	3.96(±0.64)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2.52(±0.85)	4.04(±0.82)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소영역 차원에서 비교해볼 때, 성과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성과수준과 중요도 모두 타 분야에 비해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은 성과수준이 가장 낮았고, 나머지 두 영역은 2.43으로 같은 수준을 보임.

&lt;표 4-59&gt; 고령친화산업 육성 성과수준/중요도(소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2.43(±0.90)	3.35(±1.27)
국내·외 시장 활성화	2.43(±0.79)	3.26(±1.05)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2.39(±0.66)	3.09(±0.95)

### 3) 세부영역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모두 성과수준은 보통에 못 미쳤으나 대체로 보통수준에 근접하였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이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에 비해 성과수준 및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lt;표 4-60&gt;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91(±0.85)	3.96(±0.88)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2.96(±0.88)	4.13(±0.97)

- ☐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성과수준은 대체로 보통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으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는 보통수준에 근접하였음.
- 중요도는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았음.

&lt;표 4-61&gt;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2.83(±0.83)	3.61(±0.66)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2.96(±0.77)	3.65(±0.71)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2.96(±0.82)	3.70(±0.88)

-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이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모두 2.78의 같은 수준을 보임.
- 중요도는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가 3.87로 가장 높았음.

&lt;표 4-62&gt;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 수준(M, SD)	중요도(M, SD)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2.78(±0.85)	3.87(±0.97)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2.78(±0.80)	3.78(±0.8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2.78(±0.80)	3.83(±0.72)

-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를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이 보통수준 이상의 성과수준을 보였으며,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도 보통수준에 근접한 성과수준을 보임.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에 비해 성과수준 및 중요도 모두 높게 나타났음.

&lt;표 4-63&gt;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3.09(±0.79)	3.83(±0.8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96(±0.77)	3.74(±0.81)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 분야 제도개선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보았을 때, 중요도는 4.48로 성장동력 분야의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성과수준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였음.

&lt;표 4-64&gt;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 분야 제도개선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교육분야 제도개선	2.65(±0.93)	4.48(±0.67)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 분야 제도개선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모두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 주택 분야 제도개선이 성과수준 및 중요도가 금융 분야 제도개선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중요도는 성장동력 분야의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lt;표 4-65&gt;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 분야 제도개선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주택 분야 제도개선	2.48(±0.67)	4.00(±0.85)
금융 분야 제도개선	2.43(±0.73)	3.91(±0.90)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을 세부영역 차원에서 보았을 때,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는 성장동력 분야의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성과수준은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lt;표 4-66&gt;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2.39(±0.72)	4.22(±1.04)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성과수준과 중요도 모두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그 중에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는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나 성과수준은 가장 낮았음.

&lt;표 4-67&gt;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2.48(±0.73)	3.39(±1.08)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2.35(±0.71)	3.48(±1.0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2.49(±0.73)	3.43(±0.99)

□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세부영역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수준과 중요도 모두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높지 않음.

○ 국내 수요기반 확충이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에 비해 성과수준과 중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음.

&lt;표 4-68&gt; 국내·외 시장 활성화 성과수준/중요도(세부영역)

구분	성과수준(M, SD)	중요도(M, SD)
국내 수요기반 확충	2.48(±0.73)	3.70(±0.93)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2.26(±0.75)	3.52(±0.99)

### 3.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 본 절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2011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기업의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중요도(importance) 및 성과수준(performance)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도입하여 분석하도록 함.
- IPA의 유용성은 상대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항목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IPA매트릭스는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들을 결정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 IPA 매트릭스의 각 사분면을 살펴보면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성과수준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노력지속 분야).
- 2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그 성과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중점개선 분야).
- 3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항목들로 성과수준 역시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보완개선 분야).
  - 본 영역에 있어서는 타 영역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기는 하지만 정책적 추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보완 및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4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낮은 중요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수준을 보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음(현상유지 분야).
  - 본 영역 역시 중요도가 낮다는 것이 정책적 추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타 영역에 비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의 높은 성과수준을 유지 및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가. 저출산 분야 분석결과

- 저출산 분야는 일과 가정의 양립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
- 저출산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자간 평가점수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결과, 높은 신뢰도를 보임(중요도 Cronbach alpha 0.943, 성과수준 Cronbach alpha 0.967).



&lt;표 4-69&gt; 저출산 분야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측정항목수	Cronbach's alpha (크론바하 α 계수)	신뢰도 평가기준
중요도	38	0.943	Cronbach's α >0.6
성과수준	38	0.967	

## 1) 저출산 분야 종합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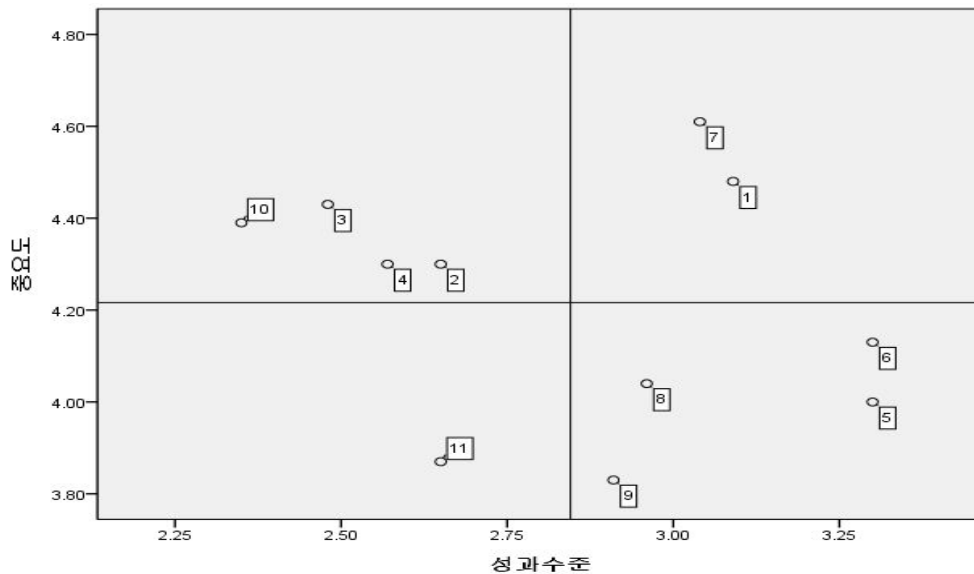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수준 IPA 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4.22(5점 만점), 만족도 평균은 2.85(5점 만점)로 나타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확대·개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분야.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분야,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lt;표 4-70&gt; 저출산 분야 종합

구분	중영역	소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일과 가정의 양립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3.09	4.48
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2.65	4.3
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2.48	4.43
4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2.57	4.3
5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3.3	4.0
6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3.3	4.13
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04	4.61
8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2.96	4.04
9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2.91	3.83
1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2.35	4.39
11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2.65	3.87
계(종합)			2.85	4.22

[그림 4-1] 저출산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2) 평가항목별 IPA 결과

### 2.1) 일과 가정의 양립화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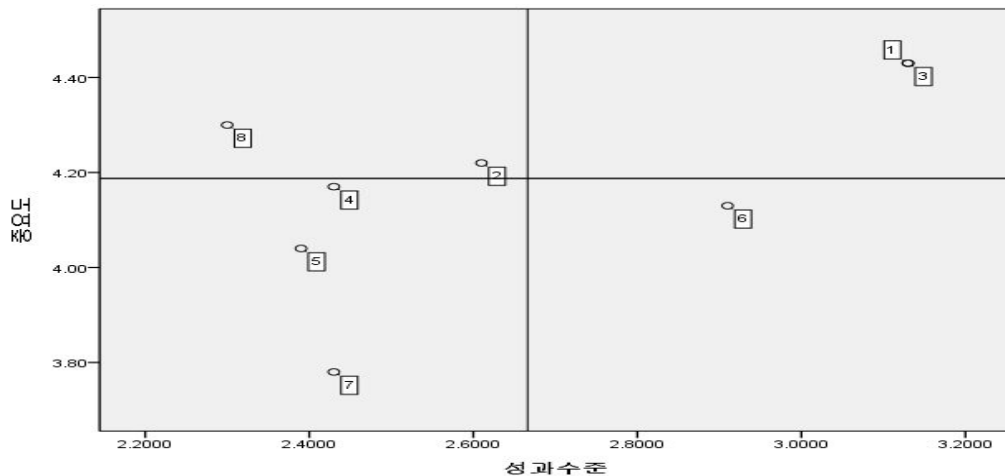
□ 일과 가정의 양립화 분석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4.19, 성과수준 평균값은 2.67로 나타난.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육아휴직제도 개선, 산전후 휴가 등 제도개선.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유연근로제 확산,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직장보육 시설 설치 활성화.

&lt;표 4-71&gt; 일과 가정의 양립화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3.13	4.43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2.61	4.22
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3.13	4.43
4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2.43	4.17
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2.39	4.04
6	가족친화 직장 사회환경 조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2.91	4.13
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2.43	3.78
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3	4.3
계(종합)			2.67	4.19

[그림 4-2] 일과 가정의 양립화 IPA 분석 매트릭스



## 2.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분석결과, 중요도의 평균값은 4.00, 성과도의 평균값은 2.87임.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민간 육아시설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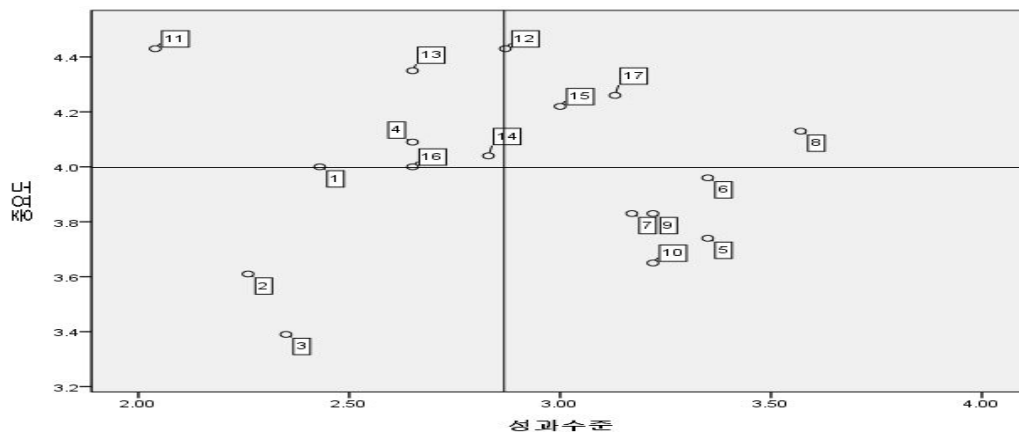
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양육수당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표 4-7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조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2.43	4.00
2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2.26	3.61
3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2.35	3.39
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2.65	4.09
5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3.35	3.74
6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3.35	3.96
7	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7	3.83
8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57	4.13
9		양육수당 지원 확대	3.22	3.83
10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3.22	3.65
11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2.04	4.43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2.87	4.43
13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2.65	4.35
14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2.83	4.04
15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3.00	4.22
16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2.65	4.00
17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3.13	4.26
계(종합)			2.87	4.00

[그림 4-3]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IPA 분석 매트릭스



## 2.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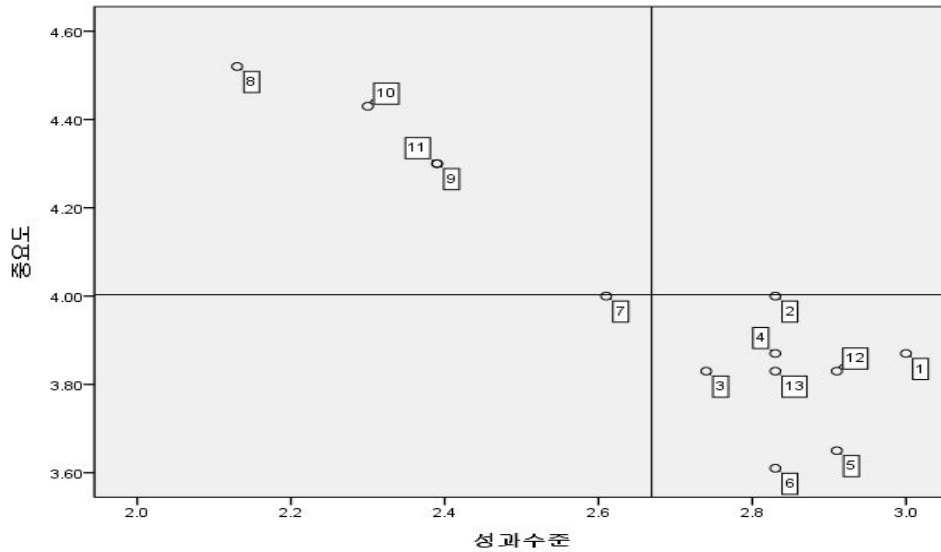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분석결과, 중요도의 평균값은 4.00이었으며, 성과도의 평균값은 2.67로 나타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lt;표 4-73&gt;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3.00	3.87
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2.83	4.00
3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2.74	3.83
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성과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2.83	3.87
5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2.91	3.65
6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2.83	3.61
7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61	4.00
8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2.13	4.52
9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2.39	4.30
1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30	4.43
11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2.39	4.30
12	아동·청소년 정책추진 기반 조성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91	3.83
13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2.83	3.83
계(종합)			2.67	4.00

[그림 4-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IPA 분석 매트릭스



## 나. 고령화 분야 분석결과

- 고령화 분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
- 고령화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자간 평가점수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 α) 결과, 높은 신뢰도를 보임(중요도 Cronbach alpha 0.968, 성과수준 Cronbach alpha 0.973).

<표 4-74> 고령화 분야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측정항목수	Cronbach's alpha (크론바하 α 계수)	신뢰도 평가기준
중요도	28	0.968	Cronbach's α >0.6
성과수준	28	0.973	

### 1) 고령화 분야 종합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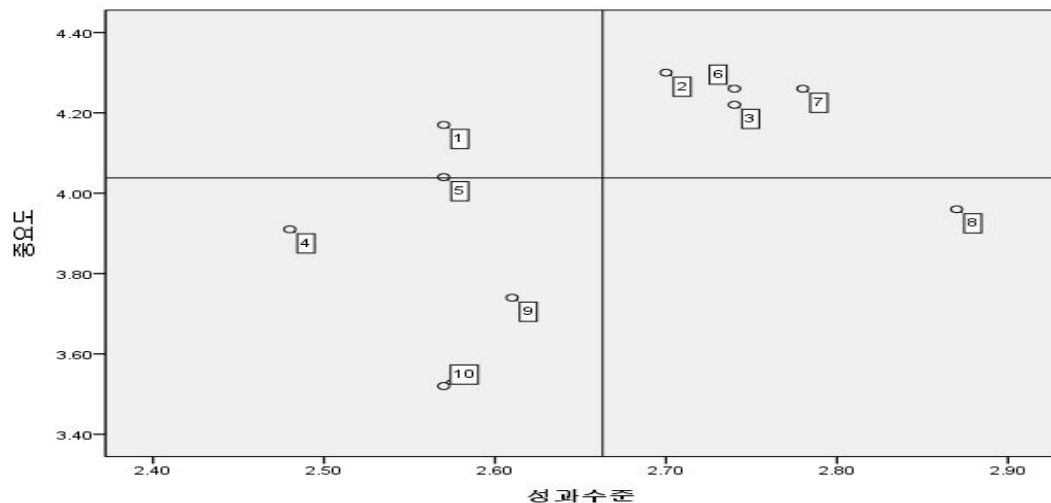
- 고령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수준 종합 IPA 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4.04(5점 만점), 성과도 평균값은 2.66(5점 만점)으로 나타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lt;표 4-75&gt; 고령화 분야 종합

구분	중영역	소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2.57	4.17
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2.70	4.30
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2.74	4.22
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2.48	3.91
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2.57	4.04
6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2.74	4.26
7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2.78	4.26
8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2.87	3.96
9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2.61	3.74
10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2.57	3.52
계(종합)			2.66	4.04

[그림 4-5] 고령화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2) 평가항목별 IPA 결과

### 2.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의 중요도 평균값은 4.11, 성과수준의 평균값은 2.59인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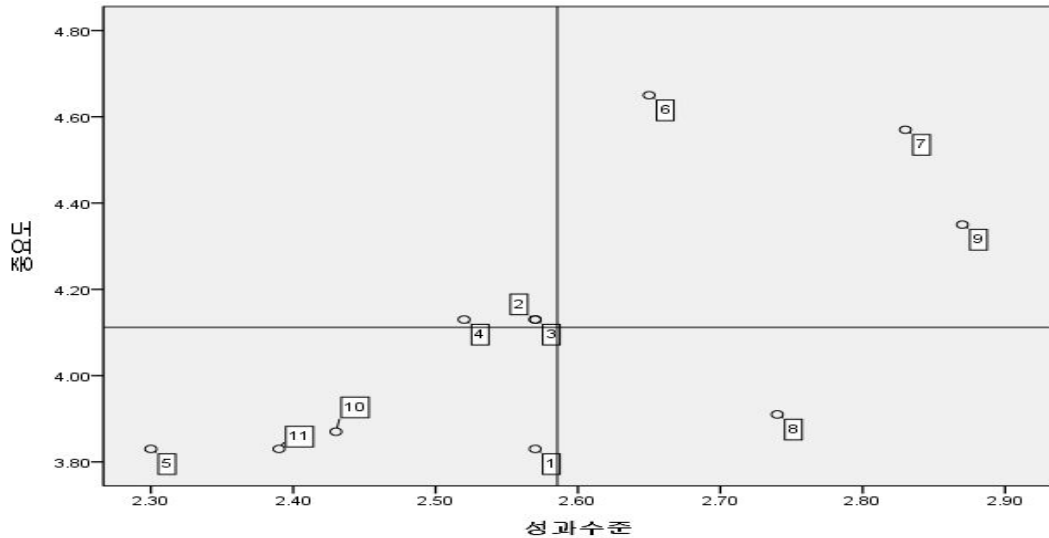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노후설계 기반 조성, 고령자 고용연장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표 4-76>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2.57	3.83
2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57	4.13
3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2.57	4.13
4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2.52	4.13
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2.30	3.83
6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2.65	4.65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83	4.57
8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2.74	3.91
9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2.87	4.35
10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설계 기반 조성	2.43	3.87
11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2.39	3.83
계(종합)			2.59	4.11



[그림 4-6]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IPA 분석 매트릭스



## 2.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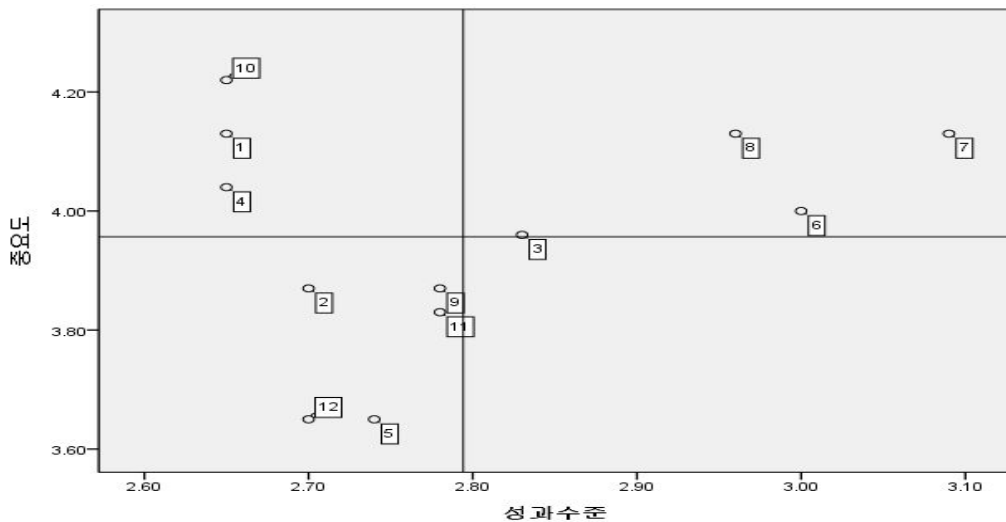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분석결과, 중요도의 평균값은 3.96, 성과수준의 평균값은 2.79인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의료비지출 적정화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체계 구축,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일자리 사업 체계화,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lt;표 4-77&gt;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2.65	4.13
2		일자리 사업 체계화	2.70	3.87
3	노인빈곤계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2.83	3.96
4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2.65	4.04
5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2.74	3.65
6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지출 적정화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체계 구축	3.00	4.00
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3.09	4.13
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2.96	4.13
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2.78	3.87
10		의료비 지출 적정화	2.65	4.22
11	다양한 사회참여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78	3.83
12	여가문화기회제공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2.70	3.65
계(종합)			2.79	3.96

[그림 4-7]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IPA 분석 매트릭스



### 2.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분석결과, 중요도의 평균값은 3.77, 성과수준의 평균값은 2.62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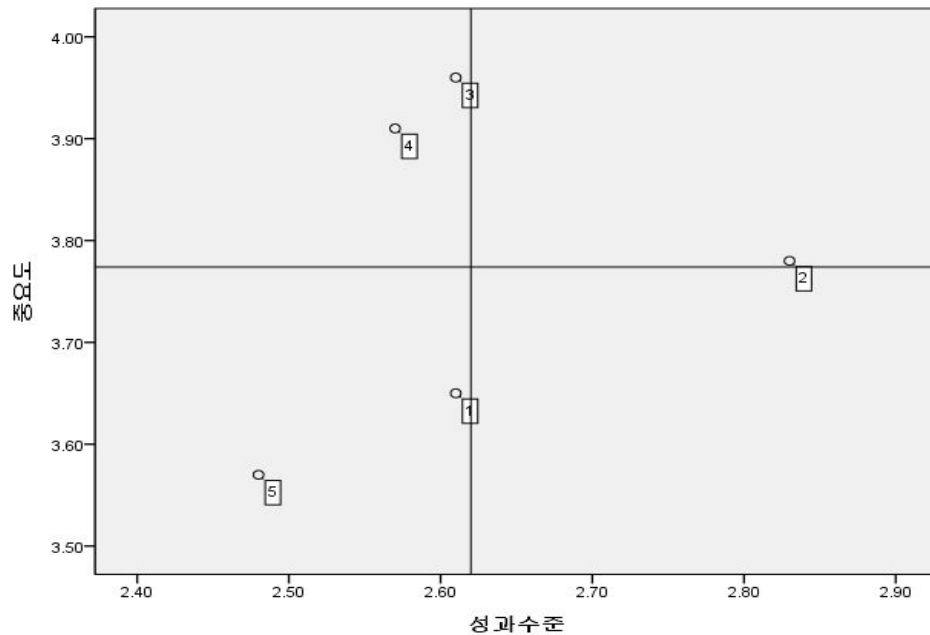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분야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lt;표 4-78&gt;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61	3.65
2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2.83	3.78
3	노인관계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2.61	3.96
4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2.57	3.91
5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2.48	3.57
계(종합)			2.62	3.77

[그림 4-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IPA 분석 매트릭스



#### 다.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제도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
-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자간 평가점수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

뢰도 분석(Cronbach  $\alpha$ ) 결과, 높은 신뢰도 보임 (중요도 Cronbach alpha 0.935, 성과수준 Cronbach alpha 0.950)

<표 4-79> 성장동력분야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측정항목수	Cronbach's alpha (크론바하 $\alpha$ 계수)	신뢰도 평가기준
중요도	19	0.935	Cronbach's $\alpha > 0.6$
성과수준	19	0.950	

#### 1) 성장동력 분야 종합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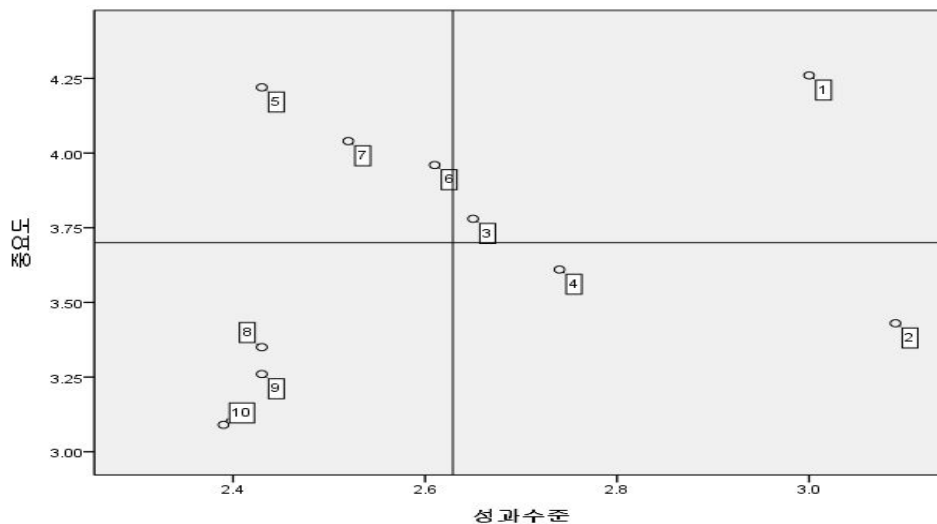
□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수준 IPA 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3.70, 만족도 평균값은 2.63으로 나타남.

- 중요도 가장 높은 분야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성과수준 가장 낮은 분야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분야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국내·외 시장 활성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lt;표 4-80&gt; 성장동력 분야 종합

구분	중영역	소영역	성취수준	중요도
1	잠재인력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3.00	4.26
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3.09	3.43
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2.65	3.78
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2.74	3.61
5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43	4.22
6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2.61	3.96
7		중장기 재정·자구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2.52	4.04
8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2.43	3.35
9		국내·외 시장 활성화	2.43	3.26
10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2.39	3.09
계(종합)			2.63	3.70

[그림 4-9] 성장동력 분야 IPA 분석 매트릭스



## 2) 평가항목별 IPA 결과

### 2.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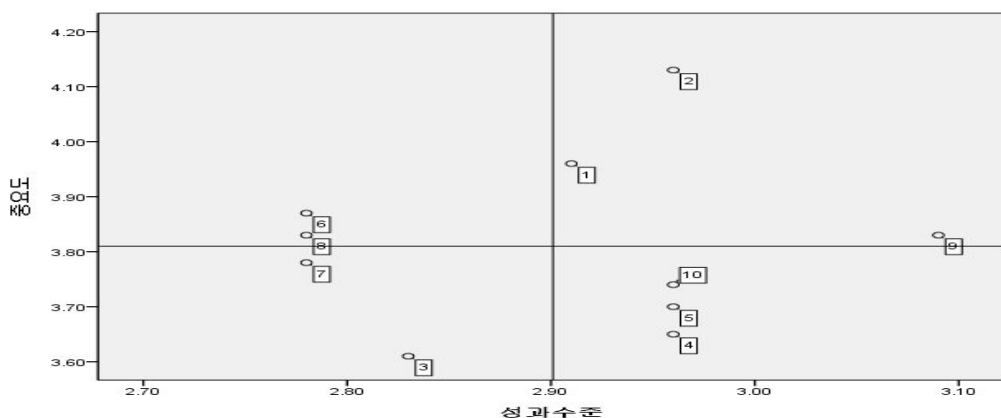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분석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3.81, 성과도 평균값은 2.90인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 가장 높은 분야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성과도 가장 낮은 분야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lt;표 4-81&gt;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91	3.96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2.96	4.13
3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2.83	3.61
4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2.96	3.65
5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2.96	3.7
6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2.78	3.87
7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2.78	3.78
8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2.78	3.83
9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3.09	3.83
1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96	3.74
계(종합)			2.90	3.81

[그림 4-1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IPA 분석 매트릭스



## 2.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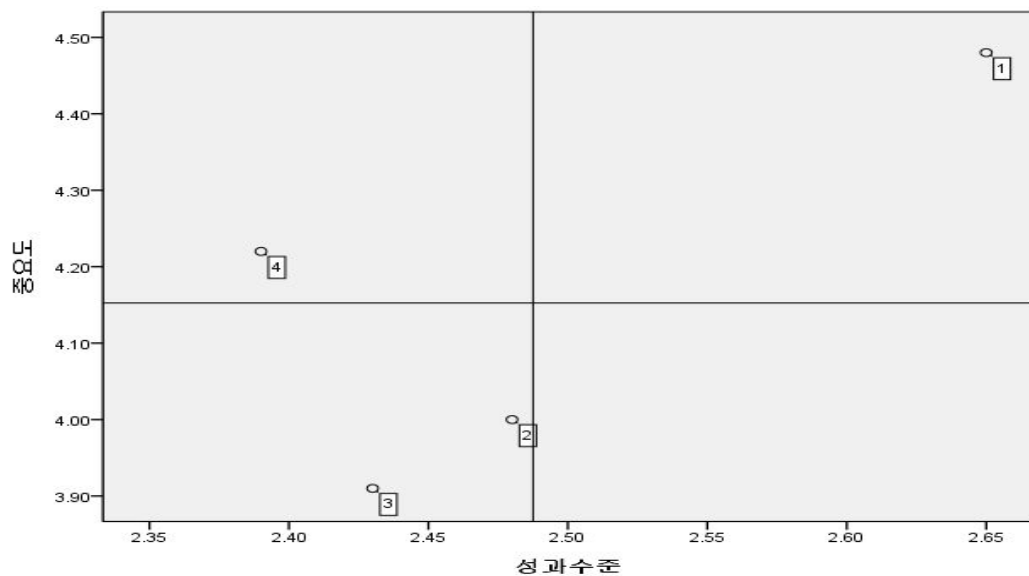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제도 개선 분석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4.15, 성과도 평균값은 2.49인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교육분야 제도개선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교육분야 제도개선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부문.
- 개선 요망 분야(3사분면) : 금융 분야 제도개선, 주택 분야 제도개선

<표 4-8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제도 개선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육 분야 제도개선	2.65	4.48
2	인구고령화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주택 분야 제도개선	2.48	4.00
3		금융 분야 제도개선	2.43	3.91
4	중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2.39	4.22
계(종합)			2.49	4.15

[그림 4-1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제도 개선 IPA 분석 매트릭스



## 2.3) 고령친화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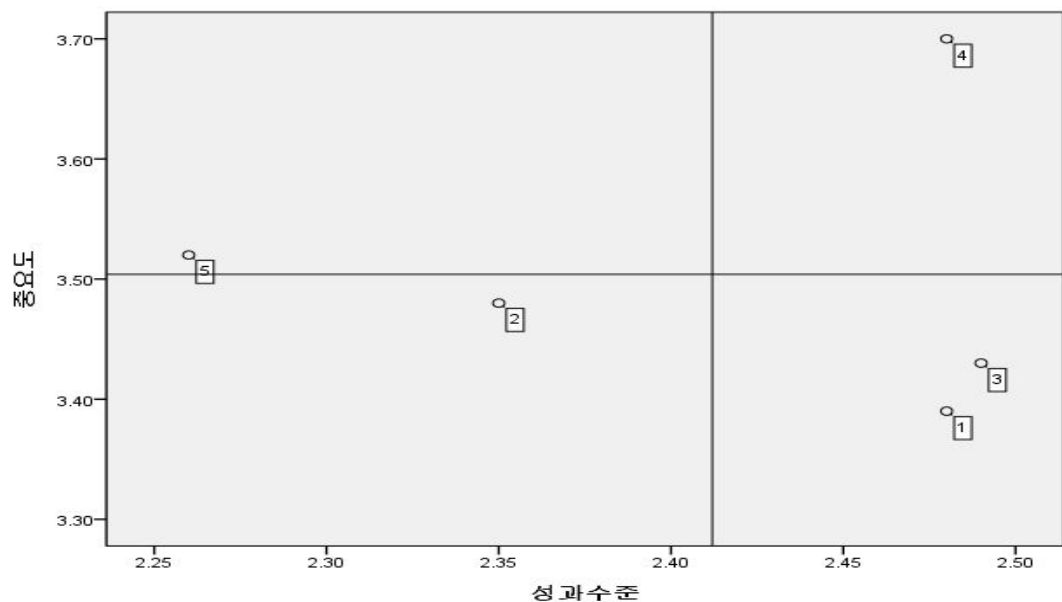
□ 고령친화산업 육성 분석결과, 중요도 평균값은 3.50, 성과도 평균값은 2.41인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 : 국내 수요기반 확충.
- 성과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노력 지속 분야(1사분면) : 국내 수요기반 확충.
- 중점 개선 분야(2사분면) :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보완 개선 분야(3사분면)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 현상 유지 분야(4사분면)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

<표 4-83> 고령친화산업 육성 분석결과

구분	소영역	세부영역	성과수준	중요도
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2.48	3.39
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2.35	3.48
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2.49	3.43
4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2.48	3.7
5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2.26	3.52
계(종합)			2.41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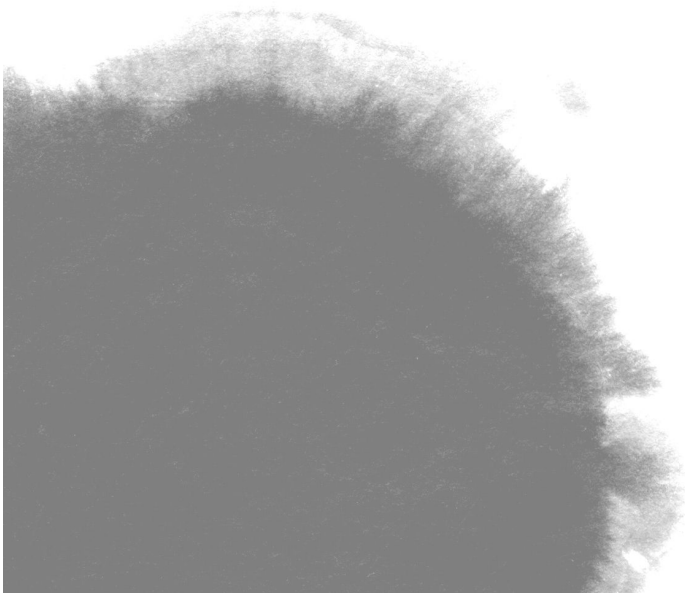
[그림 4-12] 고령친화산업 육성 분석결과 IPA 분석 매트릭스





# 5장

## 종합평가





## 제5장 종합평가

### 제1 절 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성과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을 통해 살펴본 성과는 대부분의 세부과제에서 100%이상의 달성률을 보여 매우 흡족할 만한 것으로 나타남.
  - 미흡한 과제들의 상당수가 시행시기나 입법상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저출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과제의 경우 약간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과제수혜대상자들의 만족도로 성과를 측정하는 과제들의 경우 애초의 계획대로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연간 접속건수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지표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100%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라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핵심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18개 지표의 목표 달성률도 하나를 제외하고는 100%를 넘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핵심과제 지표 18개 중 17개 지표(83.3%)에서 목표 달성률이 100%이상이 되고 모든

지표에서 90%이상 달성되어 여러 지표에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육아휴직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과 같은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에 있어서 분모가 산전후휴가지수라고 나와 있으나 모든 출산근로자수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임.

□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하여 저출산 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면 5점 만점을 기준(평균 3점)으로 2.4에서 2.7점 정도를 기록하여 약간 낮은 성과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중영역별 성과점수에서 차이를 보여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이 가장 높은 2.7점을 기록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가 2.5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관련된 정책들은 보육·교육비지원과 양육비지원과 같은 현금증여성의 정책이 많아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쉬웠고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다른 한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청소년의 역량개발이나 성범죄 예방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자살이나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관련 사고·사건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전문가조사에서 중영역별 성과수준에 대한 평가가 2.4에서 2.9점을 기록하여 평균인 3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인식 성과평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영역 수준에서 성과점수를 살펴보면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이 가장 높은 2.9점을 기록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가 2.8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2.4점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과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 영역들에서 전문가들은 일반국민들

보다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은 같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문가들도 일반 국민들과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역의 소영역인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에 대한 평가가 평균을 넘어 3.3점을 보여주지만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서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은 가장 낮은 2.4점을 기록하여 앞서 일반국민 성과인식에서 제시한 설명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줌.

□ 저출산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에서 2011년 1.24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출산율제고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성과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류체계가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 선진적인 정책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에서 정책평가(program evaluation)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작위실험방법, 그리고 정책수혜자와 그들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비수혜자간 비교를 통한 연구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정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요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 일제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고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확산·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노력의 수반이 절실함.

## 제2절 고령화 분야(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평가 중에서 정량평가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각 사업의 목표달성률 차원에서 평가해 본 결과, 몇 가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90%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여기에서 목표달성률이 부진했거나, 또는 상당히 미진했던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사업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관련법의 개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진한 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나, 관련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고, 향후에도 사업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업폐기, 또는 사업추진노력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의 차이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부문에 대한 성과정도를 물어본 결과,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하 국민인식 조사).

- 그 중에서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고령화대응체계 구축’부문에서의 부정적 응답률이 55.7%,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부문에서는 48.7%,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부문에서는 48.6%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고령화대응체계 구축’부문에 대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각 부문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응답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보장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장, 노인권익보장을 지정한 것으로 판단됨.

- 즉,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고령화대응체계 구축’부문에서는 고용기회 등 경제적 보장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고,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부문에서는 일자리 마련 등 경제보장과 건강보장사업을 지적하였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부문에서는 노인권익 등의 사업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평가를 해보면, 각 3대 부문(저출산부문, 고령화부문 및 성장동력부문)간 평균점수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못함. 이는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전체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한 가운데에서 20~30대가 느끼는 저출산부문의 효과성 평가(2.3~2.5점)가 60대가 느끼는 고령화부문의 효과성평가(2.9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화부문의 중영역에 대한 성과평가수준을 보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음(이하 전문가 조사).
  - 각 사업의 중요도측면과 아울러 평가해 보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부문이 중요도도 높은 만큼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소영역별로 성과평가수준을 보면,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부문에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부문에서는 다양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기회 제공,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사업이 각각 가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다양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기회 제공,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리고,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영역별로 성과평가수준을 보면, 가장 부진했다고 평가한 사업군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조기정착(2.30점)’, ‘노후설계 기반조성(2.43점)’,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2.39점)’,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2.48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요약하면, 일반국민 및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정성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중심이고, 특히 전문가집단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 성과는 대체적

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즉, 전문가집단에서 중요도를 감안하여 성과수준을 평가해 볼 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노년기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 및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업성과가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비롯하여 향후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제도개선보다는 관련법의 개정이나 신설을 전제로 하거나, 사회적 환경 및 분위기자세를 조성시켜야 하는 부문에서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3절 성장동력 분야(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2011년도 성장동력 분야 정책들의 성과는 성장동력분야 90개 지표와 국민인식 전화설문조사, 그리고 성장동력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 성장동력분야 90개 지표 중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지표는 82개로 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율은 91.1%, 비예산 분야를 제외한 예산분야의 90% 이상 예산집행률은 94.1%로 높은 수준을 기록. 그러나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별로이다”가 평균 39.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나서 국민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는 정책의 중요도는 5점만점에 평균 4.17, 만족도는 2.57로 조사됨.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의 성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성과지표 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93.1%, 예산집행률 91.3%).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 “별로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나타나 타 영역에 비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도 중



요도(3.83) 대비 성과수준(2.74)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실적(성과지표 목표달성률 84.0%)과, 정부출연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 실적(85.9%)은 다소 미진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정책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율 85.7%, 예산집행률 100.0%, 전문가조사 성과수준 3.0, 중요도 4.26).
-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력활용” 실적지표는 목표치 대비 모두 목표달성을 거두었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음(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100%, 성과수준 3.09, 중요도 3.43).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분야의 실적지표는 재직자 직업훈련참여율(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71.0%),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도입 대학교 수(목표달성률 87.5%)에서 다소 미흡하였으며, 전문가조사는 중요도에 비해 성과수준이 낮게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90.9%, 전문가조사 성과수준 2.65, 중요도 3.78).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방지”분야의 실적지표는 목표치 대비 모두 목표달성을 거두었으며, 전문가조사에서도 중요도 대비 성과수준이 타분야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의 점수를 받음(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100%, 성과수준 2.74, 중요도 3.61).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의 성과는 ‘잠재인력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정책의 추진실적 목표달성률이 낮았고(성과지표 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87.5%, 예산과제외(비예산과제 제외) 예산집행률 100%),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별로이다”가 45.4%, “보통이다”가 35.7%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조사에서도 중요도(4.09)대비 성과수준(2.52)이 낮게 나타남.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목표달성률이 65%에 그쳤으나 이를 제외한 사립대학경영권설립지원만족도,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등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함. 그러나 전문가 조사에서는 과제의 중요성에 비해 성과수준이 낮게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율 80.0%, 성과수준 2.43, 중요도 4.22).
- “인구고령화 대비 주책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목표달성 우수과제 비율이

83.3%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도 그리 높지 않은 점수를 기록함. 목표달성이 미흡한 세부과제는 “DC형의 펀드투자의 감독규정 개정 여부”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채증가 가능성 등으로 “국고채 평균 잔존 만기”, “국민연금 해외/대체 투자액” 등을 선정한 성과지표는 성과는 좋게 나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단기적 성과를 위해 무리한 변화를 수반할 경우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83.3%, 성과수준 2.61, 중요도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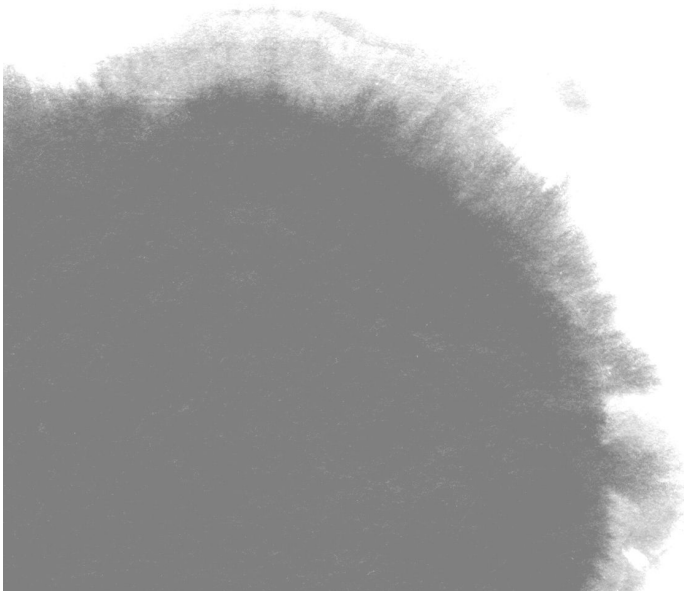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과제는 모든 지표에서 1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으나, 전문가 조사에서는 중요도(4.04)에 비해 성과수준(2.52)이 보통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성과 역시 비슷한 수준임. 정부정책의 추진실적 목표달성률(성과지표 목표달성 우수사업 비중 87.5%, 예산과제의 집행률 100%),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별로이다” 39.7%, “보통이다” 37.5%로 비슷한 수준. 전문가 조사에서는 다른 중영역 분야에 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역의 중요도(3.52)와 성과수준을 낮게 평가.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할 수 있으나 인식이 아직 낮고, 성과면에서도 체감도가 낮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과제는 모든 세부과제에서 10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였으나, 전문가 조사에서는 중요도(3.35)와 성과수준(2.43)이 모두 낮게 나타남.
-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과제의 경우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목표달성률 80.6%)”를 제외한 모든 과제에서 100% 이상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전문가들은 성과수준(2.43)과 중요도(3.26)를 대체로 낮게 평가하였으나, 세부과제로서 국내 수요기반 확충의 중요도(3.70)와 성과수준(2.48)을 해외시장 선점 중요도(3.52)와 성과수준(2.26)보다 높게 평가함.
- 마지막으로 “고령자용 식품 산업 기반조성”과제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성과지표와 R&D 과제 발굴 및 제안서 중 전자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달성률이 50%에 머물렀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는 성과수준(2.39)과 중요도(3.09)를 낮게 평가함.

# 6장

## 결론





## 제6장 결론

□ 본 보고서에서 발견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11년 성과평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정부의 시행계획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의 모든 영역의 정책들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과 목표달성률이 90%를 초과하고 있으며, 예산집행률 또한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성과를 핵심적으로 요약, 대표하는 45개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높은 성과 목표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다만,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국민인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살펴본 성과는 상이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은 산술평균이 각각 2.55점, 2.59점, 그리고 2.61점으로 나타나 중간수준(3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조사에서는 순서대로 3.22점, 3.00점, 그리고 2.57점을 기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을 제외한 분야에서 중간수준(3점)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정책노력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에 대한 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음. 즉 국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출에 더 가까이 있고 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들은 산출뿐만 아니

라 투입에도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투입에 대한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투입에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인식과 전문가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평가지표도 향후에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음.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치밀하면서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성과지표로 선정된 지표의 산정방법이나 자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산출유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양육수당의 지원율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체노인인구수 대비로 정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정책입안 및 수행에 있어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정책수요를 예측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공적인 정책의 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가 100% 달성되었다는 것은 해당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표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성 있게 높은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정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즉,
- 성공적인 과제수행의 이면에는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예를 들면, 저출산 정책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상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 개발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한 대국민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체적으로 국민인식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잘못된 성과인식으로 이어

질 수 있고, 이는 정책방향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국민 대화를 통해 정책방향을 수렴하고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그 중에서 성과도가 낮은 사업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정부와 국민의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만 현실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정책수행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장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보다 나은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11년은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며, 본 보고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를 처음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성과관련 보고서들이 정부의 시행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성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인식조사와 전문가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다층적인 성과평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임.
- 다만, 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내용을 담은 질문을 통한 국민인식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음. 예를 들면, 대분류 및 중분류보다도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새로 시작되는 기본계획 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특히 성과평가에 있어 측정의 문제를 되새겨 봄으로써 향후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토대를 닦은 측면이 있음.
- 정책성가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위해 몇몇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은 어린이집이 늘어날수록 증가율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수요대비 공급을 나타낼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수용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년도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년도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국방부 내부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대한민국 정부(200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7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8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2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 각 년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신윤정·정경희·김수봉·손창균·이수형·이지혜(2009).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 순위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이삼식·정경희·신윤정·이소정·박세경·박종서·이윤경·장보현·최효진(2008).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오영희·이윤경·최효진(2009). 『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이지혜·최효진·박보미(2010).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이지혜(201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정경희·황나미·윤석명·김수봉·이윤경·이소정·신화연·이지혜·김태현·박신영·서문희·최숙희·정익중·이규용(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조세연구원(2008). 『2006 저출산·고령사회정책평가결과』. 통계청(2008). 『사회통계조사』.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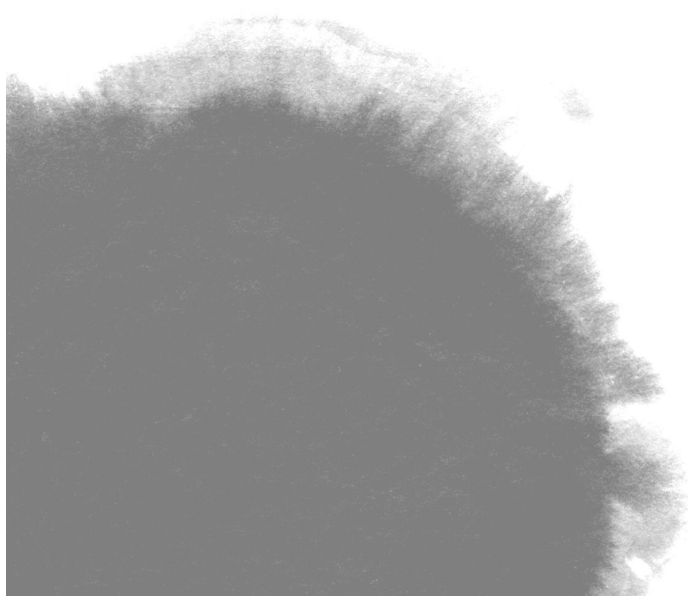
통계청(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e-나라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http://www.index.go.kr)).

파  
라





## 부록 1. 조사표 I

##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부산하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을 중심으로 20~69세의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

※ 연구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380-8355, 8199) 오신휘, 안세아 연구원

조사원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성	만 연령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거주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응답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만 연령: _____세	
전화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업들에 대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2011년도 정책과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작년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과 가정의 양립, 다시 말하면, 직장가정 양립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1. 다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제도의 확대와 개선(출산전 임금의 40% 지급,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등)  
☐②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  
☐③ 가족친화적인 직장가정 양립의 조성(직장보육시설 활성화, 기업의 근무시간 단축 등)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2. 작년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결혼, 출산,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1. 다음은 결혼, 출산,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의 조성(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  
☐②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임신과 출산관련 진료비 지원확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③ 자녀양육비용 지원의 확대(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및 양육수당의 확대 등)  
☐④ 육아지원 인프라의 확충(취약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취학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등)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4순위: \_\_\_\_

3.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1. 다음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빈곤아동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등)  
☐② 아동과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등)  
☐③ 안전한 아동과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학교폭력,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 등)  
☐④ 아동과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아동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4.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6·25전쟁 이후 1955~1963년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령화 대응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4-1.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 정책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맞춤형 취업서비스, 고용연장 등)  
☐② 여러 층의 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③ 예방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  
☐④ 노년기 대비 노후생활 설계서비스 강화(노후설계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5.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5-1. 다음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질적 향상(맞춤형 노인일자리,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②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등)  
☐③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절성 확보(건강보험의 다양한 질병 지원, 치매관리 등)  
☐④ 다양한 사회참여와 여가문화기회 제공(자원봉사활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6.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령자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1. 다음은 고령자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와 교통 환경 조성(고령자 주거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등)  
☐② 노인의 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독거노인, 학대노인 보호강화, 노인 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7.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력개발과 활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7-1. 다음은 인력개발과 활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적극적 여성 고용, 직업능력 개발, 취업지원 등)  
☐② 외국 국적 동포·외국인 활용(우수 외국인력 유치, 다문화 가족 맞춤형 서비스 등)  
☐③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 개발시스템 구축(학교 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평생학습 등)  
☐④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작업환경 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8.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8-1. 다음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교사 양성 계획 수립, 학교시설 관리 등)  
☐②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늘어나는 고령자 주택 수요 대처, 금융시장 활성화 등)  
☐③ 미래의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새로운 세원 발굴 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9.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실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이루어졌다      ☐②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9-1. 다음은 실버산업의 육성에 관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실버제품(휠체어, 침대 등)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②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시장 활성화  
 (산업박람회 개최, 우수기업 발굴 및 포상,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③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고령자용 식품기준 확립,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활성화 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응답자 일반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기혼(동거)      ☐② 사별·이혼·별거      ☐③ 미혼 → (질문 12번으로 가시오)

11. 귀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12번으로 가시오)

11-1. 귀하의 자녀 중 학교에 들어간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수는 얼마입니까?

- ☐①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 수(미취학) : (\_\_\_\_\_명)  
☐② 학교에 들어간 자녀 수(초·중·고등학교) : (\_\_\_\_\_명)

12.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자영업(고용주 포함)      ☐② 정규직      ☐③ 비정규직(계약직, 파견, 용역, 시간제 등)  
☐④ 무급가족종사자(가정주부 등 - 가족 일을 돕되 임금이 없는)  
☐⑤ 근로하지 않음      ☐⑥ 기타(\_\_\_\_\_)

1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대학교/대학원 포함)

14. 지난 1년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 ☐① 199만원 이하      ☐② 200~299만원      ☐③ 300~399만원  
☐④ 400~499만원      ☐⑤ 500~599만원      ☐⑥ 600만원 이상

☞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조사표 II

##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정부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설문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

※ 연구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380-8355, 8199) 오신휘, 안세아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설문지 작성 요령

본 설문지는 4개의 shee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sheet의 내용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11년도 시행계획의 과제들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각 sheet 안에 있는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들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성과평가)와 각 정책의 중요성 정도에 대하여 1~5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성과수준과 중요도가 높음)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I.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II.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III.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영역>												
1.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	2	3	4	5	(    )	1	2	3	4	5	(    )
2.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1	2	3	4	5	(    )	1	2	3	4	5	(    )
3.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I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영역>												
1.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2.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2	3	4	5	(    )	1	2	3	4	5	(    )
3.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영역>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	2	3	4	5	( )	1	2	3	4	5	( )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Ⅰ: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1. 육아를 위한 휴직·휴직제도 확대 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	2	3	4	5	( )	1	2	3	4	5	( )
1-3. 가족친화직장·사회환경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 II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2-1.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2-2.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2-3.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2-4.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 III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3-1.취약계층 아동지원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3-2.아동·청소년역량개발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3-3.안전한아동·청소년보호체계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3-4.아동·청소년정책추진기반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I: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	2	3	4	5	( )	1	2	3	4	5	( )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1	2	3	4	5	( )	1	2	3	4	5	( )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1-4. 노년기 생애주기 노후생활 설계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II: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2-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1	2	3	4	5	( )	1	2	3	4	5	(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1	2	3	4	5	( )	1	2	3	4	5	(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절감	1	2	3	4	5	( )	1	2	3	4	5	( )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제공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III: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3-1.고령친화적주거·교통환경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3-2.노안악증진 및 노안공경 기반바른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I: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I: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1	2	3	4	5	( )	1	2	3	4	5	( )
1-2.외국국적동포·외국인력활용	1	2	3	4	5	( )	1	2	3	4	5	( )
1-3.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1	2	3	4	5	( )	1	2	3	4	5	( )
1-4.산업재해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I: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II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I: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III : 고령친화산업 육성> <소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1	2	3	4	5	( )	1	2	3	4	5	(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1	2	3	4	5	( )	1	2	3	4	5	( )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 I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소영역 1-1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육아휴직제도 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3]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 I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소영역 1-2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유연근로제 확산	1	2	3	4	5	( )	1	2	3	4	5	( )
[2]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 I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소영역 1-3 : 가족친화직장 ·사회환경 조성>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1	2	3	4	5	( )	1	2	3	4	5	( )
[2]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1	2	3	4	5	( )	1	2	3	4	5	( )
[3]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 II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소영역 2-1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1	2	3	4	5	( )	1	2	3	4	5	( )
[2]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3]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 II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소영역 2-2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임신·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2]임신·출산비용지원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3]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 I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 II : 결혼·출산· 양육부담 경감> <소영역 2-3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보육·교육비지원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2]양육수당 지원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3]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4]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Ⅱ: 결혼·출산· 양육부담 경감> <소영역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1	2	3	4	5	(   )	1	2	3	4	5	(   )
[2]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3]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4]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5]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1	2	3	4	5	(   )	1	2	3	4	5	(   )
[6]취약계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Ⅰ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Ⅲ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소영역 3-1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1	2	3	4	5	( )	1	2	3	4	5	( )
[2]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3]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Ⅰ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Ⅲ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소영역 3-2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지원>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아동, 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2]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1	2	3	4	5	( )	1	2	3	4	5	( )
[3]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Ⅲ: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소영역 3-3: 안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구축>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아동, 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2]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3]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4]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5]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영역Ⅲ: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소영역 3-4: 아동·청소년정책 추진기반 조성>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1	2	3	4	5	( )	1	2	3	4	5	( )
[2]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 I: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소영역 1-1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고령자 고용연장	1	2	3	4	5	( )	1	2	3	4	5	( )
[2]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3]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4]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1	2	3	4	5	( )	1	2	3	4	5	( )
[5]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 I: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소영역 :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2]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	2	3	4	5	( )	1	2	3	4	5	( )
[3]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 I: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소영역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 I: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소영역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노후설계 기반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2]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II: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소영역 2-1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노인일자리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1	2	3	4	5	( )	1	2	3	4	5	( )
[2]일자리 사업 체계화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II: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소영역 2-2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내실화	1	2	3	4	5	( )	1	2	3	4	5	( )
[2]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1	2	3	4	5	( )	1	2	3	4	5	( )
[3]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II: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소영역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체계 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2]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3]장기요양보험 내실화	1	2	3	4	5	( )	1	2	3	4	5	( )
[4]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1	2	3	4	5	( )	1	2	3	4	5	( )
[5]의료비 지출 적정화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II: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소영역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제공>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고령자자원봉사활동확충및인프라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2]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Ⅲ: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소영역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	2	3	4	5	( )	1	2	3	4	5	( )
[2]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중영역Ⅲ: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소영역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2]학대노인의 보호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3]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Ⅰ: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소영역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2]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Ⅰ: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소영역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1	2	3	4	5	( )	1	2	3	4	5	( )
[2]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1	2	3	4	5	( )	1	2	3	4	5	( )
[3]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Ⅰ: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소영역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2]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3]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Ⅰ: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소영역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1	2	3	4	5	( )	1	2	3	4	5	( )
[2]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Ⅱ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소영역 2-1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교육분야 제도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Ⅱ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소영역 2-2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주택분야 제도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2]금융분야 제도개선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Ⅱ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소영역 2-3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Ⅲ : 고령친화산업 육성> <소영역 3-1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	2	3	4	5	( )	1	2	3	4	5	( )
[2]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1	2	3	4	5	( )	1	2	3	4	5	( )
[3]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표시제도확대	1	2	3	4	5	( )	1	2	3	4	5	( )

<대영역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중영역Ⅲ: 고령친화산업 육성> <소영역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세부영역>	각 항목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국내 수요기반 확충	1	2	3	4	5	(   )	1	2	3	4	5	(   )
[2]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1	2	3	4	5	(   )	1	2	3	4	5	(   )

☞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